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1년 연구지원 사업 보고서

2021. 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1년 연구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연구 활성화)** 신진연구자의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진입을 유인, 사회적경제 연구 활성화 및 연구저변 확대

○ **(정책적 함의)** 사회적경제 정책연구에 다양한 시각을 접목, 연구의 이론적·경험적 확장을 통한 정책적 함의 발굴

□ **추진내용**

○ **(사업개요)** 사회적경제 현장·신진연구자·일반시민 등 대상 사회적경제 연구계획 공모 및 선발과정을 거쳐 연구비 지원

○ **(지원대상)**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사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사회적경제 현장·신진연구자(대학원생 포함)·타분야 전문가 등)

○ **(지원사항)** 총 5개 과제 선정, 과제별 250만원 이내 연구비 지원

○ **(모집과제)** 정책연구, 사례연구 및 기획연구(총 5개과제)

- **(정책연구)**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정책에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하거나 **구체적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 **(사례연구) 구체적 사례 축적**을 통해 한국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현황, 발전과정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 **(기획연구)** '20년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는 연구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온라인 사업공고 ('21.2.)

신청서 접수
-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접수('21.4.)

심사 및 선정
- 연구계획서 심사 및 5개 과제 선정('21.4.)

협약 체결 및 연구수행
- 선정과제 대상 협약체결
- 연구 수행('21. 5.~9.)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취합('21.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1년 연구지원 사업 보고서

조미형, 이정은, 이승영

사회서비스분야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조직 전환의 과제 ····· 1

김상섭, 길민아, 정성림

소양강댐 주변지역 사회적경제 방문의료 중심 통합돌봄 시범사업 운영 사례 연구 ····· 33

유한나, 한상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부문 간 협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역 특성별 차이 규명 ····· 119

엄영호, 유두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생애주기에 따른 성과 창출과 지속가능한 조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 ····· 151

남춘모, 김세연

지역성에 따른 사회적자본의 구축과 동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18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구지원사업-2021-01]

사회서비스분야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조직 전환의 과제

조미형[1], 이정은[2], 이승영[3]

1)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위원
2)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위원
3)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위원

〈요약〉

1. 연구배경

- 최근 '공공성'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개인사업체의 법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비중이 70%에 이르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20년 150개소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선도모형(모델)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개인 운영시설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면 공공성이 확보되고,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이 확보해야 할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함.

2. 연구목적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용 방안 중에서 기존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개인 공급자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전환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전환 과정, 전환 이후 시설운영과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 공공성 인식 등을 파악함.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서비스 제공주체로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도출함.

3. 연구방법

- 문헌고찰: 공공성 개념 및 지역아동센터 역사 및 현황 고찰
- 심층면접: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기관 4개소
- 연구진 정기회의: 월 1회 이상

4. 연구내용

-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작 동기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센터의 변천사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동기와 과정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이후 달라진 점
-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등

5. 연구결과

- 본 연구에서 조사한 4개 사회적협동조합은 각기 다른 배경(교회 사역(이하 사협A),

공동육아(사협B), 지역사회운동(사협C), 자원봉사자모임(사협D))에서 지역아동센터 활동을 시작함. 정부의 공공성 강화 선도모형 시범사업이 법인 전환의 촉발제가 되었고, 다함께돌봄이 직영이나 법인 위탁되는 정부정책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시설로 남아있을 수 없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음.

- 개인시설의 법인화라는 일차 목적은 동일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과정과 목적은 조금씩 달랐음. 사협A는 지역아동센터 3개소가 조합원으로 있지만, 시설장의 퇴직이나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해 신규 시설장이 센터를 인수하여 들어온 형태라서 3개소가 협업적 관계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협B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9개소와 우리동네키움센터 1개소 등 총 10개 기관의 시설장과 종사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며, 이들 중 개인시설로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 1개소는 운영주체를 법인으로 변경하였고, 조합 설립 이후 법인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 1개소를 위탁 받았음. 이미 시민단체나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나머지 기관들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이나 네트워크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음. 사협C는 법인 사무국을 두고, 지역아동센터 5개소와 다함께돌봄 2개소 모두 지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사협D는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운영 전환한 사례로 법적 형태는 개인시설 형태였지만, 운영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특정 개인 소유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고 함.
- 이들의 공통점은 개인시설이지만 개인시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절차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러웠음. 또한 전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치와 운영방식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됨.
- 지역아동센터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순환근무/보직제 등이 운영되어야 하며, 밖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 협력적 거버넌스로서 작동해야 할 것임. 또한, 지역 차원에서 여러 센터들이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향해야 함.
- 현재 진행되는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사업〉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보다는 권역별로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장에는 더욱 유용할 것임.
- 장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무국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사회 내 여러 센터들이 들어와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의 욕구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임. 개인시설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고 사회적협동조합 안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Ⅰ. 서론

1. 연구배경

정부는 2020년 12월 28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민간 위주 전달체계에 의한 서비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성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2005년 이후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기존 공급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었고, 부족한 부분을 공공의 확대 없이 민간에 의존하면서 개인이나 영리사업자까지 서비스 제공자로 대거 진입하게 되었다. 민간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공공의 성격을 부여하였으나, 서비스 질이나 종사자 처우 등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시기부터 사회서비스 공공성 관련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전국 4,200여 개소 중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비중이 70%에 이른다(아동권리보장원, 2020). 일부 기관들에서 보조금과 후원금, 급식비 등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거나 가족종사자와 종교인 겸직 문제로 투명성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발견될 때마다 공공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자체 관리감독이나 평가를 통해 안정된 운영기반을 갖추고 서비스 질의 상향평준화되고 있지만 부실한 기관을 선별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홍나미 외, 2019).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형식적 공공성 측면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개인사업체의 법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2020년 9월부터「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선도모형(모델)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전환하려는 센터 중 공모·심사를 통해 150개소를 선정하여 운영비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8.19.).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2018년 4개소, 2019년 18개소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20년 237개소, 2021년 8월 25일 기준 573개소가 인가되었다. 강지원 외(2020) 연구에 의하면, 정부 지원으로 개인 운영시설이 형식적 공공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공공성과 거리가 먼 또 다른 사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환된 시설들이 내용적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과 관련한 연구(이선미·박경희, 2017; 정익중 외, 2018; 홍나미 외, 2019)를 종합해 보면, 운영주체의 공공성보다는 국가가 재정지원하는 공적 돌봄체계로서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 주체들이 센터 운영에 참여하고 협의해나가는 절차적 공공성이 공통적인 주요 요소로 확인되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갖고 있고, 그동안 평가체계를 통해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왔다.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공공성은 무엇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조직 형태는 시설장 개인에게 사유화되지 않고, 기관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체계를 구축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질문들에서부터 출발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이 확보해야 할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개인 운영시설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여 운영주체가 개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되면 공공성이 확보되고,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가?

2. 연구목적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존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개인사업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전환이다. 다른 하나는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백을 채우는 역할로서 지역공동체 기반의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시설인 사회서비스 공급자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을 통해 법인격을 갖춤으로써 공공성이 확보에 기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전환 과정과 전환 후 변화를 살펴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II. 연구방법

조사대상 기관은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주체인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인터뷰 참여에 동의한 4개소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 정보는 공식화된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에게 추천 요청하여[1] 9개 사회적협동조합 정보를 얻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정보검색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풍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3개소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1개소는 정부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추진 이전에 이미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기관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조사 참여 동의를 구하기 위해 연구진이 기관에 전화 연락하였다. 이 때, 2개 기관은 전화 설명 후 사전에 조사개요 및 질문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미리 보내서 내용 확인 후 동의를 득했고, 2개 기관은 전화 상 설명으로 참여 동의를 득한 후 원활한 조사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인터뷰 참여 동의를 득한 후, 일정과 장소를 협의하여 다음〈표 1〉과 같이 조사를 진행하고, 소정의 답례비를 지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조합 설립을 진행한 이사장, 사무국장, 시설장 등 6명이고, 40~50대의 남성 1명, 여성 5명이었다.

〈표 1〉 인터뷰 진행 일정

기관	지역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조사일시	조사참여자
A	경기	2020.07.	2021.06.16 14:00 ~ 16:00	이사장
B	서울	2020.01.	2021.06.18 11:30 ~ 12:30	사무국장
C	서울	2020.09.	2021.07.05 11:00 ~ 13:00	시설장
D	충북	2015.02.	2021.07.15 10:30 ~ 12:30	사무국장, 시설장 2명

본 조사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 참여자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질문 내용은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작 동기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센터의 변천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동기와 과정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이후 달라진 점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조사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연구자 및 보조원이 전사하여 자료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전사한 심층면접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각 사례별로 특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4개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4개 기관의 응답내용을 추출하고, 이를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1) 담당자로부터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지역아동센터시도지원단을 통해 추천받은 9개 사회적협동조합 정보(지역아동센터명, 사회적협동조합 이름과 전화번호, 추천이유)를 입수하였다.

Ⅲ. 연구내용

1.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많은 연구들에서 나타난 공공성 개념은 큰 틀에서 형식적 공공성과 내용적 공공성, 절차적 공공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은재호, 2008; 이승훈, 2008; 양성욱·노연희, 2012; 조대엽, 2012; 주현정·김용득, 2018 재인용; 김선경·박정민, 2018). 형식적 공공성은 서비스 제공 주체에 관한 것으로 국가의 공적활동이 가지는 정당성을 의미한다. 절차적 공공성은 공공의 문제 관련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개방성 또는 투명성, 쌍방향의 논의(소통성), 행위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참여성)를 포함하는 민주적 절차의 차원을 말한다. 내용적 공공성은 사회통합이나 자원재분배, 권리보장과 같이 공동체가 목표로 하는 가치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결과적 차원의 개념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은 보편성을 전제로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고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탁 형식으로 비영리 민간이 서비스 제공을 대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윤홍식, 2012; 홍나미 외, 2019 재인용). 사회서비스의 영역에서 공공과 민간 중 누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공공성 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홍나미 외, 2019). 사회서비스 중 특히 돌봄서비스는 가정내에서 개별적으로 충족되던 것이 돌봄의 사회화 요구에 따라 공적 체계내에서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나, 공급주체의 대다수가 민간이고 다른 공공재와 달리 돌봄은 관계적 속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등에서 공공성 논의가 복잡하다(주현정·김용득, 2018).

송이은·이지혜(2017)는 아동돌봄서비스는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가구에 두루 관련되는 보편적인 욕구라는 점에서,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공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성은(2019) 또한 보육시설은 공적지원을 받고 국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며, 공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는 개방성 측면에서 공공성을 띈다고 보았다. 즉 국가의 재정 지원과 관리감독 하에서 보편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회계 등을 공개하면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아승·심미승(2020)은 공공성 확보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돌봄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을 간과하기

쉽다고 주장하였다. 보편성과 개방성 이외에 다양한 주체간의 거버넌스를 강조하면서 제도권 안에서 보육 및 유아교육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육아의 측면에서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의 가치를 논의하였다. 손지아(2019)는 공공성 판단의 기준은 운영주체보다는 공공원리에 따른 운영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선미·박경희(2017)도 공공성의 관점에서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지역아동센터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이 개방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전제하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내용적 차원과 절차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내용적 차원은 돌봄의 관계적 속성을 반영한 관계성과 구체적인 개별 개인의 욕구에 반응하는 반응성으로 구성하였다. 절차적 차원은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계 하에서 돌봄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 재량[2]배분이 균형적이고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정익중 외(2018)에서 양적 자료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측정한 연구에서 개인운영주체의 비중이 높아 형식적 공공성은 낮지만, 회계투명성, 인력공익성, 시설 지속가능성, 지역 공개성, 서비스 공공성을 핵심요소로 하는 내용적 공공성은 일정 수준 이상 담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홍나미 외(2019)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개념을 도출하였다. 공공성의 핵심요소로 투명성(체계적으로 회계를 운영함), 개방성(기관을 투명하게 공개함), 체계성(평가를 통해 양질의 운영기반 마련함), 책무성(예측가능한 돌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시함), 방향성(지역과 아동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로 차별화), 참여성(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공동체 발전을 지향함) 등이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공공성은 공통적으로 보편성을 전제로 국가가 재원을 부담한다는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마다 하위차원을 구성하는 내용은 차이가 있다. 크게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 책무성을 강조하는 경우(정익중 외, 2018; 홍나미 외, 2019)와 서비스 제공에서의 관계성과 반응성, 지역사회(이해관계자)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다루는 경우(이선미·박경희, 2017; 이아승·심미승, 2020)로 구분할 수 있다.

이선미·박경희(2017) 연구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낙인을 갖게 하고, 서비스 전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일선

2) 재량이란 어떤 특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방법 및 대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하며, 정부와 지자체, 서비스 공급자 뿐 아니라 이용자의 결정방식까지 포괄하는 거버넌스 구조인 재량혼합(discretion mix)도 논의되고 있다.

관료 및 민간 운영자에게 재량권을 박탈하는 방식의 공공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돌봄의 관계적 성격을 반영하여 국가-민간단체-수요자(지역주민) 간 돌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주현정·김용득(2018)이 돌봄서비스에서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는 유용한 기본원리로서 공동생산을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공동생산은 "전문가, 이용자, 가족, 이웃 사이의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에서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것"(Boyle, 2010)으로, 서비스 전 과정에 각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의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2. 지역아동센터의 역사적 발전과정

공공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시대 상황에 따라 내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남찬섭, 2012; 이선미, 2016; 김선경·박정민, 2018). 대표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개념은 돌봄서비스의 특성과 지역아동센터의 역사적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기관별로 활동을 시작한 시기나 동기에 따라 기관 운영이나 아동 돌봄 철학 및 지향점의 차이가 있다. 지역아동센터 발달 전개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1기는 1960년대부터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이다.[3] 1960년대 산업화 초기 도시빈민층 형성과 함께 시작된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의 시작으로 본다(김치영·김선미, 2014).[4] 1980년대 공부방 활동은 풀뿌리운동, 지역조직운동, 교육운동으로 전개되었다. 1990년대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부방이 대도시로 확산되기 사작하였고, 빈민운동보다는 교육쪽으로 초점이 변해갔다. 제2기는 1997년부터 법적 시설이 되기 이전 2003년까지이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빈곤 가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졌다(박태정 등, 2010). IMF 이후 공부방 이용 아동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결식아동문제가 급부상하면서 공부방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김치영·김선미, 2014). 제3기는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된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이다.[5] 보건복지부는 2004년 1월부터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제도화될 당시 244개소에서 2012년 4,036개소 이르렀고,[6] 2021년 8월

3) 지역아동센터의 근원은 19세기 후반 개화기의 계몽운동과 야학에서 찾기도 한다(이선미·박경희, 2017).
4) 1962년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설립한 '민들레공부방'이 최초이다.
5) 지역아동센터 역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제도화 이전(제1기와 제2기로 구분)과 이후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화 이후 시기를 보편적 돌봄으로 다함께돌봄이 등장한 전후를 구분하였다.

현재 4,403개소이다.[7]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교회가 운영하는 시설이 전체의 절반이 약간 넘는다(조용훈, 2012)[8][9]. 2007년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었고, 2012년부터 초등돌봄교실이 시작되면서 지역아동센터와 중복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제4기는 2017년 보편적 돌봄을 지향하는 다함께돌봄센터[10]의 등장과 함께 지역아동센터의 새로운 전환 시기이다. 개인 운영시설이 70%를 차지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강지원 외, 2017; 강지원 외, 2020).

6)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은 3,581개소였다.
7)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2021.08.29.조회)
https://www.icareinfo.go.kr/info/localCenter/localCenterMap1.do?menuNo=2001100
8) 한국기독공보(2010.9.11.) "정부의 새 운영지침에 한숨짓는 지역아동센터"
9) 2009년 평가기준에 겸직과 공간 겸용 금지 항목이 들어갈 당시, 이들의 50~60%는 작은 규모의 미자립교회로 목회자가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가 72.3%, 전용공간이 없는 센터가 13.3%에 이르렀다(한국기독공보, 2009.12.16.).
10) 서울시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우리동네 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공급하고 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대신 융합형 키움센터를 설치 지원하고 있다(송이은, 2019).

Ⅳ. 연구결과

1.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사례별 분석

조사에 참여한 사회적협동조합 4개의 기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활동의 시작 배경의 다양함만큼 조합원 구성과 사업내용도 다르다. 사협A(3개 센터)와 사협D(1개 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만 하고 있지만, 사협B와 사협C는 지역아동센터 이외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운영하고, 사무국을 중심으로 다른 사업들도 운영하고 있다. 사협A, 사협B, 사협D는 정부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책에 맞춰 2020년 설립되었다. 사협C는 2015년 설립되었으나, 운영주체의 법인 전환은 2020년에 진행하였다.

〈표 2〉 사례 개요

구분		사협A	사협B	사협C	사협D
활동 시작		교회 사역 (2006)	공동육아 (1998)	지역사회운동 (1980 중후반)	자원봉사자모임 (2000 전후)
지역아동센터 신고		2007년	2004년	2009년	2007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2020년	2020년	2015년	2020년
조합원		10명 시설장(3명), 보호자, 후원자	35명 10개 센터 종사자, 후원자	31명 센터 종사자 (13명), 주민 등	7명 대표, 시설장, 목사(후원교회), 생활복지사(2명), 강사, 조리사
이사회 (감사 포함)		4명 이사장, 시설장 3명	5명 시설장 5명	9명 시설장 7명, 사무국장, 주민	4명 대표, 시설장, 목사(후원교회), 조리사
출자금		50만원 (5만원/인)	560만원 (10만원/구좌)	155만원 (5만원/구좌)	1,000만원 (최소 30만원)
사업 내용	지역아동센터	3개소	1개소	5개소	1개소
	다함께돌봄	-	1개소	2개소	-
	기타	-	유통사업, 학습모임 등	작은도서관, 지자체 공모사업 등	-

가. 사협 A: 1조합 다센터(지점 형태)

사협A의 경우, 이사장이 아동관리 전도사로 있다가, 개척교회 목사로 파송되면서 초등학생 방과후돌봄을 하고 있었다. 지역에서 마을회관을 짓고 2층 공간을 내주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하게 되었다.

> *제가 2003년에 여기 처음 왔어요. 파송이라 해서 … 그 전에는 아동관리 전도사였으니까 … 교회를 이렇게 짓기 전이고 조립식 한 칸 예배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놀이터 개념이었던 거예요. … 2006년에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당시 이장님이 2층을 어떻게 쓸까 … 마을 아이들이 다 교회 가서 노니까. 교회에서 2층을 써라. … 진짜 2층을 쓰게 되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하자 해서 당시 집사람은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 그다음에 제가 사회복지사 2급을 마침 땄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에 개소를 하게 돼요. (사협A)*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시설장이 정년퇴직하여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개인 시설, 시설장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포기하고 노인대상 사업으로 변경하는 개인 시설 등을 인수하였다. 인수한 센터는 이사장이 운영하던 센터에서 일하던 생활복지사나 교인들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 *○○은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정년퇴직을 하면서 이제 센터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인수해서 … 우리 조합 안으로 들어오고. … □□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이 아예 노인 사업쪽으로 가시면서 저희 집사람이 맡게 됐습니다. … △△은 여기에서 생활복지사 하시고. 다른 센터에서 시설장 하시던 분을 … △△을 맡아서 운영하셔라. 이런 개인적인 관계들은 교인들이에요. (사협A)*

사협A는 시도마다 설치된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2020년 2월부터 서류 준비해서 3월에 서류 제출/접수하고, 5월에 면접 심사 받고, 7월에 인가받아서, 8월에 법인 등기하였다. 행정적인 절차는 컨설팅이나 중간지원조직 등의 지원을 받아 큰 어려움은 없었다.

> *[중간지원조직] 거기 도움을 받았어요. 거기서 컨설팅해 주고 그다음에 표준정관 보내주고, 우리 사정에 맞게 특별히 많이 변경할 건 없지만, 출자금이나 이런 거 조금 바꿔서 내면. '이런 건 이렇게 잘못됐습니다'거기서 좀 안내를 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주사업이 지역아동센터니까, 사업계획서 참고하고 (사협A)*

나. 사협 B: 1조합 다센터(지점 센터 + 네트워크 활동), 사무국 운영

사협B의 사무국장은 IMF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1998년 방임되는 아동을 돌보기 위해 공동육아 활동을 하던 부모들이 초등학생 공부방을 시작하였다. 후원금을 받아서 무료로 운영하였다.

> *저희는 실업극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사업부터 시작해서 98년도에 문을 열었고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라는 사단법인이 있어요. 거기 공동육아 활동을 하던 부모들이 모여서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개인시설로 문을 열었어요. 취약계층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이들은 한 30명 정도 있는 초등전담시설이고. 지역 여건은 … 상가에 일하시는 부모들이나 상업노동자들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돌봄이 없어서 그냥 방치되고 실직자 자녀들이 많고 … 그 당시만 해도 초등 1, 2, 3학년만 받았는데도 거의 실직 가정 자녀들. 그때가 98년도니까 IMF 막 터지고 실직되고 이럴 때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다 무료로 운영을 했고 (사협B)*

운영주체를 사협B로 변경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그동안 대표와 시설장을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대표가 법인 임원이 되고 시설장은 법인에서 채용하였다. 현재 시설장과 종사자가 조합원으로 들어와 있는 9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개인운영 시설 2개소 중에서 1개소만 법인의 지점 형태로 전환하였고, 조합 설립 이후 우리동네 키움센터 1개소를 위탁 받았다. 나머지 조합원 개인운영시설은 재위탁 시기가 도래하면[11] 법인의 지점 형태로 운영주체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사협B는 지역아동센터 간 네트워크 활동을 지속, 확대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협동을 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공식적인 조직으로 전환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업을 해보고자 한다.

> *활동하는 지역아동센터들끼리 공동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에 하나지만 A, B, C, D. 이렇게 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2000년부터 연합을 해서 교사네트워크, 아동네트워크, 부모네트워크 활동을 시작했어요. 20년이 된 거죠. 20년 동안 그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10년 전부터 주로 시립과 공립을 중심으로 우리가 회원 기관을 확대하자고 해서 □□의 시립 2개와 공립 2개 이렇게 해서 8개로 늘*

11) 국공립이나 구립 등 공공에서 더 이상 개인에게는 위탁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 *어나고 구립 하나. 그래서 지금은 9개 기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9개 기관이 네트워크로 아동네트워크, 교사네트워크, 부모네트워크를 꾸준히 하다가 전체가 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 좋겠다고 해서. (사협B)*

> *앞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을 할 생각으로 우리는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승인이 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렇게 사무국장 역할을 해야 되겠다.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해야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사실 좀 돈은 안 되고. 사회공헌사업이지만 제 나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역량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다른 활동을 하려고 해요 이사들은. … 20년 동안 계속 꾸준히 활동했던 선생님들이 다 이사였어요. (사협B)*

다. 사협 C: 1조합 다센터(지점형태), 사무국 운영

사협C는 1980년대 지역사회운동으로 공부방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용시설이 방치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공간을 활용한 지역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9년부터 그러한 공간을 무상 임대받아서 민간 재단의 후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 *사협C는 사회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초중반 학생운동하던 분들이 졸업하시고 사회에 나오면서 동네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 도시 빈민, 그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방을 하자. 그리고 글을 배우는 시기를 놓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한글학교를 열자 해서 한글학교랑 공부방 두 가지부터 출발을 해서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들을 쭉 하다가 … 지역 내에 사각지대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들여다봤던 게 국민임대 단지였어요. 200세대 이상 국민임대 단지 안에 법적으로 주민공용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다 비워 놓고 … 그 공간을 무상 임대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겠구나. 해서 2009년 한 군데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에서 도서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비용도 조금 후원을 받고 거기에 작은 규모로 지역아동센터가 도서관부터 시작을 해서… (사협C3)*

처음에는 센터들의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다가, 2020년 모두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하였다.

> *사실 초창기에는 다 운영 주체가 달랐어요. [센터가] 만들어진 재원들이 다 달*

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이 의미들을 같이 모아서 사실 운영 주체도 다르기는 하지만 그때도 거의 같은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조금 더 긴밀했죠 (사협C3)

그러니까 다 소속이 다르긴 했지만 뭔가 같은 의도로 같이 모여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사협C2)

저희는 주민들도 같이 조합원으로 끌어들이고 1인 1표. 실무자 중심이 아니라 조합원들도 같이 동등하게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 지역아동센터 연합 조합이 아니라 그런 목표의 목적에 해서 만든 거였고 거기에는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게 다 포함돼 있고 (사협C3)

그 당시에는 운영 법인은 다 똑같이 사협C였지만 사실 운영이나 이게 법인의 통제하에 있진 않았어요. 그때는 법인을 그냥 두고서 지역아동센터를 개별로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저희가 지점으로 다 등록이 된 거죠. (사협C2)

라. 사협 D: 1조합 1센터

사협D의 시설장은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오던 모임에서 봉사활동의 연속선상에서 공부방을 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공간을 내주어서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교회 평신도들 중심으로 자원봉사를 하던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유일한 사람으로 멤버에 참여해서 6년 동안 장애우시설에 가서 돌보고 … 그 일을 하다가 지역에 어려운 친구들이 발견되면 대신 부모가 되어주는 그런 활동을 또 했어요. … 회비 내서 그런 일을 하다가 뿔뿔이 흩어지니까 '한군데서 모여서 하자'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이전에 공부방을 시범으로 했다가 …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했고, 마침 교회에서도 장소를 쓰라고 허용해 주시고. 그래서 시작한 게 2007년 (사협D)

시설장 퇴직 이후에도 센터가 지향하는 가치를 지키면서 운영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고민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나서, 전환을 하게 되었다. 법적 형태는 개인운영시설이지만, 아동, 종사자,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러한 취지에 맞는 옷이라고 생각하였다.

제가 이제 15년 넘게 했고, 퇴직을 하면, 물론 다른 사람을 뽑아서 할 수도 있지만. 1세대들이 희생과 노력으로 운영을 했던 시대가 뒤로 가면서 저무는 게 느껴지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돌봄을 담보할 거냐. … 이것이 형태나 정체성이 잘 보존돼서 다음으로 이어갈 그런 체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시스템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컨설팅을 해준다고 해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조금 더 체계화된 거고 거기에 아이들이나 자원봉사자, 종사자들이 같이 운영에 참여해서 결정을 함께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사협D)

저희가 한두 번 정도 같이 식사하면서 의논하고. 그리고 컨설팅받아가면서 정관 만들고 총회하고, 저희는 시간을 어렵게 내 맞추는 게 어려웠지, 다른 데보다 사람을 모으거나 전환하는 거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사협D)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의 철학 등에 대한 공부를 하였다. 종사자뿐만 아니라, 센터를 졸업한 청년들과도 함께 참여하였다.

저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협동조합의 정신, 철학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우리 것이 되는 거 같았어요. 내 옷을 입는 거지.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어색함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지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밥 먹고 공부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전환하면서 동시에 그런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밥값을 받았어요 회의비하고. 그래서 사회적경제 책을 사서 읽고 같이 선생님들이 스터디하고(사협D)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중고등학생까지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졸업생들 중에서 아동돌봄 관련 일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다고 하였다.

다함께돌봄도 위탁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게 저희 센터에 출신 친구들이 계속 배출이 되니까 좋은 교사로, 사회복지사로 양성시켜서 이 친구들이 일자리로, 후배들로 키워주고 싶다 물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가까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이 서로 융합적으로 관계를 잘 맺어가느냐가 지역의 건강한 돌봄의 토대를 만드는 거에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잘 해보려고 (사협D)

2.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사례간 분석

정부 정책에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조사대상 4개소 모두 정부 정책 상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류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법인에게만 위탁을 하고, 국공립(시립/구립)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들은 더 이상 재위탁이 안된다. 서울시의 경우 종사자 단일임금 대상 요건이 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설립하였다.

[지금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된] 계기는 전적으로,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될 거다. 이제 [법인으로 다] 가야 된다 결국엔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사협A)

지역아동센터 안에 사회적협동조합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서. 이것을 의미 있게 현장에서 받아서 전환을 하고 (사협C)

개인 시설을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계속 운영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복지부 정책상. 이런 정책을 피해 가기가 어려운 거죠. … 우리 안에도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서울은 특히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법인 아니면 단일임금을 주지 않았거든요. (사협B)

지금 이사장을 하고 있는 OO시립과 ㅁㅁ센터장님도 개인인데 시립을 맡았어요. 그동안은 그게 가능했었는데 이제 법적으로 개인 시설한테 국공립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3년 지나 위탁이 끝나는 그때는 개인이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사협B)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이 자발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절차와 원칙을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조합을 통해서 새롭게 일을 도모해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정부가 주도했고, 전환하지 않으면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도 안고 있다.

우리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조합이라는 조직을 꾸려서 그 사업을 해 봅시다'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는 조합으로 해야 된대' 이 개념에서 출발하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 가령 의료조합이나 학교에서 하는 조합, 공동

육아하는 조합이나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관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자. 아이는 이렇게 하고 이런 세팅을 할 텐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회적협동조합의 표준정관인데 지역아동센터의 여건에 맞춰서 그냥 좀 수정해 보세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사협A)

하고 있는 일은 그대로인데, 전환하라고 하니까, 요구하는 규격을 맞춘 것이다.

우리는 어쨌든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이미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이 틀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쑥 빼다가 여기에 앉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기준 틀에 우리를 맞추는 거죠.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말씀 드렸지만 조합에 대해서 전적인 이해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사협A)

그렇지만, 개인시설이지만 개인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이 자연스러웠다.

사협A를 제외한 3개소의 공통점은 개인시설이지만 개인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러웠다. 법적으로는 개인시설이지만,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사유화되어 있지 않았다. 시민단체의 부설기관으로 들어감으로써 후원금을 모으기 수월해지고, 운영에 있어서도 감사 역할을 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저희는 이 센터가 누구의 것이 아니었어요 개인시설이었을 때도. 여러 사람이 관여한 센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결정하기가 좀 수월했죠. 이게 한 사람의 희생이나 한 사람의 돈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완전히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던 체계가 아니었고 … 물론 이 센터는 아이들의 것이지만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가 함께하는, 그 자체가 협동조합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사협D)

저희가 한 3년 정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 지역에서 후원을 받아서 아이들 식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 제가 이게 공적으로 공공성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다 이걸 열어놔야 되겠다 해서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의 부설기관으로 우리가 요청을 했고 어쨌든 법적으로는 개인시설일 수밖에 없지만[12] 내용적으로는 시민연대 부설기관으로 저희가 합의를 하고 들어가서 시민연대 후원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시민연대가 공적으로 감사도 하고 운영에도 참여하니까(사협B)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고 기존 시설을 폐업 신고하고 신규 시설 등록하는 절차가 많

12) 법적으로 시민연대로 운영주체를 전환하면 운영비가 중단되기 때문에 개인 시설로 유지했다고 하였다(인터뷰 내용). (신규 시설로 다시 등록하게 되어 2년간 자부담 운영해야 함, 연구진 설명)

이 번거로웠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기존 시설을 폐업 신고하고 신규로 시설 등록하는 절차가 번거로웠다. 발기인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전환 이후 공식적인 기관 명칭이 길어져서 불편한 점도 언급하였다.[13)]

다 바뀐 상황이이에요. 저희는 작년 10월 1일자로 기존 시설들은 다 폐쇄하고, 10월 1일자로 다 신규 시설이 된 거예요. 운영 주체가 ABCD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래서 통장도 옛날에는 〈OO지역아동센터〉였다면 지금은 〈ABCD사회적협동조합 OO지역아동센터〉 통장 명의가 그렇게 바뀌어서 들어가고 … 사업자 바뀌고 이래야 돼요. 행정 절차가 이게 아주 좀 그래요. … 통장 다시 만들고 그러한 불편함. 인가받고 사업계획서 다시 내고 그런 게 어렵지. 의견 차이라든지 방향성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업무적인 행정처리적인 이런 번거로움 (사협A)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그런 서류 작업 다 끝나는 동안에 정말 힘들었어요. 은행 작업도 다 해야 되고. 어쨌든 한 곳에서 계좌를 다시 개설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10개 이상을 계좌를 한꺼번에 개설을 하다 보면 서류가 이만큼인 거예요. (사협C2)

운영 방법에 대해서 내면화시키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전환하면서 공시까지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설립 단계에서는 준비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토시 하나가 틀려도 빠꾸.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더라고요.(사협D)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사업 공모 선정 기관에 제공되는 지원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채용하기는 부족하여, 기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법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대신 지원금으로 파트타임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사협D기관의 경우, 월 60만원을 10개월 정도 지원 받았다. 이 비용으로 야간보호 업무를 수행할 시간제 인력을 채용하고, 협동조합 업무는 센터 생활복지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 업무가 상시적이지도 않고 시설장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생활복지사의 다른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로 시간제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채용했어요 시간제를. 그 비용을 받았으니까 60만 9천 원인가 69만 원인가 그 비용을 받아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런데 사회적 경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일단. 그리고 그분이 사회적 경제 일을 센터 안에서 전담하는 것도 애매해요. 사회적 경제 일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일이 며칠 동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리의 업무 속에 틈틈히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하고 긴밀하게 저희도 다 알고 있어야돼서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그 일을 하고 선생님의 센터 역할을 대신할 만한 나눠줄 만한 사람을 뽑자. 그래서 어쨌든 매치나 엎어치나 사람을 새로 뽑아서. 그분에게 야간 보호 사업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선생님으로 뽑았고. 우리 센터 선생님이 직접 저희랑 늘 의논해 가면서 직접 발로 뛰고 해서 설립을 하고 경영 공시도 다 지원을 해주고(사협D)

사협B의 경우, 사무국 상근자를 채용하고, 출자금에서 60만원과 지원금 월 60만원을 합쳐서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20시간 가량 근무하면서 센터 일과 사무국 일을 병행하고 있다.

우리는 실제 유통판매 사업이나 교육을 하려면 그걸 누가 진행해요 저도 못해요 그래서 상근자를 바로 쓴 거예요. 이사들이 우리가 출자한 돈이 한 400 되거든요. 그거 까먹자 그냥. 이렇게 한 거고 복지부가 공공성 사업으로 한 개 센터당 60만 원씩을 줬어요. 그 OO가 신청해서 상근자를 120만 원을 주는데 우리가 60을 주고 OO에서 60을 줘요. 그래서 센터에서 아예 상근을 하게 했어요. …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한 일과 사회적협동조합 일을 하고 … 근데 60만 원 줘봤자 한 개 센터에 10시간 이상 못하잖아. 우리가 120만 원에 20시간밖에 근무를 못 하는데. 120이면 딱 반이잖아요 40시간에. 그래서 20시간이나 18시간을. … 상근자를 안정적으로 두는 게 지금 1번이에요. (사협B)

3.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

본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도출된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운영주체가 법인이라는 자부심이 생겼고, 외부에서 센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형식적 공공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시설에서 법인격을 갖추게 되니까, 대표자 개인 이름이 아니라, 법인 이름으로 명기한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다. 개인시설일 때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이며, 센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개인 소유 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종사자들 스스로도 책임감을 더 느끼고, 부모나 외부의 시선도 달라질 거라고 기대한다.

13) ㈜, (사) 등처럼 사회적협동조합도 축약된 명칭이 필요해 보인다.

어떻게 보면 조합이라는 옷을 입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좋고. … 저희들 사업계획서 같은 거 낼 때, 대표자 사협A으로 내는 게 아니라 대표 운영 주체 법인으로 해서 내니까 어쨌든 그런 명목상 공공성. 이게 어떤 개인이 아니구나. (사협A)

4년마다 [구청에서] 재심의를 받아서 공간 임대를 연장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법인이 돼 있으니까 일단 자격으로도 경쟁력이 좀 생겼고. (사협C)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안에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역할들을 그대로 할 건데 주체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뀌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더 깊게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저희 스스로는 들고, 또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도 사협으로 바뀌었어. 그렇게 인식이,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겠죠. 저희가 그냥 개인 시설이 아니라는 거. 부모님들에게도 '이건 누구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다'그런 신뢰성이 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됐고 (사협C)

운영위원회와 달리 이사회 회의록은 인감을 찍어야 한다는 점에서 임원들은 내용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는 그냥 도장 받지만 조합은 총회 회의록 공증을 받잖아요. 공증을 받다 보니까 인감을 청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민감해하잖아요. 본인들이 인감을 찍어야 되니까 더 꼼꼼하게 읽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좀 더 투명,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적으로는 사실 조합이 돼서 센터 운영에 있어서 더 투명해지고 더 공공성이 확보되고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협A)

하지만, 아직 협동조합 차원의 추가적인 사업을 운영하지 않거나, 센터 간 교류 협력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은 조합 총회나 이사회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와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

사실 전환하고 나서 달라진 건 별로 잘 못 느껴요. 저희 이사회하고 그다음에 조합원 총회하고 하지만, 이게 운영위원회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사협A)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절차적 공공성은 ①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확보된다. 이사회, 실무자회의 등 조합원 간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자주 만나야 한다.

협동조합은 같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회의가 많은 편이

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조합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등 조합원이나 임원들의 논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으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전에도 같이 의논하면서 일해 온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융합형 하나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어서 이사회를 미친 듯이 했어요. 기록을 안 해 놓은 것까지 하면 1년 동안 아마 50번 더 한 것 같아요. 매일 만났고 매일 워크샵이고 공식적인 것만 한 28번인가 했으니까(사협B)

어디 다돌(다함께돌봄) 공고가 났는데 여기에 우리 취지에 맞나 이런 거 해서 우리가 이거를 지원할 건가 이런. (사협D3) 같이 고민하는 (사협C1)

아동센터 전반적인 운영이나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도 있고 이제 법인에서 안건에 대해서..(사협C2)

그런 것들을 다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 계속하고 이런 구조들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냥 몸에 배여 있는 상태(사협C1)

우리 같은 경우는 이사회의 보다는 실무자 회의가 더 자주 하죠. 모든 것들을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하고 거의 이사회에서는 그냥 실무자 회의에서 결정된 거를 승인해 주는 역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또 중요한 것들을 역할을 결정을 하고 (사협C1)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 관계가 생기기도 하지만, 혼자서 운영할 때와 달리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 '우리가 함께 운영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

어쨌든 그 사이에서 서로 갈등관계가 있고 의견을 모으기에 그리고 가치관은 서로 다른데 이걸 가지고 우리 조합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고 말들도 많고 막 이러죠. 근데 그 사이에서 같이 가는 사람들을 같이 만들어낸다는 거.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혼자 운영할 때랑은 이게 우리가 운영한다 우리가 함께한다 이런 거는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사협C3)

그때는 혼자서 모든 걸 고민을 해결해야 하던 것들을 여기 들어오니까 같이 고민해서. 고민을 던져놓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그

런 것들은 좋죠.(사협C1)

조합이 지향하는 가치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시설장과 이사들 간의 공식적 의사소통구조를 만들어 운영한다. 이들은 신규로 채용된 시설장들로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20년 이상 시설을 운영해 온 경험을 가진 이사들로부터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센터 운영이 법인 이사진들에게 운영일지 수준까지 공개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같이 논의한다.

(법인이 운영하는 센터) 두 군데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 이사들과 그 센터와 가치 정립을 새롭게 하기 위한 워크숍을 2-3회 했고요. 교사들과 워크숍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과 내용을 잡는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매월 정례회의를 해요. 자체 정례회의를 하다가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같이. 저쪽 OO랑 우리랑 월례회의로 해요. 줌으로 저희가 매일 운영일지와 활동을 공유해요 2개 센터가. 잔디라는 앱을 사용해서 공유를 다 해요. … 모든 교사가 쓴 내용을 공유하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잖아요. 그다음에 월례회의 이슈를 교사들이 올리게 돼 있어요. OO는 이달에 어떻다. 이런 걸 센터장이 정리해서 올려요 그리고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거를 이사도 다 들어가고 전체 회의에서 하는 거죠. … 예를 들면 요즘에는 OO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오는 애들이랑 갈등이 있고, 전반적인 혁신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 교사가 센터장이랑 내부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회의를 해서 우리는 혁신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 한 서너 번을 모여서 혁신 프로젝트를 같이 논의해요. 이사가 다 참여하고 거기 교사들이 다 와서 그걸 논의해서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식으로 법인이 하니까 체계가 잡히고 달라지고 (사협B)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절차적 공공성은 ② 조합원 간의 순환보직제/순환근무제를 통해 확보된다. 시설장 개인 소유의 센터가 아니고, 조합원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조합원 간에 직책을 순환하고 있다. 또한 법인 산하에 있는 여러 센터들 간에도 순환해서 근무함으로써 센터가 사유화되지 않고, 공공의 시설이라는 인식이 실현되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순환보직/근무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수평적인 조직구조로서 시설장과 생활복지사가 서로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경력이 쌓이면 시설장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종사자들이 센터를 이동하면서 근무하게 되면, 센터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

처음에 만들 때부터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모델을 한

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사협C3) 순환보직제도라는 게 있어요. 저희 지역아동센터랑 다돌 센터랑 계시는 분들이 3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해요.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라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 그런 부분이 저희 공공성이나 투명성 확보에 굉장히 주력을 한 것 같아요. (사협C2) 법인 안에 있지만 한 곳에서 계속 있다 보면 고인물이 썩는다고 하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을 해요. … 수평구조라고 하는 게 센터장을 했다가도 생활복지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생활복지사 하시던 분도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센터장을 하시고 또 센터장 하다가 생활복지사로 가서 실무를 좀. … 센터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책임감이 좀 무겁잖아요. 책임이라는 거를 조금 내려놓고. 생활복지사로서 좀 쉴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센터장 하면서 또 열심히 일하고. 이런 순환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사협C1)

교사를 뽑을 때도 … 우리 안에서 다 동의를 선생님들이 해 주면 OO과 ㅁㅁ도 다 순환이 될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수평의 관계가 좀 전망이 생기는 거죠. 생활복지사로 왔지만 센터장이 될 수도 있고 두 개 센터가 같이 공유를 하니까 투명성이 없을 수가 없고 공공성이 떨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질문하니까. 거기는 월급을 얼마 받아요. 거기는 그런데 글 쓴 거 보니까 왜 생활복지사가 제대로 출퇴근 안 하고 이렇게 그런 건 직무 유기가 아니에요 이런 게. 다른 센터에도 제안이 되고 서로 다 얘기가 되니까 개인적인 관계나 이득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게 저희는 엄청난 법인 전환의 공공성으로 확 달라지는 거죠. (사협B)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절차적 공공성은 ③ 공동급식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지역사회 사회적기업이나 지역주민을 통해 센터 급식을 공급하게 되면, 급식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지역사회 연대 측면에서도 공공성이 강화된다.

급식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 운영 센터 모두가 지역의 사회적기업 도시락업체에 급식을 위탁하고 있다.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사회 연대라는 측면에서도 공공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저희 운영 방식의 또 다른 특징은 공동급식. 2009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 지역아동센터 비리의 제일 큰 온상인 급식비를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그때 같이 출발을 했던 사회적 기업 형태의 도시락업체가 있어요. 행복담는네모 라고 해서 sk에서 지원을 받아서, 거기도 실험이었죠. 지금은 저희 5군데 모두 공동급식 형태로 하고 있고 약간의 간식비를 제외한 급식비 금액을 통으로 행복담은네모에 다 토스를 하고 거기서 영양사가 짜고 저희는 급식회의를 통해서 계속 꾸준히 수정하고 (사협C3)

4.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의 숙제/어려움

가. 조합원 간의 동질성 유지

협동조합 초창기에는 수년에 걸쳐 같이 만나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다면, 점점 사업이 확장되어가면 신규 직원을 조합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들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냥 지역아동센터에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류나 짧은 시간 면접으로 조합에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 *공개 채용 당시 면접이나 이런 걸로는 그 사람을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당장 여기 공석이 생겼으니까 빨리 채용을 해야되는 상황이고. 면접 당시 지역아동센터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여쭤봤을 때 거의 모르시는 분이에요 … 정말 우리한테 흡수가 될지, 교육을 통해서 흡수가 될지 아닐지 (사협C2)*

> *이전 사람들(초창기 멤버들)은 조그마한 가치관의 고리들이 있는데 이후 사람들(공개 채용)은 그런 것조차도 없으니까 사회적협동조합에 이해도 없고 그냥 직업으로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걸러낼 수가 없거든요. 면접이나 이런 데서는. … 신규 조합원들을 키워내고 같이 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사협C3)*

또한, 사람을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용 이후에 조합원 교육 등을 통해 조합이 지향하는 가치와 운영 철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합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 *우리의 과제 자체가 우리 조합의 가치관에 맞게 우리와 함께 하는 이런 동료를 만나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자.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저희 조합 내에서 브레인이신 이제 사무국장님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원들과 고민해서 하지 않으면 사실 조합 자체도 미래가 밝지는 않은 거죠. 지금까지는 초창기 이런 의욕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 사회적협동조합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적인 고용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조합원 교육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사협C3)*

신규 직원 선발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개별 센터에서 채용하던 인사시스템을 법인 대표와 이사, 시설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변경하였다.

> *각 센터에 인사권을 주니까 사람마다 [심사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조합의 이런 것보다는 우선 내 센터를 이렇게 하기에 수월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 인사 원칙을 세운 게 신규 채용할 때는 법인 대표, 그리고 법인의 이사 한 명, 시설장 이렇게 3명이 하게끔 인사제도 바꿨거든요. (사협C3)*

처음부터 뜻을 같이 해 온 사람들과 나중에 직장으로 들어 온 사람들 사이의 공유하기 어려운 간극이 있다. 또한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합 조직과 조합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어렵다. 사람 문제가 가장 어려운 숙제이다.

> *법인이 처음부터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가치 비전과 철학을 전체와 워크샵을 하고 몇 번의 동의를 거쳐서 뽑은 다음에도 면접을 볼 때도 계속 얘기해서 가치를 만들지만 개인이 한계가 있거나 못하겠으면 법인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개입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니까 단점은 그런 거고 그런데 내가 발전할 수 있고 이 안에서 나도 하나의 조합원으로서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법인이지만 내가 조합원이잖아요. 내거잖아요. 그니까 충분히 펼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또 수준과 역량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이슈는 이 사회적협동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까. (사협B)*

> *저희가 가치관 공유나 교육 이런 게 없으면 되게 개인적으로 힘들어지는 부분이 활동의 의미나 … 활동가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에 동기부여가 계속 되지 않으면, 어떨 때는 이 상태에서 종사자로 가라 그러면 '아,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또 13명의 실무자 조합원이 가치관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 저희가 끊임없이 교육을 했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사회 활동 이런 거에 가치관을 두고 시작했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생기시는 거예요. 그냥 직업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다른 데와 다르게 생활복지사 몇 년 근무하면 시설장이 되더라. 이런 분들도 생기시니까. 저희가 아무리 건강하게 조직을 운영한다고 해도 조직 내에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저희의 계속 따라오는 고민들인 거죠.(사협C3)*

나. 부모(보호자) 조합원 참여

다중이해관계자에 후원자로 참여하는 부모는 있지만, 부모 자격으로 참여하는 조합원은 없었다. 출자금에 대한 부담도 있고, 조합 입장에서 부모는 필요와 욕구가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함께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부탁을 하면 당연히 들어오실 분이 두세 분은 있어요. … 그런데 조합원은 조합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선뜻 들어와 달라고 말씀드리기가 뭐 하더라고요. … 물론 10만 원 내도 되고 5만 원 내도 되는데. 나중에 청산 과정에서 또 불편할 수 있고 그래서 부모님 조합원은 그냥 넘기고 자원봉사자 정도 들어와 계시죠(사협C)

아직까지는 저희가 한 2년 정도는 활동이 좀 정립될 때까지는 부모 조합원을 아직 안 뽑았어요. (사협B)

V. 정책 개선 및 제안

본 연구에서는 개인시설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지역아동센터들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협동조합의 가치 실현을 통해 아동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여러 센터들이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향해야 한다. 지역의 돌봄을 함께 하는 여러 센터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하나의 조직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센터들간의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아동돌봄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1조합 다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센터들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사무국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무국의 역할 중에는 조합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협동조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설립 초기 조합원과 센터의 종사자로 채용되는 조합원 간 동질성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조합원 교육이 … 사회적협동조합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같은 생각으로 모여서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생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업인데 이걸 소홀하게 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깨질 수밖에 없다. … 일조합 다센터와 일정 규모 이상의 1조합 다센터에는 필히 사무국을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해야지. 1조합 다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사무국은 브레인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중간 지원 조직이고 브레인이라서 이 브레인을 계속 유지를 하고 살려줘야지 이 사람들이 이 가치관들 계속 공부하고 뭐가 공공성인지에 대해서 터득을 하고 … 그거를 이 사람들 스스로는 안 되니까 이 중간지원조직인 사무국을 키

워줘야 되는 거고 유지해줘야 되는 게… 인센티브 60만 원 70만 원 줘도 아무 소용없다 (사협C3)

법인 사무국에 인력을 배치한 조합들의 경우, 사무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역아동센터 인력이 사무국 일을 할 수는 없다. 이사회를 하고, 후원금 모집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이런 일을 수행할 상근 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법인의 일은 센터의 일과 성격이 달라서, 법인에서 운영 센터들의 허브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센터들이 간과하는 게 협동조합 법인만 만들어 놓으면 끝. 이렇게 하는데, 조직을 만듦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본인들이 각각 부담을 하던지 아니면 그걸 전담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협C2)

제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을 해보니까 인가받는 순간부터 일이 막 생겨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유통사업 했으니까. 부가가치세도 내야 되고 법인세도 신고도 해야 되고.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랑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사협B)

지정 후원금 후원처 해가지고 후원 신청서 내서 후원 받으려면 상근자라도 한 명 있어야 하는데 근데 센터들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사업은 해놨어요. 이사회를 하려해도 공지를 해야 되고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다 일인 거예요. (사협B)

협동조합이란 그게 굉장히 범위가 넓고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도 계속 [조합원] 교육을 해야 되고 … 교육팀을 아예 꾸리자 … 또 이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사무국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사업팀을 또 이렇게 구성을 해서 … 또 협동조합에 대한 우리도 이제 컨설팅이 들어오면 그것도 해야 되고 … 센터 일이랑 이거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좀 업무가 좀 과중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사무국에서 허브 역할이 되어 줘야지만이 센터가 숨을 좀 쉴 수 있는 여건 (사협C1)

특히 1센터 1조합의 경우, 조합 업무를 수행할 여유 인력이 없다. 여러 센터가 모일 때에는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된다. 센터 운영만으로도 바빠서 법인에서 따로 일을 도모하기 어렵다. 더하여 1조합 1센터 기관의 경우에는 법인의 일이 더 추

가된 것이다.

> *지금은 센터 운영하는 게 너무 바쁘니까. 센터 안에서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법인의 주담당자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법인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센터 사회적협동조합과 지역아동센터의 관계가 … 한 센터 한 조합은 센터가 하는 일이 법인이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라 지금은. 이렇게 하다가 법인에 이사회가 열린다 그러면 이 안에서 다 연락하고, 서류 행정 작업하고 알리고 모이고 이걸 센터에서 다 중복적으로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협D)*

사회적협동조합 안에 지역사회 여러 센터가 들어가 있으니, 필요한 지역에 개소하고 폐업하는 게 수월해질 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 아동돌봄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경쟁이 아니라, 협업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즉 아동수가 줄어드는 센터는 통폐합하고, 대신 돌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개소할 수 있는 유연성이 조합 안에서 이뤄질 수 있다.

> *OO구에도 요번에 융합형을 만들면서, 그 지역에 융합형 큰 게 하나가 생기면 지역아동센터가 짜잘하게 있느니 그냥 한두 개를 없애고 다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하나는 없애고 들어갔거든요. (사협B)*

그밖에 몇 가지 제안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당시에는 행정적 처리에 초점을 맞추느라,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으나, 조합을 운영하면서 교육을 받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 전에 교육이나 가치 공유 등의 과정이 미흡했다면, 이를 설립 이후에 채워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1조합 1센터뿐만 아니라, 1조합 다센터의 경우에도 일단 개인 운영 시설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니까 했을 뿐, 법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개별 센터는 정부지원금으로 해야 할 업무가 정해져 있다면, 여러 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은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다. 물론 법인 사무국 운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센터 단위로 하지 말고 조합 단위로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이제. 오늘은 그걸 얻었어요 제가. … 법인 차원에서 좀 해봐야겠다. 지역 일을. (사협D)*

둘, 현재 진행되는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사업〉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관은 전

국 150개, 시도별로 분배하여 서울의 경우 15개소가 지원받았다.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보다는 권역별로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장에는 더욱 유용할 것이라고 한다.

> *돈보다 사람을 지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가 우리 센터에만 고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권역별로 있으면(사협C)*

셋,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과 지역아동센터의 취약계층 범위가 다르다. 상이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 기준과 협동조합기본법 상 취약계층의 정의가 다르다. 맞벌이부부 자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보다 넓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취약계층돌봄서비스제공형으로 인가받은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사협A는 이러한 이유로 인가 이후 취약계층돌봄서비스 제공형에서 지역사업형으로 정관을 변경하였다.

>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제공형 그걸로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아동 비율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정 차상위를 협동조합법에 따르다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기준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걸 맞추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조합 사업을 할 때 운영의 제한이 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역사업형으로 유형을 바꾸다 보니까…(사협A)*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실질적으로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능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에 적절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지원·오윤섭·손호성·김경래(2017).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홍성민·이정은·김성오·김예슬·안영(2020). 사회적협동조합 모형을 활용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선경·박정민(2018).“Q방법론을 활용한 공공성 인식유형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1), 1-21.

김치영·김선미(2014). “지역아동센터 발달과정과 발전방향 연구”. 아동교육, 23(4), 243-261.

남찬섭(2020).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와 공공성”. [2020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기획세션 발표 원고. 59-96.

박태정·박형원·이희연(2010).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지역아동센터의 운영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3, 75-109.

손지아(2019).“사회복지에서‘공공성’개념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 비판사회정책, 62, 131-155.

송이은(2019).“지역아동센터, 위기인가 기회인가”. 월간 복지동향, 252, 19-29.

송이은·이지혜(2017).“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 마련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선미(2016).“돌봄의 특성과 돌봄 공공성의 요건”. 사회와 이론, 29, 223-250.

이선미·박경희(2017).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문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NGO 연구, 12(2), 127-164.

이성은(2019). “보육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평가과정 개선방안과 정책적 과제”. [2019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원고. 463-478.

이아승·심미승(2020).“육아공동체에서 대안적 돌봄 가치 연구: 현상학적 체험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행정학보, 3, 197-224.

정익중·홍나미·강지원(2018).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확대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이화여자대학교.

조용훈(2012). 기독교 도시빈민공동체운동의 현황과 미래적 과제에 대한 연구. 신학사상, 0(0), 117-151.

주현정·김용득(2018). “공공성 담론으로 보는 돌봄서비스: 상호의존의 조직화와 공동생산 제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2), 233-262.

홍나미·정익중·김시아·김지선·강지원(2019).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인식에 대한 포토보이스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7, 91-13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구지원사업-2021-02]

소양강댐 주변지역 사회적경제 방문의료 중심 통합돌봄 시범사업 운영 사례 연구

김상섭[1], 길민아[2], 정성림[3]

1)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혁신사업팀 팀장
2)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혁신사업팀 대리
3)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혁신사업팀 대리

〈요약〉

1. 연구배경

□ 한국사회의 초고령사회로의 전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실행

ㅇ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7%이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 추세임

- 2025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전망됨
- 강원도는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0%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
- 이에 사회적으로 '살던 곳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 AIP)'에 대한 관심 증가함

ㅇ 보건복지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명 '커뮤니티 케어'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함

- 2019년 16개 기초지자체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전국적·보편적 단계를 목표로 설정함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본 목표는 노인의 독립생활을 강조하고 AIP가 가능한 통합서비스 제공에 있음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구성 요소 중 가장 핵심 요소는 '의료' 특히 '방문의료' 서비스임

□ 강원도 도농 간 양극화 현상 및 소양강댐 주변지역 사회적경제 방문의료 중심 통합돌봄 시범사업 운영 사례

ㅇ 도농 간의 양극화 현상과 돌봄 사각지대

- 강원도 내에서도 농촌인구는 도시 인구보다 더 빠른 고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도농 간 성장의 불균형과 양극화 확대 현상이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농촌은 물리적·지리적 환경 때문에 돌봄 대상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소양강댐과 같은 대형댐 주변지역은 공적 돌봄 체계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어 대표적인 돌봄의 사각지대임

ㅇ 2020년 '소양강댐주변지역 사회적소외층 방문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이하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운영 사례

- 2020년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K-water 소양강댐지사의 댐주변지역 주민생활지원사업을 위탁받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주관하였음
- 강원도 사회적경제 의료기관인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기관으로 방문의료 서비스를 시행함

- 댐주변지역에 소재한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은 마을공동체형 돌봄모델 구축 및 대상자 모집을 위해 협력기관으로 참여함
- 춘천 사회적경제 의료기관 및 사회적경제 돌봄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 주도의 '통합돌봄 TF'구성

2. 연구목적

□ 강원도 사회적경제 방문의료 중심 마을(농촌)공동체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개발 및 확산 방안 모색을 위한 운영 사례 축적

○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의 실제 사례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대표적 돌봄 취약지역인 댐주변지역 통합돌봄 운영 사례 조사
- 사회적경제 방문의료 서비스의 성과와 결과에 대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 및 사례 축적

○ 마을(농촌)공동체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위한 모델 및 사회적경제 연계 방안 제시
- 2020년 댐주변지역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파편적인 자료와 성과의 학술적 차원에서 사례 중심의 연구결과로 재구성
- 참여인력 면접조사를 통한 보완 과제 도출 및 사회적경제 연계 방안 모색

3. 연구방법

○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조사
- 개념과 이론적 기초 구축 및 연구의 차별성 도출

○ 기초통계자료분석 등 양적조사방법
- 시범사업 내 방문의료 서비스 결과와 성과의 정량적 사례축적

○ 면접조사 등 질적조사방법
-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회적경제 현장 활동가 대상의 면접조사를 통한 질적 사례 축적

4. 연구내용

□ 연구 목차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1장 서론
- 문헌 연구를 통한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배경, 목적, 방법

○ 제2장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추진 배경 및 지역 현황과 현안
-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주변지역의 인구·사회적 현황과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추진배경

○ 제3장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방문의료서비스 사례 분석 및 성과
- 기초통계자료분석을 통한 방문의료 사례 축적

○ 제4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향 및 과제
-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현장 활동가의 면접조사를 통한 시범사업의 평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향 모색

○ 제5장 결론

5. 기대효과

○ 학술적·정책적·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 측면에서의 효과 기대
- 학술적 효과: 현장 기반의 사회적경제 방문의료의 실증적 사례 연구
- 정책적 효과: 향후 강원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사례 축적 및 자료 확보
- 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 효과: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마을(농촌)공동체형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과 연계방안 제시

제1장 서론

한국사회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살던 곳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 AIP)'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김형수 외, 2020: 178; 남춘호, 2020: 523).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계획 일명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노인돌봄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오봉욱, 2020: 24).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란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정의된다(보건복지부, 2018; 2020). 커뮤니티 케어는 기존 노인돌봄 서비스와 체계가 매우 분절적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모아져 나타난 결과이며(오봉욱, 2020: 24), 의료서비스와 노인의 독립생활을 강조하면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에 맞는 통합서비스 제공 모델의 마련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조원희·가와쿠보 히로시, 2020: 212).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전국 16개 기초 지자체의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보편적 단계를 구상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정책적 변화와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오현정 외, 2020:195; 남춘호, 2020: 523). 그러나 농촌은 도시와 달리 돌봄 대상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지리적 환경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선도사업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시·군·구 단위 돌봄 체계와 민간 기관 중심의 전문가 네트워크만으로는 물적·인적 자원이 부족한 농촌 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계층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없으며,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돌봄체계에서는 면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김남훈·하인혜, 2020; 김남훈 외, 2020: 5)

이상의 맥락에서 통계청(2020)이 발표한 '202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강원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30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0%를 차지해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강원도 내에서도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더 빠른 고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지역 내에서도 공간적으로 불균형적 성장과 양극화 확대 현상이 지

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소양강댐과 같은 대형댐 주변지역은 댐이 가지는 특성상 물리적·지리적 환경의 불리함, 물적·인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돌봄 서비스의 접근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공적 돌봄 체계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돌봄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지역별 인구고령화 수준과 지역자원 수준을 우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본 목표는 의료서비스와 노인의 독립생활을 강조하면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구축에 있으며(조원희·가와쿠보 히로시, 2020: 212), 연구 주제와 관점에 따라 다소 간 차이는 있지만 '의료', 특히 '방문의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구성 요소들 중 가장 핵심 요소라는 견해에는 이견이 없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20년 강원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강원사경센터)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에서 댐주변지역 주민생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주·위탁한 "소양강댐주변지역 사회적소외층 방문의료서비스 시범운영[1]"의 기획 및 사업주관을 맡아 사회적경제 주도의 방문의료가 결합된 댐주변지역 통합돌봄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다.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은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진행되었으며, 방문의료서비스는 당해 연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소양강댐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춘천시 법정리 30개 리 중에서 3개 면, 1개 읍 소재 14개 법정리 거주민 114명을 대상으로 283회의 방문의료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이자 분석 대상인 2020년'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획과 운영의 주체였다는 데서 기존의 유사 시범사업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에는 강원사경센터 이외에 강원도 대표 사회적경제 의료기관인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원주의료사협)이 참여기관으로 방문의료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실제 소양강댐 주변지역인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에 소재한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이하 춘천별빛사협)이 대상자 모집 및 마을공동체 돌봄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였다.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을 계기로 춘천 지역사회에서는 사회적경제 당사자 중심의 돌봄 조직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합돌봄TF'를 구성·운영하였고, 이후 춘천사회혁신센터에서 도심형 돌봄

1) 최초 기획안과 사업계획서는 2019년 9월 K-water소양강댐지사의 의뢰와 협의를 거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작성하였으며, 당시 사업명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문의료 및 마을공동체 통합돌봄서비스 시범운영"이었다. 이후 K-water와의 최종 조율 및 협약 과정에서 사업내용은 원안대로 시행하되 사업명칭을 "소양강댐주변지역 사회적소외층 방문의료서비스 시범운영"으로 변경하였다.

모델로 기획한 '케어카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은 기존 의료 및 공적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여 각기 따로 제공하던 각종 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할 필요성으로 추진되었으며, 대상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치료와 간호, 요양 및 일상생활 돌봄을 지역사회 안에서 제공함으로써 대상자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김남훈 외, 2020: 4). 그러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대상자의 요구를 조사한 연구는 드물며, 현장 중심의 실제 사례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김형수 외, 2020: 178).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복지'가 별개가 돼서는 안 되며, 따라서 '의료복지통합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돌봄과 의료의 결합의 방식과 역할의 구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사례 연구조사가 미비해 여전히 미지수이다. 나아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실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의 우수 사례 및 우수 프로그램의 공유가 필요하며, 서비스 전달체계 관리자와 학계 그리고 실천 전문가의 협력 하에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차후 방향을 논의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돌봄서비스 실천 관계자, 참여 인력에 의한 연구가 진행되어 현장 기반의 실증적이고 사례 중심의 자료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오봉욱, 2020: 29-30 참조).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2020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조사 하고 보다 객관적 틀 내에서 사례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돌봄 체계와 돌봄 자원이 부족한 강원도 농촌지역에서 마을단위 공동체와 지역의 사회적경제 자원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의 구성과 연구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2020년'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대상지역의 사회·경제·인구학적 현황을 토대로 시범사업의 시행 배경과 추진과정을 소개하고,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마을(농촌)공동체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2020년'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방문의료서비스 사례 조사 및 성과 분석을 위해 방문의료서비스 이용자의 현황, 주요 사례 및 만족도 조사 등 기초통계자료분석을 통해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성과와 사례를 축적하고 의미를 도

출한다.

제4장에서는 2020년'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회적경제 조직 및 협력기관의 주요 돌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질적연구방법론을 통해 정성적 차원에서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평가와 함께 관련 사례를 축적하고, 향후 강원도 마을공동체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향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 자원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기대 효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과제 및 사회적경제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참여 연구자 모두는 2020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주관기관인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혁신성장본부 혁신사업팀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의 참여 연구자 모두는 2020년 시범사업의 사전 준비단계인 기획에서부터 춘천지역 사회적경제 돌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방문의료 서비스 지원, 그리고 만족도조사 시행에 이르기까지, 2020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운영의 총괄과 실무 그리고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 실천관계자, 참여 인력에 의한 연구의 진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신진연구자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연구자 모두는 이번 연구조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요 개념과 이론을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결합시킴으로써 개개인의 학술적·실천적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이번 연구사업의 참여가 향후 강원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활동가로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획과 설계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경험적 자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제2장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추진 배경 및 지역 현황과 현안

1. 한국사회 고령화 현황 및 현안

한국에서 고령사회는 다가올 전망이나 이슈가 아니라 현재 직면한 현실이자 현안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한국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기 직전 해인 1999년 「노령화 실태와 노인복지 대책」의 제하로 전국 일간신문에 실린 기사의 내용이다.

> *통상적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 부른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3백5만 명으로 전체의 6.6%였으나 내년 중에는 7%를 돌파하고 2022년엔 14.3%에 달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에 비해 무척 빠른 것이다(동아일보, 「노령화 실태와 노인복지 대책」, 1999.02.03. 8면 기사).*

그러나 2020년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고령자 통계」 내용에 따르면 2020년 당해 연도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5.7%로 조사되었고,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며, 206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 절반에 가까운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보도자료, 「2020년 고령자 통계」, 2020.9.28). 이처럼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전환은 2005년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거시적으로 사회·경제·지역 등 모든 측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각 측면에서 구조적 차원의 문제가 발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응코자 노무현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성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2005년 5월에 제정하였다.[2]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목표 및 중장기 방향 수립을 위해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인구 정책의 근간이

2) 2005년 5월에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책임지는 주체로 규정하였다(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참조).

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3], 현 문제인 정부에서도 2020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5년간(2021~2025년)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고령화가 전체 인구 구성비 중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할 때, 이는 필연적으로 그 사회의 저출산 추세와 연동되어 발생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고령화와 저출산이란 두 함수의 역학관계는 사회구조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개인·심리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거시·미시적으로 다양한 사회 경제적·제도적·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천광역시, 2017: 6쪽 참조). 이에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이미 한국보다 빨리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여러 나라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령화와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그 해결책들을 꾸준하게 모색·접근해 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개선된 결과들을 가시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고령화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추세와 맞물려 있어 이러한 문제를 반등시킬만한 정책적 개입은 결코 쉽지 않다. 고령화 선진 국가들의 여러 사례를 통해 볼 때 인구를 늘리는 정책적 개입은 보통 20여 년이 흘러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목전인 현 한국의 시점에서 고령화·저출산 문제의 해결 혹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적 도출과 적용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윤민석, 2016: 18~22쪽 참조).

2. 춘천시와 소양강댐 주변지역 인구 현황 및 고령화 추이

현재 한국의 고령화 상황은 각종 통계 수치와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 속에서도 평균의 함정은 존재한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고령화 추세는 평균으로 수렴되지만 지역별 양상과 지역 내 고령화 추이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실례로 통계청의 2020년 기준 전국 '시도/시/군/구'별 고령인구비율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비율 전국 평균이 16.4%인데 비해, 강원도 고령인구 비율은 20.7%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전반적 사회·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매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제1차년도(2006~2010)에는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구축, 제2차년도(2011~2015)에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공고화, 제3차년도(2016~2020)는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에 초점을 두었으며(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다. 이에 비해 도시화가 집중·집적된 수도권 및 특별자치시도와 광역시의 경우 부산(19.4%)과 대구(16.6%)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고령인구비율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추세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강원(20.7%), 전남(23.5%), 전북(21.4%), 경북(21.7%)처럼 상대적으로 농산어촌 비중이 크고 인구유입 유인이 적으면서 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거나 그 문턱에 직면해 있다.[4)]

이와 같은 현상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유사성을 나타낸다. 실례로 강원도의 행정구역인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7개의 시, 11개의 군)의 인구 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원주시, 춘천시, 속초시를 제외한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든 지역이 각 시군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행정구역별(시도/시/군/구) 고령인구비율(전국/강원)

행정구역별	고령인구 비율(%)	65세이상 인구(명)	전체인구(명)	행정구역별		고령인구 비율(%)	65세이상 인구(명)	전체인구(명)
전국	16.4	8,496,077	51,829,023	강원도	춘천시	17.9	50,567	282,765
서울특별시	16.1	1,561,139	9,668,465		원주시	15.1	53,390	354,376
부산광역시	19.4	657,711	3,391,946		강릉시	21.3	45,484	213,321
대구광역시	16.6	400,494	2,418,346		동해시	20.2	18,293	90,593
인천광역시	14.0	411,483	2,942,828		태백시	25.2	10,760	42,719
광주광역시	14.2	205,666	1,450,062		속초시	19.2	15,874	82,665
대전광역시	14.4	210,784	1,463,882		삼척시	25.4	16,572	65,243
울산광역시	12.6	143,367	1,136,017		홍천군	26.2	18,133	69,242
세종특별자치시	9.8	34,881	355,831		횡성군	29.5	13,701	46,472
경기도	13.2	1,775,315	13,427,014		영월군	29.7	11,498	38,662
강원도	20.7	319,691	1,542,840		평창군	28.4	11,831	41,681
충청북도	18.0	288,148	1,600,837		정선군	28.0	10,317	36,870
충청남도	19.1	405,188	2,121,029		철원군	22.8	10,171	44,699
전라북도	21.4	386,203	1,804,104		화천군	22.6	5,609	24,857
전라남도	23.5	435,880	1,851,549		양구군	21.1	4,702	22,278
경상북도	21.7	573,715	2,639,422		인제군	20.6	6,530	31,694
경상남도	17.4	580,258	3,340,216		고성군	29.7	7,945	26,757
제주특별자치도	15.7	106,154	674,63		양양군	29.8	8,314	27,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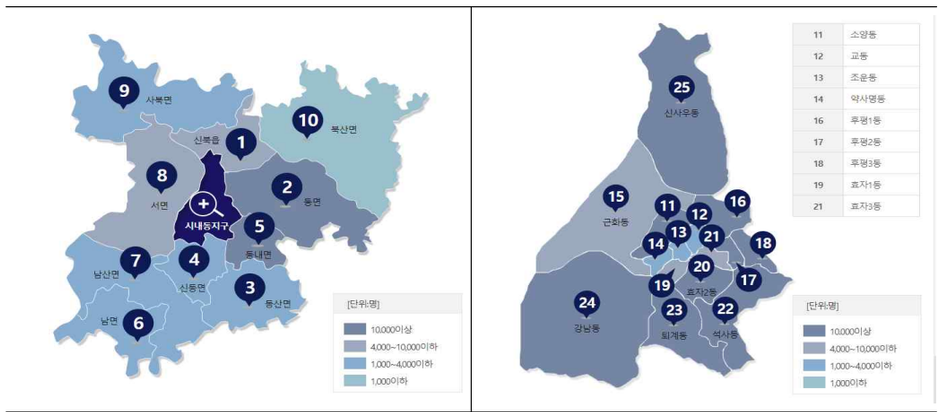
*자료출처: 통계청(KOSIS)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통계자료(https://kosis.kr)

4)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2020.9.28) 참조,

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이자 '2020년 소양강댐주변지역 방문의료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인 춘천시도 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기준 춘천시 전체 인구 282,765명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50,567명으로 17.9%의 고령인구 비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당해 연도 전국 평균 수치인 16.4%보다 다소 높은 편이지만, 강원도 내 18개 지방자치단체 중가장 낮은 고령인구 비율을 보인 원주시(15.1%) 다음으로 젊은 도시에 속한다. 그러나 춘천시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25개 읍·면·동별 인구 동향을 보면 도심과 농촌지역의 인구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춘천시는 행정구역상으로 도심에 위치한 15개의 동과 도심을 둘러싼 10개의 읍면(1읍, 9면)으로 구성된다. 도심은 다시 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원도심과 거주단지의 조성 등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진행된 신도심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근래 도심 주변의 면지역에 진행된 택지조성과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새롭게 형성된 신규 신도심 지역(동면, 동내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 춘천시 행정구역 현황 및 인구수 지도



춘천시 읍면별 현황 및 인구수 지도(1읍, 9면) | 춘천시 시내동별 현황 및 인구수 지도(15동)

자료출처 : 춘천시통계(www.chuncheon.go.kr/chstat/index.chuncheon)

2019년 기준으로 춘천시 읍면동별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당해 연도 춘천시 전체인구 285,585명 중 78.25%인 223,456명이 도심에 해당하는 15개의 동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춘천시 전체 면적 1,116.35㎢ 중 도심으로 분류되는 15개의 동 면적이

4.75%인 53.07㎢임을 감안할 때, 인구의 도심 집중화 현상과 도농 양극화 현상이 춘천시 내에서도 진행되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춘천시 25개 읍면동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춘천시 읍면동 중 '고령화사회(65세 노인 비율 7%이상 14%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은 기존 도심권 내에서도 인기 주거지였던 퇴계동(12.41%)과 석사동(12.91%), 그리고 2000년 중반부터 도심 인근지역에 신도시급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신흥 신도심으로 부상한 동면(11.96%)과 동내면(13.86%) 네 곳 뿐이다. 한편 춘천시에서 '고령사회(65세 노인 비율 14% 이상 20%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은 춘천의 도심을 구성하는 11개의 동 지역으로 조사되었고, 노인 인구비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지역은 모두 열 곳으로 춘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조운동(26.2%)과 약사명동(28.04%)을 제외하면 모두 춘천 외각의 읍면 농촌지역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아래의 〈표 2〉와 같이 춘천시 읍면동별의 고령화 수준을 고령화 범주(고령화마을, 고령마을, 초고령마을)로 유형화 하고 여타 통계수치와 관계 지을 때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 해볼 수 있다. 우선 2019년 기준 춘천시 전체 인구 285,585명을 행정구역별로 배치하고 이를 고령화 범주로 묶어 각 범주별로 인구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고령화동네 121,508명, 고령동네 134,102명, 초고령동네 29,975명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인구 대비 범주별 인구 비율은 고령화동네 42.55%, 고령동네 46.95%, 초고령동네 10.49%를 차지하지만, 범주별 평균 인구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신규)신도심으로 구성된 고령화동네의 평균 인구수가 30,377명인데 비해, 원도심 비중이 높은 고령동네의 평균 인구수는 12,191명으로 거의 2.5배 차이를 보였으며, 도심 외곽의 농촌 지역에 해당하는 초고령동네의 평균 인구수는 2,997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춘천시 내에서도 도심과 농촌, 구도심과 신도심 등 거주 환경과 지역에 따라 인구의 편중 현상과 고령화의 편차가 대단히 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춘천시에서 가장 적은 인구를 지닌 남면(1,108명)과 북산면(975명)의 경우 고령화 비율이 각각 41.16%와 41.95%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표 2〉 춘천시 행정구역별 인구 동향 및 의료기관 현황 통계(자료출처: 춘천시통계)

	행정구역	인구(명)		고령화		의료 인력수*(명)	의료기관 현황(개)		지역 특징	비고
		지역 인구	65세이상	비율(%)	수준		병원수**	병상수		
합계	**춘천시**	**285,585**	**47,645**	**16.68**	**고령사회**	**4,003**	**326**	**4,305**	**도농복합도시**	
1	동면	19,918	2,382	11.96	고령화 동네	166	9	537	신규 신도심	댐주변 지역
2	퇴계동	47,101	5,844	12.41		194	39	187	신도심	
3	석사동	36,768	4,745	12.91		324	64	245	신도심	
4	동내면	17,721	2,456	13.86		59	11	32	신규 신도심	댐주변 지역
소계	**4**	**121,508**	**15,427**	**12.67**		**743**	**123**	**1,001**		
5	후평2동	15,431	2,168	14.05	고령 동네	60	10	-	도심	
6	신사우동	20,664	3,230	15.63		139	13	154	신도심	
7	후평3동	21,468	3,437	16.01		56	21	8	도심	
8	강남동	17,275	2,867	16.60		201	28	364	도심	
9	근화동	9,095	1,575	17.32		5	1	-	원도심	
10	소양동	10,562	1,879	17.79		135	21	202	원도심	
11	효자3동	5,139	928	18.16		1,048	5	673	도심	
12	효자1동	4,785	914	19.10		72	10	66	도심	
13	효자2동	12,916	2,547	19.72		122	9	277	도심	
14	교동	4,296	849	19.76		767	1	401	원도심	
15	후평1동	12,471	2,468	19.79		56	10	37	도심	
소계	**11**	**134,102**	**22,862**	**17.05**		**2,661**	**129**	**2,182**		
16	조운동	3,046	798	26.20	초고령 동네	195	40	1	원도심	
17	신북읍	8,038	2,172	27.02		4	1	-	농촌	댐주변 지역
18	약사명동	2,439	684	28.04		142	27	44	원도심	
19	신동면	2,603	740	28.43		-	-	-	농촌	
20	남산면	3,648	1,163	31.88		3	1	-	농촌	
21	동산면	1,547	551	35.62		145	2	583	농촌	
22	사북면	2,604	929	35.68		29	1	93	농촌	댐주변 지역
23	서면	3,967	1,454	36.65		81	2	401	농촌	
24	남면	1,108	456	41.16		-	-	-	농촌	
25	북산면	975	409	41.95		-	-	-	농촌	댐주변 지역
소계	**10**	**29,975**	**9,356**	**31.21**		**599**	**74**	**1,122**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 종합병원, 병원, 의원, 특수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부속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편 이러한 고령화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돌봄서비스와 비례관계에 놓이거나 혹은 아주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다. 실례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1인당 평균 1.9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만성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노인 비율이 전체 노인의 84.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21). 즉 우리나라 노인 인구 1인당 평균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사망시까지 보유하는 현 고령화 시대에서는 의료서비스 특히 노인전문의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지속적으로 제공 받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실제 삶과 일상에서도 매우 중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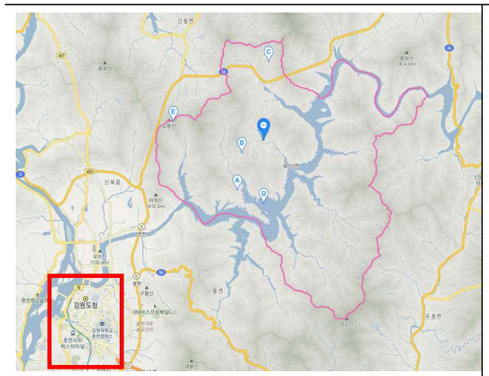
그러나 위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춘천시의 경우 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의료자원(의료기관·의료인력)과 지역별 고령화 수준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 2018년 기준으로 춘천시에 등록된 전체 병원수 326개 중 91.7%에 해당하는 299개의 병원과 전체 의료인력 4,008명 중 87.7%에 해당하는 3,516명이 도심지역인 15개의 동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농촌과 근린지역인 10개 읍면의 경우 평균 고령인구 비율이 20.46%로 초고령사회에 해당하지만 병원 27개, 의료인력 487명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과 이용에서 도농 간 불평등 현상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와 직접적 연관을 갖는 춘천시 소양강댐 주변지역 5개면(동면, 동내면, 신북읍, 북산면, 사북면)의 경우 총 인구수 49,256명, 의료기관 22개, 의료인력 258명으로 춘천시 전체 대비 각각 17.26%, 6.45%, 6.75%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역 중 2000년대 중반 신규 신도심으로 조성되어 고령화 비율이 현저히 낮고 의료자원의 접근과 돌봄·교통 등 공공서비스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동면'과 '동내면'을 제외하면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실제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수 11,617명의 '신북읍', '사북면', '북산면'의 평균 고령화율은 30.21%로, 당해 연도 춘천시 평균 고령화율 16.68%보다 그 비율이 1.8배 높고, 의료자원이 집중된 도심지역(15개의 동)의 평균 고령화율 15.63%보다 1.9배 높은 통계수치를 보였다. 그럼에도 위의 세 지역에 입지한 의료자원은 의료기관 2개, 의료인력 33명에 불과해 보건·의료자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이 도심 외곽의 농촌지역이면서도 지리적으로도 소양강댐 주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춘천 내에서도 대표적인 교통 취약지역으로 꼽힌다.[5] 따라서 지역의 의료자원인 병원과 의료인력의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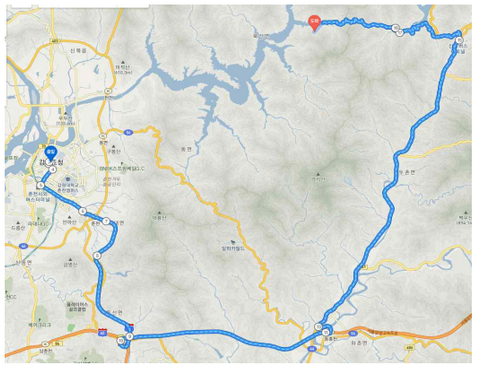
5) 실례로 춘천지역 소양호 대부분을 포함하는 북산면은 그 인근으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과 접해 있다. 이 중 조교리, 대곡리, 물로리, 품걸리, 대동리 등 소양호 남쪽에 위치한 마을의 경우 주변 환경이 소양호와 높은 산으로 막

대 다수가 도심에 위치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지역 주민(노인)들이 병원까지 가는 거리, 이동방법, 그리고 병원에 가기까지의 시간적 노력 등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림 2〉춘천시 소양강댐 주변지역인 북산면 지리적·환경적 특성(지도출처: 카카오맵)



춘천도심(붉은 박스), 북산면(보라색 권역), 소양호



춘천시내 ↔ 북산면 조교리 길찾기 지도(파란실선)

우리나라는 의료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넓은 면적, 적은 인구'가 특징인 농어촌 지역에는 의료기관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이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에 집중되며, 공공의료기관 역시 인구를 기준으로 배치됨으로써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민간은 물론 공공의료기관 조차 이용하기 쉽지 않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이 입지하더라도 규모가 작아 필요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안석·김남훈·김유나, 2019: 6쪽 참조). 실제 춘천의 경우 10개 읍면에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지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리(里) 단위에는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일반환자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 만성질병환자의 요양지도와 관리를 위해 13개의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 기관인 보건지소만 하더라도 읍면 단위에 1개씩 존재하고 있어 농촌지역 특히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접근성의 제약이 있다. 또한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지만 시설과 자원의 한계로 기본적인 혈액검사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검사의 한계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진료

혀 있어 차량을 이용해 춘천 시내까지 이동할 경우 홍천군을 경유해야만 한다. 이들 지역은 춘천시내와 지도상 직선으로 20~30km 거리이지만, 도로상 실 이동거리는 60~80km에 해당하고, 춘천 소재 지역이지만 차량 이용시 춘천시내까지 약 1시간 4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대표적인 교통 취약지역이다.

의뢰서와 약 처방전 발급에 한계가 있다. 하위기관인 보건진료소의 경우 리 단위에 소재하고 있어 접근성에서는 용이하지만, 보통 간호사가 상주하며 기존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약을 지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제공할 수 있는 약의 종류와 품목이 제한되어 있고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필요한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따른다.

결론적으로 지역의 의료 자원 부족 및 접근성의 제약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는 건강상의 어려움과 연결되며, 이러한 어려움은 농촌과 도심에 사는 지역적 격차로 인한 건강상 불평등과 직결된다(안석·김남훈·김유나, 2019: 4쪽 참조). 특히 소양강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의료기관의 부족, 교통의 불편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더구나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이 지역 노인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료·복지·보건의 영역 그리고 이와 결합한 돌봄 서비스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댐으로 인한 지리적 환경의 불리함, 물적·인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3.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성과

가. 사업개요

국내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989년 6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부터 다목적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고, 1993년 12월 10일 개정한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본격적인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댐주변(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강원도내 지원사업 대상댐은

〈그림 3〉 소양강댐 지원사업 대상지역(법정리 기준)

다목적댐 2개(소양강댐, 홍천댐)와 홍수조절용댐 1개(평화의댐)이며,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총 892억 원이 지원되었다(전만식, 2018: 1-4쪽 참조). 소양강댐 지원사업 대상지역 면적은 약 762㎢로 강원도 내 5개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 인제군, 양구군, 홍천군, 화천군'에 걸쳐 있으며, 이 중 소양강댐 지원사업 구역에 해당하는 마을(법정리 기준)은 14개 읍면의 67개 법정리[6]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소양강댐 지원사업 대상지역 및 구역내 마을현황(법정리 기준, 2019년 적용)

지자체명	세부 현황	행정리
춘천시	**5개 읍면 30개 리**	**97**
신북읍(5)	율문리(5), 천전리(9), 유포리(3), 산천리(2), 발산리(3)	22
북산면(10)	내평리, 청평리(2), 부귀리, 추곡리(2), 오항리(2), 물노리(2), 조교리(2), 대동리, 대곡리, 추전리	15
동면(10)	지내리(3), 감정리(2), 월곡리, 품안리, 품걸리(2), 신이리, 평촌리, 상걸리(2), 장학리(15), 만천리(9)	37
동내면(3)	거두리(14), 신촌리(4), 고은리(2)	20
사북면(2)	고탄리, 고성리(2)	3
인제군	**3개 읍면 14개 리**	**35**
인제읍(4)	상동리(5), 남북리(2), 합강리(3), 덕산리	11
남면(8)	신남리(4), 부평리, 남전리(2), 관대리, 신월리, 상수내리, 하수내리, 수산리	12
북면(2)	원통리(9), 월학리(3)	12
양구군	**2개 읍면 16개 리**	**22**
양구읍(8)	송청리(2), 수인리, 웅진리, 석현리, 공리, 학조리, 이리, 안대리	9
남면(8)	두무리, 심포리, 원리, 도촌리, 구암리, 청리(4), 대월리(죽리,2), 창리(2)	13
홍천군	**3개 읍면 5개 리**	**10**
두촌면(2)	장남리(2), 원동리(2)	4
북방면(1)	북방리(2)	2
화촌면(2)	야시대리(2), 풍천리(2)	4
화천군	**1개 면 2개 리**	**5**
간동면(2)	간척리(3), 오음리(2)	5

* 자료출처: K-water 소양강댐지사 제공

6) 법정리는 법으로 지정한 리(里)를 말하며 변경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정리는 행정편의상 생성·분할이 가능하고 변경시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리'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2020년 K-water에서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소양강댐주변지역 사회적 소외층 방문의료서비스 시범운영사업」(이하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은 K-water 소양강댐지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일회적이고 소모성으로 추진되었던 기존의 주민지원사업의 한계성을 극복하고[7], 지리적으로 교통과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댐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시범운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8]

2020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은 총 사업비 138,180,000원, 전체 사업기간은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이중 방문의료서비스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시행하였다. 사업 추진 및 운영체계는 발주기관 K-water, 위탁기관 K-water소양강댐지사, 수탁기관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방문의료서비스 수행 및 참여기관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협력기관 소양강댐효나눔복지센터와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되었다.

각 기관별 역할 및 업무분장으로 주관기관인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강원사경센터)는 세부사업의 기획·운영, 예산집행, 현장 모니터링 등 사업 총괄운영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지원사업의 핵심 영역인 방문의료서비스 부분은 강원도 유일의 사회적경제 의료기관인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원주의료사협)에서 담당하였다. 사업 주관기관인 강원사경센터와 참여기관인 원주의료사협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중요성 및 대상지역의 지리적·환경적 여건을 고려해 사업기간 동안 방문의료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도록 의사 1명, 간호사 1명, 케어매니저 1명으로 구성된 전문 방문의료팀(호호방문진료센터)[9]을 구성하여 방문의료서비스를 진행하였다. 나아가 지원사업 대상이 댐 주변지역이라는 환경적 특수성, 사회적경제 주도의 방문의료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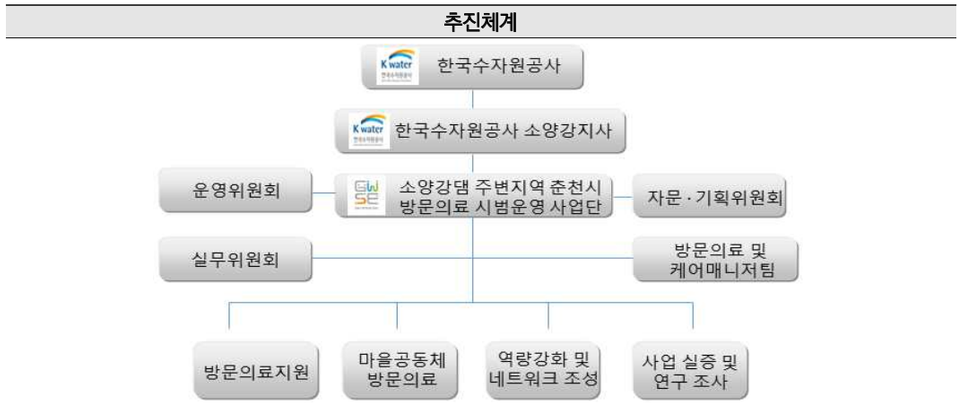
7) K-water에서 시행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매년 용수 및 발전판매수입금 일부를 출연하여 댐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댐주변경관활용, 주변생활 지원사업, 육영사업, 기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참조). 그러나 지원사업의 시행은 이원화 되어 있는데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조성사업'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며, 나머지 지원사업을 댐관리단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의 중복문제 및 사업의 소규모·소액화 현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결과적으로 지원사업 시행자의 이원화 문제와 매년 반복되는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지원사업 운영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은영·배명순·이지헌, 2008: 552-553쪽 참조).

8) 소양강댐지사에서 2020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을 추진한 배경으로는, 2019년 강원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시행한 「사회적경제 강원돌봄네트워크 통합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서의 방문의료 성과를 신문기사를 통해 모니터링 하고, 당시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인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적용 가능성을 문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19년 9월부터 센터와 소양강댐지사 간의 지속적이고 실무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을 기획·추진하게 되었다.

9) 방문의료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양창모 원장(가정의학전문의)', '김지향 간호사', '정윤후 케어매니저'. 이 중 양창모 원장은 원주의료사협의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하였으며, 김지향 간호사는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의 조경자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였다. 케어매니저는 공개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하였다.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지역사회기반 사회적경제 통합돌봄의 사례 도출이란 목적성, 마을공동체형 통합돌봄 기반구축이라는 가능성 등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소양강댐 주변지역에 소재한 대표 돌봄기관인 소양강댐효나눔복지센터(이하 효나눔센터)와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이하 춘천별빛사협)을 협력기관으로 참여시켰다.[10] 이들 협력기관은 지원사업 기간 동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홍보 및 대상자 모집과 선별, 사례관리를 위한 방문의료서비스 정보의 공유와 돌봄서비스의 결합으로 효과의 극대화를 모색했다. 무엇보다 방문의료가 결합된 농촌형 마을공동체 통합돌봄 사례 도출을 위한 기관간 협업과 협력은 지원사업의 필수 요소였다.

〈그림 4〉 소양강댐주변지역 사회적소외층 방문의료서비스 시범운영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기관



구분	기 관	
주최	K water	K-water소양강댐지사
주관	GWSE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행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협력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소양강댐효나눔복지센터	소양강댐효나눔복지센터
	춘천별빛산골교육센터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10) 소양강댐효나눔복지센터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해 K-water에서 2009년에 설립한 노인복지기관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노인들을 위해 전문적 노인복지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한편 소양강댐 주변지역인 사북면 고탄리에 소재한 춘천별빛사협은 2005년 어른들의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시작으로 2012년 산골유학센터를 설립해 아이들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강원도의 대표적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이후 농촌형 커뮤니티케어의 의지를 가지고 마을 노인 돌봄과 복지를 위한 '우리마을119'사업 등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을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결과

2020년'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은 처음 시도하는 시범사업의 성격과 가용 자원의 한계 등을 고려해 대상지역을 춘천시로 한정했다. 춘천시의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구역은 법정리 기준으로 5개 읍면의 30개 법정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댐주변지역 구역 중 최근 신규 신도심으로 개발되면서 지역 고령화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생활문화권이 농촌보다 도심에 가까운 지역은 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을 고려해 대상지역에서 제외하였다.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방문의료의 정량목표는 소양강댐지사와 강원사경센터, 원주의료사협 간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대상자 30명 이상, 방문의료 횟수 200회 이상으로 설정하였다.[11]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위탁기관인 소양강댐지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소외계층과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신체적 약자를 우선 대상자로 고려하였다. 이에 반해 강원사경센터에서는 댐 주변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상 노인을 포함한 주민 대부분이 교통 약자이자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소외계층이란 점을 들어 의료권과 건강권에 방점을 두고 보편적 선정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지원사업 구역 내에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업시행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가용 범위 내에서 협력기관인 효나눔센터와 춘천별빛사협의 협조를 통해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해 적용키로 하였다. 다만 대상지역 해당 주민 중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과 동일유형의 타 기관의 서비스를 이미 수혜 받고 있는 사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동시에 춘천별빛사협의 '우리동네119' 등 자체적인 농촌마을형 돌봄을 시행하고 있던 사북면 고탄리의 경우 방문의료와 마을돌봄이 결합된 농촌형 마을공동체 통합돌봄의 사례 도출을 위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마을노인 전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방문의료서비스를 기획하였다. 이후 진행과정의 성과와 주민들의 반응을 고려해 춘천별빛사협의 협조로 고탄리와 바로 인접한 고성리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준비한 사회적경제 중심의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 '(가칭)우리동네 주치의'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유사 사례의 축적 및 확대의 필요성을 참여기관 모

11) 방문의료 횟수를 대상자의 3배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대상자 1인 당 최소 2회 이상의 재방문 진료와 간호를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2019년 '지역특화 방문의료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경험을 통해 방문의료가 1회에 그칠 경우 투입되는 자원(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대비 방문의료의 효과성과 대상자의 만족도를 기대할 수 없고, 무엇보다 노인 질환의 경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수치이다. 또한 방문의료의 특성상 대상자와 의료 서비스제공자 간의 상호신뢰관계, 이른바 라포(rapport)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 역시 고려되었다.

두가 공감하고 추진하였으며, 리빙랩(Living Lab)방식으로 시범사업 내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에 비해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는 효나눔센터[12]는 노인들의 사전 질병예방과 건강관리의 차원에서 방문의료서비스를 활용하고, 대상자 중심의 방문의료와 효나눔센터의 돌봄자원이 결합하는 방식의 시설형 통합돌봄 모델을 기획하였다.

결론적으로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추진 성과는 사업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기관별 역할에 따라 '방문의료서비스'와 '사회적경제 통합돌봄 기반구축'의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사업목적과 수행기관 그리고 이에 따른 추진성과들을 정량적 차원에서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4〉 소양강댐주변지역 사회적소외층 방문의료서비스 시범운영사업 주요 추진내용 및 추진 성과

목적 및 수행기관		추진성과			비고
목적	수행기관	항목	주요내용	수량	
사회적 경제 통합돌봄 기반구축	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네트워크구축	• 춘천지역사회 통합돌봄추진위원회 결성	1건	TF구성
			•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협력기관 업무협약	3개소	
		사업보도추진	•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관련 외부보도	12건	
		대외행사	• 협약식 포럼 및 성과공유회 포럼	2회	춘천시/의회
		홍보물제작	• 홍보물(리플렛 및 홍보부채) 제작	2종	
		성과분석	•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사례 도출 및 성과분석	1건	35명
		만족도조사	•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만족도조사 기획	1건	80명
댐주변 지역 방문의료 서비스	원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설명회	• 방문의료시범사업을 위한 마을설명회	4회	고탄리·고성리
		공동진료	• 마을형 공동진료	6회	사북면
		의료기관협의	• 지역 (조교, 고탄, 오동)보건진료소 업무협의	4건	약처방 등 협의
		만족도조사	•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시범사업 만족도조사 시행	80건	
		비대면 관리	• 집중호우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대상자관리	150회	
		방문의료성과	• 방문의료 시행 지역(법정리 기준)	14개	4개 읍면
			• 방문의료 대상자 및 1차 방문의료	114명	
			• 1차 방문의료 대상자 중 재방문 횟수	170회	
			• 총 방문의료 횟수	283회	

12) 소양강댐효나눔복지센터는 K-water가 소양강댐 주변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지을 위해 2009년 10월 개관하였으며, 현재 센터의 주요 지원사업은 상담사업(건강, 영양, 법률, 노인학대 등) 건강생활 지원사업(건강증진 및 기능회복, 건강노년생활지원, 급식지원 등), 노년사회화교육 지원사업(한글, 외국어, 교양교육 등 평생교육 기회 제공), 지역조직 및 세대통합(지역자원개발사업, 지역복지연계사업 등), 특화사업(치매의심군 낮돌봄실,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고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소양강댐효나눔복지센터 홈페이지 참조(http://www.cckwater.or.kr/so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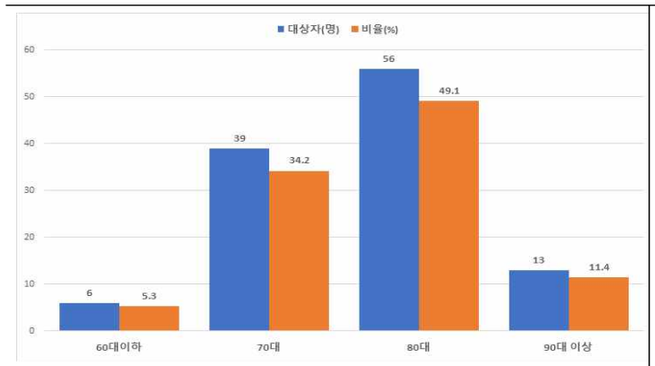
여기서 2020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성과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방문의료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문의료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양강댐 주변지역 노인들에게 방문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중심의 노인요양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기질병의 발견과 사전 예방'을 사업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원주의료사협에서 의사·간호사·케어매니저로 구성된 방문의료팀을 신규 고용을 통해 구성하고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춘천시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구역의 절반에 해당하는 4개 읍면 14개 법정리에서 114명을 대상으로 총 283회의 방문의료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이는 추진계획에서 설정한 정량목표인 방문의료 대상자 30명과 방문의료 회수 200회를 각각 380%와 142%를 초과 달성한 수치이다. 지역별 방문의료 추진현황을 소양강댐 주변지역 구역별 인구수와 대비해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춘천시 소양강댐 주변지역과 지역별 방문의료 수행 현황(■ 방문의료 시행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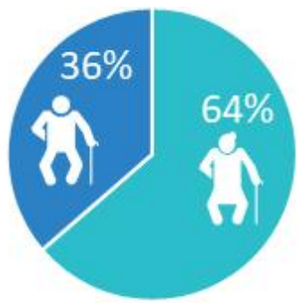
댐 주변지역 현황			방문의료 현황			
읍면	법정리	인구(명)	1회방문(회)	재방문(회)	총방문(회)	대상(명)
사북면(2)	고탄리	298	31	49	79	59
	고성리	297	28	56	84	
	소계	**298**	**59**	**105**	**163**	
신북읍(5)	발산리	609	3	8	11	14
	산천리	825	3	7	10	
	천전리	2,894	7	15	22	
	유포리	572	1	1	2	
	율문리	1,954	-	-	-	
	소계	**5,198**	**14**	**31**	**45**	
북산면(10)	조교리	101	7	4	11	29
	물로리	108	4	7	11	
	청평리	89	7	7	14	
	부귀리	50	5	7	12	
	오항리	208	3	3	6	
	추곡리	325	3	1	4	
	대곡리	18	-	-	-	
	추전리	10	-	-	-	
	내평리	15	-	-	-	
	대동리	10	-	-	-	
	소계	**6,122**	**29**	**29**	**58**	
동면(10)	품걸리	98	9	3	12	12
	평촌리	36	3	2	5	
	지내리	1,050	-	-	-	
	감정리	363	-	-	-	
	월곡리	194	-	-	-	
	품안리	9	-	-	-	
	신이리	49	-	-	-	
	상걸리	124	-	-	-	
	장학리	9,763	-	-	-	
	만천리	7,093	-	-	-	
	소계	**17,808**	**12**	**5**	**17**	
동내면(3)	거두리	11,133	-	-	-	-
	신촌리	1,667	-	-	-	
	고은리	598	-	-	-	
	소계	**13,398**	**-**	**-**	**-**	
합계		**42,824**	**114**	**170**	**283**	**114**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전체 대상자 114명의 사회·경제·인구학적인 차원의 일반적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대별 특성으로 방문의료서비스 대상자 중 60대 이하 6명(5.3%), 70대 39명(34.2%), 80대 56명(49.1%), 90대 이상 13명(11.4%)으로, 전체 대상자 중 70대와 80대 연령층이 8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상자의 남녀 비율은 여성 73명으로 64%, 남성 40명으로 36%의 성비를 나타냈다.

〈표 6〉 소양강댐 방문의료사업 인구학적 일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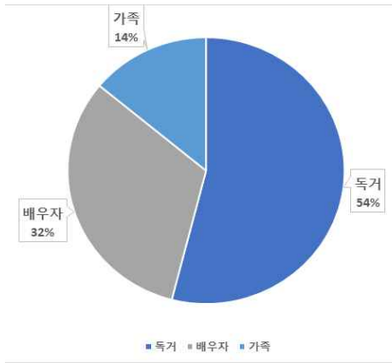
연령별 분포(■ 대상자, ■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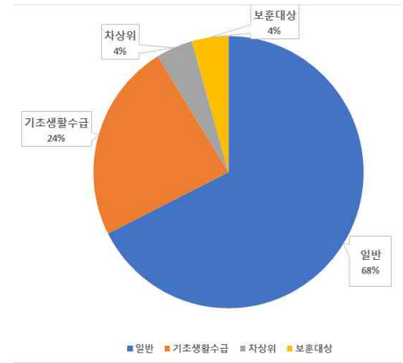
남녀 성비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대상자의 가족관계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 중 독거가 62명(54.4%)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 혹은 배우자와의 동거가 52명(45.6%)으로 나타났다. 동거 유형에서는 거의 70%에 가까운 비율로 배우자와의 동거가 36명(32%)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과의 동거가 16명(14%)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차원에서 방문의료 대상자를 일반과 저소득층을 거칠게 구분했을 때, 전체 대상자 중 일반이 77명(67.5%)으로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으로 해당되거나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 27명(23.7%), 차상위계층 5명(4.4%), 보훈대상자 5명(4.4%)으로 나타났다.

〈표 7〉 소양강댐 방문의료사업 사회·경제적 일반 특성



가족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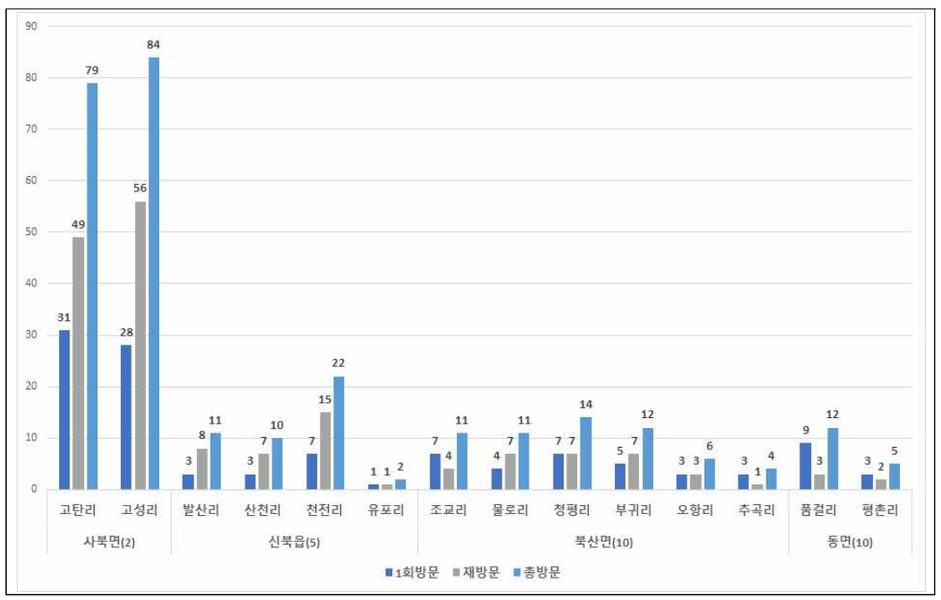


경제적 수준 비율

한편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추진현황을 지역별로 구분해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읍면 기준으로 방문의료 대상자와 방문 빈도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사북면으로 전체 대상자인 114명 중 절반 가까이 59명(52%)이 해당되었다. 사북면은 1회 방문 및 재방문 이상을 포함한 총 방문의료 횟수가 163건으로 대상자 1명당 평균 2.8건의 재방문 의료서비스가 진행되었다. 사북면 다음으로는 북산면이 29명(25%), 신북읍 14명(12%), 동면 12명(11%)이 최소 1회 이상 방문의료서비스 대상자로 집계되었다. 참고로 사북면의 방문의료 대상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춘천별빛사협과의 협업으로 고탄리와 고성리의 마을공동체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추진한 결과이다. 지역별로 다소간의 부침은 있지만 1회 방문의료와 재방문을 포함한 총 방문의료서비스는 사업기간 동안 전체 283건이 진행되었다. 이는 대상자 1인당 평균 2.5회의 방문의료서비스가 진행된 것으로 기존의 일회적이고 시혜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의 방식을 극복하고 무엇보다 노인질환의 경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방문의료진과 대상자 간의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수치이다.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마을별 추진현황을 압축·요약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소양강댐 방문의료사업 지역별 추진현황

방문의료 지역		1회 방문		재방문		총 방문		방문의료 대상자	
읍면	법정리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대상(명)	비율
사북면(2)	고탄리	31	27%	49	29%	79	28%	59	52%
	고성리	28	25%	56	33%	84	30%		
	소계	**59**	**52%**	**105**	**62%**	**163**	**58%**		
신북읍(5)	발산리	3	3%	8	5%	11	4%	14	12%
	산천리	3	3%	7	4%	10	4%		
	천전리	7	6%	15	9%	22	8%		
	유포리	1	1%	1	1%	2	1%		
	소계	**14**	**12%**	**31**	**18%**	**45**	**16%**		
북산면(10)	조교리	7	6%	4	2%	11	4%	29	25%
	물로리	4	4%	7	4%	11	4%		
	청평리	7	6%	7	4%	14	5%		
	부귀리	5	4%	7	4%	12	4%		
	오항리	3	3%	3	2%	6	2%		
	추곡리	3	3%	1	1%	4	1%		
	소계	**29**	**25%**	**29**	**17%**	**58**	**20%**		
동면(10)	품걸리	9	8%	3	2%	12	4%	12	11%
	평촌리	3	3%	2	1%	5	2%		
	소계	**12**	**11%**	**5**	**3%**	**17**	**6%**		
합계		**114**		**170**		**283**		**114**	



그 외에도 2020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에서는 8월 코로나19(COVID-19)의 확산 및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에 대응코자 유·무선을 통해 46명을 대상으로 총 150여회의 비대면 대상자 관리를 시행하였다. 또한 '농촌 마을공동체형 방문의료 중심 통합돌봄' 기반구축을 위해 방문의료팀 주최로 총 4회에 걸쳐 사북면의 고탄리와 고성리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설명회와 강연을 진행했으며, 사북면 노인회(고성1리 고성2리, 고탄리)와 미팅을 통해 지역 노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월 1회 마을회관 등에서 진료와 검진을 진행하는 '(가칭)우리동네 진료소'의 운영을 요청받았다. 이에 협력기관인 춘천별빛사협의 협조로 사북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아 마을공동체형 정기진료소를 별빛지역아동센터에 설치하고, 사업기간 내 정기진료 6회를 운영하면서 마을주민들에게 총 88회의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 의료자원과의 연계 및 협조를 위해 사북면 고탄보건진료소, 신북읍 조교보건진료소, 오동보건진료소와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만성질환 처방과 관련한 협력을 타진하였다. 이러한 추진성과들은 추진계획의 정량적 목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이지만 변화하는 지역 상황과 환경 여건에 따라 유기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한 결과들 숫자로 나타나는 것 이외의 또 다른 의미와 성과를 내포하고 있다.

제3장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방문의료서비스 사례 조사 및 성과

1. 강원도, 방문의료중심 사회적경제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과정

2020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은 2019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시행한 '강원도사회적경제 통합돌봄서비스 상품개발 및 시범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기반으로 기획·추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9년 지역특화사업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센터 모델 발굴 및 강원도사회적경제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위해 강원도 대표 사회적경제 돌봄기관인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영월군돌봄서비스센터, 횡성열린사회서비스센터 그리고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16년에 결성한 「사회적경제강원돌봄 네트워크」 주도로 진행되었다. 당시 지역특화사업은 '가사 중심의 노인요양서비스 한계를 극복하는 통합돌봄체계'의 구축 및 '통합돌봄 상품개발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운영은 방문의료(간호·진료)와 지역 사회적경제 돌봄자원(기업)이 결합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네트워크 회원사(원주·횡성·영월)의 방문요양 대상자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었다. 시행결과 사업추진 목표였던 60건의 방문의료를 훨씬 뛰어넘는 112건의 방문진료와 119건의 방문간호가 진행되었으며, 사회적경제 중심의 방문의료와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첫 통합돌봄 (시범)사업이란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추진과정을 통해 많은 장애물과 개선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방문의료를 통해 질병확인 및 치료과정을 확인하더라도 현지 기관과의 연계가 되지 않아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실례로 영월지역에서 방문의료를 통해 고혈압을 초기 발견하고 혈압관리 및 처방을 안내하였지만 이송 도우미 부재 및 접근성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연구조사의 필요성 및 궁극적으로 살고 있는 곳에서 의료·보건복지서비스 연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각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모호함. 2019년 지역특화사업은 방문의료팀(원주의료사협)과 영월·원주·횡성지역의 사회적경제 돌봄기관(기업) 간의 수평적이고 기능적 차원에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러나 케어매니저와 같은 전담인력의 부재와 기관 간 명확하지 않은 업무 분장 등으로 사례관리의 목표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법적 뒷받침 및 표준화된 진단과 치료기준 마련. 방문의료의 특성상 가정 진료의 특수 상황과 윤리적 측면에 대한 법적 기준의 부재와 미비는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처방전 발급, 약물 전달방법, 검사진행과정, 통증치료 등 기초 진료 행위를 비롯해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제한된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방문의료서비스의 기대가 컸던 대상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의 결합력을 낮추는 등 궁극적으로 질적 차원에서 지원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넷째, 의료적 문제뿐만이 아닌 주거환경, 영양불균형 등 기타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 및 재원 마련 필요.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질병 그 자체보다 주거환경이 더 큰 건강의 위협 요인이 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복지혜택을 받기 어려운 독거노인에게는 의료행위보다 영양 불균형 해소, 주거환경 개선 등 돌봄과 복지의 문제 해결이 의료보다 더 시급한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방문의료가 지속되기 위한 적절한 수가측정 필요. 방문의료의 지속성 및 서비스의 질적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방문의료(왕진)에 대한 적절한 수가의 책정이 필요하다. 특히 강원도는 지역적 특성상 이동거리가 멀고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이 많아 거리 및 시간에 대한 적절한 왕진수가가 마련되지 않을 시 이동 부담의 발생 및 수익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의료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다.[1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기획과 시행은 2019년 지역특화사업의 주요 성과와 개선과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물론 방문의료의 법적 기반 및 적정 수준의 왕진의료 수가의 책정, 그리고 통합돌봄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지자체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자원과의 연계 등은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와 개선과제이자 앞으로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별 역할과

13)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의 공고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왕진료 시범수가를 책정하였다.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된 왕진료 I 형이 11만5천원,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한 왕진료 II 형이 8만원으로 산정되어 수가 금액의 적정성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왕진 수가 적정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인구가 밀집한 도심 이외의 지역에는 역으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지역특화 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업무분장을 시스템화, 지원사업 전담 의료진과 케어매니저의 고용, 방문의료팀의 구성 및 운영 가능 정도의 사업예산 확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시행 기반 조성, 농촌형 마을공동체 통합돌봄 사례 및 모델 도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 및 자원의 연계, 그리고 사회적경제 통합돌봄 의제와 담론 도출을 위한 지연 네트워크 연계 등의 차원에서 2019년 지역특화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비해 질적 차원의 차별화를 도출하였다. 아래의 〈표 9〉는 이상의 과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9〉 2019년 지역특화 '통합돌봄서비스 사업'과 2020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연계성

2019 지역특화 주요현안	개선과제	2020년 댐주변사업 추진방향
• 현지 기관 및 지역 보건의료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 활용 및 서비스 개선	• 서비스 대상지역 의료·복지·돌봄 자원 조사 및 활용 방안 강구	• 춘천시 보건소 행정기관 및 지역 보건진료소와의 업무협의 • 마을형 돌봄(춘천별빛사협) 및 시설형(효나눔센터) 돌봄자원 연계 활용
• 기관 별 역할분담의 모호함 및 전문 담당자 부재	• 주관, 참여, 협력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연계 시스템 구축 • 통합돌봄 전문 담당자 발굴 및 육성	• 방문의료 전문 의료팀(의사, 간호사) 고용 및 구성 • 방문의료팀에 케어매니저 신규 고용 및 역할 분담
• 법적 뒷받침 및 표준화된 진단과 치료기준 부재	• 지자체 및 지역 의료보건 자원과 연계 • 방문의료 성과 및 타당성 조사 • 방문의료 관련 담론과 의제 형성	• 관련 포럼 개최 및 지자체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의 • 원주의료사협 의료기관인 '밝음의원'과 협업을 통한 적극적 진료 시행
• 방문의료 이외의 돌봄서비스 결합 부재	• 농촌 마을공동체형 통합돌봄 기반 구축	• 춘천별빛사협 '우리동네119' 사업 및 효나눔센터 노인복지지원사업 연계
• 방문의료의 지속성 및 질적 측면 담보를 위한 왕진의료의 적절한 수가 책정	• 방문의료 시행을 위한 현실적 지원사업비 확보	• 의사, 간호사, 케어매니저 인건비 및 이동에 따른 교통비 책정 • 의료서비스에 수반되는 비용 책정

2. 방문의료서비스 사례 조사 및 성과 분석

이 장에서는 2020년'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에서 시행한 방문의료서비스 이용자 80명의 만족도 조사, 그리고 강원대학교 간호대학교의 자문을 받아 방문의료팀이 작성한 방문의료 현장 기록 및 방문의료서비스 이용자 35명의 사례자료를 표본으로 기초 통계자료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자료와 결과에 기초해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에서 방문의료서비스의 필요성과 성과의 타당성을 도출하고, 지역사회 돌봄에서 의료서비스가 가지는 의미를 유추하고자 한다.

가. 방문의료서비스 사례 조사 및 분석

(1) 일반적 특성

사례중심 방문의료서비스 성과는 방문의료서비스 시행 기간(5월~11월)동안 방문의료팀이 작성한 현장방문 기록과 11월부터 12월까지 방문의료서비스 이용자 중 성과 조사를 위해 설문과 면접에 응한 35명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14]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성과 조사를 위해 설문과 면접에 응한 35명의 거주지 분포는 북산면 14명(40.0%), 사북면 12명(34.3%), 신북읍 7명(20.0%), 동면 2명(5.7%) 순으로 나타났다.

14) 최초 계획은 방문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의 모집단이 114명임을 감안해 전수 조사에 가깝게 진행하려 하였으나, 방문의료서비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방문의료팀이 면접과 설문조사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대상자 대부분이 70~80대 고령자로 의도한 것만큼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통계적 관점에서 최소 표본 크기가 30개 이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의 비중이 30.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기본적인 통계적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10〉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사례조사 대상자 일반 특성 (N=35)

구분	분류	응답수(%)
성별	남	13 (37.1)
	여	22 (52.9)
나이	70대	12 (34.3)
	80대	17 (48.6)
	90대	6 (17.1)
교육정도	읽고 쓰기 불가능	16 (45.7)
	읽고 쓰기 가능	19 (54.3)
경제활동 여부	예	8 (22.9)
	아니오	27 (77.1)
기초생활수급 여부	예	14 (40.0)
	아니오	21 (57.1)
건강보험 관련	국민건강보험(지역, 직장)	18 (51.4)
	의료급여	15 (42.9)
	국가보훈대상	2 (5.7)
장애 여부	예	4 (11.4)
	아니오	31 (88.6)
장애유형	지체장애인	3 (8.6)
	시각장애인	1 (2.9)
동거유무	예	24 (68.6)
	아니오	11 (31.4)
거주형태	단독주택	29 (82.8)
	아파트	1 (2.9)
	기타	5 (14.3)
의료서비스 미충족 경험 여부	예	32 (91.4)
	아니오	3 (8.6)
의료서비스 미충족 이유*	교통문제	20 (62.5)
	동행 보호자 무	7 (21.8)
	경제적 이유	2 (6.3)
	증세가 가벼움	2 (6.3)
	기타	1 (3.1)
주관적 건강상태	보통	4 (11.4)
	나쁨	18 (51.4)
	매우나쁨	13 (37.1)

* 응답자 32명

표본자료(N=35)에서 나타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남자가 13명(37.1%), 여자가 22명(62.9%)이었으며, 연령대는 70대 12명(34.3%), 80대 17명(48.6%), 90대 6명(17.1%)으로 80대가 가장 많았다. 교육정도는 읽고 쓰기 불가능이 16명(45.7%), 읽고 쓰기 가능이 19명(54.3%)이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활동 참가자가 8명(22.9%), 경

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27명(77.1%)이었으며,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4명(40%)으로 조사되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의료급여 15명(42.9%), 국가보훈대상 2명(5.7%), 지체장애인 3명(8.6%), 시각장애인 1명(2.9%)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로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24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 중 68.6%를 차지했다.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이 29명(82.8%)으로 농촌지역의 특징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최근까지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미충족 경험이 32명(91.4%)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미충족의 이유로는 교통이용의 불편이 20명(62.5%), 동행보행자가 없어서가 7명(21.8%), 경제적 이유가 2명(6.3%), 큰 증상이 없어서가 2명(6.3%)으로 나타나 댐 주변지역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 대상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18명(51.4%) 나쁨을 선택하였고, 매우 나쁨이 13명(37.1%), 보통이 4명(11.4%)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2) 방문의료서비스 대상자 건강수준

방문의료서비스 대상자 건강수준은 사례는 크게 두 차원에서 구분해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방문의료서비스 대상자 114명을 대상으로 방문의료팀이 작성한 현장 방문 기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며, 다른 하나는 앞 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14명 모집단 중 성과 조사를 위해 설문과 면접에 응한 35명의 표본조사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이다.

우선 방문의료팀 현장 방문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댐주변지역 주민 114명의 질병의 유형을 분류하면 중복 체크 포함(N=339)하여 고혈압·동맥경화 등 혈관질환이 전체 질환 중 29%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관절염·신경통증 등 외과와 신경계 질환이 25%로 그 뒤를 이었다. 그외 뇌 질환 10%, 당뇨 질환 9%, 소화기 질환 4%, 호흡기 질환 3%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기타 질환이 14%로 나타났다. 한편 방문의료서비스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질환[15]보유수(N=134)는 3.6개로 조사되었으며, 4개의 질환을 보유하는 비율이 27%로 가장 높았고, 3개와 5개가 각각 2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방문의료서비스 대상자 대부분이 복합 만성질환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 여기서 질병(disease)과 질환(illness)의 용어적 구분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정의를 따른다. 질병은 의학적으로 심신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질환은 개인적, 사회심리적 차원의 개념으로 사용한다(위키디피아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질병). 다만 방문의료팀의 현장 기록에서는 진료를 통한 질병의 기록과 대상자 주관적 질병 경험인 질환의 기록이 혼용되어 있어 자료의 맥락에 따라 구분하고, 대부분의 경우 구별 없이 혼용해서 사용한다.

〈표 11〉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서비스 대상자 질병유형 현황 및 1인당 질환 보유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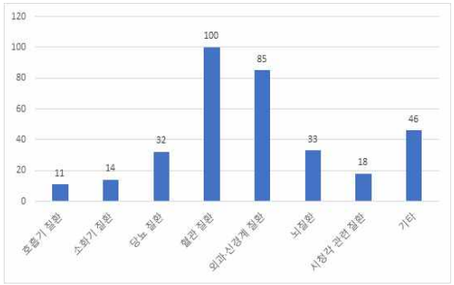
(N=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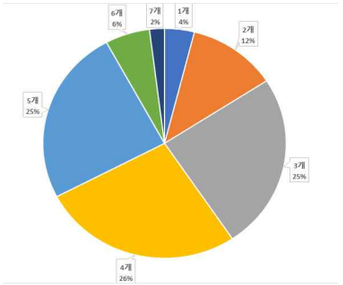
질병분류	n(%)
호흡기 질환	11 (3%)
소화기 질환	14 (4%)
당뇨 질환	32 (9%)
혈관 질환	100 (29%)
외과·신경계 질환	85 (25%)
뇌 질환	33 (10%)
시청각 관련 질환	18 (5%)
기타	46 (14%)

(N=134)

1인당 질환 보유개수	n(%)
1개	5 (4%)
2개	16 (12%)
3개	33 (25%)
4개	36 (27%)
5개	33 (25%)
6개	8 (6%)
7개	3 (2%)
1인 평균*	3.6

* 의료서비스 대상자 114명





한편 성과 조사를 위해 설문과 면접에 응답한 사례 중심 대상자 35명에 대한 건강수준의 조사에서는 건강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다중 응답(N=293)을 포함하여 복약이 35건(14.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신체활동 33건(13.8%), 통증 31건(13.0%), 혈압 30건(12.6%)으로 복약, 신체활동, 통증, 혈압이 건강문제에 있어 주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낙상이 18건(7.5%), 배뇨 15건(6.3%), 위생 15건(6.35), 불면 14건(5.9%), 배변 8건(3.3%), 혈당 8건(3.3%), 식이 7건(2.9%), 욕창 4건(1.7%), 흡연 4건(1.7%), 우울 3건(1.3%), 음주 1건(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서비스 대상자 건강문제 연관 요인

범주	구분	n (%)
건강문제 (N=239)	복약	35 (14.6%)
	신체활동	33 (13.8%)
	통증	31 (13.0%)
	혈압	30 (12.6%)
	낙상	18 (7.5%)
	배뇨	15 (6.3%)
	위생	15 (6.3%)
	불면	14 (5.9%)
	배변	8 (3.3%)
	혈당	8 (3.3%)
	식이	7 (2.9%)
	욕창	4 (1.7%)
	흡연	4 (1.7%)
	우울	3 (1.3%)
	음주	1 (0.4%)

비록 제한적 수준에서 진행된 조사 자료이지만, 적어도 이를 통해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대상자들의 건강수준에서 질병이 건강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 대부분이 70~80대 고령의 노인이고 댐 주변지역이라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면 설문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동의 문제, 주거환경의 문제, 음식의 문제, 정서지원 등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들은 4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3) 사례 중심 방문의료서비스 대상자의 방문의료서비스 사례 소개

이 절에서는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성과 조사를 위해 설문과 면담에 응한 사례 중심 대상자 35명 중 방문의료팀의 현장방문 기록지와 대상자 면담자료를 토대로 방문의료서비스를 통한 관리사례를 5개의 유형 —①만성질환, ②재가 와상 대상자, ③정신적 질환, ④장애인, ⑤지역사회 연계— 으로 구분하고 대표 관리 사례를 관찰 기록 방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가) 만성질환 관리 사례

① 대상자의 요구도

대상자는 83세 남자로 차상위계층이며, 건강보험 유형은 의료급여이고, 혼자 생활중이다. 기초노령연금 25만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약간 있

으나 생활환경이 어려웠다. 지인의 소유로 전기세 만 부담하며 좁은 방안에 주방시설이 설치되어 열악한 환경이었다.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비와 약값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올해에는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타인에게 약만 타서 달라고 하여 복용 중이다. 혈압이 179/95 mmHg로 혈압 조절이 필요한 상태였고, 자가 혈압계가 없어 매일 혈압을 측정할 수 없었다. 대상자는 허리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② 방문의료서비스 내용

대상자의 혈압약 중 올로디핀정이 빠져있음을 발견하여 요양병원과 통화 결과 올로디핀정이 빠진 것이 확인하였고, 다음날 약 처방 및 약을 받았는지 사회복지사와 통화하여 혈압약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혈압계를 대여해주고[16], 혈압 측정 및 기록방법을 교육하였으며, 10일 이상 측정한 자가 혈압 측정 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평균 혈압이 156/79mmHg로 확인 되어 혈압약 조정이 필요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해주었다. 보건지소에서 무료로 약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앞으로 고혈압, 당뇨약을 보건지소에 직접 방문하여 처방받도록 권하였다. 허리 통증으로 미추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2회 시행하였으며, 약국에서 불법 제조약으로 의심되는 진통제 복용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였다. 허리 운동에 대해 영상을 보여주고 시범을 보이며 교육하였고, 걷기 운동을 꾸준하게 할 것을 권유하였다.

③ 치료 및 간호중재 효과

대상자는 누락된 혈압약을 발견하여 약국과 병원에 연락하여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소견서 발급을 통해 보건지소에 혈압약 처방을 연계 조치하여 추후 정상 범위로 혈압이 조절 되었다. 대상자는 허리 통증이 반 이상 경감되었고, 다리 저림 증상도 많이 없어졌다. 허리 운동을 조금씩 실천 중이며 주 5회, 회당 15분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허리 통증이 감소되어 이웃의 동행으로 혈압약 처방을 받기 위한 내원이 수월해 졌다. 교통비와 약값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 하여 보건지소에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연계해 드렸다.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이 큰 연계자원이었다.

16) 방문의료서비스 시행 단계에서 부터 대상자 대부분이 노인인 점을 감안하여 방문의료팀에서 26대의 혈압기를 보유하였고 현장 검진을 통해 혈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혈압기의 대여 및 자가 혈압 측정 방식을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혈압 관리를 사례를 축적하였다.

(나) 재가 와상 대상자 관리사례

① 대상자의 요구도

대상자는 91세 여자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며, 건강보험 유형은 국민건강보험이고, 자녀와 생활 중이다. 15년 전 파킨슨병을 진단받았고, 7월 옆구리 통증으로 3주간 입원 후 퇴원하였으며,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혼자 거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와상 상태로 꼬리뼈 (coccyx) 부위에 욕창(2단계)이 발생하였다. 입원 중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다가 퇴원하면서 제거하였는데 그 이후로 소변을 보기 힘들어 비뇨기과 약을 복용 중이다.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고, 매일 몸 상태가 달라서 며칠 동안 잠을 자기도 한다. 물을 하루에 300-500mL 정도를 먹고 있으며 10일 동안 대변을 보지 못한 상태였다.

② 방문의료서비스 내용

대상자에게 복약 상담을 통해 복용약을 조절해주었다. 정상 혈압으로 혈압약을 중지하였으며, 혈압기를 대여해주고 요양보호사에게 혈압 측정 및 기록방법을 교육하였다. 변비 증상으로 적정 수분 섭취에 대한 식이교육과 장마사지를 교육하였고, 변비약 복용 방법을 교육하였다. 욕창 소독방법, 욕창예방 자세, 체위 변경 방법, 개인위생 유지, 충분한 영상 섭취 등 욕창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하였다. 오랜 유치도뇨관 삽입으로 인한 감각저하로 일시적 배뇨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시키고, 수분 섭취 권유와 스스로 배뇨시도를 하도록 권유 등 교육을 하였다.

③ 치료 및 간호중재 효과

대상자는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정상 혈압을 유지하였다. 비뇨기과 약을 복용하지 않고 스스로 소변을 보기 시작하였다. 욕창예방을 위한 간호 교육 후 욕창 부위는 정상 피부로 회복되었고, 변비로 인한 불편감이 감소하였다. 수분 섭취와 스스로 배뇨시도를 하도록 권유하여 스스로 배뇨를 하게 되었다.

(다) 정신적 질환 관리사례

① 대상자의 요구도

대상자는 77세 여자로 기초수급자이며, 건강보험 유형은 의료급여이고, 혼자 생활 중이다. 20년 전 녹내장 수술을 하였고, 노안과 안구 건조, 뻐근한 증상으로 안약을 점안하고 있다.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자가 혈압 측정 및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 3년 전 척추측만증 수술 후 배우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3개월 뒤 사망하였으며, 수술 후 관리가 되지 않아 2년 후 다시 통증으로 척추측만증 재수술을 받았으며, 척추 수술을 2번 받은 과거 병력으로 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 척추 수술 후 남편의 사망이 겹쳐지면서 복통이 심해서 소화기 내과 진료를 봤으나 특이 소견이 없었으며, 허리수술 후 통증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고향을 떠나 독거 생활에서 오는 우울증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고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다. 디아제팜 0.5T를 끊으면 잠이 안와서 지금 계속 복용 중으로, 수면시간은 불규칙 하며 수면 시간은 하루 3시간이었다.

② 방문의료서비스 내용

대상자에게 혈압기를 대여해 드리고 자가 혈압 측정 및 기록 방법을 교육하였다. 평소 음식을 짜게 먹는 편으로 국 종류에 염도를 낮출 것을 권유하였다. 고혈압 합병증 검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여 병원에서 검사를 해볼 것을 권유하였고, 고혈압 합병증 검사 결과와 자가 혈압기록지를 토대로 혈압약을 조절하였다. 녹내장으로 꾸준히 안약을 넣고 있으며, 혈압 조절이 더욱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과거 배우자 사별과 허리 통증 이야기 등 대상자 이야기를 경청하고 정서적 지지를 하였으며, 낮 시간에 햇빛을 쐬며 산책을 하도록 권유하였고, 수면유도제 복용하는 것 대신 수면 박탈 요법을 교육하였다. 수면 박탈 요법으로는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잠을 청하려 무작정 눕거나, 눈을 감거나 애쓰지 않고 잠이 오지 않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때까지 시간을 보내라고 설명하였다. 낮에는 되도록 일정한 시간에 햇볕을 쬐며 걷기를 권고 하고 저녁시간에 카페인 음료를 자제하도록 교육하였다.

③ 치료 및 간호중재 효과

대상자의 혈압은 정상 수치를 유지하였다. 방문진료서비스에서 의료팀이 알려준 대

로 우울증약 중에 수면제를 빼고 복용 중이며, 수면 박탈요법을 적용하고 있다. 하루 수면 시간이 6-7시간으로 불면증은 호전되어 잘 잔다고 하였다.

(라) 장애인 관리사례

① 대상자의 요구도

대상자는 75세 여자로 기초수급자이며, 건강보험 유형은 의료급여이고, 혼자 생활 중이다. 시각 장애인으로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복용 중이며, 류마티스관절염이 심하여 양쪽 무릎에 통증이 있었고, 손가락 변형이 심하였다. 골다공증으로 골절 위험이 높고, 오른쪽 고관절 대퇴부 골절로 수술한지 2달째이며 고관절 통증으로 호소하였다. 천식으로 흡입기를 사용 중이다. 식욕부진과 소화불량, 오심, 구토 증상으로 소량의 식사를 하고 있으며 침대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서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다. 시력소실로 거의 안보이며 그림자처럼 검은 형태로만 보여 거의 눈을 감고 있는 상태이다. TV 시청이 무의미하여 늘 라디오를 켜고 있으며 조용히 있으면 우울해져 흐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② 방문의료서비스 내용

대상자에게 혈압기를 대여해주고 자가 혈압 측정을 권유하였으며, 요양보호사가 오전, 오후 3시간씩 방문하여 요양보호사에게 혈압측정 및 기록방법을 교육하였다. 혈압이 낮게 측정되어 혈압약 감량을 위해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였다. 자세 교육과 천식 흡입기 사용 방법을 교육하였다. 욕창 관리가 필요하여 확인하였고, 요양보호사가 관리하고 있다.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오심,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다음 병원 진료할 때 진통제 변경을 하도록 하였고, 식욕부진으로 뉴케어를 제공하였다. 관절 운동 및 마사지 상담 교육을 하였다. 낙상 주의 교육과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지급하고 낙상과 골절에 대한 불안 감 경감을 위해 정서적으로 지지하였다.

③ 치료 및 간호중재 효과

대상자는 혈압 기록지와 진료의뢰서를 반영하여 혈압약을 감량하여 복용중이며 현재 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되었다. 기구를 이용하여 마사지를 하고 있으며 관절 통증으로

복용 중이던 진통제 중 오심, 구토 부작용이 있었던 약이 변경되어 구토 증상이 없어지고, 부진하던 식욕을 되찾았다. 근래에 식사를 잘 하여 영양 섭식 상태가 좋아졌다.

(마) 지역사회 연계사례

① 대상자의 요구도

대상자는 81세 여자로 기초수급자이며, 건강보험 유형은 의료급여이고, 혼자 생활중이다. 3년 전 넘어져 왼쪽 고관절 수술을 하였고, 통증은 없으나 무릎 관절이 구부려지지 않아서 앉았다가 일어날 경우 매우 힘들다고 하였다. 지팡이로 지지하며 불안정하게 천천히 걷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이 어려웠다. 혈압이 189/93 mmHg로 높게 측정되었고, 잇몸과 틀니가 맞지 않아서 틀니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이다. 발톱 무좀으로 엄지발톱이 변형되어 눌리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천을 엄지발가락에 둘둘 말아서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② 방문의료서비스 내용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을 혼자 내원하지 못하였다. 방문의료팀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동행 하여 보건지소를 방문하였고, 혈압약 처방을 받아 집에 모셔다 드렸다. 이후 추가 혈압약 처방과 관련하여 담당 생활지원사와 통화하였고, 생활지원사가 향후 병원 방문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여 대상자의 혈압약을 보건지소에서 타주거나 필요한 경우 병원에 동행하도록 요청하였다. 발톱 무좀으로 피부과 내원하도록 하였고, 생활지원사가 동행하여 발톱 무좀 치료를 이행하였다. 허리와 관절 균형을 위해 외출하거나 이동할 경우 지팡이 등을 이용하도록 설명하였고, 낙상예방 교육을 시행하였다.

③ 치료 및 간호중재 효과

대상자는 거동 불편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워 고혈압 치료가 방치되었던 경우로, 보건지소에 두 차례 모시고가 혈압약을 타도록 도와드리고, 보건지소 의사와 상의하여 혈압기록 결과를 토대로 혈압약을 조절하였다. 이후 대상자의 북부노인복지관 맞춤형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와 통화하여 대상자가 보건지소 이용 시 이동서비스 도움 드리기로 하였고, 향후 안정적인 혈압약 복용과 미뤄왔던 발톱무좀 치료를 하게 되었다.

대상자는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복용 중이며 혈압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변형된 무좀 발톱 치료로 신발을 편하게 신을 수 있으며 걸음도 수월해 졌다고 하였다.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가 잘 부착되어 있으며 물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3.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

2020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성과 검증 및 만족도 분석을 위해 10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문의료팀과 협력기관인 춘천별빛사협, 효나눔센터의 협조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만족도 조사는 '강원도사회적경제 통합돌봄 의료서비스 상품개발 및 시범운영 사업의 문제점 개선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계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방문의료서비스의 대상자와 보호자를 조사 대상으로 정하였다. 조사 항목은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층임을 감안하여 4개 영역 —①시범운영사업 전체 만족도, ②방문의료, ③통합돌봄, ④기타— 전체 17개 문항으로 A4용지 한 장 이내로 최소화 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설문 내용과 유형에 따라 응답지수가 5점 척도인 것도 있고, '예/아니오'와 같이 양자택일 형태와 서술형태가 복합되어 있는 혼합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분석 수준에서 통계검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초통계 자료와 분포 결과만 분석하였다.

가.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대상자 일반적 특성

만족도 설문조사에 응답한 80명의 일반적 특성으로 응답자 중 여성 52명(65%), 남성 28명(35%)으로 여성이 많았고, 나이는 80대가 39명(48.8%), 70대 이하가 33명(41.2%), 90대가 8명(10.0%)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행정구역(읍, 면)상 거주지 분포로는 사북면이 45명(56.3%)으로 가장 많았고, 북산면 17명(21.3%), 신북읍 11명(13.7%), 동면 9명(8.7%) 순으로 전체 방문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지역별 분포와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17] 응답자 별 방문의료 횟수는 비대면 (유·무선전화)진료를 포함해 3~5회가 51명(63.8%)로 가장 많았고, 6~8회가 13명(16.3%), 9~11회가 7명(8.8%), 기타 횟수가 9명(11.3%)으로 조사되었다.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13〉과 같다.

17) 방문의료서비스 이용자 114명의 행정구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사북면 59명(51.8%), 북산면29명(25.4%), 신북읍 14명(12.3%), 동면 12명(10.5%).

〈표 13〉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현황 (N=80)

구분	분류	n (%)
성별	남	28 (35.0)
	여	52 (65.0)
나이	70대 이하	33 (41.2)
	80대	39 (48.8)
	90대	8 (10.0)
방문횟수*	3회~5회	51 (63.8)
	6회~8회	13 (16.3)
	9회~11회	7 (8.8)
행정구역(읍, 면)	사북면	45 (56.3)
	북산면	17 (21.3)
	신북읍	11 (13.7)
	동면	7 (8.7)

* 비대면(유·무선 전화) 포함

나.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전체 만족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전체 만족도 조사는 '매우불만'1점, '불만'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만족'5점으로 측정되었다. 평균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에 4.70±0.49점이었다. 성별에 따라 남자는 4.75±0.44점, 여자는 4.67±0.51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다. 나이에 따라서는 70대 이사가 4.70±0.47점, 80개가 4.69±0.52점, 90대가 4.75±0.46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방문횟수에 따른 만족도는 비대면 진료 포함 9회~11회가 4.86±0.48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표 14〉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전체 만족도 (N=80)

구분		분류	n (%)	M±SD*
총합계			80 (100.0)	4.70±0.49
	성별	남	28 (35.0)	4.75±0.44
		여	52 (65.0)	4.67±0.51
	나이	70대 이하	33 (41.2)	4.70±0.47
		80대	39 (48.8)	4.69±0.52
		90대	8 (10.0)	4.75±0.45
	방문횟수**	3~5회	51 (63.8)	4.71±0.46
		6~8회	13 (16.3)	4.69±0.48
		9~11회	7 (8.8)	4.86±0.38

* 5점 만점, ** 비대면(유·무선 전화) 포함

다. 방문의료

방문의료 관련 설문 내용은 총 7개 항목으로 '①건강증진 및 유지의 도움 여부와 이유, ②재참여 여부, ③서비스의 필요성 여부와 이유, ④다른 사람에게 권유 의사와 이유, ⑤자기 비용 부담시 이용 여부, ⑥자부담 적정 비용, ⑦추가 의료서비스 분야'로 구성하였다.

(1) 방문의료서비스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도움

'방문의료가 건강증진 및 유지에 도움'에 대한 문항은'매우 불만'1점, '불만'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으로 측정되었다. 만족도 평균 점수는 4.53±0.6점이었다. 성별에 따라 남자는 4.61±0.50점, 여자는 4.48±0.73점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점수가 높았다. 나이에 따라서 70대 이하는 4.52±0.62점, 80대는 4.54±0.68점, 90대는 4.50±0.76점으로 90대가 가장 낮고, 80대가 점수가 가장 높았다. 방문횟수에 따라 3회~5회가 4.53±0.58점, 6회 이상에서 8회 이하가 4.69±0.63점, 9회 이상에서 1회 이하가 4.86±0.38점으로 방문횟수가 많을수록 방문의료서비스의 건강 향상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높았다.

〈표 15〉 방문의료서비스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도움 만족도 결과 (N=80)

구분		분류	n (%)	M±SD*
총합계			80 (100.0)	4.53±0.66
	성별	남	28 (35.0)	4.61±0.50
		여	52 (65.0)	4.48±0.73
	나이	70대 이하	33 (41.2)	4.52±0.62
		80대	39 (48.8)	4.54±0.68
		90대	8 (10.0)	4.50±0.76
	방문횟수**	3~5회	51 (63.8)	4.53±0.58
		6~8회	13 (16.3)	4.69±0.63
		9~11회	7 (8.8)	4.86±0.38

* 5점 만점, ** 비대면(유·무선 전화) 포함

한편 서술 방식으로 응답한 만족의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①찾아와서 편리함, ②상세한 상담 및 복약지도, ③상세한 진료, ④통증 감소 및 질병

호전, ⑤운동방법, 당뇨관리 등 건강 교육, ⑥지속적인 방문이 건강관리에 도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의료의 관점에서 진료의 목적과 행위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차원과 대상자의 관점에서 만족의 요인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8)]

(2) 방문의료서비스의 재참여 여부

'방문의료서비스 시행한다면 다시 참여 여부'에 대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80명 중 1명을 제외한 79명이 '참여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특성은 방문횟수 3~5회를 시행한 80대 여성이었으며,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는 괜찮아졌다'였다.

〈표 16〉 방문의료서비스 재참여 여부 결과 (N=80)

구분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N (%)
		n (%)	n (%)	
총합계		79 (98.8)	1 (1.2)	80 (100.0)
성별	남	28 (35.0)	0 (0.0)	28 (35.0)
	여	51 (63.8)	1 (1.2)	52 (65.0)
나이	70대 이하	33 (41.3)	0 (0.0)	33 (41.3)
	80대	38 (47.5)	1 (1.2)	38 (47.5)
	90대	8 (10.0)	0 (0.0)	8 (10.0)
방문횟수*	3~5회	50 (62.5)	1 (1.2)	50 (62.5)
	6~8회	13 (16.3)	0 (0.0)	13 (16.3)
	9~11회	7 (8.8)	0 (0.0)	7 (8.8)

* 비대면(유·무선 전화) 포함

(3) 방문의료서비스의 필요여부

'방문의료서비스 필요여부' 항목은 '필요없다'1점, '보통'2점, '필요'3점, '매우 필요'4점으로 측정되었다. 측정결과 평균 필요성 점수는 4점 만점에 3.78±0.50점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에 따른 점수는 남자가 3.86±0.36점, 여자는 3.73±0.56점으로 남

18) 초진환자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진행된 연구조사에서 국내 종합병원 초진환자들이 실제로 진료받은 시간은 6.2분이며, 이 중 62%가 진료시간 확보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들의 지불 가능한 금액은 약 6,000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만족하는 진료시간은 10분이며, 만족하는 진료시간이 길수록 지불 가능 금액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다시 말해 충분한 진료시간이 보장되었을 때 의사와 환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내지만, 현실은 왜래 진찰료가 낮음으로 인해 의사는 제한된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진료시간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는 진료환경이 의사와 환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찬희 외, 2017 참조).

자가 여자보다 다소 점수가 높았다. 나이에 따라서는 70대 이하가 3.76±0.63점, 80대 3.79±0.41점, 90대 3.88±0.35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필요성 점수가 높게 나왔다. 방문횟수에 따라서는 3회~5회 3.84±0.37점, 6회~8회가 3.92±0.28점, 9회~11회 3.71±0.49점으로, 6회 이상 8회 이하 방문의료횟수가 필요성 여부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표 17〉 방문의료서비스의 필요여부 결과 (N=80)

구분	분류	n (%)	M±SD*
총합계		80 (100.0)	3.78±0.50
성별	남	28 (35.0)	3.86±0.36
	여	52 (65.0)	3.73±0.56
나이	70대 이하	33 (41.2)	3.76±0.63
	80대	39 (48.8)	3.79±0.43
	90대	8 (10.0)	3.88±0.35
방문횟수**	3~5회	51 (63.8)	3.84±0.37
	6~8회	13 (16.3)	3.92±0.28
	9~11회	7 (8.8)	3.71±0.49

* 4점 만점, ** 비대면(유·무선 전화) 포함

한편 응답자들이 제시한 방문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의 이유로는 ①혼자서 병원가기 힘듬, ②충분한 진료시간으로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됨, ③상세한 건강관리 상담(복양지도 및 운동방법 등)을 해준 것이 좋음, ④통증치료, ⑤외진 지역(댐주변지역), ⑥고령자에게 필요 등으로 나타났다.

(4) 방문의료서비스의 권유 의도

"방문의료가 시행된다면 다른 분들에게 권유 하겠습니까"의 질문에는 참여 대상자 80명 모두가 타인에게 권유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타인에게 권유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차원으로 압축할 수 있다. ①충분한 진료 시간으로 자세한 상담을 할 nt 있고, 친절하게 안내함, ②수자원공사(K-water)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시내에 나가서도 (이 사업을) 알리고 다님, ③멀리 시내까지 안 나가고 상담·치료해줘서 좋음.

(5) 개인부담금 발생 시 참여 의도

'방문의료 시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더라도 이용하시겠습니까?'의 질문에는 '이용 하겠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 응답자(N=80) 중 75명(93.8%)이 자부담이 있더라도 이용하겠다고 답하였고,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5명(6.2%)으로 나타났다. '이용하지 않겠다'로 답한 대상자는 남자 1명(3.6%), 여자 4명(7.7%)이었고, 70대 이하 2명(6.1%), 80대 2명(5.1%), 90대 1명(12.5%)로 조사되었다. 방문횟수에 따라서는 3회~5회가 4명(5.0%), 6회~8회가 1명으로 나타났다. '이용하지 않겠다'를 선택한 대상자들이 제시한 이유로는 '기초수급자라서'와 '돈이 없다'로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표 18〉 개인부담금 발생 시 참여 의도 (N=80)

구분		이용 하겠다	이용하지 않겠다	N (%)
		n (%)	n (%)	
총합계		75 (93.8)	5 (6.2)	80 (100.0)
성별	남	27 (33.8)	1 (1.2)	28 (35.0)
	여	48 (60.0)	4 (5.0)	52 (65.0)
나이	70대 이하	31 (38.7)	2 (2.5)	33 (41.3)
	80대	37 (46.3)	2 (2.5)	38 (47.5)
	90대	7 (8.8)	1 (1.2)	8 (10.0)
방문횟수*	3~5회	47 (58.8)	4 (5.0)	50 (62.5)
	6~8회	12 (15.0)	1 (1.3)	13 (16.3)
	9~11회	7 (8.8)	0 (0.0)	7 (8.8)

* 비대면(유·무선 전화) 포함

(6) 개인부담금 적정비용 선택

앞서 살펴본 '개인부담금 발생 시 참여의도'의 조사항목과 연계해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방문의료서비스 개인부담금의 적정비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 왕진시범사업에서 책정한 왕진 시범수가의 본임부담금[19]을 기준으로 향후 사회적경제 방문의료서비스 혹은 통합돌봄에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만족도 조사항목에

19) 2020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348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왕진시범사업에서 책정한 왕진 수가는 왕진료 80,000원~115,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 중 70%가 정부지원금으로 부담하고 환자 본인부담은 30%로 책정되었다. 왕진시범사업 및 왕진수가 책정에 대한 논쟁과 논의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포함시켰다. '개인부담금 적정비용을 선택해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하 응답 문항으로는 '1만원 내외', '3만원', '5만원 내외', '금액 상관없음' 네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1만원 내외'가 60명(75.0%)으로 가장 많았고, '3만원'은 5명(6.3%), '5만원 내외'는 7명(8.8%), '금액과 상관없다'가 7명(8.8%)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1만원 내외'로 응답한 대상자는 성별에 따라 남자 19명(70.4%), 여자 41명(85.4%)이었고, 나이에 따라 70대 이하가 25명(80.6%), 80대가 30명(81.1%), 90대가 5명(71.4%)이었으며, 방문횟수에 따라 3회~5회가 40명(78.4%), 6회~8회가 7명(53.8%), 9회~11회가 4명(57.1%)으로 조사되었다.

〈표 19〉 개인부담금 적정 비용 선택(N=80)

구분			1만원 내외	3만원	5만원 내외	금액 상관없음	N (%)
			n (%)	n (%)	n (%)	n (%)	
총합계			60 (80.0)	5 (6.7)	3 (4.0)	7 (9.3)	80 (100.0)
	성별	남	19 (70.4)	4 (17.8	2 (7.4)	2 (7.4)	27 (100.0)
		여	41 (85.4)	1 (2.1)	1 (2.1)	5 (10.4)	48 (100.0)
	나이	70대 이하	25 (80.6)	4 (12.9)	0 (0.0)	2 (6.5)	31 (100.0)
		80대	30 (81.1)	1 (2.7)	3 (8.1)	3 (8.1)	37 (100.0)
		90대	5 (71.4)	0 (0.0)	0 (0.0)	2 (28.6)	7 (100.0)
	방문 횟수*	3~5회	40 (78.4)	3 (5.9)	2 (3.9)	2 (3.9)	51 (100.0)
		6~8회	7 (53.8)	1 (7.7)	1 (7.7)	3 (23.1)	13 (100.0)
		9~11회	4 (57.1)	1 (14.3)	0 (0.0)	2 (28.6)	7 (100.0)

* 비대면(유·무선 전화) 포함

(7) 희망 의료서비스 종류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방문의료 분야의 마지막 질문으로는 '꼭 지원 되었으면 하는 의료서비스가 있으십니까'였다. 이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향후 사업 기획에 참고하기 위한 문항이었다. 응답 항목은 '한방', '치과', '신경·통증', '기타(서술형)'로 다소 포괄적으로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이는 설문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층인 점을 감안하였고, 방문의료팀의 현장 경험 및 협력기관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정하였다. 그 결과 '신경·통증치료'가 45명(56.3%)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분야가 10명(12.5%), '한방'이 8명(10.0%)으로 조사되었다. 9명(11.3%)이 응답한 '기타'에는 '물리치료, 방사선 검진, 치매 검진, 안과, 진료과별 전

문의' 등이 제시되었으며, '없다'가 8명(10.0%)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특징에 따른 세부 결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신경, 통증 치료'의 경우 성별에 따라 남자 1명(39.3%), 여자 34명(65.4%)이고, 나이에 따라 70대 이하 17명(51.5%), 80대 21명(53.8%), 90대 7명(87.5%)이었으며, 방문횟수에 따라 3회~5회가 26명(51.0%), 6회~8회가 8명(61.5%), 9회~11회가 4명(57.1%)으로 조사되었다.

〈표 20〉 희망 의료서비스 종류 (N=80)

구분		한방	치과	신경/통증 치료	기타	없음	N (%)
		n (%)	n (%)	n (%)	n (%)	n (%)	
총합계		8 (10.0)	10 (12.5)	45 (56.2)	9 (11.3)	8 (10.0)	80 (100.0)
성별	남	2 (7.1)	7 (25.0)	11 (39.3	3 (10.7)	5 (17.5)	28 (100.0)
	여	6 (11.5)	3 (5.8)	34 (65.4)	6 (11.5)	3 (8.8)	52 (100.0)
나이	70대이하	3 (9.1)	5 (15.2)	17 (51.5)	3 (9.1)	5 (15.2)	33 (100.0)
	80대	5 (12.8)	5 (12.8)	21 (53.8)	5 (12.8)	3 (7.7)	39 (100.0)
	90대	0 (0.0)	0 (0.0)	7 (87.5)	1 (12.5)	0 (0.0)	8 (100.0)
방문 횟수 *	3~5회	5 (9.8)	7 (13.7)	26 (51.0)	7 (13.7)	6 (11.8)	51 (100.0)
	6~8회	1 (7.7)	2 (15.4)	8 (61.5)	0 (0.0)	2 (15.4)	13 (100.0)
	9~11회	1 (14.31)	0 (0.0)	4 (57.1)	2 (28.6)	0 (0.0)	7 (100.0)

* 비대면(유·무선 전화) 포함

라. 통합돌봄 만족도

만족도 조사에서 '통합돌봄 만족도'분야는 방문의료서비스가 결합된 통합돌봄 사례 도출을 위해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 및 향후 통합돌봄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①(방문의료) 방문 횟수 주기, ②방문의료서비스 이외의 필요 서비스, ③방문의료서비스 필요 이유, ④정서지원 서비스 필요 유무'를 설문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 기타 사항으로 '⑤불만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였다.

(1) 희망 방문주기

방문의료서비스의 '방문 횟수 주기는 어떻게 원하시나요?'에 대한 질문에 '월 1회 1

회'54명(67.5%), '2개월에 1회'15명(18.8%), '월 2회 이상'6명(7.5%), '3개월에 1회'5명(6.3%) 순으로 나타났다. '월 1회'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성별에 따라 남자가 21명(75.0%), 여자 3명(63.5%)이었고, 나이에 따라 70대 이하가 20명(60.6%), 80대 30명(76.9%), 90대 4명(50.0%)이었으며, 방문횟수에 따라 3회~5회 이하가 3명(64.7%), 6회~8회 이하가 10명(76.9%), 9회~11회 이하가 6명(85.7%)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월 1회' 방문 횟수 주기를 가장 선호하였다.

〈표 21〉 방문의료서비스 희망 방문주기(N=80)

구분			월 2회 이상	월 1회	2개월	3개월	N (%)
			n (%)	n (%)	n (%)	n (%)	
총합계			6 (7.5)	54 (67.5)	15 (18.7)	5 (6.3)	80 (100.0)
	성별	남	2 (7.1)	21 (75.0)	3 (10.7)	2 (7.1)	28 (100.0)
		여	4 (7.7)	33 (63.5)	12 (23.1)	3 (5.8)	52 (100.0)
	나이	70대 이하	3 (9.1)	20 (60.6)	8 (24.2)	2 (6.1)	33 (100.0)
		80대	1 (2.6)	30 (76.9)	5 (12.8)	3 (7.7)	39 (100.0)
		90대	2 (25.0)	4 (50.0)	2 (25.0)	0 (0.0)	8 (100.0)
	방문 횟수 *	3~5회	4 (7.8)	33 (64.7)	10 (19.6)	4 (7.8)	51 (100.0)
		6~8회	1 (7.7)	10 (76.9)	2 (15.4)	0 (0.0)	13 (100.0)
		9~11회	1 (14.3)	6 (85.7)	0 (0.0)	0 (0.0)	7 (100.0)

* 비대면(유·무선 전화) 포함

(2) 방문의료서비스 외 서비스 필요

방문의료와 결합된 통합돌봄서비스 사례 도출 및 모델 구축을 위해 '방문의료서비스 외에 필요 지원이 있으신가요?'의 질문에는 80명 중 76명이 응답을 하였다. 응답 항목은 4점 척도로 '필요없다'1점, '보통'2점, '필요'3점, '매우 필요'4점으로 측정되었다. 그 결과 방문의료서비스 외에 추가 지원 필요성 평균 점수는 2.1±1.05점으로 대부분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성별에 따라 남자는 1.92±1.02점, 여자는 2.19±1.07점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점수가 높았다. 나이에 따라서 70대 이하는 1.94±0.95점, 80대는 2.16±1.14점, 90대는 2.57±0.98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방문횟수에 따라 3회~5회 이하가 2.23±1.12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다.

〈표 22〉 방문의료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필요 (N=76)

구분		n (%)	M±SD*
총합계		76 (100.0)	2.11±1.05
성별	남	24 (31.6)	1.92±1.02
	여	52 (68.1)	2.18±1.07
나이	70대 이하	32 (42.1)	1.94±0.96
	80대	37 (48.7)	2.16±1.14
	90대	7 (9.2)	2.57±0.98
방문횟수**	3~5회	51 (63.8)	2.23±1.12
	6~8회	13 (16.3)	2.00±1.04
	9~11회	7 (8.8)	1.71±0.49

* 5점 만점, ** 비대면(유·무선 전화) 포함

(3) 방문의료서비스 필요 이유 선택

'방문의료서비스 필요한 이유 선택'에 대해서 '고령자'가 70명(87.5%)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 6명(7.5%), '기타' 4명(5.0%), '식생활가사지원' 0명(0.0%) 순이었다.[20] '고령자'를 선택한 대상자는 성별에 따라 남자 25명(89.3%), 여자 45명(86.5%)이었고, 나이에 따라 70대 이하 28명(84.8%), 80대 35명(89.7%), 90대 7명(87.5%)이었으며, 방문횟수에 따라 3회~5회 이하가 4명(86.3%), 6회~8회 이하가 12명(92.3%), 9회~11회 이하가 6명(85.7%)으로 '고령자'를 선택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기타'항목에는 '경제적 어려움', '궁금한 것이 많아서 긴 진료시간동안 궁금증 해소', '거리'라고 답하였다.

〈표 23〉 방문의료서비스 필요 이유 선택(N=80)

구분			고령자	장애	식생활가사지원	기타	N (%)
			n (%)	n (%)	n (%)	n (%)	
총합계			70 (87.55)	6 (7.5)	0 (0.0)	4 (5.0)	80 (100.0)
	성별	남	25 (89.3)	2 (7.1)	0 (0.0)	1 (3.6)	28 (100.0)
		여	45 (86.5)	4 (7.7)	0 (0.0)	3 (5.8)	52 (100.0)
	나이	70대 이하	28 (84.8)	3 (9.1)	0 (0.0)	2 (6.1)	33 (100.0)
		80대	35 (89.7)	2 (5.1)	0 (0.0)	2 (5.1)	39 (100.0)
		90대	7 (87.5)	1 (12.5)	0 (0.0)	0 (0.0)	8 (100.0)
	방문	3~5회	44 (86.3)	4 (7.8)	0 (0.0)	3 (5.9)	51 (100.0)
	횟수	6~8회	12 (92.3)	0 (0.0)	0 (0.0)	1 (7.7)	13 (100.0)
	*	9~11회	6 (85.7)	1 (14.3)	0 (0.0)	0 (0.0)	7 (100.0)

* 비대면(유·무선 전화) 포함

20) 통합돌봄의 맥락에서 방문의료서비스의 필요 이유를 조사하고자 구성한 설문이었으나 질문 및 응답 구성에서 조사의 의도와 목적이 잘 반영되지 못하였다.

(4) 정서지원 서비스 필요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노인 통합돌봄에서 의료서비스만큼 중요한 부분이 정서지원임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통합돌봄의 맥락에서 '정서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신가요?'를 질문하였다. 응답 항목과 지수는 '필요 없다'1점, '보통'2점, '필요'3점, '매우 필요'4점으로 측정되었다. 그 결과 정서지원 서비스 필요성 평균 점수는 2.38±1.13점이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 남자는 2.50±1.1점, 여자는 2.31±1.15점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점수가 높았다. 나이에 따라서 70대 이하는 2.27±1.23점, 80대는 2.51±1.0점, 90대는 2.13±1.36점으로 90대가 점수가 가장 낮고, 80대가 점수가 가장 높았다. 방문횟수에 따라 6회~8회가 2.62±1.12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다.

〈표 24〉 정서지원 서비스 필요(N=80)

구분		n (%)	M±SD*
총합계		80 (100.0)	2.38±1.13
성별	남	28 (35.0)	2.50±1.11
	여	52 (65.0)	2.31±1.15
나이	70대 이하	33 (41.3)	2.27±1.23
	80대	38 (47.5)	2.51±1.00
	90대	8 (10.0)	2.13±1.36
방문횟수**	3~5회	50 (62.5)	2.37±1.20
	6~8회	13 (16.3)	2.62±1.12
	9~11회	7 (8.8)	2.00±0.82

* 5점 만점, ** 비대면(유·무선 전화) 포함

(5) 개선사항

마지막으로 2020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개선사항의 질문에는 '①의료서비스, ②친절도, ③방문의료횟수, ④없다'로 응답을 구성하였고, '①의료서비스'이외의 불만 혹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서술 방식으로 의견을 적을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80명 중 73명(91.2%)이 '없다'로 응답하였다. 개산서항으로 '방문의료횟수' 4명(5.0%), '기타' 3명(3.8%) 순이었으며, '의료서비스'와 '친절도'는 각 0명(0.0%)이었다. 서술 방식으로 제기된 불만·개선사항으로는 '자주 오면 좋을 것 같다', '경제적 도움 필요', '응급 구급약(벌에 쏘였을 때 등)', '대기시간이 길다[21]'라고 응답하였다.

21) 여기서 말한 대기시간은 사북면 고탄리와 고성리에서 시행한 '마을공동진료'의 대기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병원과 달

〈표 25〉 불만 및 개선사항 (N=80)

구분			의료서비스	친절도	방문의료 횟수	없다	기타	N (%)
			n (%)	n (%)	n (%)	n (%)	n (%)	
총합계			0 (0.0)	0 (0.0)	4 (5.0)	74 (91.2)	3 (3.8)	80 (100.0)
	성별	남	0 (0.0)	0 (0.0)	1 (3.6)	25 (89.3)	2 (7.1)	28 (100.0)
		여	0 (0.0)	0 (0.0)	3 (5.8)	48 (92.3)	1 (1.9)	52 (100.0)
	나이	70대이하	0 (0.0)	0 (0.0)	1 (3.0)	30 (90.9	2 (6.1)	33 (100.0)
		80대	0 (0.0)	0 (0.0)	2 (5.1)	36 (92.3)	1 (2.6)	39 (100.0)
		90대	0 (0.0)	0 (0.0)	1 (12.5)	7 (87.5)	0 (0.0)	8 (100.0)
	방문	3~5회	0 (0.0)	0 (0.0)	3 (5.9)	46 (90.2)	2 (3.9)	51 (100.0)
	횟수	6~8회	0 (0.0)	0 (0.0)	0 (0.0)	13 (100.0)	0 (0.0)	13 (100.0)
	*	9~11회	0 (0.0)	0 (0.0)	1 (14.3)	6 (85.7)	0 (0.0)	7 (100.0)

* 비대면(유·무선 전화) 포함

리 환자 한 명당 진료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탓에 제기된 불만 사항이었다.

제4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향 및 과제

이 장에서는 2020년'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과 직간접적으로 한 돌봄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의미와 한계를 점검하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통합돌봄의 방향과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에 직접 참여한 방문의료팀의 간호사였고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2021년 '길벗마을돌봄간호사협동조합(이하 길벗협동조합)'을 설립한 김지향 이사장과 협력기관이자 농촌형 마을공동체 통합돌봄 모델을 함께 기획한 '춘천별빛사협'의 최대영 팀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탐색을 위해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춘천시 원도심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카페'의 기획과 운영 총괄을 맡고 있는 '춘천사회혁신센터' 윤효주 팀장과 원주에서 공동체 돌봄 기반의 커뮤니티케어 교육과 기획 활동을 하면서 2020년'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전문가 자문으로 참여한 '위드커뮨협동조합(이하 위드커뮨)' 천혜란 이사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에게는 사전 연락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 취지를 설명하였고, 인터뷰의 효율적 진행과 상호간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인터뷰 대상자와 공유하여 인터뷰이가 질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 항목은 10개 내외로 구성하였고 현장 상황에 따라 새로운 질문 항목이 추가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인터뷰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사전 양해로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기본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인터뷰 대상자 기본현황

연번	이름/성별/연령	현 소속 / 기관성격	직책	시범사업 관련	돌봄 관련 활동
1	김지향/여/40대	길벗마을돌봄간호사협동조합 / 사회적경제기업	이사장	방문의료팀 간호사	춘천시 케어카페 간호진단·상담 운영
2	최대영/남/50대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경제기업	팀장	협력기관	우리동네119, 세대공감 반찬 지원사업 등 마을공동체 사업
3	윤효주/여/40대	춘천사회혁신센터 / 중간지원조직	팀장	-	춘천시 케어카페 기획 및 운영, 도심형 공동돌봄체 사업 기획
4	천혜란/여/40대	위드커뮨협동조합 / 사회적경제기업	이사장	자문위원	커뮤니티케어활동가, 강원도 마을기업 돌봄 사업모델 구축

1.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방문의료의 방향과 역할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 등장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으로 정의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명칭으로 2019년 지역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6월부터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6년까지 보편적 실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27). 말하자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면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돌봄의 필요 정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김보영, 2021: 48-49쪽), 이를 위한 경험과 사례의 축적 및 지역과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 개발이 이루어져야함은 필요조건이다. 2020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최초 기획되었다.[22] 그러나 준비과정과 시행과정에서 여러 장애물에 직면하였고 사업의 성과만큼이나 한계와 과제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인터뷰에서 인터뷰이 모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지만, 통합돌봄의 맥락에서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평가와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각자의 관점과 경험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2020년'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방문의료팀 간호사로 참여한 '길벗마을돌봄간호사협동조합' 김지향 이사장은 농촌, 댐 주변지역 등 의료와 복지 취약지역에 방문의료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문제와 대상자의 정서적 지원 및 동기부여 차원에서 필수 요소이며, —2020년 방문의료사업의 경험에 기초해— 통합돌봄에서 의료는 돌봄 대상자의 사전 검사(screening)와 이를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돌봄 자원의 연결자로서 역할이 현장에서의 치료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고령화가 되니까 아무리 교통이 발달해도 접근성은 떨어진다. 우리가 예전에도

22)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최초 기획안과 사업계획서는 2019년 9월 K-water소양강댐지사의 의뢰와 협의를 거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작성하였으며, 당시 사업명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문의료 및 마을공동체 통합돌봄서비스 시범운영"이었다.

이제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필요 없지 않냐. 교통 발달했으니까 차, 버스 타고 나오면 금방 오지"했는데 고령화가 되니까 없어지면 안되는 게 된 거야. 의료적 영역에서 어떤 분은 병원을 다니긴 하지만 어떠어떠한 개인적인 이유로 병원 가고 싶지도 않고, 이동 수단도 남한테 신세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런 마음 때문에 안 간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방문의료서비스가)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분은 정신적 건강이 더 필요한 거예요. (…) 그래서 병원에 가실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시켜드리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길벗협동조합' 김지향 이사장).

미국이나 유럽의 형태에서는 의료가 먼저 접근을 해서 복지와 함께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지가 먼저 가면서 의료를 접목하려니까 잘 안 돼. 의료가 (먼저) 가서 이분의 건강 상태를 스크리닝(screening)을 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신, 신체 그런 다음에 환경이 보이잖아요. (…)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케어 매니저가 의료인이 해요. 간호사가 신체적 정신적 스크리닝을 먼저 들어가고 의사 선생님하고 연결하죠. 주거환경이나 이런 개선을 필요하면 복지랑 연결하죠('길벗협동조합' 김지향 이사장).

이에 비해 2020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협력기관이자 소양강댐 주변지역인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에서 마을돌봄사업을 총괄하는 '춘천별빛사협' 최대영 팀장은 방문의료의 필요성에서 병원과 이·미용실의 이용, 말벗과 같은 정서적 지원 등 일상생활의 필요서비스 중 가장 결핍된 요소이며, 통합돌봄 혹은 방문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의사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현장에서의 치료와 처방을 강조하였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을 어르신들과 관계를 맺고 어르신들의 불편한 점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요. (…) 반찬나눔 정도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말동무를 해드리고 건강을 살펴보는 정도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불편한 점을 뽑자면 생활시설 이용의 불편함이지요. 첫 번째가 병원, 두 번째 이·미용실 이용 그리고 말동무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적다였습니다('춘천별빛사협' 최대영 팀장).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사업시행기간이 너무 짧았고 그 짧은 기간에 어르신들 한분한분이 체감하면서 만족을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그 정도 (방문의료서비스를) 와준 것만으로 만족은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해볼 때, 처방전을 주거나 직접적인 치료가 시행되지 않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호사가 직접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복지사 또는 요양

돌봄이랑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간호사 보다는 의사가 와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20년 소양강사업에서는 어르신들의 복용약을 살펴보고 중복 처방되었거나 증상에 상관없이 똑같은 약을 장기복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것을 의사선생님이 약복용 방법을 다시 설명해 주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처방이 주어지지 않는 통합돌봄 형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춘천별빛사협' 최대영 팀장).

한편 '위드커뮨' 천혜란 이사장[23]은 2020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에 대해 의사, 간호사, 케어매니저 등 주체의 역할의 모호성과 통합돌봄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지 않아 주민주도형 돌봄 사례가 도출 되지 않은 점을 아쉬움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동시에 일본 돌봄(개호)사례를 통해 통합돌봄에서 의료의 역할과 방향을 보다 유기적이고 시스템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양강댐 방문의료시범사업은)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주체가 모였고 책임주체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방문의료팀은 모니터링도 해야 하고, 치료도 해야 하고 케어플랜 매니지먼트 보고서작성, 정산까지. 그러면서도 대외홍보 만족도 조사 등등 의사수급이 어렵다보니, 의사의 권한이 커지고 그러다보니 본질적인 이사업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는 어차피 방문의료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지역 주민과 간호가 같이 진행되고 간호사의 대상자 관리가 의사는 간헐적 관심과 치료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 간호사와 케어매니저가 케어플랜을 짜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상자 관리가 진행되고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교육이 같이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주민스스로가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위드커뮨' 천혜란 이사장).

우리나라는 왕진이랑 방문진료의 개념을 같이씁니다. 개념은 다르다. 왕진은 외래진료를 하는 환자에게 즉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와주세요"해서 의사가 방문하는 것이 왕진이고, 방문진료는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개호 보험'과도 같은 건데, 케어플랜을 짜고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케어진료를 하는 시스템이다 간호적은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문하는 간호사들은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 의사의 처방이 달라지는 건강관리, 치료관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위드커뮨' 천혜란 이사장).

23) '위드커뮨협동조합' 천혜란 이사장은 일본에서 돌봄 관련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2019년 귀국해 공동체 기반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기 위해 원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현재 커뮤니티케어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자문 역할과 함께,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기획한 「마을기업 돌봄 신사업 모델 구축 지원사업」에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다.

이와는 다른 맥락으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춘천의 원도심(약사명동, 효자동)에 간호사, 마을돌봄 활동가, 마을 주민 등이 함께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 누구나 돌봄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케어카페'를 기획·운영하고 있는 '춘천혁신센터' 윤효주 팀장은 2020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영향과 도심형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일상성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아닌데, 의료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팀 —방문의료팀(호호방문진료센터)— 이 저희 (춘천사회혁신센터) 입주 기업으로 있었고, 그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방문의료 외에 좀 더 도시에서 확산될 수 있는 방식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춘천혁신센터' 윤효주 팀장).

저희가 이 사업('케어카페')은 일상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상적인 건강관리가 내가 지금 안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아픈데 물어볼 수도 있고, 사실 돌봄이라는 게 그냥 말벗하고 미술하고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여기가 아니라도 문화센터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죠('춘천혁신센터' 윤효주 팀장).

이상과 같이 2020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고 현재 지역사회에서 돌봄사업에서 활동하는 인터뷰 대상자 모두는 통합돌봄에서 의료(진료·간호), 특히 방문의료의 역할과 의미에서는 다소 간의 이견을 보였지만, 그것이 통합돌봄의 필수요소라는 점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2. 지역 기반 통합돌봄의 방향과 과제

인터뷰를 통해 농촌 혹은 댐 주변지역이란 공간적·환경적 특수성을 넘어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의 영역에서 통합돌봄, 즉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면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보편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방향과 실천적 과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공통적 의견을 하나의 과정으로 정리하면, ①제공자가 아닌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마을) 주민들 개개인이 직면한 현안과 문제를 통해 니즈(needs)를 파악하고, 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봄 자원을 연결함으로써 솔루션(solution)을 제공하며, ③그 과정에서 대상자와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 돌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④대상자 '스스로 돌봄'에서 '서로 돌봄'으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돌봄'으로 나아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역에서 직간접적으로 돌봄 활동을 하는 인터뷰이 모두가 지역 현안을 고려한, 지역주민 각자에 필요한 니즈의 파악과 그것의 충족이 보다 미시적이고 실천적 차원에서 통합돌봄 혹은 지역돌봄의 시작이자 현재 직면한 과제임을 언급한 점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

> *이게 동내별로도 원하는 니즈와 성향이 달라요. 효자동과 약사명동이 완전 다르고, 살고 있는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뭘 넣어야 하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니즈가 뭐냐. 다 다르죠. 그걸 풀어내려면 주민과 대화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보여요. 제가 주민들하고 둘러앉아서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이제 자율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길벗협동조합' 김지향 이사장).*

> *일반 케어가 필요한 고령자는 질환에 따라 생활형편에 따라 니즈 조건이 달라진다. '누가 반찬만 해줬으면', '누가 한 달에 두어 번 장을 봐줬으면', '누가 나를 태워다 줬으면', '목욕만 시켜줬으면', '마당의 풀이나 베 줬으면' 등등의 원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니즈 조건을 채워주면 그것이 통합돌봄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대상자분들은 시설로 들어가는 시일을 미룰 수 있다고 봅니다('위드커뮨' 천혜란 이사장).*

> *제가 가지고 있던 약간의 어르신들에 대한 편견을 좀 깬 게 있는데요. 연로해지면 하던 일도 내려놓으시면서 여가를 즐기며 좀 쉬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어르신들은 농사일을 하면서 노동이 운동을 하는 것이고 농사일을 하면서 이웃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경로당에 모여 농사일에 대한 정보공유도 이루어지고 관계형성을 하게 되지요. 그런 면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잘 살려야 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춘천별빛사협' 최대영 팀장). 저희가 이 사업('케어카페')을 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주민분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걸 잘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존 돌봄서비스는) 이미 필요하다는 걸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설정한 거랑 다른 게 담길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 예를 들어 오시는 분들이 하체가 부실하시데. 그래서 집에서도 아프고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저희가 수련관이랑 얘기해 가지고 효자동에는 지금 대나무 지압이랑 매트를 거기다 깔아놨거든요. 그렇게 까니까 이제 운동도 자연스럽게 되시고 그분들끼리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간호선생님이 없으셔도('춘천사회혁신센터' 윤효주 팀장).*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로는 돌봄 대상자를 포함한 지역주민과 마을 단위에서의 돌봄 조직화 및 교육을 통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 *약사동이란 얘기하게 된 것은 저희(춘천사회혁신선테)가 이제 관계를 기반 한 돌봄, 공동체 돌봄이라는 맥락에서 케어카페를 하는 건데, 그냥 기존의 관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봐야 되냐 라고 봤을 때, 약사명동은 그때 3년 차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주민조직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곳은 어느 정도 주민 조직화가 이루어진 곳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좀 있었고 (…) 저희가 사회적경제 보다는 주민조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을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안에 기존에 있었던 커뮤니티나 기존에 있었던 (통장, 이장 등) 전달체계들과 이미 친하신 소그룹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춘천사회혁신센터' 윤효주 팀장).*

> *우리나라도 재가요양서비스라고 해서 목욕서비스, 이동서비스, 식사지원 등등 여러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농촌과 낙후지역은 그 나마의 서비스이용도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구요. 지역적 소외와 여러 상황 상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과 각계의 복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통합돌봄에 대한 인식교육부터 시켜주고 행정이 그 순환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기반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위드커뮨' 천혜란 이사장).*

>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장기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시행하기에도 우리의 정서와 이해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모임부터 서로를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역주민에게는 교육이 진행되고 행정과 기관에서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위드커뮨' 천혜란 이사장).*

궁극적으로 이러한 교육과 조직화의 핵심은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서로 돌볼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있으며, 여기에 행정과 다양한 돌봄 주체들이 결합된 순환시스템 기반이 조성되었을 때 비로소 기존의 중복되고 분절화 된, 시설·영리·공급자 중심의 제도화된 돌봄서비스의 대체 혹은 새로운 대안적 돌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실례로 춘천사회혁신센터의 '케어카페'는 춘천시 원도심에 맞는 대안적 돌봄 모델로서 '주민스스로 돌봄'에 방향을 설정하고 사례를 도출했으며, 그 결과 행정(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과 결합하여 작지만 하나의 대안 돌봄 모델로서 적용과 확장 가능성을 높여가

고 있다.

코로나가 되면서 돌봄의 공백들이 여러 곳에서 생겼는데, 기존의 돌봄이 자기 취약성을 드러내야 하는 돌봄이었잖아요. 그래서 취약성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돌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의존하는 돌봄이 필요하다. 공급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때는 공급자이고 어떤 때는 수요자가 되는 이런 식의 이 두 가지 측면에 대안 돌봄 모델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거냐. 마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의존하고 이런 것들은 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관계 기본적으로 마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봤고요('춘천사회혁신센터' 윤효주 팀장).

작년의 케어카페 두 개는 다 저희 (춘천사회혁신센터) 예산이었거든요. 100%로. 근데 (올해) 약사명동은 자체 도시재생사업으로 가고 있고, 저희가 효자동은 특화 사업 안에서 케어카페를 운영하고요. 한 번 시행됐었던 게 눈에 보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안에서 대안 모델로서 안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춘천사회혁신센터' 윤효주 팀장).

이 외에도 강원사경센터에서도 강원도 농촌 현실에 맞는 마을돌봄의 사례와 모델 도출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인 '마을기업'을 활용한 "마을기업 돌봄 신사업 모델 구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반 조성을 위해 '위드커뮨' 천혜란 이사장과 함께 마을기업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통합돌봄의 인식전환 교육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마을기업은 소득을 창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마을의 조직이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는 않지만, 일단 조직이라는 틀이 짜여져 있다 보니 교육을 시행했을 때 동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지요. 통합돌봄이라는 용어도 생소한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통합돌봄이란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주민역량교육, 의료돌봄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회차의 교육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관심주제도 아니어서 접근은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미전달과 함께 역량강화교육 해외사례를 들며 모두가 두려워하는 노후에 대해 고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미션을 쥐어주고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법인설립을 목표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역 모두가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모델수립이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위드커뮨' 천혜란 이사장).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서 통합돌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거시적이고 제도적인 통합돌봄 정책만으로는 본래 의도한 목표에 도달하기 쉽

지 않으며, 보다 미시적이고 이해와 실천 기반의 관계적 속성, 특히 '공동체성', '호혜성', '비영리성'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통합돌봄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통합돌봄의 슬로건은 '탈시설, 탈원, 시설 밖으로 나오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탈시설이라고 생각해요. 턱없이 부족한 병원과 의사부족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요자 공급자가 구분지어 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가 높다고 생각해요('위드커뮨' 천혜란 이사장).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서로 돌볼 수 있고, 다 같이 돌볼 수 있고, 이런 지향이 사실은 이제 호혜와 공동체에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거, 자기의 감각을 볼 수 있는 거. 근데 그거는 일반 주민분들이 하기는 어려워요('춘천사회혁신센터' 윤효주 팀장).

우리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을 만나고 교감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반찬을 갖다드리고 대화도 주고받으면 좋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거부감 없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춘천별빛사협' 최대영 팀장).

보건 진료(보건지소) 전담공무원은 선생님이 혼자예요. 그 분이 (다른 환자를 위해) 방문을 나가신다. 그러면 그 장소가 비는 거죠. 이 분이 나갔을 때 다른 분이 아파서 왔을 때 소장님이 안계시니까 이 분은 '소장님이 안계시네' 하는 어떤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2인 1조나 아니면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 사실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이 쓰는 그 공간은 공공의 영역이면서 마을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의료공간이고 그 지역 안에서 의원까지는 아니지만 공공 영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인력이 좀 충원되고 시스템 좀 변화를 주고 그러면 돌아가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문제점이 뭔가를 자꾸 찾아야 되는 거죠('길벗협동조합' 김지향 이사장).

위의 내용처럼 인터뷰에 참여한 돌봄 활동가들이 각자의 경험과 실천을 통해 통합돌봄 혹은 대안적 돌봄의 필수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관계적 속성, 즉 '공동체성, 호혜성, 비영리성, 네트워크 간 협력' 등은 사회적경제의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그 동안 사회적경제에서 돌봄관련 주체들은 돌봄사업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아 왔으며, 지역

돌봄 영역에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경제 원칙에 맞닿은 관계적 속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돌봄영역에서의 경험 축적과 다양한 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한 인터뷰 참여자들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

> *우리나라는 이제 통합돌봄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통합돌봄의 슬로건은 탈시설, 탈원, 시설 밖으로 나오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탈시설이라고 생각해요. 턱없이 부족한 병원과 의사부족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요자 공급자가 구분지어 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가 높다고 생각해요('위드커뮨' 천혜란 이사장).*

> *반반인데 (지역사회 돌봄에서 사회적경제가) 필요하다 느끼는 건 지역 안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 사회적경제기업 밖에 없어. 그리고 사실은 이런 식의 공동체라는 걸 기반을 해서 돌봄을 하는 것, 치유 농업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사회적경제기업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데 반대로 애미한 건 자기 틀이 너무 강하죠('춘천사회혁신센터' 윤효주 팀장).*

이러한 맥락에서 2020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 방문의료팀의 간호사로 활동하고, 그 경험으로 토대로 국내 최조로 간호사 주도의 의료협동조합인 '길벗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현재 '케어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향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김지향 이사장이 간호사 주도의 의료 협동조합을 설립한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지금 통합돌봄이 나오고 커뮤니티 케어가 나오는 이 시점에 내가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점 하나도 못 찍을 거 같은 거예요 그런 수많은 고민을 했었던 우리 선생님들 그 다음에 그럼 누군가가 분명히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재가 (요양보호)센터도 해 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댐주변지역 방문의료) 시범 사업을 한, (…) 기존의 재가센터나 방문 간호 요양 이런 걸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아니다 이거는 지금 포화 상태고 다 누구든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방식이 뭘까. 내가 최대한 이걸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협동조합이다. 그럼 일단 간호사들의 인식 변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간호사 협동조합부터 세우자('길벗협동조합' 김지향 이사장).*

> *제가 추구하는 거는 사실은 협동조합 내에서 유휴 간호사들이 조합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육아를 하던 뭘 하던 파트타임 형식이나 아니면 하프. 그러니까 4시간 정도 일 해서 누구든 다 지역에 나와서 경험하고 일하고 자기 경제적인 것까지 가져가고, 이게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어느 날 케어 매니저가 간호사가 하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네트워크 형성해서 갈 수 있다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대한 간호사 일자리 창출이 생기긴 해요. 최종 목적은 사실은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재활의학, 의사가 한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돌봄이 필요한 서비스를) 공유하는 거예요('길벗협동조합' 김지향 이사장).*

제5장 결론

가 연구에서는 2020년 K-water에서 발주하고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소양강댐 주변지역 사회적경제 방문의료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중심의 통합돌봄 사례 소개 및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인구학적 현황과 현안을 통해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타당성과 통합돌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기초통계분석에 기초해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 받는 방문의료서비스의 사례 분석과 성과의 의미를 도출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지역 돌봄 활동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통합돌봄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 연구는 기획 당시 학술적 측면, 정책적 측면, 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 측면에서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추진하였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과 이론 혹은 일본, 영국 등의 해외 사례에 대한 소개 및 분석 연구는 어느 정도 누적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장 기반의 국내 사례를 조사한 연구가 매우 드문게 현실이며,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과 방문의료서비스가 중심이 된 실증적 사례 연구는 그것의 정리와 소개만으로도 학술적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기초지자체 선도사업의 단계에서 향후 보편적 단계를 지향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의 사례 공유, 참여 인력에 의한 연구의 진행, 현장 기반의 자료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측면에서의 활용 가치도 조심스럽게 모색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0년'댐주변지역 방문의료사업'에 참여한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면접조사를 통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방향과 사회적경제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탐색해본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는 아쉬움과 한계로 남는다. 우선 같은 농촌이어도 지역에 따라 현안과 환경이 다른 만큼, 춘천시에 소재한 소양강댐 주변지역이라는 공간적·환경적 특수성은 성과와 결과의 일반화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다음으로 의료

분야의 경우 대단히 전문적 영역임을 감안할 때 방문의료서비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성과와 사례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24]

24) 이를 위해서는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의료 전문가 집단과 결합해 평가 측정 지표 등을 함께 설계하고, 사업 시행과정에서부터 자료의 수집과 대상자 평가 등이 진행되었을 때 보다 객관적인 사례 분석과 성과 도출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희완(2008),「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2020년 진료비통계지표(진료일 기준)」.

김남훈·조승연·하혜지(2020),「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 및 확산 방안」,『KREI 정책연구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남훈·하인혜(2020),「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과제」,『KREI 정책연구보고』 P26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보영(2021),「커뮤니티 케어가 아직 되지 못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월간 복지동향』 제270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김상문·이병철(2013),「다목적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한국수자원학술논문집』 제46권 제4호, 한국수자원학회.

김형수·고영·손미선(2020),「서울특별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통합돌봄 요구」,『융합정보논문지』 제10권 제5호, 중소기업융합학회.

남춘호(2020),「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의료사협의 역할 분석: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2020년도 (사)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 논문집』, 한국지방정부학회.

박혜선(2020),「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모델개발연구」,『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제26권 제1호, 의료·복지 건축.

보건복지부(2020),「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가이드북」, 보건복지부.

석재은(2018),「돌봄정의 개념구성과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평가」,『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2호, 한국사회정책학회.

소진홍(2009),「공공사업분야 지원사업제도 개선방안 연구: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미선, 김형수, 조종희, 고영, 김미예(2020),「보건의료복지 서비스제공자와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인식」,『융합정보논문지』 제10권 제6호, 중소기업융합학회.

신창환(2019,「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구축을 위한 사례연구」,『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9권, 제4호,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안석·김남훈·김유나(2019),「농촌·도시 건강실태 및 의료비용 효과 비교와 정책과제」,『KREI 정책연구보고』 P25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봉욱(2020),「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사회과학리뷰』 제5권 제1호, K교육연구학회.

오영인(2019),「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위한 비판적 시각」,『의료정책포럼』 제17권 제1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오현정, 김형수, 고영, 신은영, 손미선(2020),「광역 지자체별 노인의 통합돌봄 요구 비교」,

『융합정보논문지』 제10권 제8호, 중소기업융학회.

윤민석(2016),「서울의 고령화 현황과 대응방안」,『세계와 도시』 12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이은영·배명순·이지헌(2008),「다목적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청잼과 충주댐을 중심으로」,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수자원학회.

이재열(196),「구조와 행위의 이중성과 미시-거시 연계분석의 방법론」.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이찬희·임현선·김영남·윤수진·박양숙·김선애·박은철·강중구(2017),「외래 초진환자의 만족 진료시간과 관련 추가 비용 지불 의사」,『보건행정학회지』 27권1호, 한국보건행정학회.

인천광역시(2017),「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제언」, 인천광역시.

임선아(2016),「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16 고용패널 학술대회발표자료집. 한국고용정보원.

장민선(2017),「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연구보고』, 한국법제연구원.

전만식(2018),「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정책, 미래지향적 개선방안」,『정책메모』제690호, 강원연구원.

전지훈(2020),「지역공동체 기반 돌봄 활동의 요인구성과 정책 방향: 노인과 아동의 돌봄 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IDI 도시연구』 제18호, 인천연구원.

조원희, 가와쿠보 히로시(2020),「고령사회 지역통합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과제: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방향」,『사회복지연구』, 제51권 제1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최경환, 정명채, 장월계(2020),「농촌지역 비대면 보건·의료서비스 개발·활용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2020),「2020 고령자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2020.9.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2020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홍성운(2007),「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강원통계정보(http://stat.gwd.go.kr/)

춘천시통계(https://www.chuncheon.go.kr/chstat/index.chuncheon)

통계청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통계자료(https://kosis.kr)

동아일보,「노령화 실태와 노인복지 대책」, 1999.02.03. 8면

【부록1-인터뷰 채록본】

1-1. 녹취문 편집본_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최대영 팀장 (53세)

■ 개요

○ 구술자 : 최대영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팀장
○ 면담자 : 정성림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리
○ 면담일자 : 2021년 8월 5일 목요일, 13:00~14:00 (60분)
○ 면담장소 :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회의실

■ 녹취문

1. 고탄리에서 마을돌봄을 운영하게 된 배경과 계기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을 어르신들과 관계를 맺고 어르신들의 불편한 점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요. 그러면서 우리들끼리 나중에는 우리 마을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영역까지 넓혀보자, 해보자라는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땐 4명 정도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 준비를 시작하는데 저희가 전문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구요 그나마 제가 소소하게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진행을 하다 보니, 그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략 마을 어르신들은 130분 정도 되었구요. (처음에는) 반찬 나눔 정도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말동무를 해드리고 건강을 살펴보는 정도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불편한 점을 뽑자면 생활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이지요. 첫 번째가 병원, 두 번째 이·미용실 이용 그리고 말동무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적다였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의료, 교통 등 댐 주변지역 생활과 환경과 도시와의 차이

제가 가지고 있던 약간의 어르신들에 대한 편견을 좀 깬 게 있는 데요 연로해

지면 하던 일도 내려놓으면서 여가를 즐기며 좀 쉬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어르신들은 농사일을 하면서 노동이 운동을 하는 것이고 농사일을 하면서 이웃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경로당에서 모여 농사일에 대한 정보공유도 이루어지고 관계형성을 하게 되지요. 그런 면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잘 살려야 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장점도 많지만 또 한편으론 도시가 오히려 제한적 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3. 현재 진행하는 마을돌봄 운영 현황

상시 운영인력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반찬나눔 행사와 우리마을 119라고 위탁사업과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30여분의 어르신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이·미용서비스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을 만나고 교감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반찬을 갖다드리고 대화도 주고받으면 좋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부감 없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병원이동을 차량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미용서비스 반찬나눔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원사업비가 줄고 저희도 사업 확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전남 영광의 여민동락, 대전 민들레의료사협 등 다른 마을돌봄사례와 춘천별빛사협과의 차이점

여민동락은 사실 첫 시작부터가 주간보호센터로 결의를 해서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시작점부터가 다르구요 저희는 문제의 발견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그곳은 목적설정부터가 다르죠. 그리고 저희도 궁극적으로 안정화되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자면 그런 방향을 쫓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의료사업으로 시작한 민들레사협과 같은 경우는 저희랑 완전히 다른 것 같구요. 사실 의사가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운신의 폭의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계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 같구요. 우리 마을의 확연히 다른 점은 대상이 분명하다 이겠죠 면단위 소재에 작은 마을이구요. 문제의 발견 또한 분명합니다. 생활권이 좁고 마을단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좀 어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5. 마을돌봄을 위한 주변 자원동원 및 협력 현황

현재 거의 지원을 받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지사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세대공감 반찬지원사업 어린이들이 어르신께 반찬을 배달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시청의) 복지과 등에서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제되고 있다. 맥락과 취지가 같다고 해도 일단 기관자격이 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6. 2020년 방문의료서비스가 마을돌봄에 미친 영향과 평가

사업시행기간이 너무 짧았고 그 짧은 기간에 어르신들 한분 한분이 체감하면서 만족을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그 정도 와준 것만으로 만족은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어르신들하고 얘기해 볼 때 처방전을 주거나 직접적인 치료가 시행되지 않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호사가 직접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복지사 또는 요양돌봄이랑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간호사 보다는 의사가 와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20년 소양강사업에서는 어르신들의 복용약을 살펴보고 중복 처방되었거나 증상에 상관없이 똑같은 약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것을 의사선생님이 약복용 방법을 다시 설명해 주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처방이 주어지지 않은 통합돌봄 형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7. 통합돌봄에서 사회적경제가 갖는 의미와 나아가야 할 방향

저는 좁은 의미에서 나라 지원사업의 지원되는 분야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일자리 지원사업이 많고 의미 없는 정책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초고령화 된 사회의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일로 전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 녹취문 편집본_위드커뮨협동조합 천혜란 이사장

■ 개요

○ 구술자 : 천혜란 위드커뮨협동조합 이사장 (46세)
○ 면담자 : 정성림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리
○ 면담일자 : 2021년 8월 5일 목요일, 11:00~12:00 (60분)
○ 면담장소 : 상지대학교 회의실

■ 녹취문

1. 강원도의 상황에서 고령화시대에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이 필요 한 이유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통합돌봄의 슬로건은 탈시설, 탈원, 시설 밖으로 나오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탈 시설이라고 생각해요. 턱없이 부족한 병원과 의사부족이 현실이잖아요. 그럼 내가 사는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요자 공급자가 구분지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가 높다고 생각해요. 고령화가 되어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본인이 원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다. 일반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부양자의 선택으로 피부양자가 시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럼 왜 부양자가 시설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건 일반 생활 케어를 못해주기 때문이고 어르신혼자 놔둘 수 없는 이유와, 고령의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싫어서 남들에게 폐를 끼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돈을 주는 자식들의 선택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일반 케어가 필요한 고령자는 질환에 따라 생활형편에 따라 니즈조건이 달라집니다. '누가 반찬만 해줬으면', '누가 한 달에 두어 번 장을 봐줬으면', '누가 나를 태워다 줬으면', '목욕만 시켜줬으면', '마당의 풀이나 베어줬으면' 등등의 원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니즈 조건을 채워주면 그것이 통합돌봄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대상자분들은 시설로 들어 가는 시일을 미룰 수 있다고 봅니다.

2. 보직 사각지대의 관점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진행 상황의 사회적경제 통합돌봄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도 재가요양서비스라고 해서 목욕서비스, 이동서비스, 식사지원 등등 여러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농촌과 낙후지역은 그 나마의 서비스이용도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구요 지역적 소외와 여러 상황상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과 각계의 복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통합돌봄에 대한 인식교육부터 시켜주고 행정이 그 순환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기반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20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주체가 모였고 책임주체는 분명해 보이지 않고, 방문의료팀은 모니터링도 해야 하고, 치료도 해야 하고 케어플랜 매니지먼트 보고서작성, 정산까지 그러면서도 대외홍보 만족도 조사 등등 의사수급이 어렵다보니, 의사의 권한이 커지고 그러다보니 본질적인 이사업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는 어차피 방문의료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럼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가. 지역 주민과 간호가 같이 진행되고 간호사의 대상자 관리가 의사는 간헐적 관심과 치료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호사와 케어매니저가 케어플랜을 짜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상자 관리가 진행되고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교육이 같이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지원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주민스스로가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4. 일본 사례 등을 통해 볼 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통합돌봄 모델(시스템) 도출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는 왕진이랑 방문진료의 개념을 같이 씁니다. (하지만) 개념은 다르다. 왕진은 외래진료를 하는 환자에게 즉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와주세요"해서 의사가 방문하는 것이 왕진이고, 방문진료는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개호보험'과도 같은건 데 케어플랜을 짜고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케어진료를 하는 시스템이다. 간호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문하는 간호사들은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 의사의 처방이 달라지는 건광 관리, 치료관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가체계상 의사가 대상자를 만나러 수시로 방문진료 케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 시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을 볼 때 90분에 20명 정도 진찰 한다고 했을 때, 방문진료는 90분에 한곳을 갈수도 있는 상황이다. 고생스러운 진찰을 하려는 의사수급도 어려울 것으로 봅니

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장기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시행하기에도 우리의 정서와 이해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모임부터 서로를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역주민에게는 교육이 진행되고 행정과 기관에서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5.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마을기업을 활용한 마을형 돌봄 모델의 추진 배경 및 성과와 한계

통합돌봄의 인식전환, 교육부터 시작한 거 같아요 마을기업은 소득을 창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마을의 조직이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는 않지만, 일단 조직이라는 틀이 짜여 있다 보니 교육을 시행했을 때 동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지요. 통합돌봄이라는 용어도 생소한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통합돌봄이란?'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주민역량교육, 의료돌봄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회차의 교육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마을기업의) 관심주제도 아니었어서 접근은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미전달과 함께 역량강화교육 해외사례를 들며 모두가 두려워하는 노후에 대해 고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미션을 쥐어주고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법인설립을 목표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역 모두가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모델수립이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 녹취문 편집본_길벗마을돌봄간호사협동조합 김지향 이사장

■ 개요

○ 구술자 : 김지향 길벗마을돌봄간호사협동조합 이사장 (46세)
○ 면담자 : 길민아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리
○ 면담일자 :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10:00~12:00 (120분)
○ 면담장소 : 춘천시 약사명동도시재생센터

■ 녹취문

1. 2020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

2018년도에 '회복적서클'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정신과 교수님하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신장애인의 '회복적정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신장애우한테최초로 시도해보는 프로그램이 같이 참여를 했고, 국립춘천병원의 환우분들하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른 방향성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유치원부터 대학교, 기업까지 해야 하는 걸 수도 있다. 거기서 만난 선생님들 90%가 사회복지사에요 의료인은 저 혼자인 거예요 같이 얘기를 하는데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은 사회복지사들이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 보다 더 잘 알아요. 청소년 문제, 발달장애, 지적장애와 관련된 여러 복지관련 사업들에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커뮤니티케어라는 얘기를 2015년부터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는 많이 나오고 나도 듣고 아는 게 있는데 '그럼 과연 실제 의료보전은 어떨까?'가 이제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공부할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간호사들이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거는 뭔가 지역이든 병원이든 밑으로 오는 후배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간호학적인 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아니냐고.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요양원이나 재가센터나 방문간호를 나가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 그 영역들이 잘 안 돌아간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다 알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에 대한 거를 액션을 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앉

아서 계속 얘기는 많이 해.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건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것들. 2016년 17년 계속 얘기는 한 거죠. 18년도 회복적서클을 하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사례랑 건강에 대한 이야기. 저도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졌죠. 그랬는데 조경자 (춘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이 "지역에 이런 게 (소양강댐 주변지역 방문의료 시범사업) 있는데 해보면 어떻겠냐."하셔서, "그럼 저 사실 궁금했는데. 해보겠습니다." 계기는 그런 거예요.

2. 실제 방문의료 돌봄 사업을 참여하면서 느낀 이상과 현실은?

제가 건강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매니저, 교육매니저 하는 것을 13년부터 17년까지 했어요. 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1차 진료를 해야 돼요. 이 선생님들이 880개 지소 중 전국에 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원래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보건소와 함께 연계해서 잘 가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걸 없애는 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거죠. 이분들 안에서 돌아가는 거를 서포트를 해주거나 비어 있는 부분 대해서 누군가 연결해 줄 수만 있으면, 이 자체가 잘 돌아갈 거라는 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그거를 보이긴 했어요. 제가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서비스) 방문을 해서 이제 그런 경험하고 해봐야 되겠다.

공무원으로서 보는 것, 책임지어야 되는 방향성하고 제가 이제 직접 나가서 보는 거는 또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궁금해서 해 보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방문의료서비스 시범사업 간호사로 참여) 하게 됐고 사실은 제가 먼저 나가서 어르신들 먼저 뵙고 상황이나, 이제 상황파악도 좀 하고, 동네도 좀 보고, 집도 보고, 정윤후 매니저, 별빛 팀장님하고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방문 의료이긴 한데 보건진료소장과 보건소를 연결해서 투어 버전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팀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각지대 계속 나올 거고, 받는 사람만 받을 거고, 아무리 (우리마을)119 이렇게 (최대영)팀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만들어서 사업을 해서 모셔간다 해도 분명히 이건 한계가 있다.

보건 진료 전담공무원은 (지소에) 선생님이 혼자예요. 그 분이 (다른 환자) 방문을 나가신다. 그러면 그 장소가 비는 거죠. 이 분이 나갔을 때 다른 분이 아파서 왔을 때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 분은 '소장님이 안 계시네'하는 어떤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그러려면 2인 1조나 아니면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좀 개선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방문의료사업에) 나와서 보니까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보건소 약에 대한 것도 이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약이 한정돼 있어요. 보건소가 주는 틀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

떻게 하면 다양성을 접근해 줄 수 있을 것이냐'를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점들을 더 조사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해서 공백을 메꿀 것이냐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죠.

딱 제가 외부인으로서 방문의료 팀으로써 가서 보니까 여기가 뚫어지는 거구나 (부족하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니까 그걸 메꿔줘야 되는 거죠.그러니까 팀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보건진료소장님이 재활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그 안에 재활약이나 물리치료사들이 상주하거나 그런 어떤 공간이 마련이 돼서, 그런 인력을 써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면 사실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이 쓰는 그 공간은 공공의 영역이면서 마을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의료 공간이고, 그 지역 안에서 의원까지는 아니지만 공공영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인력이 좀 충원되고 시스템 좀 변화를 주고 그러면 돌아가요. 그러고 돌아가면서 문제점이 뭔가를 자꾸 찾아야 되는 거죠.

3. 춘천에 강원대·한림대 등 의대·간호대와 대학병원 등 많은 의료자원이 있음에도 사회적경제 의료 인력이 양성되지 않는 이유

사실은 관심이 있으신 의사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봅아야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숙제죠. 숙제. 사실은 지금 시스템에서는 의사 선생님들 약간 경제적인 이런 마인드로 우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풀지는 좀 많이 고민해야 해요. 의사는 그런 (경제적인) 훈련을 학부 때 하는 거죠. 사실 경제적인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착하고 정말 뜻이 있으신 분들은, 가끔 방송에 나오는 분들 그런 분인 거예요. (뜻이 있는 다른 의사들도) 크게 뭐가 돌아가면 구조적인 것 때문에 멈칫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 구조적으로 돌아가게 타이트하니까 자기가 굳이 거기서 이슈화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게 있죠. 간호사들도 지역에 나오면 본인의 직업을 잘 오픈하지 않아요. 조용히 살아요.

4. 댐주변지역 시범사업 방문의료팀 간호사의 경험으로 농촌 등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 방문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고령화가 되니까 아무리 교통이 발달해도 접근성은 떨어진다.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필요 없지 않냐, 교통 발달했으니까 차 버스 타고 나오면 금방 오지'했는데 고령화가 되니까 없어지면 안 되는 게 된 거야. 의료적 영역에서 어떤 분은 병원을 다니긴 하지만 어떠어떠한

개인적인 이유로 병원 가고 싶지도 않고, 이동 수단도 남한테 신세지고 싶어 싶지도 않고. 이런 마음 때문에 안 간다. 그러면 그런 분은 (방문의료서비스가)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분은 정신적 건강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그거를 들어주거나 풀어내실 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실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시켜드리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분이 거동 정말 불편이 못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활팀이 가야 될 수도 있고, 물리치료나 이런 거 하는 팀에 가야 될 지도 있고. 사실이 직접 그 집에 가면 그 부분이 전체가 보이는데 우린 아무도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거를 가볼 필요가 있죠. 직접적으로 개인의 삶을 들여다봐야지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5. 의료인의 관점에서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결합되어야 하는 이유

제가 그때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서비스) 방문을 나갔을 때도 사회복지사 선생님 같이 왔지만 제가 보는 관점과 그분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걸 못 봤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니까 서로 그거를 못 본 걸 서로 챙겨가야 되는데, 사실 (서로 챙기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대상자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의 형태에서는 의료가 먼저 접근을 해서 복지와 함께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지가 먼저 가면서 의료를 접목하려니까 잘 안 돼. 의료가 (먼저)가서 이분의 건강 상태를 스크리닝을 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신, 신체 그런 다음에 환경이 보이잖아요. 그것만 좀 뒤바뀔 수 있으면 우리의 고민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케어매니저가 의료인이 해요. 간호사가 신체적 정신적 스크리닝을 먼저 들어가고, 의사 선생님하고 연결하죠. 주거 환경이나 이런 개선을 필요하면 복지랑 연결하죠. 이 케어 매니저의 역할을 간호사. 그러니까 의료 인력이 제일 많은 간호사가 해줘야 해요. (길벗마을돌봄간호사)협동조합을 세운 이유도 그게 보여서 그랬어요

6. 댐주변지역 방문의료 시범사업 이후 돌봄을 위한 간호사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

(시범사업 할때도 주변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내 스스로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걸 안 한다고 하면 어느 날 분명히 누군가는 또 해야 될 일은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이런 기회에 한번 내가 궁금했던 거를 한번 해보자. 해보고 그러면 이제 결정을 내려고 해보고 그다음 다시

생각을 하자. 지금 통합돌봄이 나오고 커뮤니티 케어가 나오는 이 시점에 내가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점 하나도 못 찍을 거 같은 거예요 그런 수많은 고민을 했었던 우리 선생님들 그 다음에 그럼 누군가가 분명히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재가센터도 해 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시범사업을 한, 누구나 와도 되는 그런 건강한 일상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버전으로 갈 수가 없어요. 수가책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와상이나 수급자나 이런 분들하고 또 만나야 되는 거죠. 기존의 재가센터나 방문 간호, 요양 이런 걸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아니다. 이거는 지금 포화 상태고 다 누구든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방식이 뭘까? 내가 최대한 이걸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협동조합이다. 그럼 일단 간호사들의 인식 변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간호사 협동조합부터 세우자.' 제가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협동조합 내에서 유휴 간호사들이 조합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육아를 하던 뭘 하던 파트타임 형식이나, 아니면 하프 그러니까 4시간 정도 일 해서 누구든 다 지역에 나와서 경험하고, 일하고, 자기 경제적인 것까지 가져가고. 이게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어느 날 케어 매니저가 간호사가 하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네트워크 형성해서 갈 수 있다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대한 간호사 일자리 창출이 생기긴 해요. 최종 목적은 사실은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재활의학, 의사가 한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돌봄이 필요한 서비스를) 공유하는 거예요.

1-4. 녹취문 편집본_춘천사회혁신센터 윤효주 팀장 + 길벗마을돌봄간호사협동조합 이사장

■ 개요

○ 구술자 : 윤효주 춘천사회혁신선테 팀장 (42세) + 김지향 길벗마을돌봄간호사협동조합 이사장
○ 면담자 : 길민아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리
○ 면담일자 :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10:00~12:00 (120분)
○ 면담장소 : 춘천시 약사명동도시재생센터

■ 녹취문

1. 춘천사회혁신센터에서 도심형 돌봄 모델인 케어카페를 기획하게 된 배경

윤효주: 저희(춘천사회혁신센터)가 코로나 관련된 TF를 만들었어요.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냐. 얘기했을 때 이제 돌봄 얘기가 있었는데 이 돌봄을 어떤 형태로 풀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창(비전)이 있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 대안의 모델이 필요한데, 여기서 키워드를 커뮤니티에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기존에 있는 돌봄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규칙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랑 아주 가까운 돌봄이랑 두 개를 돌봄 모델로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얘기했을 때 하나는 지역 안에서 이제 아이들 육아와 관련된 파트가 필요한 게 있었고,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병원 가는 것도 어렵고 기존에 경로당이든 뭐든 그렇게 모아졌던 것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봄이지만 공동체성을 같이 구현 할 수 있는 모델. 이 두 가지가 지금 지역 안에 필요하다 라는 의견으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윤효주: 코로나가 되면서 돌봄의 공백들이 여러 곳에서 생겼는데, 기존의 돌봄이 자기의 취약성을 드러내야 되는 돌봄이었잖아요. 그래서 취약성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돌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의존하는 돌봄

이 필요하다. 공급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때는 공급자이고 어떤 때는 수요자가 되는 이런 식의 이 두 가지 두 가지 측면에 대안 돌봄 모델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거냐. 마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의존하고 이런 것들은 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관계 기본적으로 마을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봤고요. 저희가 이제 그 비슷한 사례로 서울에서 진행됐었던 사례들이 좀 있어가지고 걔네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춘천)지역 버전에 맞게 해보자한 거죠.

2. 춘천의 약사명동과 효자동에 케어카페를 운영한 이유

윤효주: 약사동이랑 얘기하게 된 거는 저희(춘천사회혁신센터)가 이제 관계를 기반한 돌봄, 공동체 돌봄이라는 맥락에서 케어 카페를 하는 건데 그냥 기존의 관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 약사명동은 그때 3년차(도시재생)이기 때문에 주민조직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곳은 어느 정도 주민 조직화가 이루어진 곳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좀 있었고. 약사 명동이 다른 데보다 고령화가 되게 높은 지역이었었어요. 그리고 18년도에 여기 약사 명동 중심으로 비슷한 돌봄 모델이 리빙랩으로 이루어진 적도 있어서 이런 연계 지점을 가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3. 최초의 기획의도와 현실과 접점 및 격차

윤효주: (첫 번째)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잘 안 돼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 그니까 (서비스 등을)받는 거는 됐는데, 그것을 주는 형식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인거에요. 지금 시도를 좀 해보고 있는 거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내가 와서 "해보세요!" 한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내가 주는 행위가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좀 여건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지금 효자동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저희 센터에 있는 채소 냉장고를 거기(효자동)에 두고 8월 한 달간은 한살림에서 지원 되는 거, 동네 텃밭에서 있는 거, 센터 옥상에 있는 것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좀 넣어서 가져가는 것들을 조금 익숙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가져가다 보면 뭔가 줘야 될 것 같은 그 마음. 그렇게 한두 개가 냉장고에 다 채

워지면 서로 나눠지는 것들. 나의 어떤 작은 역할이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에 좀 와 닿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윤효주: 두 번째 안 되는 거는 이게 믹스(mix)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효자동은 청년층이랑 노인층이 되게 섞여 있는 동네거든요. 그 강원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두 층이 사실 잘 믹스되지 않아요. 그리고 약사 명동도 보면 이제 기존에 오셨던 분들,'그룹'이 분들만 오시고 그 외에 분들이 들어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믹스를 어떻게 잘 만들어갈 거냐가 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됐어. 그래서 지금 효자동에서 좀 해보려고 하는 거는 너무 딱딱하게 맨날 했던 방식으로 하면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노인분들하고 청년분들하고 같이 하숙방 같은 개념으로 해서 예능 콘텐츠 같은 걸 만들거든요. 조만간. 그래서 한 3회 정도 같이 소셜다이닝을 찍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좀 흥미를 주고 거기에 참여했던 청년이나 이거에 흥미 있었던 청년들이 뭔가 내년에 케어카페랑 연동될 수 있는 거리들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윤효주: (잘되고 있는 것은) 작년의 케어카페 두 개는 다 저희 예산이었었거든요 100%로. 근데 (올해) 약사명동은 자체 도시재생 사업으로 가고 있고, 저희가 효자동은 사업 안에서 케어카페를 운영하고요. 한 번 시행됐었던 게, 눈에 보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안에서 대안 모델로서 안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김지향 선생님이 정말 100% 잘 하시는건 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주민분들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걸 잘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존의 돌봄은) 이미 필요하다는 걸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설정한 거랑 다른 게 담길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그런데 김지향 선생님이 (지역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시는 분들이 하체가 부실하시데, 그래서 집에서도 아프고, (불편하시고)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저희가 수련관이랑 얘기해 가지고 효자동에는 지금 대나무 지압이랑 매트를 거기다 깔았거든요. 그렇게 까니까 이제 운동도 자연스럽게 되시고, 그분들끼리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간호 선생님이 없으셔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프로그램 안에 자율적으로 집어넣고 빼고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4. 케어카페 사업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역할과 필요성

윤효주: 저희가 사회적경제 보다는 주민 조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을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안에 기존에 있었던 커뮤니티나 기존에 있었던 (이장, 통장 등) 전달 체계들과 이미 친하신 소그룹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이라면 반반인데,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지역 안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 사회적 경제기업 밖에 없어. 그리고 사실은 이런 식의 공동체라는 걸 기반을 해서 돌봄을 하는 것, 치유 농업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사회적 경제 기업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반대로 애매한 건 자기 틀이 너무 강하죠. 이 사업을 같이 들여다보고 같이 필요한 걸 만들고 이런 느낌은 아니어서, 내 옷에 그냥 여기를 끼워 맞추는 거지.

5. 도시형 마을돌봄이라 할 수 있는 케어카페에서 의료(간호사)인력을 결합한 이유

윤효주: 저희가 이 사업은 일상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상적인 건강관리가 내가 지금 안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아픈 데 물어볼 수도 있고. 사실 돌봄이라는 게 그냥 말벗하고 미술하고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여기가 아니라도 문화센터 가서도 할 수 있는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서로 돌볼 수 있고 다 같이 돌볼 수 있고 이런 지향이 사실은 이제 호혜와 공동체에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거, 자기의 감각을 볼 수 있는 거. 근데 그거는 일반 주민분들이 하기는 어려워요.

김지향: 자가 간호를 하려면 자가 간호 교육은 간호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건강을 챙기는 정보와 교육을 간호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들이 여태까지는 많이 빠져 있었던 거죠. 의료 인력 결합 안 해도 돌아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게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의료가 접근을 하고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몸이 이런 상태구나. 내 정신이 이런 상태거나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김지향: 지역사회 간호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이유는 그거(개인의 신체 정신적

건강산태)를 빨리 캐치해서 빨리 방향성을 찾아주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 안내를 해준 다음에 치료로 들어가든 아니면 치료 이전의 버전으로 가서 활동을 하게 하든 하기 위해서예요. 어쨌든 신체와 정신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져요. 자꾸 활동할 수 있게. 효자동이나 여기(약사동)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 있으면 너무 우울하고 죽고 싶고 그랬는데 여기 나와서 살 것 같아. 너무 좋아. 집에 있으면 안 해. 여기서 배워 가도 집에 가면 안 해." 제가 자꾸 움직이게 해드려서 여기 나오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하니까 같이 해서 좋아.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을 거 같아." 이게 어르신들이 혼자서 어려운 거예요.

6. 20년 댐주변지역 방문의료시범사업이 돌봄카페 기획에 미친 영향은?

윤효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아닌데, 의료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방문의료)팀이 저희 (춘천사회혁신센터) 입주 기업으로 있었고. 그럼 여기가 지금 하고 있는 방문의료 외에 좀 더 도시에서 확산될 수 있는 방식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계기는 되는 거죠.

7. 케어카페와 소양강댐 방문의료는 도시형과 농촌형 돌봄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사례 모두 경험한 상태에서 차이점

김지향: 이게 동네별로도 원하는 니즈와 성향이 달라요. 효자동과 약사명동이 완전 다르고, 살고 있는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뭘 넣어야 하나.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니즈가 뭐냐 다 다르죠. 그걸 풀어내려면 주민과 대화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니즈인지) 안 보여요. 제가 주민들하고 둘러앉아서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이제 자율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김지향: 도심형과 농촌형의 큰 차이는, 여기 (도시에) 계신 분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시잖아요. (농촌의) 그분들은 농사를 지으시고, 그럼 계절별로 접근해야하는 게 달라지고, (농촌의) 그 분들은 관절염이 더 심각하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농촌형은 투어버전의 버스가 필요할 수 도 있다. 물리치료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기는 조금 가면 병원을 가실 수 있죠. 그런데 거기는 조금 가서가 아니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구지원사업-2021-03]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부문 간 협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역 특성별 차이 규명

유한나[1], 한상일[2]

1)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2) 연세대학교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요약〉

1. 연구배경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 욕구 해소를 위해 공공, 영리, 비영리 부문과 활발하게 협력한다. 그러나 타 부문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문 간 협력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또한 지역 내 협력을 통한 역동적이고 자생적인 생태계 형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주목한 실증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부문 간 협력이 조직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둘째, 부문 간 협력과 성과의 관계를 지역 특성(도시 규모, 수도권 여부)이 조절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적 생태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20년 '지역생태계 구축지원사업 조사' 중 사회적 경제 조직 대상의 조사 결과(n=4,041)를 SPSS ver23.0, AMOS ver22.0, Jamovi ver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내용

먼저 응답 조직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후 가설 검증에 앞서 종속변수인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항목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부문 간 협력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한 경로 분석을 시행하였고, 지역 특성의 조절 효과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 단순회귀선 기술기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5. 연구결과

첫 번째 연구 목적인 부문 간 협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결과, 공공, 영리, 비영리 부문과의 협력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가 유의미하게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인 부문 간 협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 특성(도시 규모, 수도권 여부)의 조절 효과는 경제적 성과에서 확인되었다. 즉, 중소도시 소재 조직이 대도시 소재 조직에 비해, 비수도권 소재 조직이 수도권 소재 조직에 비해 부문 간 협력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두드러졌다. 끝으로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충족되지 않은 사회 욕구를 해소하는 대안적 경제조직이다. 사회문제는 단일 주체가 해결할 수 없기에, 이들은 협력적 해결책을 추구한다(Sakarya et al., 2012). 이러한 협력은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inter-sector collaboration)을 넘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기업, 시민단체 및 비영리 재단 조직들과 폭넓게 이루어지는 부문 간 협력(cross-sector collaboration)의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관심을 일으키며, 창의적 해결책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부문 간 협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제한된 지역 범주나 사업 특성에 기초해 실증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타 부문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적, 실무적인 각종 지원책이 활발히 입안·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문 간 협력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는 엇갈린다.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부문 간 협력의 연구에서 지역적 맥락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간과되어 왔다. 지역적 맥락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맥락에 따라 발현 과정이 서로 다르다. 지역사회 내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오랫동안 활동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이들이 형성하는 부문 간 협력의 양식과 성과는 지역마다 다르다. 둘째,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사회에 산재한 유무형의 자원을 기반으로 운영된다(Austin et al., 2006). 공동의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형성하는 사회적 자본의 양상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사회적 경제 조직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를 목표시장으로 하여 사업을 전개하거나, 지역사회 내에 소외된 수혜자들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지역적 범주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부문 간 협력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협력과 성과의 관계를 지역적 특성이 조절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 내에서 협력하여 역동적이

고 자생적인 생태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국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 맥락의 자생적, 독립적 생태계 형성의 기회보다 정부 주도의 지원, 민간 자본의 투입 등 타 부문에의 의존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부문 간 협력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지역적 맥락에서 탐구하는 것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의 도출에 큰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협력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해결된다(Pestoff, 2014). 정치·경제·사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시되었으나 본격화된 협력이 발생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이다. 주기적인 경제위기는 사회 보호, 교육, 보육, 보건,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았고, 정부는 과거보다 다양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나 시민사회 조직과 협력에 나서게 되었다(Osborne, 2010). 다양한 사회 수요가 나타나는 가운데 영리 기업도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시민사회 조직도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발전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경제 영역 내 주체들과 협력할 뿐 아니라(김선화·장승권, 2018), 영역 외부의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Cook et al., 2003). 이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부문 간 협력 방식을 추구하며(Henry, 2015; Jenner & Oprescu, 2016; Kwong et al., 2017; Choi et al., 2018; Choi & Chang, 2019),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하고 자원을 결합하는 것을 주된 전략으로 삼는다(Alvord et al., 2004; Meyskens et al., 2010).

이러한 협력은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경제 조직은 부족한 운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들은 다양한 조직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인다(Googins & Rochlin, 2000;

김영욱 외, 2012; 최영근, 2013). 즉, 사회적 교류 네트워크(SEN; social engagement network)를 통해 재무적, 인적, 사회적, 무형적 자원을 확보한다(Meyskens et al., 2010). 둘째, 이들은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내 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협력한다(Montgomery et al., 2012). 특히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을 구성원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문제의식을 공유할 때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에 폭넓은 참여를 확보할 수 있고, 자원의 활용이 쉬워진다. 셋째, 사회적 경제 조직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과 협력한다(Ansell & Gash, 2007; Connick & Innes, 2003). 최근 지역사회의 문제는 정부와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의사결정 및 정책 집행과정에서 협력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로 해결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지역사회의 상황과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고 집행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Freeman, 1997; Smith, 1998). 즉, 부문 간 협력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며,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방안이기도 하다.

2.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부문 간 협력과 지역 특성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3의 영역을 구성하며, 시민사회에서 출발하여 성장했고 현재는 시민사회와 별도의 혹은 중첩된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타 부문과 어떻게 협력하며 대안적 자본주의의 행위자로서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협력의 유형별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협력 실태와 방향을 논의해 왔다. 공공 부문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정부 의존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정책의 단순 전달자, 정책 집행 수단, 지원의 대상이 아닌 공동생산자(Co-producer)로서 파트너십 형성도 논의되고 있다(장인봉·장원봉, 2008; Barinaga, 2020). 즉,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사회문제의 복잡성이 커질수록 정부의 단일한 정책 처방과 시장의 수익성 기준에서 제외되는 부문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빈번한 공적 만남을 갖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의제선정과 정책결정의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영리 부문과의 협력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V(Creating Social Value),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등 최근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전략적 사회혁신파트너로서, 또한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와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는 파트너로서의 협력이 주목받고 있다(Seelos & Mair, 2005). 비영리 부문과의 협력은 공익성과 공공성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재단, 기업이 설립하는 비영리법인, 결사체(association)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Seelos & Mair, 200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부문 간 협력에 관한 연구에서 부족한 점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협력을 통해 성과를 향상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고(Henry, 2015), 특히 한국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는 점이다. 특히 서로 다른 제도와 운영원리를 가진 조직 간 협력은 협력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갈등과 긴장을 유발할 수 있기에 세심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의 사회적 경제 환경은 단시간 내 빠른 양적 성장을 거두어 힘의 비대칭이 큰 상황으로(Park et al., 2018), 자원 의존적 행동이나 의도하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떠밀리게 되어 본래 목적을 상실(mission drift)하는 현상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Kwong et al., 2017; Barinaga, 2020). 이러한 측면에서 부문 간 협력의 연구가 중요성을 갖는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영리 기업과 비교할 때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자원 전략을 추구한다(Austin et al., 2006). 즉, 내부 기반 전략(제품, 종업원, 조직 프로세스 등)보다 외부 기반 전략(경쟁자, 고객, 제휴 파트너 등)을 우선시하며, 재무적 측면에서 자금의 출처가 더 넓고, 비재무적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운영된다(Gras & Lumpkin, 2012). 즉,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에 산재한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과 지역 내 미시·거시적 수준의 네트워크를 복원하여 경영에 이용하는 방식은 성과 향상에 중요하고(최석현 외, 2012), 이를 위해 지역별 차이의 검증이 요구된다(함재봉 외, 2020).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접근은 자산기반 지역공동체개발(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ABCD) 관점이다(한상일·김경희, 2013; 한상일, 2019). 이는 지역에 속한 인력, 기관, 장소 등 다양한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접근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외부에 존재하는 주체들에게 의존하기보다 지역 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체별(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프로보노, 자원봉사, 지역 언론사) 연계 실태와 미래 연계 방향에 대한 연구(최혁라 외, 2012)와, 사회적 경제 조

직의 지역자산 활용도에 따른 성과 차이 검증(한상일·김경희, 2013; Han et al. 2015; 한상일, 2019)이 연구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자산을 협력 부문별로 유형화하여 검증한 시도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 행위자로서, 지역 내 주체들과의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성과를 향상하며, 이러한 관계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에 주목한다. 또한 추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떻게 지역적 특성에 맞는 균형 잡힌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부적인 전략 방향과 외부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1. 가설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부문 간 협력(공공, 영리, 비영리 부문)이 조직 성과(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부문 간 협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 특성(도시 규모, 수도권 여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 부문 간 협력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선행 연구의 전반적인 견해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폭넓은 네트워크 형성이 성과를 향상한다는 것이다. 조상미·김진숙(2014)은 협동조합이 관련 조직들(정부, 민간 기업, 시민사회)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수록 성과와 지속가능성이 향상됨을 주장하였다. 반성식 외(2011)는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이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고, 최석현·남승연(2015)은 생활협동조합의 지역 네트워크 활용이 경제적 성과를 향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복태 외(2018)는 협동조합이 다양한 조직과 연대를 맺는 정도, 즉 네트워크 다양성이 경제적 성과(자금조달성과, 시장참여 및 시장진입 성과)를 향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공 부문과의 협력이 사회적 경제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실

증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공공 부문과의 협력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강병준, 2014; Choi et al., 2018), 지역관계 구축을 매개로 간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박현희·박은영, 2017),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연구 결과(김영욱 외, 2012)가 존재한다. 특별히 중앙정부와의 협력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희·박은영, 2017; 이해진, 2019).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지역과 밀접한 지역 내 공공 부문과의 협력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를 높인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 지역 내 공공 부문과의 협력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사회적, 경제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리 부문과의 협력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행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박미경 외(2012)는 영리 기업의 지원이 포함된 업무환경 요인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실증 규명하였다. 유한나·민동권(2015)은 사회적 기업이 영리 기업과 강한 파트너십을 맺을수록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유의미하게 향상됨을 실증 규명하였다. 반면, Choi et al.(2018)은 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과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사회 문제 해결 또는 사회적 책임 이행,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목적을 위한 활동 수행) 사이에 부정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김영욱 외(2012)는 영리 기업과의 파트너십은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전반적인 사회적 성과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와 재무적 성과(라이벌 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자산 대비 수익의 정도)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있다. 영리 기업과의 선행 연구 결과는 상반된 특성이 있으나, 지역 내 영리 기업과의 협력으로 국한하여 연구된 바 없기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다음의 가설을 수립하였다.

H2 : 지역 내 영리 부문과의 협력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사회적, 경제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영리 부문과의 협력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비영리 시민사회 영역에서 태동하였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사회적 성과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확인되었으

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규명되지 않았다. 김영욱 외(2012)는 비영리 부문과의 파트너십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을 실증 규명했다. 강병준(2014)은 시민사회 부문(신뢰, 착한 소비)의 요인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 규명하였다. Choi et al.(2018) 또한 비영리 단체와의 파트너십과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 간 긍정적 연관성을 규명하였다. 이해진(2019)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할수록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됨을 실증 규명하였다. 선행 연구는 주로 사회적 성과와의 관계만을 규명하였으나, 자원봉사 등 인적 자원 동원, 기금 모금 및 재무적 자원 동원, 협력 기회 창출 등으로 인해 경제적 성과도 향상시킬 것이다. 이에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 지역 내 비영리 부문과의 협력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사회적, 경제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지역 특성의 조절 효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목표달성 가능성은 위치한 지역의 개인, 공간, 그리고 기관들과의 관계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높아진다(한상일, 2019).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은 지역별로 다르고, 지역의 어떠한 자산을 활용가는가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한상일·김경희, 2013; Han et al. 2015; 한상일, 2019).

협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 특성의 차이를 규명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으나 지역 특성에 따른 성과의 차이, 지역 특성에 따른 협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는 존재한다. 먼저, 지역 특성과 성과의 관계에서, 지역 특성(권역)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제적 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함재봉 외, 2020). 그러나 지역 특성(도시 여부, 수도권 여부)에 따라 사회적 성과(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인, 2014). 즉, 지역 특성별로 경제적 성과는 상이할 수 있으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 특성과 협력의 관계에서, 민윤경·홍경준(2020)에 따르면 지역 특성(도시 규모)에 따라 자원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협력 링크의 총 합이 상이하였는데,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일 때 자원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협력 링크의 합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최영근(2013)에 따르면, 대도시보다 저개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이 더 많은 종류의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서울과 강원 지역에만 국한하여 각각 대도시, 저개발 지역으로 분류하였기에 포괄적인 지역 특성에 따른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여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도시 규모와 수도권 여부에 대한 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 지역 내 공공 부문 협력과 조직 성과(사회적, 경제적) 간의 관계에서 도시 규모 특성은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H5 : 지역 내 영리 부문 협력과 조직 성과(사회적, 경제적) 간의 관계에서 도시 규모 특성은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H6 : 지역 내 비영리 부문 협력과 조직 성과(사회적, 경제적) 간의 관계에서 도시 규모 특성은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H7 : 지역 내 공공 부문 협력과 조직 성과(사회적, 경제적) 간의 관계에서 수도권 여부는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H8 : 지역 내 영리 부문 협력과 조직 성과(사회적, 경제적) 간의 관계에서 수도권 여부는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H9 : 지역 내 비영리 부문 협력과 조직 성과(사회적, 경제적) 간의 관계에서 수도권 여부는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사용한 변수는 〈표 1〉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는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성과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중, 지역 창업 활동 기여 정도, 지역 소득 증가 기여 정도, 지역사회 고용 창출 기여 정도, 지방재정 기여 정도, 지역사회 빈곤율 감소 기여 정도,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확산 기여 정도에 대한 동의 정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박현희·박은영, 2017; 반성식 외, 2011). 경제적 성과는 전년 대비 평균 매출액 증가, 평균 총수입 증가, 총 영업이익 증가, 총 지출비용 증가, 총 자산 증가, 총 부채 증가에 대한 동의 정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김정인, 2014; 김창범·이찬영, 2015; 최석현·남승연, 2015).

독립변수는 부문 간 협력으로 지역 공공 부문과의 협력, 지역 영리 부문과의 협력, 지역 비영리 부문과의 협력을 구분해 측정하였다. 공공 부문과의 협력은 조직운영에

있어 지역 내 자치단체와의 연계 정도를, 영리 부문과의 협력은 지역 내 민간 기업과의 연계 정도를, 비영리 부문과의 협력은 지역 내 시민단체와의 연계 정도를 Likert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김영욱 외, 2012; 박현희·박은영, 2017; Choi et al., 2018). 조절변수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구분한 도시 규모(민윤경·홍경준, 2020),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한 수도권 여부(함재봉 외, 2020)로 측정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유형	변수명	조작적 정의	측정
조직 성과	사회적 성과	사회적 성과의 7가지 하위영역에 대한 동의 정도	우리 조직은 1) 제공하는 서비스 중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2) 지역 창업활동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편이다, 3) 지역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편이다, 4) 지역사회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편이다, 5)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편이다, 6) 지역사회 빈곤율 감소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편이다, 7)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1 ~ 매우 그렇다 = 5
	경제적 성과	경제적 성과의 6가지 하위영역에 대한 동의 정도	우리 조직은 전년 대비 1)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2) 평균 총수입이 증가하였다, 3) 총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 4) 총 지출비용이 증가하였다, 5) 총 자산이 증가하였다, 6) 총 부채가 증가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 1 ~ 매우 그렇다 = 5
부문 간 협력	공공 부문과의 협력	지역 공공 부문과의 연계 정도	조직운영에 있어 지역내 공공 부문(자치단체(시, 군, 구청))과 얼마나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연계 약함 = 0 ~ 연계 강함 = 10
	영리 부문과의 협력	지역 민간기업과의 연계 정도	조직운영에 있어 지역내 민간기업(대기업, 중소기업, 지역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등)과 얼마나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연계 약함 = 0 ~ 연계 강함 = 10
	비영리 부문과의 협력	지역 시민단체와의 연계 정도	조직운영에 있어 지역내 시민단체(문화재단, 주민조직, 비영리조직 등)과 얼마나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연계 약함 = 0 ~ 연계 강함 = 10
지역 특성	도시규모	도시규모별 지역구분	대도시(특별/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1, 중소도시(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지역,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에 포함) = 0
	수도권 여부	수도권 및 비수도권 구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1, 비수도권(영남권, 충청 및 강원권, 호남권 등) = 0

3. 측정도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20년 "지역생태계 구축지원사업 조사" 중 사회적 경제 조직 대상의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해당 조사는 2020년 10월 5일~11월 13일에 전국 77개 기초자치단체 내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 면접조사와 웹 설문지 설계를 통한 비대면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본 조사는 전수조사로 5,030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며, 본 연구는 이 중 경제적 성과를 묻는 문항에서 결측치가 있는 응답 989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041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기존에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여타 조사와 비교해 가장 큰 표본으로 수집된 것이며, 응답조직의 지역 내 부문 간 협력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역적 특성을 함께 조사하였기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 규명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SPSS ver23.0, AMOS ver22.0, Jamovi ver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응답 조직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가설 검증에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종속변수인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항목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부문 간 협력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한 경로 분석을 시행하였고, 지역 특성의 조절 효과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 단순회귀선 기술기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분석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수도권이 36.7%로 가장 많았고, 주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15.8%), 광제조업(15.6%), 교육서비

스업(13.7%) 순으로 나타났으며, 법적 형태는 (일반)협동조합이 35.7%로 가장 많았다. 종업원 수는 다수 조직이 50명 미만(94.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응답 조직 특성(n=4,041)

구분		N	%	구분		N	%
권역	수도권	1,482	36.7	사업 지역	기초자치단체 내	1,802	44.6
	영남권	759	18.8		광역자치단체 내	1,090	27.0
	충청 및 강원권	816	20.2		전국지역	1,149	28.4
	호남권	984	24.4	법적 형태	민법상 법인 (사단·재단법인 등)	136	3.4
업종	농업, 임업, 어업	154	3.8		사회복지법인	27	0.7
	광제조업	628	15.6		비영리민간단체	44	1.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0.5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등)	781	19.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17	0.4		농어업회사법인	44	1.1
	건설업	131	3.2		영농조합법인	76	1.9
	도매 및 소매업	500	12.4		(일반)협동조합	1,441	35.7
	운수 및 창고업	60	1.5		사회적협동조합	450	11.1
	숙박 및 음식점업	160	4.0		개별법상 협동조합	902	22.3
	정보통신업	45	1.1		개인사업자	107	2.6
	금융 및 보험업	638	15.8		기타	33	0.8
	부동산업	19	0.5	종업원 수	1명 이하	992	24.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6	2.9		2명~4명	993	24.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8	2.2		5명~9명	899	22.2
	교육서비스업	552	13.7		10명~49명	935	23.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20	5.4		50명~99명	97	2.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30	8.2		100명 이상	82	2.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9	3.4		무응답	43	1.1
	기타	221	5.5				

분석에 앞서 부문 간 협력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응답 조직의 연계 정도는 공공 부문(43.6%), 비영리 부문(34.9%), 영리 부문(31.1%) 순으로 연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국내 사회적 경제 조직은 공공 부문과의 강한 연계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부문 간 협력 응답 비율(단위: %)

구분	부문 간 협력 정도 〈-전혀 없음----------보통----------매우 강함-〉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공공 부문	6.4	5.6	4.7	4.4	3.0	25.7	6.7	11.6	14.0	7.3	10.7	100.0
	21.1				35.4			43.6				
비영리 부문	7.7	5.8	5.9	6.1	4.7	26.2	8.7	11.9	11.8	6.0	5.2	100.0
	25.5				39.6			34.9				
영리 부문	9.1	6.9	7.4	6.8	5.3	25.6	7.8	11.0	10.3	5.4	4.4	100.0
	30.2				38.7			31.1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역 특성 중 소재지의 도시 규모에 따라 부문 간 협력 및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표 4〉와 같이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공공 부문 및 비영리 부문과의 협력은 중소도시 소재 조직(5.77, 5.29)이 대도시 소재 조직(5.73, 5.15)에 비해 높았고, 영리 부문과의 협력은 대도시 소재 조직(4.95)이 중소도시 소재 조직(4.8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도시규모에 따른 성과 차이에 있어서는 경제적 성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성과에서 중소도시 소재 조직(3.12)이 대도시 소재 조직(3.03)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임이 확인되었다.

〈표 4〉 도시규모별 부문 간 협력 및 성과 차이

구분		집단	N	Mean	SD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차
독립변수	공공 부문	대도시	2,188	5.73	2.863	0.161	.688	-.469	4039	.639	-.042
		중소도시	1,853	5.77	2.859						
	비영리 부문	대도시	2,188	5.15	2.804	4.699	.030	-1.600	3985	.110	-.138
		중소도시	1,853	5.29	2.667						
	영리 부문	대도시	2,188	4.95	2.825	0.612	.434	1.246	4039	.213	.110
		중소도시	1,853	4.84	2.744						
종속변수	사회적 성과	대도시	2,188	3.03	0.731	8.052	.005	-3.537	4039	.000***	-.083
		중소도시	1,853	3.12	0.766						
	경제적 성과	대도시	2,188	3.07	0.969	.104	.747	1.598	4039	.110	.0492
		중소도시	1,853	3.02	0.982						

$^{*}p < .05, ^{**}p < .01, ^{***}p < .001$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역 특성 중 소재지인 권역에 따라 부문 간 협력 및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표 5〉와 같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다.

〈표 5〉 권역별 부문 간 협력 및 성과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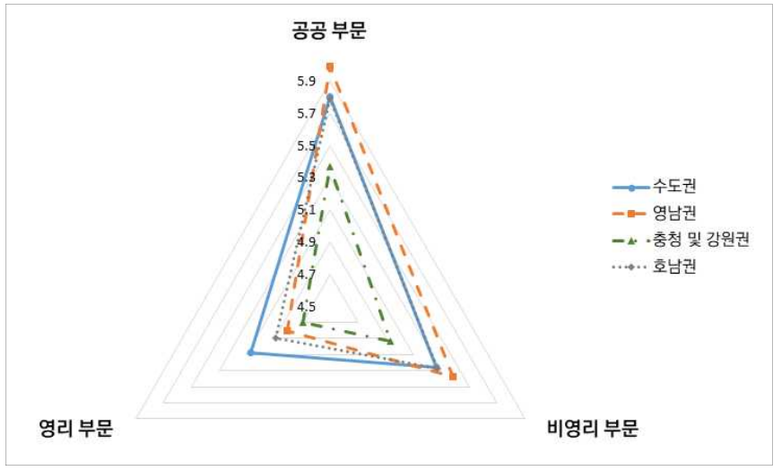
구분		유형	N	Mean	SD	F	사후검증 (LSD)
독립변수	공공 부문	수도권(a)	1,482	5.80	2.927	6.891	a〉c** b〉c*** d〉c*
		영남권(b)	759	5.99	2.707		
		충청 및 강원권(c)	816	5.37	2.963		
		호남권(d)	984	5.79	2.764		
	비영리 부문	수도권(a)	1,482	5.26	2.833	4.122	b〉c*
		영남권(b)	759	5.38	2.724		
		충청 및 강원권(c)	816	4.93	2.774		
		호남권(d)	984	5.27	2.575		
	영리 부문	수도권(a)	1,482	5.07	2.892	3.455	a〉c*
		영남권(b)	759	4.81	2.688		
		충청 및 강원권(c)	816	4.70	2.786		
		호남권(d)	984	4.89	2.696		
종속변수	사회적 성과	수도권(a)	1,482	3.05	0.753	6.004	b〉c** d〉c**
		영남권(b)	759	3.13	0.765		
		충청 및 강원권(c)	816	3.00	0.727		
		호남권(d)	984	3.12	0.741		
	경제적 성과	수도권(a)	1,482	3.05	0.966	1.940	-
		영남권(b)	759	3.11	0.994		
		충청 및 강원권(c)	816	3.03	0.968		
		호남권(d)	984	3.00	0.979		

$^{*}p < .05, ^{**}p < .01, ^{***}p < .001$

먼저 권역 특성에 따른 협력 부문 차이 분석 결과, 공공 부문과의 협력은 영남권(5.99), 수도권(5.80), 호남권(5.79), 충청 및 강원권 소재 조직(5.37)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청 및 강원권에 비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소재 조직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영리 부문과의 협력은 영남권(5.38), 호남권(5.27), 수도권(5.26), 충청 및 강원권 소재 조직(4.93)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남권 소재 조직이 충청 및 강원권 소재 조직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았고, 다른 지역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영리 부문과의 협력은 수도권(5.07), 호남권(4.89), 영남권(4.81), 충청 및 강원권 소재 조직(4.70)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청 및 강원권 소재 조직에 비해 수도권 소재 조직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았고 다른 지역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인 부문 간 협력의 정도를 비교하면, 〈그림 1〉과 같이 공공 및 비영리 부문과의 협력은 영남권 소재 조직이, 영리 부문과의 협력은 수도권 소재 조직이 높았다. 반면 충청 및 강원권 소재 조직의 부문 간 협력 정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다음으로 권역 특성에 따른 성과 차이에 있어서는 경제적 성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성과에서 영남권(3.13)과 호남권(3.12) 소재 조직이 충청 및 강원권(3.00) 소재 조직에 비해 사회적 성과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림 1〉 권역별 차이



2. 부문 간 협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가.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교차적재 되는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구성 개념을 정제하였다. 먼저 내적 일관성을 통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먼저

고유값(eigenvalue) 1 이상의 요인으로 한정하여 요인을 도출하고, 공통성이 0.4 이하인 SP7(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확산 기여 정도)과 동일 요인으로 적재되지 않는 EP6(부채 증가)은 제거하였다. 변수 선정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KMO를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0.890이 나왔으므로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치는 28282.484이며 유의확률이 .000이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단일 차원성을 확인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설문항목들이 일관성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해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직 단위의 분석 수준에 대해서 0.6 이상이면 적합하나, 각각 0.879, 0.909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표 6〉 탐색적 요인분석

개념	요인		요인분석				신뢰도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 (%)	Cron-bach α
사회적 성과	SP1	빈곤감소	0.822	0.689	3.799	34.535	0.879
	SP2	소득기여	0.829	0.717			
	SP3	고용창출	0.789	0.654			
	SP4	재정기여	0.802	0.668			
	SP5	창업기여	0.758	0.581			
	SP6	공동체 의식	0.692	0.504			
경제적 성과	EP1	평균 총수입 증가	0.925	0.879	3.691	33.550	0.909
	EP2	평균 매출액 증가	0.907	0.848			
	EP3	총 영업이익 증가	0.864	0.763			
	EP4	총 자산 증가	0.803	0.675			
	EP5	총 지출비용 증가	0.702	0.512			
KMO 척도			0.890***				

$^{*}p < .05, ^{**}p < .01, ^{***}p < .00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 777.766, df = 43, TLI = 0.967, CFI = 0.974, RMSEA = 0.065로 나타났다(〈표 7〉 참조). TLI과 CFI, IFI의 경우 .90이상일 때, RMSEA의 경우 .50 이하일 때를 좋은 적합도라고 해석하므로, 본 연구의 성과 변수의 적합도는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형의 적재값을 고려한 개념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확인한 결과,

CR값이 0.7 이상, AVE가 0.5 이상인 기준치를 충족하여 측정 모형에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잠재변수	측정항목	비표준화 회귀계수	S.E.	C.R.	p	표준화 회귀계수	AVE (〉0.5)	개념 신뢰도 (〉0.7)
사회적 성과	SP1	1	-	-	-	0.788	0.592	0.90
	SP2	0.969	0.019	52.287	***	0.784		
	SP3	1.047	0.020	51.187	***	0.77		
	SP4	1.047	0.019	55.119	***	0.82		
	SP5	0.914	0.020	45.284	***	0.694		
	SP6	0.832	0.020	40.886	***	0.635		
경제적 성과	EP1	1	-	-	-	0.725	0.631	0.89
	EP2	0.756	0.020	38.075	***	0.602		
	EP3	1.203	0.022	54.24	***	0.844		
	EP4	1.376	0.022	61.997	***	0.965		
	EP5	1.344	0.023	59.619	***	0.923		

$^{*}p < .05, ^{**}p < .01, ^{***}p < .001$

나.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주요 변수들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표 8〉과 같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가 0.8 이상인 것이 없으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성과는 공공 부문 협력, 비영리 부문 협력, 영리 부문 협력과 정(+)의 상관관계를, 수도권 여부, 도시 규모와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비영리/영리 부문과의 협력 수준이 높을수록, 비수도권일수록, 중소도시일수록 사회적 성과가 높았다. 경제적 성과는 공공 부문 협력, 비영리 부문 협력, 영리 부문 협력, 도시 규모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비영리/영리 부문과의 협력 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일수록 경제적 성과가 높았다. 또한 수도권 여부는 영리 부문과의 협력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일수록 영리 부문과의 협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상관관계 분석

요인	1	2	3	4	5	6	7
1.수도권 여부	1						
2.도시 규모	0.195 ***	1					
3.공공부문 협력	0.014	-0.007	1				
4.비영리부문 협력	0.011	-0.025	0.555 ***	1			
5.영리부문 협력	0.046 ***	0.020	0.461 ***	0.487 ***	1		
6.사회적 성과	-0.033 *	-0.064 ***	0.336 ***	0.315 ***	0.312 ***	1	
7.경제적 성과	0.012	0.037*	0.156 ***	0.142 ***	0.129 ***	0.00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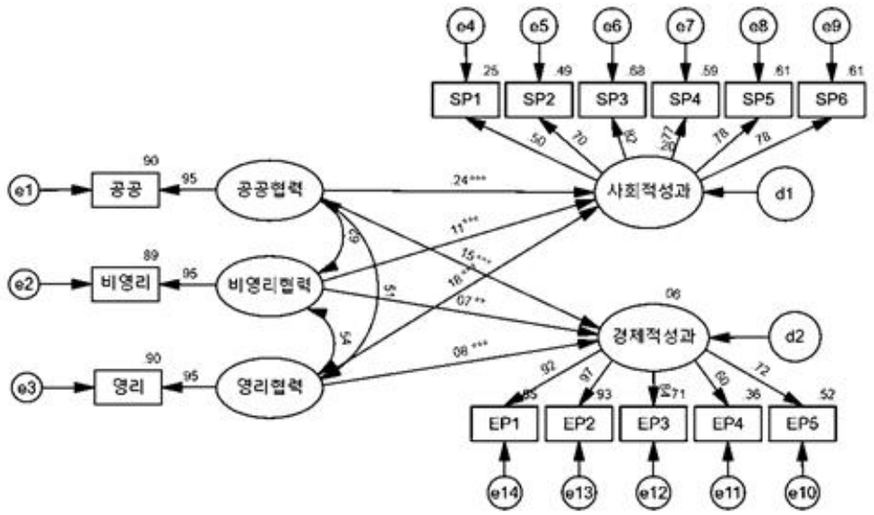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1. 수도권 여부: 수도권(1), 비수도권(0)
2. 도시 규모: 대도시(1), 중소도시(0)

다. 부문 간 협력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부문 간 협력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그림 2〉, 〈표 9〉와 같다.

〈그림 2〉 부문 간 협력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p < .05, ^{**}p < .01, ^{***}p < .001$

〈표 9〉 H1, H2, H3에 대한 검증 결과

가설					부호	b	t	p	결과
H1	H1a	공공부문 협력	→	사회적 성과	(+)	0.237	10.072	***	채택
	H1b	공공부문 협력	→	경제적 성과	(+)	0.146	6.331	***	채택
H2	H2a	영리부문 협력	→	사회적 성과	(+)	0.184	8.584	***	채택
	H2b	영리부문 협력	→	경제적 성과	(+)	0.078	3.649	***	채택
H3	H3a	비영리부문 협력	→	사회적 성과	(+)	0.107	4.551	***	채택
	H3b	비영리부문 협력	→	경제적 성과	(+)	0.068	2.846	**	채택

$^{*}p < .05, ^{**}p < .01, ^{***}p < .001$

먼저 연구 모형 모델적합도 지수를 평가하였다. x^2는 1318.078, df는 71, RMR는 0.114로 나타나 기준치보다 높았으나, GFI는 0.956, AGFI는 0.934, NFI는 0.958, CFI는 0.960, IFI는 0.960으로 나타나 0.9 이상의 기준치를 충족하였기에 전반적으로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공 부문 협력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 값이 0.237(t=10.072, p〈0.001),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 값이 0.146(t=6.331, p〈0.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가설1을 채택하였다. 영리 부문과의 협력 또한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 값이 0.184(t=8.584, p〈0.001),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 값이 0.078(t=3.649, p〈0.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2를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부문과의 협력 또한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 값이 0.107(t=4.551, p〈0.001), 경제적 성과에 대한 경로계수 값이 0.068(t=2.846, p〈0.01)로 나타나 가설3 또한 채택하였다.

3. 지역 특성의 조절효과

가. 도시 규모의 조절효과

도시 규모의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0〉과 같다. 다중공선성 여

부를 검정한 결과, 공성선통계량 중 VIF(분산팽창계수)의 경우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데 2.18~6.19로 나타났고, 잔차의 자기상관을 나타내는 Durbin-Watson 값은 1.95~1.99로 2에 가까우므로 문제가 없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0.1 이하일 때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나 0.161~0.458으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10〉 H4, H5, H6에 대한 검증 결과

가설		종속변인	단계	투입변인	β	SE	t	95% CI(b)		결과
								Lower	Upper	
H4	H4a	사회적 성과	1	공공 협력	0.094	0.004	24.566***	0.087	0.102	기각
				도시 규모	-0.079	0.022	-3.611***	-0.123	-0.036	
			2	공공 협력 X도시 규모	-0.006	0.008	-0.776	-0.021	0.009	
	H4b	경제적 성과	1	공공 협력	0.072	0.005	13.780***	0.062	0.082	채택
				도시 규모	0.052	0.030	1.740	-0.007	0.111	
			2	공공 협력 X도시 규모	-0.023	0.011	-2.140*	-0.043	-0.002	
H5	H5a	사회적 성과	1	영리 협력	0.089	0.004	22.480***	0.082	0.097	기각
				도시 규모	-0.093	0.022	-4.200***	-0.137	-0.050	
			2	영리 협력 X도시 규모	-0.013	0.008	-1.670	-0.029	0.002	
	H5b	경제적 성과	1	영리 협력	0.065	0.005	11.930***	0.054	0.075	채택
				도시 규모	0.042	0.030	1.380	-0.017	0.101	
			2	영리 협력 X도시 규모	-0.039	0.011	-3.550***	-0.060	-0.017	
H6	H6a	사회적 성과	1	비영리 협력	0.093	0.004	22.960***	0.085	0.101	기각
				도시 규모	-0.071	0.022	-3.180**	-0.114	-0.027	
			2	비영리 협력 X도시 규모	-0.010	0.008	-1.220	-0.026	0.006	
	H6b	경제적 성과	1	비영리 협력	0.070	0.005	12.780***	0.059	0.081	채택
				도시 규모	0.059	0.030	1.960*	0.000	0.118	
			2	비영리 협력 X도시 규모	-0.027	0.011	-2.410*	-0.048	-0.005	

$^{*}p < .05, ^{**}p < .01, ^{***}p < .001$

가설 검증 결과, 공공, 영리, 비영리 부문과의 협력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모두 유

의하였다. 도시 규모의 조절효과 상호작용항은 공공 부문 협력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β=-0.023, t=-2.14, p<.05), 영리 부문 협력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β=-0.039, t=-3.55, p<.001), 비영리 부문 협력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β=-0.027, t=-2.41, p<.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호작용항 투입 시 공공 부문(R^2=0.133, ΔR^2=0.001, p<0.05), 영리 부문(R^2=0.037, ΔR^2=0.003, p<0.001), 비영리 부문(R^2=0.040, ΔR^2=0.001, p<0.05) 모두 모형의 설명력이 향상되었다. 이에 경제적 성과에 관한 가설 4b, 가설 5b, 가설 6b가 채택되었다. 비록 사회적 성과에 대한 조절효과는 기각되었으나, 도시 규모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부(-)의 연관성이 나타나 중소도시일수록 사회적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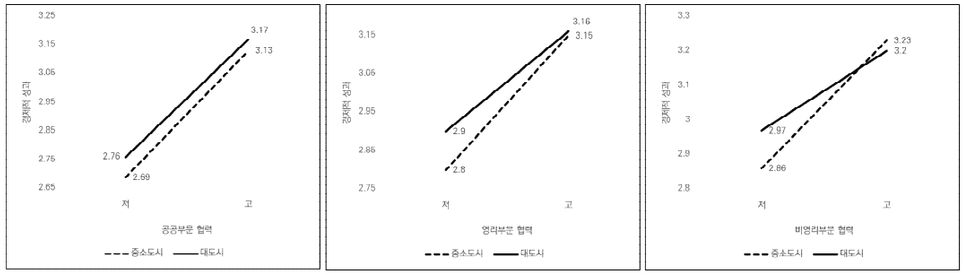
유의한 것으로 판명된 공공, 영리, 비영리 협력과 경제적 성과의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협력 정도가 높은 집단(+1SD), 평균 집단, 협력 정도가 낮은 집단(-1SD)에서 경제적 성과의 단순회귀선 유의성을 검정하였다(〈표 11〉 참조).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소도시 소재 조직의 경제적 성과가 대도시 소재 조직의 경제적 성과보다 부문 간 협력이 미치는 영향의 기울기가 더 컸다. 즉, 도시 규모에 관계없이 부문 간 협력(공공, 영리, 비영리)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성과가 높아지지만, 그 영향력은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더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표 11〉 단순회귀선 검정 결과

	도시규모	b	SE	Z	95% CI(b)	
					lower	upper
공공 협력 → 경제적성과	High (+1SD)	0.061	0.007	8.23***	0.046	0.076
	Average	0.072	0.005	13.77***	0.062	0.082
	Low (-1SD)	0.083	0.007	11.24***	0.069	0.098
영리 협력 → 경제적성과	High (+1SD)	0.045	0.008	6.00***	0.031	0.060
	Average	0.065	0.005	11.92***	0.054	0.075
	Low (-1SD)	0.084	0.008	10.77***	0.068	0.099
비영리 협력 → 경제적성과	High (+1SD)	0.057	0.008	7.49***	0.042	0.072
	Average	0.070	0.005	12.77***	0.059	0.081
	Low (-1SD)	0.083	0.008	10.46***	0.068	0.099

$^{*}p < .05, ^{**}p < .01, ^{***}p < .001$

〈그림 3〉 도시규모의 조절효과 그래프



나. 수도권 여부의 조절효과

수도권 여부의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2〉와 같다. 다중공선성 점검을 위한 공선성통계량 중 VIF(분산팽창계수)의 경우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데 1.62~5.66으로 나타났고, 잔차의 자기상관을 나타내는 Durbin-Watson 값은 1.94~1.98로 2에 가까우므로 문제가 없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0.1 이하일 때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나, 0.177~0.616으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부문 간 협력(공공, 영리, 비영리)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는 유의하였다. 수도권 여부의 조절효과 상호작용항은 공공 부문 협력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β=-0.025, t=-2.302, p〈.05), 영리 부문 협력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β=-0.024, t=-2.211, p〈.05), 비영리 부문 협력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β=-0.030, t=-2.705, p〈.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호작용항 투입 시 공공 부문(R^2=0.045, ΔR^2=0.001, p〈0.05), 영리 부문(R^2=0.035, ΔR^2=0.001, p〈0.05), 비영리 부문(R^2=0.040, ΔR^2=0.002, p〈0.01) 모두 모형의 설명력이 향상되었다. 이에 경제적 성과에 관한 가설 7b, 가설 8b, 가설 9b가 채택되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성과에 대한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도권 여부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부(-)의 연관성이 나타나 비수도권일수록 사회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H7, H8, H9에 대한 검증 결과

가설		종속변인	단계	투입변인	β	*SE*	t	95% CI(*b*)		결과
								Lower	Upper	
H7	H7a	사회적 성과	1	공공 협력	0.095	0.004	24.620***	0.087	0.102	기각
				수도권 여부	−0.050	0.023	−2.200*	−0.095	−0.005	
			2	공공 협력 X수도권 여부	−0.009	0.008	−1.130	−0.024	0.007	
	H7b	경제적 성과	1	공공 협력	0.072	0.005	13.830***	0.062	0.083	채택
				수도권 여부	0.007	0.031	0.235	−0.054	0.068	
			2	공공 협력 X수도권 여부	−0.025	0.011	−2.302*	−0.046	−0.004	
H8	H8a	사회적 성과	1	영리 협력	0.089	0.004	22.408***	0.082	0.097	기각
				수도권 여부	−0.066	0.023	−2.865*	−0.111	−0.021	
			2	영리 협력 X수도권 여부	0.002	0.008	0.187	−0.014	0.018	
	H8b	경제적 성과	1	영리 협력	0.065	0.005	11.964***	0.054	0.075	채택
				수도권 여부	−0.003	0.031	−0.082	−0.064	0.059	
			2	영리 협력 X수도권 여부	−0.024	0.011	−2.211*	−0.046	−0.003	
H9	H9a	사회적 성과	1	비영리 협력	0.093	0.004	23.008***	0.085	0.101	기각
				수도권 여부	−0.048	0.023	−2.099*	−0.093	−0.003	
			2	비영리 협력 X수도권 여부	−0.004	0.008	−0.532	−0.021	0.012	
	H9b	경제적 성과	1	비영리 협력	0.070	0.005	12.739***	0.059	0.081	채택
				수도권 여부	0.009	0.031	0.284	−0.052	0.070	
			2	비영리 협력 X수도권 여부	−0.030	0.011	−2.705**	−0.052	−0.008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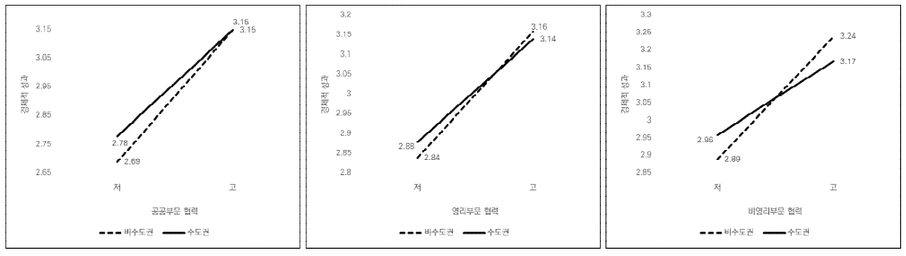
유의한 것으로 판명된 공공, 영리, 비영리 부문 협력과 경제적 성과의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협력 정도가 높은 집단(+1SD), 평균 집단, 협력 정도가 낮은 집단(-1SD)에서 경제적 성과의 단순회귀선 유의성을 검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수도권 소재 조직의 경제적 성과가 수도권 소재 조직의 경제적 성과보다 부문 간 협력이 미치는 영향의 기울기가 더 컸다. 즉, 수도권 여부에 관계 없이 부문 간 협력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성과가 높아지지만, 그 영향력은 비수도권 소재 조직이 수도권 소재 조직에 비해 더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표 13〉 단순회귀선 검정 결과

	수도권 여부	*b*	*SE*	*Z*	95% CI(*b*)	
					lower	upper
공공부문 협력 → 경제적성과	High (+1SD)	0.061	0.007	8.35***	0.046	0.075
	Average	0.073	0.005	13.82***	0.062	0.083
	Low (-1SD)	0.084	0.008	11.25***	0.070	0.099
영리부문 협력 → 경제적성과	High (+1SD)	0.053	0.007	7.19***	0.039	0.068
	Average	0.065	0.005	11.96***	0.054	0.075
	Low (-1SD)	0.077	0.008	9.79***	0.061	0.092
비영리부문 협력 → 경제적성과	High (+1SD)	0.055	0.008	7.35***	0.041	0.070
	Average	0.070	0.005	12.73***	0.059	0.081
	Low (-1SD)	0.085	0.008	10.70***	0.069	0.100

*$p < .05$, **$p < .01$, ***$p < .001$

〈그림 4〉 수도권 여부의 조절효과 그래프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역 내 부문 간 협력(공공, 영리, 비영리 부문)이 조직 성과(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특성(도시 규모, 수도권 여부)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공, 영리, 비영리 부문과의 협력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리 부문과의 협력이 사회적 성과에 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hoi et

al., 2018)와 특정 부문과의 협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확인되지 않은 연구(김영욱 외, 2012)와 달리,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공, 영리, 비영리 부문과의 협력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측정한 협력의 범위가 지역을 제한하여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즉, 광범위한 부문 간 협력보다는 지역 내 부문 간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 향상에 기여함을 나타낸다. 둘째, 도시 규모와 수도권 여부로 살펴본 지역 특성의 조절효과는 부문 간 협력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확인되었다. 즉, 도시 규모와 수도권 여부에 관계없이 부문 간 협력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성과가 높아지나 중소도시일수록, 비수도권일수록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공, 영리, 비영리 부문과의 협력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도시이며 비수도권일 때 높은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최영근, 2013; 민윤경·홍경준, 2020), 이러한 협력은 경제적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더욱 크다는 것이다. 셋째, 협력 수준을 통제하였을 때 지역 특성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 규모와 수도권 여부에서 모두 부(-)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즉, 부문 간 협력 수준을 통제하였을 때 중소도시일수록, 비수도권일수록 사회적 성과가 더욱 높음이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역 내 부문 간 협력 수준이 높을수록 성과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일찍이 Desroche가 강조한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영역의 경계 밖 주체들과 개방적이고 유연한 시각을 가지고 협력할 필요성을 시사한다(자끄 드푸르니 외, 2021). 즉, 지역 내 타 부문의 주체들과 사회적 경제 조직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의 목표 하에 혼합가치를 추구하면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장종익(2017)이 제시한 타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획 창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 영역 중심의 주도적인 협력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협력에 따른 경제적 성과 향상이 더욱 높다는 결과는, 지역이라는 공통된 범주 내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실질적인 재무 성과 향상을 위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별 지역 차원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부문 간 협력을 장려 및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 수준을 통제하였을 때 사회적 성과에 대한 지역 특성의 부(-)의 영향력이 나타난 것은, 오히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

가 협력 정도에 관계 없이 사회적 성과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공공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리 및 비영리 영역의 잠재적 주체들을 우호적 협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효과성 높은 협력 촉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먼저 부문 간 협력을 단일 지표로 측정한 점이다. 공공, 영리, 비영리 부문과의 협력을 측정함에 있어 연계 정도만으로 측정하였기에 협력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탐구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협력의 성격을 다각화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리 부문과의 협력에 관한 문항에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사회적 경제기업이 선택지로 제시되어 엄밀하게 영리 영역과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구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아닌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제시되어 있기에 사회적 경제 영역 내 다양한 성격의 조직 중 영리 성격이 강한 기업적 특성을 갖는 조직과의 협력을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각 부문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한 조사를 통한 실증 규명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부문 간 협력은 지역 내 협력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향후 지역 외 협력과의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한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전수조사 자료이기에 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의 결과에 비해 국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성을 잘 설명해주는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정책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서의 부문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그간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개별적으로 수행했던 부문 간 협력을 제도적 차원의 관심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부족한 자원이 타 부문과의 협력으로 확보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사회문제를 지역 주체들이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론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부문 간 협력의 연구 분야에 기여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부문 간 협력에 관한 실증 연구는 제한적이며, 특히 국내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 전국 단위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부문 간 협력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관련 연구에 기여한다. 실무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부문 간 협력과 성과의 영향을 규명하여 부문 간 협력 관련 전략 수립,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참고문헌

강병준,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 분석", 『공간과 사회』, 24, 2014, pp. 5-46.

김복태·이계만·박범준, "협동조합 네트워크 다양성이 조직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수도권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1), 2018, pp. 183-209.

김선화·장승권, "협동조합간 협동의 실천과정: 두레생협의 공정무역 사례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36(2), 2018, pp. 93-113.

김영욱·이지만·정승화·최영근, "사회적 기업의 파트너십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산업관계연구』, 22(4), 2012, pp. 65-92.

김정인, "사회적기업의 특성 및 지원유형에 따른 성과차이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2), 2014, pp. 181-212.

김창범·이찬영, "한국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대한 효율성 분석", 『산업경제연구』, 28(4), 2015, pp. 1715-1738.

자끄 드푸르니·마르뜨 니센·나딘 리셰-바떼스띠·리오넬 프루또·로랑 가르댕·장-루이 라빌, "사회연대경제", 2021, (김신양·엄형식 옮김), 착한책가게.

민윤경·홍경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역량이 협력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한국사회복지학』, 72(2), 2020, pp. 65-95.

박미경·최송식·이창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요인에 대한 연구 -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1(1), 2012, pp. 191-210.

박현희·박은영,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활동과 사회적·경제적 성과의 관계: 지역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14(3), 2017, pp. 61-87.

반성식·김상표·유지현·장성희, "사회적기업가정신, 조직문화 및 네트워크 활동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논집』, 25(3), 2011, pp. 49-82.

유한나·민동권,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위한 자원 확보 전략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기업과 영리 기업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고객만족경영연구』, 17(3), 2015, pp. 165-190.

이해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협력 네트워크 조직의 관계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9(1), 2019, pp. 57-89.

장인봉·장원봉, "공동생산자(Co-producer)로서 지방정부와 사회적 기업의 파트너십(Partnership) 형성과 전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3), 2008, pp. 299-320.

장종익,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협동조합연구』, 35(2), 2017, pp. 81-101.

조상미·김진숙,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 특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41(4), 2014, pp. 283-323.
최무현·고은주,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역자산활용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9, 2019, pp. 37-61.
최석현·남승연, "사회적기업의 성과모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6(1), 2015, pp. 133-155.
최석현·조창현·정무권,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사회자본 형성전략에 대한 이론적 고찰-연결망 재구축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1), 2012, pp. 125-152.
최영근, "신생 사회적 기업의 사업적 형태와 활동 지역이 파트너십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28(3), 2013, pp. 133-151.
최혁라·김선명·김기현,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성화를 위한 사례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 2012, pp. 308-31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안, 2020.
한상일, "한국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업가정신과 지역 자산 활용: 사회적 성과와 재정성과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협동조합경영연구』, 50, 2019, pp. 1-23.
한상일·김경희, "한국 사회적 기업의 지역자산 활용: 자산기반지역공동체발전 관점에서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지방행정연구』, 27(3), 2013, pp. 153-180.
함재봉·윤복만·박근, "사회적기업의 성장결정요인의 지역별 비교를 통한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5(2), 2020, pp. 101-113.
Alvord, S. H., Brown, D. L. and C. W. Letts, "Social Entrepreneurship and Societal Transformation: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40(3), 2004, pp. 260-282.
Ansell, C. and A. Gash,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2007, pp. 543-571.
Austin, J., Stevenson, H. and J. Wei-Skillern, "Social and Commercial Entrepreneurship: Same, Different, or Bot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0(1), 2006, pp. 1-22.
Barinaga, E., "Coopted! Mission Drift in a Social Venture Engaged in a Cross-sectoral Partnership",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31(2), 2020, pp. 437-449.
Choi, Y. and S. Chang, "Resource Acquisition Partnership of Nascent Social Enterprise for Sustain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23(2), 2019, pp. 1-8.
Choi, Y., Chang, S., Choi, J. and Y. Seong, "The Partnership Network Scopes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Social Value Cre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22(1), 2018, pp. 1-21.
Connick, S. and J. Innes, "Outcomes of Collaborative Water Policy Making: Applying Compexity Thinking to Evalu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46(2), 2003, pp. 177-197.
Cook, B., Dodds, C. and W. Mitchell, "Social Entrepreneurship - False Premises and Dangerous Forebodings",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38(1), 2003, pp. 57-72.
Das, T. K. and B. Teng, "Instabilities of Strategic Alliances: An Internal Tensions Perspective", 『Organization Science』, 11(1), 2000, pp. 77-101.
Freeman, J.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Administrative State", 『UCLA Law Review』, 45(1), 1997.
Googins, B. K. and S. A. Rochlin, "Creating the Partnership Society: Understanding the Rhetoric and Reality of Cross-Sectoral Partnerships", 『Business and Society Review』, 105(1), 2000, 127-144.
Gras, D., and G. T. Lumpkin, "Strategic Foci in Social and Commercial Entrepreneurship: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Social Entrepreneurship』, 3(1), 2012, pp. 6-23.
Han, S., Choi, M. and S. Chung, "Organizational capacity, community asset mobilization, and performance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30, 2015.
Henry, C., "Doing Well by Doing Good : Opportunity Recognition and the Social Enterprise Partnership", 『Journal of Social Entrepreneurship』, 6(2), 2015, pp. 137-160.
Jenner, P. and F. Oprescu, "The Sectorial Trust of Social Enterprise: Friend or Foe?", 『Journal of Social Entrepreneurship』, 7(2), 2016, pp. 236-261.
Kanter, R. M., "Collaborative Advantage", 『Harvard Business Review』, 72(4), 1994, pp. 96-108.
Kwong, C., Tasavori, M. and C. Wun-mei Cheung, "Bricolage, Collaboration and Mission Drift in Social Enterprises",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29(7-8), 2017, pp. 609-638.
Meyskens, M., Carsrud, A. L. and R. N. Cardozo, "The Symbiosis of Entities in the Social Engagement Network: The Role of Social Ventures",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22(5), 2010, pp. 425-455.
Montgomery, A. W., Dacin, P. A. and M. T. Dacin, "Collective Social Entrepreneurship: Collaboratively Shaping Social Good",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1(3), 2012, pp. 375-388.
Osborne, S. P.,『The New Public Governance?: Emerging Perspectives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Public Governance』, London, UK: Routledge, 2010.
Park, J., Hwang, K. and S. J. Kim, "Forming a Social Partnership between a Small Social Enterprise and a Large Corporation: A Case of the Joint Platform, H-JUMP",『Sustainability』, 10(10), 2018, 3612.
Pestoff, V., "Hybridity, Coproduction, and Third Sector Social Services in Europe",『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8(11), 2014, pp. 1412-1424.
Sakarya, S., M. Bodur, Ö. ildirim-Öktem and N. Selekler-Göksen, "Social Alliances: Business and Social Enterprise Collaboration for Social Transformation",『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5(12), 2012, pp. 1710-1720.
Seelos, C., and J. Mair, "Social Entrepreneurship: Creating New Business Models to Serve the Poor",『Business Horizons』, 48(3), 2005, pp. 241-246.
Smith, S.. "Collaborative Approaches to Pacific Northwest Fisheries Management: The Salmon Experience",『Willamett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Dispute Resolution』, 6(29), 1998, pp. 29-6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구지원사업-2021-04]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생애주기에 따른 성과 창출과 지속가능한 조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

엄영호[1], 유두호[2]

1)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2)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요약〉

1. 연구배경
-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요구됨
-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정책의 필요성

2. 연구목적
- 외부지원과 제도적 환경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 성과 창출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
- 생애주기별 성과 창출 영향요인의 차이점 확인
- 사회적 경제 조직의 효과적 지원과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3. 연구방법
-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Ordered Logit Model)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생애주기(시작→생존→성장→성숙→위기) 5단계에 따른 추가 분석

4. 연구내용
- 외부지원 활성화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제적 성과를 낮춘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제도의 질적 개선 필요
- 조직장이 활성화될수록 경제적 성과는 높아지므로 단단한 재정 기반을 위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과 조직간 상호작용 및 네트워킹이 요구됨
- 생애주기별 분석에서는 성장 및 성숙단계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외부지원이 오히려 경제적 성과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지원 위주의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이 조직의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다고 볼 수 있음
- 조직장의 활성화는 성숙, 위기단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제적 성과와 성장단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성과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보여줌

5. 연구결과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은 외부지원과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모두 받음
- 사회적 경제 조직장을 고려하여 각 조직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성과 창출을 지역에 홍보,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방식의 정책 설계가 요구됨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성장 초기 단계 조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일정 단계가 지나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정도를 달리하는 차별적 지원이 필요함

Ⅰ. 연구배경

현대사회는 폭발적 경제성장 이후의 저성장으로 접어들며, 성장 이면에 잠재되어 있던 삶의 질, 사회적 불평등, 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장용석 외, 2015). 급격한 기후변화와 함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환경, 건강, 경제 등 모든 사회경제정치 영역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그 심각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 즉, 사회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하나의 사회문제 또 다른 사회문제를 파생시키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문제는 단일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기 어렵다. 사회문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추구되어야 한다. 과거의 단순화된 방식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사회문제 해결 주체인 국가를 비롯하여 기업, 시민단체 정도의 주체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 주도의 해결방식에 기대거나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 중심의 원리에 의존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사회문제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그 해결에 있어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정부 혹은 기업 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각 주체들의 협력과 새로운 대안의 개발이 요구된다(조희진·장용석, 2016; Kaletsky, 2010).

최근 들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방식이자 이제는 당연하고 새롭지 않은 방안 중 하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모두 중시하는 '사회적 경제'이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에서 강조하는 시장 중심의 원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이다(Gueslin, A, 1998).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이윤활동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조직 목표로 추구하는 조직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관한 논의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을 통해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꾸준한 양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의 사회적 기업 유형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제공형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수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역할이 제시되고 있다(라준영,

2010; 한세억, 2017).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사회 공헌,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이슈, 불평등 등 일자리 제공을 넘어 다양한 가치들에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1].

Ⅱ. 연구목적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새롭지 않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지도가 생기고 비록 다소 불안정할지라도 조직의 생태계도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는 이들이 창출하는 가치를 어떻게 다양화할지, 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조직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질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영향요인을 외부지원과 사회적 경제 조직이 속한 조직장(organization field) 측면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외부지원 측면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원의존성(resource dependency)에 기반하여 부족한 자원을 외부를 통해 획득하고 조직을 발전시켜 나갈 때 성과 창출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면, 조직장은 제도주의 조직론(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을 적용하여 조직을 둘러싼 직·간접적 연계망의 영향력을 포착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의 생애주기에 따라서 성과 창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목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부족한 자원과 역량으로 인해 조직이 단기간에 소멸하거나 지속가능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와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1) 이로운넷(2021). "사회적경제 미디어 이로운넷의 창사 13주년을 축하드립니다"(검색일자: 2021.08.14.).
"오산시, 사회적기업과 손잡과 친환경 비닐 보급 확산"
인천일보(2021). 오산시, 사회적기업과 손잡고 친환경 비닐 보급 확산에 나서(검색일자: 2021.08.14.).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20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역자원조사는 5,030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업유형, 주요 사업지역, 생애주기를 비롯한 일반 특성부터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외부지원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일부 문항에 대한 결측치를 제외한 4,181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조사지역[2]은 서울시 전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경기, 인천,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에 속한 총 77개 기초자치단체이며, 조사시기가 2020년 10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므로 분석시기는 2020년 단년도이다. 한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는 각각 사회적 경제 조직의 매출액과 유급 취약계층 근로자 수로 측정되었으며 5점 척도와 6점 척도의 서열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가 순서형 척도일 때 활용되는 분석방법인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Ordered Logit Model)을 실시하였다.

2. 변수의 측정

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측정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는 일반적으로 재무적 지표로 측정이 가능한 경제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회적 성과 두 가지로 구분된다(유두

2) 지역자원조사의 구체적인 조사지역은 서울시 전 기초자치단체, 경기(부천, 안산, 수원, 광명, 안양, 오산, 평택, 남양주, 의정부), 인천(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강원(원주, 강릉, 춘천), 경남(창원, 김해, 진주, 거창), 경북(포항, 구미, 안동, 칠곡), 광주 전 기초자치단체, 대구 전 기초자치단체, 대전 전 기초자치단체, 부산(동구, 중구), 전북(전주, 익산, 군산, 완주, 진안), 충남(서산, 태안), 충북(청주)이다.

호·유승주, 2019). 아래 〈표 1〉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한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을 정리한 것이다. 권소일·이재희(2018)의 연구에서 서울 소재 인증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자료수집한 것을 제외하면, 그 외 9개의 연구는 모두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자율경영공시 자료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율경경공시 자료는 사회적 기업의 일반 현황부터 매출액, 당기순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 지표, 취약계층 고용인원,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와 같은 사회적 성과 지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료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이다(유두호·유승주, 2019).

선행연구 검토 결과, 대다수의 연구에서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활용하였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된 지표는 매출액이다. 이는 음의 값(-)이 존재할 수 있는 당기순이익의 특성상 자연로그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로 추정된다(최유진, 2021). 사회적 성과의 측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연구에서 취약계층 고용과 관련한 지표가 활용되었다. 사회적 기업의 인증유형 중 취약계층 고용을 강조하는 일자리 제공형이 아직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유두호·엄영호, 2020), 취약계층 고용은 지역사회 재투자처럼 재투자 금액이 없거나 결측값이 많은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여 많이 연구에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최유진, 2021). 본 연구 역시 사회적 경제 조직 성과의 효과적인 측정을 위해 경제적 성과는 매출액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성과는 취약계층 고용인원을 활용하였다.

한편, 사회적 경제 조직 성과 창출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변수로는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과 외부지원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김정인(2014)과 최유진(2021)은 민간기부와 정부지원금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외부지원 측면을 살펴보았지만, 그 외에 외부지원 측면에 주목한 연구들은 정부지원금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를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거나 최근 지역별로 사회적 경제 기금이 조성되는 등 재정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들이 존재한다(유두호·엄영호, 2020).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환경 인식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외부지원 활성화를 측정함으로써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외부지원 환경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조직장 활성화의 경우 권소일·이재희(2019)의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네트워크와 유사하다. 단, 권소일·이재희(2019)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관계적, 구조적, 인지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다른 기업과의 모임 횟수, 정보 교환, 네트워크 구축 의지 등을 통해 측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함하여 지역 자치단체, 시민단체, 공공기업, 민간기업과의 연계 정도를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장과 이 안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의 영향을 살펴본 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나아가 분석의 정교함을 위해 다수의 연구에서 독립변수 혹은 통제변수로 활용된 조직특성을 본 연구 역시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운영성과적 측면에서 조직이 위치한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1〉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측정 선행연구

연구자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선남이·박능후(2011)	순편익	정규직 근로자 비율,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인증기관, 월평균급여, 사업개월, 사업체 형태 명확도, 최고경영자 특성	
김정인(2014)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취약계층 고용비율,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율	조직특성(형태, 인증유형, 사회서비스 제공 유형), 투명성(노사협의회 유무, 근로자 전체회의 유무, 공시빈도), 정부지원, 기업 후원, 일반기부	
김희철(2015)	당기순이익	취약계층 고용인원	조직형태, 인증유형, 유급근로자, 교육훈련비, 외부지원금, 순자본	
김숙연·김선구(2016)	매출액영업이익률	취약계층 고용비율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수, 기업규모, 자본, 인증기간, 정부지원금, 공시횟수	
김숙연·강수진(2017)	매출액영업이익률	취약계층 고용비율	정부지원금(인건비, 전문인력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총자산	
권소일·이재희(2019)	매출액	취약계층 고용인원	네트워크, 집단구분(업종)	
김문준 외(2018)	매출액	취약계층 고용인원, 유급 근로자 인원	조직형태, 인증유형, 기업의 지역, 외부지원금	
고명일·양난주(2019)	매출액, 순수익	취약계층 고용인원	재정지원	인증유형, 조직 소유권 형태, 운영기간
이경은(2020)	영업이익률,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률	취약계층 고용인원, 취약계층 고용비율, 사회서비스 총 수혜자, 지역사회 재투자	정부 재정지원 규모, 정부 재정비중	조직연령, 조직규모, 주민 1인당 지역총소득, 지역경제활동인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규모
최유진(2021)	매출액	취약계층 고용인원	정부지원금, 민간기부, 조직유형	내부요인(조직 투명성, 운영기간, 인증유형, 업종, 유급근로자), 외부요인(노인인구비율, 인구증가율, 사업체 종사자)

나.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제적·사회적 성과이다. 경제적 성과는 매출액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성과는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고용하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단, 지역자원조사의 경우 각 성과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하는 형식이 아니라 각각 매출액은 5점 척도,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6점 척도로 응답하게끔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경제적 성과는 2019년(12.31 기준) 각 사회적 경제 조직의 매출액에 대하여 '1억원 미만=1'부터 '1억원 이상~5억원 미만=2',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3'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4', '50억원 이상=5'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적 성과는 2019년(12.31 기준) 각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급 취약계층 근로자 수에 대하여 '1명 이하=1', '2명~4명=2', '5명~9명=3', '10명~49명=4', '50명~99명=5', '100명 이상=6'까지 6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다.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외부지원 활성화와 조직장 활성화 두 가지로 구성된다. 외부지원 활성화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소재한 지역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환경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응답한 내용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의 경우 '내가 속한 지역은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 등 지원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내가 속한 지역은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반영해 다양한 사업모델과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 육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내가 속한 지역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립한 지원계획에 관한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속한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등 정책관련 사업과 사회적 경제 영역과의 연계 기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내가 속한 지역은 지역형 사회적 경제 기금을 조성,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있다.'의 총 5가지 세부문항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외부지원 활성화 변수 측정을 위한 단일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진행하였고 크론박 알파 계수 값은 0.9120으로 매우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장 활성화 변수 역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조직들로 구성된 조직장과 조직장의 활성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다문항을 활용하였다. '귀 사회적 경제

조직은 조직운영에 있어 지역 내 타 기관들과 얼마나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문항에 대해 각 항목별로 지역의 타 기관과의 연계정도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할 경우 10점 방향으로, 연계가 매우 약하다고 생각할 경우 0점 방향으로 응답한 내용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에서 지역 내 타 기관은 자치단체, 시민단체, 공공기업, 민간기업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네 가지 기관과의 연계정도에 대해 11점 척도로 응답한 내용의 평균값을 통해 조직장 활성화를 측정하였으며, 신뢰도 검증 결과 크론박 알파 계수 값은 0.8056으로 신뢰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라. 통제변수

실증분석의 정교함을 높이기 위해 조직나이, 조직규모, 조직유형, 소속지역, 주요 사업지역, 생애주기와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먼저, 조직나이와 조직유형을 통제하였다. 조직나이는 설문이 진행된 2020년도에서 조직의 설립년도를 뺀 후 1을 더한 값을 통해 측정하였다. 조직규모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총 근로자 수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1명 이하, 2명~4명, 5명~9명, 10명~49명, 50명~99명, 100명 이상으로 응답하게끔 구성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조직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으며, 첫 번째 조직유형은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축협, 수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협동조합' 유형 여부, 두 번째 조직유형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타(지원농어업법인 등)와 같은 '사회적 기업' 유형 여부로 구성된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소속지역, 주요 사업지역, 생애주기 역시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소속지역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수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특성과 지역자원조사에서 수도권 외에 일부지역이 조사범위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속하면 1, 그 외 지역에 속하면 0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사업지역은 기초자치단체 내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 내, 광역자치단체 내, 전국지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생애주기는 운영성과 측면에서 조직이 위치한 단계를 시작단계, 생존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위기단계로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시작단계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 2〉는 변수와 측정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변수 및 측정지표

구분	변수	측정문항	비고
종속변수	경제적 성과	2019년(12.31 기준) 각 사회적 경제 조직의 매출액 ①1억원 미만 ②1억원 이상~5억원 미만 ③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④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⑤50억원 이상	5점 척도
	사회적 성과	2019년(12.31 기준) 각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급 취약계층 근로자 수 ①1명 이하 ②2명~4명 ③5명~9명 ④10명~49명 ⑤50명~99명 ⑥100명 이상	6점 척도
독립변수	외부지원 활성화 (α=0.9120)	Q. 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소재한 지역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환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내가 속한 지역은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 등 지원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내가 속한 지역은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반영해 다양한 사업모델과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 육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내가 속한 지역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립한 지원계획에 관한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속한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등 정책관련 사업과 사회적 경제 영역과의 연계 기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내가 속한 지역은 지역형 사회적 경제 기금을 조성,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있다.	5점 척도의 평균값
	조직장 활성화 (α=0.8056)	Q. 귀 사회적 경제 조직은 조직운영에 있어 지역 내 타 기관들과 얼마나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지역의 타 기관과의 연계정도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할 경우 10점 방향으로, 연계가 매우 약하다고 생각할 경우 0점 방향으로 평가해주십시오(연계약함(0) ~ 연계강함(10)). 지역 자치단체 / 지역 시민단체 / 지역 공공기업 / 지역 민간기업	11점 척도의 평균값
통제변수	조직나이	2020 - 설립년도 + 1	
	조직규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총 근로자 수 ①1명 이하 ②2명~4명 ③5명~9명 ④10명~49명 ⑤50명~99명 ⑥100명 이상	
	조직유형1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축협, 수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립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더미
	조직유형2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타(지원농어업법인 등)	
	소속지역	수도권(1), 그 외 지역(0)	
	사업지역	조직의 주요 사업지역 ①기초자치단체 내* ②광역자치단체 내 ③전국지역	
	생애주기	운영성과적 측면에서 조직이 위치한 생애주기 ①시작단계* ②생존단계 ③성장단계 ④성숙단계 ⑤위기단계	

주) *준거더미

Ⅳ. 연구내용

1.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과 영향요인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이윤 활동을 통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투자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장용석 외, 2018). 즉,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시켜 창출하는 혼합조직(hybrid organization)의 특성을 가진다(조희진·장용석, 2016). 사회적 경제 조직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므로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한 가지 성과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조직보다는 성과 창출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여전히 정부지원금과 같은 외부의 지원 없이는 자생하기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성과 창출의 영향요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경우 경제적 목적 및 사회적 가치의 창출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원리 및 소유구조 등의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한세억, 2017).

이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성상 성과 창출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선행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인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구분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먼저, 사회적 기업의 인증유형, 업종, 형태, 규모, 지배구조 등과 같은 조직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조상미·권소일·김수정, 2012; 이수창·정우열, 2014), 자원기반이론을 적용하여 재무역량, 사회적 기업가정신, 혁신역량, 네트워크역량에 따라 사회서비스 업종 사회적 기업의 성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 연구(전현수·최균, 2020),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의 성과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강문실·양성국, 2016)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은 사회적 기업이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특수한 조직의 성격에 주목하고, 보유한 내부자원을 조직역량과 연계시켜 성과 창출과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내적측면에 주목한 연구들이 진행됨과 동시에 부족한 내부자원과 역량을 외부환경으로부터 어떻게 충원하고 성과 창출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특히,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중심으로 한 정부지원금과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김재홍·이재기(2012)의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금이 경제적 성과(EROI)와 사회적 수익률(SRO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지원금이 경제적 성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회적 수익률은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김숙연·강수진(2017)은 정부지원금을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금 항목과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대체로 정부지원금이 경제적 성과와는 부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나고 사회적 성과와는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엄태기·김석은(2021)은 정부지원금과 같은 재정지원 외에 정부지원인력을 포함한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를 성과 창출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검토하고, 경제적 성과는 정부지원으로부터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받지만, 사회적 성과는 경제적 성과를 매개로 하여 정부지원의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제시한다. 일부 연구는 사회적 기업 외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창출에 있어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한 지원이나 공공구매 우선구매제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설계를 제안하기도 한다(유두호·엄영호, 2020).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를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과 특성에 맞게 주로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공통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이라는 기능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므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부족한 재정적 측면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요인에 주목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조직 연결망을 포착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중요하게 다룬 외부지원 측면과 함께 사회적 경제 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동학을 포착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에 주목한다. 제도적 환경은 조직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성(legitimacy) 획득의 과정을 설명하고(Suchman, 1995), 조직의 성과 창출을 비롯하여 조직이 속한 조직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설명한다(유승주·유두호, 2020). 이에 본 연구는 외부지원과 같은 조직의 기능주의적 측면과 제도적 환경의 영향력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가진다.

2. 연구 가설 및 모형

가. 외부지원 활성화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 관점에 따르면 자원이 부족한 조직은 외부 환경에서 자원을 탐색하고 생존에 필요한 자원 획득을 시도한다(Pfeffer & Salancik, 2003). 또한, 조직은 단순히 스스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다른 조직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자원과 역량, 노하우를 흡수하고 내부 자원을 높이는 전략을 시도하여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한다(Selznick, 1949). 내부 자원이 부족하고 자원 획득 경로가 많지 않은 사회적 경제 조직은 외부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자원의존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외부지원을 통해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고 그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정규진·서인석·장희선, 2013).

외부의 지원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수단 중 하나이다. 박승규·배귀희(2014)의 연구에 따르면 전라북도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그들의 효과적인 성과 창출을 견인하여 생산효과, 고용효과, 소득효과를 높이고 전라북도 산업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이 강조된다. 또한, 인증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 기업이 인증 받은 후 초기 단계에 성과를 창출함에 있어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이 밝혀졌다(오단이, 2013). 즉, 외부환경 중 정부의 지원은 예비 사회적 기업 혹은 인증 초기의 사회적 기업 성과 창출의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에 있어 외부지원 영향력에 주목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경은(2020)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이 단일한 성과영향을 가진다는 가정에서 벗어나, 정부재정지원을 비중과 규모로 구분하여 취약계층 근로자 수, 기업이 제공한 사회서비스 수혜자 수, 지역사회 재투자와 같은 사회적 성과와 영업이익률,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률로 대변되는 경제적 성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정부재정지원 규모는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비중은 사회적 성과를 높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최유진(2021)은 외부지원의 활성화를 민간 기부와 정부 보조금 측면으로 설정하여 민간 기부가 성과 창출을 제고시키며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원의존성에 대한 논의와 외부지원-성과 창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 1, 2를 도출하였다.

가설 1. 외부지원이 활성화될수록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제적 성과는 높아진다.
가설 2. 외부지원이 활성화될수록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성과는 높아진다.

나. 조직장(Organization field) 활성화

제도주의 조직론(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을 폭넓게 해석하며 직접적인 연계망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결된 환경에 순응한 조직의 행태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Bromley & Meyer, 2015). 즉, 조직들 간 공유되는 규칙과 규범 혹은 의미 체계(meaning system) 속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조직들의 집합인 조직장(organization field)에서 발생하는 조직의 정당성(legitimacy) 확보 및 생존 전략을 강조한다(정명은·안민우, 2016; Scott, 2003). 조직장 내에서는 조직들의 기능이 서로 다르더라도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규범과 문화 등을 수용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Meyer & Rowan, 1977).

제도주의 조직론을 사회적 경제 조직에 적용하면 이들이 속한 조직장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부족한 자원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다. 즉, 사회적 경제 조직의 조직장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이며 이들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영향을 받는 공간이므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라고 볼 수 있다(유두호·황정윤·장용석, 2019). 따라서 조직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고 그들과의 관계에 따라 성과 창출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한다면 단순히 조직 내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지원 외에 거시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조직장의 활성화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활성화된다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문제 해결에 적합한 조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창출의 증가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주혜린·황정윤,

2019). 또한, 조직장의 활성화는 신생 조직의 유입과 조직의 정당성 증가를 유발하여 성과 창출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Hannan & Carroll, 1992), 사회적 기업의 정당성 증가로 인해 조직의 수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생태계의 확장이 이루어져 효과적인 성과 창출의 요소가 다양해지기도 한다(황정윤·조희진, 2016). 사회적 기업이 창출된 이윤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것 역시 사회적 경제 조직장의 활성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유두호·황정윤·장용석, 2019).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있어 조직장의 활성화는 곧 해당 조직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연계망 속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의 긍정적 효과로도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교육, 정보 교환을 통해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판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한다(김학실, 2014).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충분한 성과 창출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포함한 조직들 간의 교류와 협력사업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다(권소일·이재희, 2018).

이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조직장 형성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태계가 먼저 활성화된 해외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이스라엘에서 1999년데 설립된 소셜 벤처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높은 성과 창출과 조직의 성공 요인으로 해당 조직의 네트워크, 공공부부문 및 NGO와의 지속적 협력이 제시되었다(Sharir & Lerner, 2006). 따라서 네트워크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조직장의 활성화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조직장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과 간 관계 검증을 위한 가설 3, 4를 도출하였다.

가설 3. 조직장이 활성화될수록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제적 성과는 높아진다.
가설 4. 조직장이 활성화될수록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성과는 높아진다.

다. 조직의 생애주기(Life cycle)와 성과 창출

한편, 사회적 경제 조직은 개별 조직마다 성과 창출의 편차가 크다. 급격한 양적 성장으로 조직의 수가 증가하고 생태계의 규모가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질적 성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경영공시제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부족한 성과로 인해 조직 생존에 위협을 느

껴 중도에 경영공시를 회피하는 사회적 기업이 많아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된다(유두호·유승주, 2019). 이는 안정적인 성과 창출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는 반면 생존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조직도 상당수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는 조직마다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성과 창출에 따른 발전단계별 접근이 고려되어야 하며(서도원, 2011), 사회적 경제 조직이 창출하는 성과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모든 조직을 동일 선상에 두고 파악하기보다는 조직의 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조직에 대한 생애주기별 접근은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흔히 조직 생애주기는 탄생(birth), 성장(growth), 성숙(maturity), 회복(revival), 쇠퇴(decline)의 5단계로 구분된다(Miller & Friesen, 1985). 이와 같은 조직 생애주기를 일반 민간 기업에 적용하여 살펴본 연구들이 존재한다(김우성·김경회, 2014; 안영수·이승일, 2015; 안영수·Wan, L,·이승일, 2016).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또는 수도권 제조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와 기업의 자본구조를 살펴보거나, 지역별 입지요인이 기업의 생애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업 생애주기 관련 연구는 기업이 생애주기에 따라 발전 정도나 특성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기별로 기업의 성과 창출을 파악하고 생존과 성장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부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생애주기를 정부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와 조직의 자체 역량이 극대화되는 과정까지 설립기(창업)→자립기(유지)→성장기(발전)로 구분하여 사회적 기업의 발전수준별 특성과 발전요소 간 정합성 관계를 파악하고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생애주기별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한다(서도원, 2011).

본 연구는 이러한 생애주기에 대한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 가설 5를 도출하였다. 조직의 성장단계를 탄생→성장→성숙→회복→쇠퇴 단계로 구분할 때, 사회적 경제 조직은 생성 이후에 안정된 자원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생존 이후 어느 정도의 운영시스템이 정착되면 '성장' 단계에 이르고, '성숙' 단계에 도착하면 안정된 이윤 창출을 통한 모델 정립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을 시도할 것이다. 반면, 운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성장 단계 혹은 성숙 단계에 가더라도 업종을 전환하거나 휴업·폐업과 같은 '위기' 단계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생애주기에 대해 정밀하게 탐색해 봄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 논의를 시도한다.

가설 5. 생애주기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과 창출 정도는 달라진다.

Ⅴ. 연구결과

1. 분석결과

가. 기초통계 및 변수 간 상관관계

〈표 3〉은 변수의 기초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관측치는 설문에 응답한 4,181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며,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측치가 존재한다. 종속변수인 경제적 성과는 평균 2.087, 사회적 성과는 평균 1.541으로 두 변수 모두 평균값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외부지원 활성화는 평균 3.196으로 비교적 외부지원이 활성화되어있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조직장 활성화는 평균 4.966로 나타났으며, 최솟값과 최댓값의 편차가 크므로 타 기관과의 연계 정도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에서는 수도권에 속한 조직이 많았으며, 기초자치단체 내를 주요 사업지역으로 활동하는 조직들이 42.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생애주기 분포는 성장단계(33.08%), 생존단계(27.91%), 시작단계(19.16%), 성숙단계(11.48%), 위기단계(8.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기초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경제적 성과 (매출액)	4,181	2.087	1.350	1	5
사회적 성과 (취약계층 근로자)	4,181	1.541	0.963	1	6
외부지원 활성화	4,181	3.196	0.749	1	5
조직장 활성화	4,181	4.966	2.209	0	10
조직나이	4,181	11.558	13.776	2	121
조직규모	4,181	1명 이하 1,149(27.48%), 2명~4명 1,067개(25.52%), 5명~9명 915개(21.88%), 10명~49명 873개(20.88%), 50명~99명 98개(2.34%), 100명 이상 79개(1.9%)			
조직유형1	4,181	협동조합 형태 해당 2,851개(68.19%), 협동조합 형태 해당 안 함 1,330개(31.81%)			
조직유형2	4,181	사회적 기업 형태 해당 1,948개(46.59%), 사회적 기업 형태 해당 안 함 2,233개(53.41%)			
소속지역	4,181	수도권 1,562개(37.36%), 그 외 지역 2,619개(62.64%)			
사업지역	4,181	기초자치단체 내 1,794개(42.91%), 광역자치단체 내 1,136개(27.17%) 전국지역 1,251개(29.92%)			
생애주기	4,181	시작단계 801명(19.16%), 생존단계 1,167명(27.91%), 성장단계 1,383명(33.08%), 성숙단계 480명(11.48%), 위기단계 350명(8.37%)			

종속변수와 주요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양측 검정을 실시했을 때, 모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7 이상의 높은 상관계수 값을 보이는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명	1)	2)	3)	4)	5)
1) 경제적 성과	1				
2) 사회적 성과	0.263*	1			
3) 외부지원 활성화	0.049*	0.081*	1		
4) 조직장 활성화	0.137*	0.121*	0.391*	1	

주) 통제변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1임

나. 사회적 경제 조직 성과 창출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사회적 경제 조직 성과 창출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Model 1은 경제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며, Model 2는 사회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독립변수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외부지원 활성화 변수는 경제적 성과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성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부지원이 활성화될수록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제적 성과는 높아진다는 가설 1과 외부지원이 활성화될수록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성과는 높아진다는 가설 2는 모두 지지되지 않았다.

즉, 외부지원 활성화는 오히려 경제적 성과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지원이 양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질적인 측면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와 같은 정부지원금은 경제적 성과를 낮추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므로 정부지원은 재정적 지원 외에 전문인력 지원이라든지 차별화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김숙연·강수진, 2017).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단기 예산 중심이거나 재정지원이 오히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전문성 부족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에 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3]. 즉,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율성을 높여주면서도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직장 활성화 변수는 경제적 성과에만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장이 활성화될수록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제적 성과는 높아진다는 가설 3은 지지되었으며 조직장이 활성화될수록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성과는 높아진다는 가설 4는 지지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즉, 조직장의 활성화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제적 성과 창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조직장은 간접적인 영향을 포함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얼마나 포괄적으로 타 조직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성상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 지원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기 위해 조직장 안에서의 네트워크는 필수적이다. 사회적 기업이

3) 이로운넷(2021). 공공-민간 사이의 사회적경제, 공적안전망 강화 주체로 거듭나려면?(검색일자: 2021.08.14.).

타 조직과의 정보교환, 협의, 상호거래 등 네트워크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재희·조상미, 2015)이 분석결과에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 분석결과

		Model 1 (경제적 성과)	Model 2 (사회적 성과)
외부지원 활성화		-0.080 (0.045)***	0.015 (0.052)
조직장 활성화		0.073 (0.016)***	0.052 (0.019)
조직나이		0.080 (0.003)***	-0.004 (0.004)***
조직규모		0.922 (0.326)***	1.774 (0.051)***
조직유형1		-0.451 (0.091)***	-0.663 (0.095)***
조직유형2		0.420 (0.092)	1.515 (0.108)***
소속지역		0.253 (0.064)***	0.129 (0.074)
사업지역	광역	0.060 (0.076)	0.074 (0.089)
	전국	0.085 (0.075)*	0.115 (0.086)
생애주기	생존단계	0.743 (0.107)***	0.412 (0.121)**
	성장단계	1.393 (0.105)***	0.802 (0.118)**
	성숙단계	1.724 (0.130)***	0.976 (0.149)
	위기단계	0.356 (0.147)**	0.477 (0.164)***
cut 1		1.765 (0.197)	2.203 (0.226)
cut 2		3.127 (0.201)	3.418 (0.229)
cut 3		3.724 (0.203)	4.195 (0.233)
cut 4		4.961 (0.211)	6.213 (0.269)
N		4,181	4,181
Chi2(df)		1674.95(12)***	997.43(12)***
Pseudo-R2		0.148	0.123
Log likelihood		-4812.154	-3552.878

주1) *p〈0.1 **p〈0.05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주2) 조직유형1은 협동조합 형태 해당유무, 조직유형2는 사회적 기업 형태 해당유무를 나타냄
주3) 사업지역의 준거더미는 기초자치단체 내이며, 생애주기의 준거더미는 시작단계임

통제변수에서는 조직유형, 소속지역, 사업지역, 생애주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조직나이는 Model 1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 오래된 조직일수록 경제적 성과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협동조합 형태를 의미하는 조직유형1 Model 1, 2 모두에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 협동조합 형태를 가진 사회적 경제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사회적 기업 형태를 의미하는 조직유형2는 Model2 2에서만 양(+)의 방향의 영향력이 확인되어, 사회적 기업 형태를 가진 사회적 경제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사회적 성과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소속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한 사회적 경제 조직은 그 외 지역에 속한 조직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사업지역은 전국을 사업범위로 삼는 조직이 기초자치단체 내를 사업범위로 삼는 조직보다 경제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의 경우 생존, 성장, 위기단계에 속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기초단계의 조직에 비해 모든 성과가 높았으며, 성숙단계의 조직은 기초단계에 속한 조직에 비해 경제적 성과만 높은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6〉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생애주기를 시작, 생존, 성장, 성숙, 위기의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경제적 성과 창출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는 생애주기별로 경제적 성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시작단계와 생존단계에 속한 사회적 경제 조직은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에 있어 외부지원 활성화와 조직장 활성화 두 변수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단계와 성숙단계에 속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외부지원이 활성화될수록 경제적 성과가 낮아진다. 이는 적정 수준의 성장이 이루어진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외부지원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지원 위주의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은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방해하여 의존성향을 높이고 성과 창출을 낮추기도 한다(이수창·정우열, 2014). 적당한 성장 수준에서의 외부지원 부작용이 분석에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조직장 활성화는 성숙, 위기단계에 속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장 활성화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적정 수준의 성장단계를 벗어나 생존의 위기가 찾아올 때까지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타 조직, 연계된 기관과의 네트워킹이나 지역에서의 사회자본 구축, 공동체 의식 형성이 꾸준한 조직의 성과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된다(조희진·장용석, 2016; 최석현·조창현·정무권, 2012). 따라서 적당한 수준의 성공 이후에도 조직장 활성화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제적 성과 창출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표 6〉 생애주기별 분석결과 - 경제적 성과

		Model 1 (시작단계)	Model 2 (생존단계)	Model 3 (성장단계)	Model 4 (성숙단계)	Model 5 (위기단계)
외부지원 활성화		-0.194 (0.127)	0.000 (0.086)	-0.173*** (0.076)	-0.297** (0.139)	0.120 (0.153)
조직장 활성화		0.060 (0.041)	0.045 (0.031)	0.076 (0.027)	0.154** (0.049)	0.136** (0.054)
조직나이		0.082*** (0.009)	0.096*** (0.007)	0.075*** (0.005)	0.074*** (0.007)	0.056*** (0.009)
조직규모		0.922*** (0.033)	0.992 (0.064)	0.839*** (0.521)	1.245*** (0.100)	0.933*** (0.115)
조직유형1		-1.277*** (0.301)	-0.227 (0.167)	-0.504*** (0.141)	-0.576*** (0.273)	-0.059 (0.348)
조직유형2		0.375 (0.289)	0.674*** (0.165)	0.304** (0.149)	-0.326 (0.296)	0.675* (0.344)
소속지역		0.534*** (0.192)	0.197 (0.120)	0.275*** (0.102)	0.052 (0.185)	0.422* (0.232)
사업지역	광역	0.425* (0.229)	-0.108 (0.145)	0.114 (0.123)	-0.062 (0.207)	0.076 (0.265)
	전국	0.065 (0.226)	-0.079 (0.142)	0.168 (0.119)	0.046 (0.216)	0.405 (0.280)
cut 1		1.077 (0.520)	1.380 (0.333)	-0.071 (0.325)	-0.375 (0.565)	2.747 (0.603)
cut 2		2.223 (0.527)	3.006 (0.343)	1.320 (0.327)	0.705 (0.564)	3.886 (0.620)
cut 3		2.613 (0.534)	3.558 (0.350)	1.971 (0.329)	1.308 (0.566)	4.563 (0.634)
cut 4		3.508 (0.559)	4.746 (0.375)	3.280 (0.340)	2.616 (0.579)	5.867 (0.682)
N		801	1,167	1,383	480	350
Chi2(df)		150.68(8***	279.90(8)***	306.08(8)***	173.89(8)***	77.13(8)***
Pseudo-R2		0.121	0.102	0.073	0.115	0.094
Log likelihood		-548.132	-1237.768	-1932.350	-669.237	-371.436

주1) *p〈0.1 **p〈0.05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주2) 사업지역의 준거더미는 기초자치단체 내임

〈표 7〉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성과 창출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유일하게 성장단계에 속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Model 3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성장단계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조직장이 활성화될수록 사회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애주기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과 창출 정도는 달라진다는 가설 5는 지지되었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달성 가능한 사회적 성과는 경제적 성과에 비해 창출이 쉽지 않다. 취약계층 고용, 유급근로자 고용 등 고용창출과 같은 사회적 성과의 경우 단순 재정적 지원

외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사회적 경제 조직 간 네트워킹의 활성화가 강조되는 이유이다(도수관·박경하, 2014). 또한,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이 마련된 사회적 기업이 이윤을 지역에 기부하거나 장학금, 물품 제공 등의 방식으로 재투자하여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냄에 있어서도 조직장 활성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유두호·황정윤·장용석, 2019). 따라서 적당한 자생력을 갖춘 성장단계에서는 사회적 성과 창출에 있어 조직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생애주기별 분석결과 - 사회적 성과

		Model 1 (시작단계)	Model 2 (생존단계)	Model 3 (성장단계)	Model 4 (성숙단계)	Model 5 (위기단계)
외부지원 활성화		0.134 (0.135)	0.085 (0.117)	-0.063 (0.091)	-0.062 (0.159)	0.236 (0.163)
조직장 활성화		-0.017 (0.044)	-0.154 (0.036)	0.035*** (0.032)	0.091 (0.061)	-0.017 (0.061)
조직나이		0.017* (0.009)	0.003 (0.007)	-0.006 (0.006)	0.001 (0.010)	0.004 (0.011)
조직규모		1.825*** (0.135)	1.861*** (0.100)	1.753*** (0.084)	1.692*** (0.145)	1.854*** (0.184)
조직유형1		-0.710** (0.279)	-0.338* (0.175)	-0.859*** (0.151)	-0.822*** (0.291)	-0.609* (0.353)
조직유형2		1.030*** (0.272)	1.453*** (0.192)	1.606*** (0.183)	2.166*** (0.382)	1.512*** (0.389)
소속지역		0.133 (0.204)	0.003 (0.138)	0.173 (0.120)	0.133 (0.230)	0.447* (0.267)
사업지역	광역	-0.009 (0.241)	-0.039 (0.167)	0.167 (0.147)	0.095 (0.261)	0.003 (0.309)
	전국	-0.082 (0.236)	0.083 (0.161)	0.079 (0.139)	0.228 (0.260)	0.317 (0.320)
cut 1		1.849 (0.535)	1.870 (0.383)	1.282 (0.385)	1.744 (0.699)	2.477 (0.658)
cut 2		3.081 (0.546)	3.117 (0.391)	2.555 (0.389)	2.809 (0.705)	3.740 (0.678)
cut 3		3.856 (0.564)	3.827 (0.400)	3.363 (0.393)	3.616 (0.711)	4.665 (0.704)
cut 4		5.509 (0.692)	6.106 (0.521)	5.444 (0.442)	5.522 (0.763)	6.534 (0.880)
N		801	1,167	1,383	480	350
Chi2(df)		69.57(8)***	160.30(8)***	400.36(8)***	189.00(8)***	72.05(8)
Pseudo-R2		0.068	0.077	0.128	0.177	0.117
Log likelihood		-480.558	-964.987	-1366.940	-439.005	-272.341

주1) *p<0.1 **p<0.05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주2) 사업지역의 준거더미는 기초자치단체 내임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영향요인으로서 외부지원과 조직장의 활성화 측면에 주목하였으며 조직의 생애주기별로 성과 창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분석결과, 외부지원 활성화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제적 성과를 낮추지만 조직장의 활성화는 경제적 성과는 증진시킨다. 생애주기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에 대한 분석에서는 성장 및 성숙단계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외부지원이 오히려 경제적 성과를 낮추며, 조직장이 활성화 되면 성숙, 위기단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제적 성과와 성장단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성과가 높아진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에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조직을 둘러싼 외부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존재한다. 기존 사회적 경제 조직 연구는 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일반적인 조직특성과 현실적인 지원정책 등에 주목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을 적용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기업, 지역주민, 타 조직 등으로 형성된 조직장의 영향력을 통해 성과 창출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이론적 지평을 넓힐 수 있다.

다음으로, 조직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개념을 사회적 경제 조직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조직의 생애주기 개념의 적용은 주로 일반기업에 한정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은 중앙정부 중심의 인증 제도를 바탕으로 조직의 탄생부터 초기 성장 단계를 이끌어간다. 다수의 조직들은 이 단계를 벗어나면 자생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애주기별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이론적 기여와 함께 사회적 경제 조직과 조직 생태계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사회적 경제 조직 성과의 체계적인 측정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지원금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 정책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한다. 하지만 외부지원 활성화가 오히려 경제적 성과를

낮춘다는 결과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질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필요하거나 성과에 대한 측정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본인 조직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 측정하고 정부는 일방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한 부분에 대해 성과가 실질적으로 증진되었는지 평가하여 정책의 효과를 지난하고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조직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을 중심으로 성과 공유의 장을 활성화한다면 사회적 경제 조직장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는 과거에 비해 높아졌지만 여전히 그들이 창출하는 성과와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를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설명회, 박람회 개최를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장을 활성화하여 성과 창출의 기회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생애주기별로 성과 창출의 정도가 다르며 영향요인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차원적인 정책으로 같은 방식, 같은 양으로 지원하기보다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생애주기 초기 단계의 조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일정 단계가 지나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지원 정도를 줄이는 차별적 지원을 통한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컨설팅·교육·네트워킹 등과 같이 물적 지원 외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생애주기 단계별로 조직에 필요한 요소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의 개설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조직으로서 이들의 성과는 사회적 가치와 기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가치의 민주적 소유까지 포함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료의 한계가 보완된다면 정교한 논의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과 관련한 깊이 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문실·양성국(2016).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자본이 기업성과 및 맥락수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9(1): 151-167.

고명일·양난주(2019).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높이는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의 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1(3): 49-73.

권소일·이재희(2018).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이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업종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 10(2): 197-230.

김문준·이용탁·최영근·박순우(2018).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관한 연구: 충남지역 (충남· 대전· 세종시) 의 자율경영공시 자료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21(2): 61-81.

김숙연·강수진(2017). 사회적기업 성과와 정부지원금과의 관련성.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2): 1-19.

김숙연·김선구(2016). 사회적기업 특성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30(4): 55-73.

김우성·김경회(2014). 한국 상장기업의 생애주기와 자본구조. [산업경제연구], 27(5): 2015-2045.

김재홍·이재기(2012).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분석: 정부지원금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4(4): 1037-1063.

김정인(2014). 사회적기업의 특성 및 지원유형에 따른 성과차이 분석: 자율경영공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2): 181-212.

김희철(2015).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8(7): 1797-1812.

도수관·박경하(2014).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고용창출간의 관계 분석: 2007~2011년 인증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8(3): 499-524.

서도원(2011). 사회적기업의 발전수준별 특성과 발전요소간 정합성 관계: 상황적 접근. [산업과경영], 24(1): 187-205.

선남이·박능후(2011).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5(2): 141-164.

안영수·이승일(2015). 수도권 시군구별 입지요인이 제조업 기업의 생애주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역연구], 31(3): 55-77.

안영수·Wan, L·이승일(2016). 기업생애주기 관점에서의 수도권 제조업 기업의 지역별 산업진단과 입지요인 실증연구. [국토계획], 51(5): 85-105.

유두호·엄영호(2020). 사회적 기업 역할 및 영역 확대의 필요성 분석: 국회의원의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4(2): 87-117.

유두호·엄영호(2020).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창출 영향요인 분석: 조직 내부요인과 지방정부 역량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0(3): 59-92.
유두호·유승주(2019). 왜 사회적 기업은 자율경영공시제도에서 이탈하는가?: 사회적 기업의 성과와 외부자원 의존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2): 27-52.
유두호·황정윤·장용석(2019). 준거집단 압력과 제도 생태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9: 129-163.
유승주·유두호(2020). 우리나라 초등학교 시설물 개방의 영향요인-제도주의 조직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9(4): 173-199.
엄태기·김석은(2021).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55(1): 93-120.
오단이(2013). 자원의존이론과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사회적기업의 형성 및 성장에 관한 사례연구: 초기 인증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3): 269-297.
이경은(2020).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그 양날의 검: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의 활용.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3): 207-230.
이로운넷(2021). 공공-민간 사이의 사회적경제, 공적안전망 강화 주체로 거듭나려면?.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414(검색일자: 2021.08.14.)
이로운넷(2021). "사회적경제 미디어 이로운넷의 창사 1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810(검색일자: 2021.08.14.)
이수창·정우열(2014). 사회적기업의 성과 결정요인 분석-사회적기업의 조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2): 127-148.
이재희·조상미(2015). 사회적기업간 네트워크 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 중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2): 89-125.
인천일보(2021). 오산시, 사회적기업과 손잡고 친환경 비닐 보급 확산에 나서.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718(검색일자: 2021.08.14.)
장용석·김회성·황정윤·유미현(2015). [사회적 혁신 생태계 3.0]. 서울시: CS컨설팅&미디어.
장용석·조희진·김보경·황정윤·이영동(2018). [사회적 가치의 재구성: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로 사회적 기업의 미래를 그리다]. 고양시: 문우사.
전현수·최균(2020). 사회적기업의 조직역량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경제적 성과의 조절효과 분석. [사회적기업연구], 13(3): 139-166.
정규진·서인석·장희선(2013).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자원의존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1): 171-203.
정명은·안민우(2016). 조직장, 제도적 논리 그리고 구성된 행위자-한국 지방정부 기금의

제도화 과정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5(3): 37-75.
조상미·권소일·김수정(2012). 조직요인은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사회복지학], 64(3): 29-50.
최석현·조창현·정무권(2012).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사회자본 형성전략에 대한 이론적 고찰-연결망 재구축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1): 125-152.
조희진·장용석(2016).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 [한국정책학회보], 25(4): 329-359.
주혜린·황정윤(2019). 사회적 기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영향요인: 일반 국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7.
최유진(2021). 사회적기업의 성과 요인 분석: 외부자원의 효과와 복합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5(1): 81-10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조사 자료 [Data set]]
한세억(2017).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1): 115-154.
황정윤·장용석(2017). 사회적 기업 지원의 딜레마-정부보조금, 약인가 독인가. 한국정책학회보, 26(2): 225-258.
황정윤·조희진(2016). 사회적 기업 설립의 영향요인 분석: 기능주의와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2(3): 237-277.
Bromley, Patricia, & John W. Meyer. (2015). Hyper-Organization: Global Organizational Expansion. Oxford University Press.
Gueslin, A. (1998). L'invention de l' conomie sociale. Paris: Economia.
Hannan, M. T., & Carroll, G. R. (1992). Dynamics of organizational populations: Density, legitimation and compet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Kaletsky, A. (2010). Capitalism 4.0: The birth of a new economy in the aftermath of crisis. New York, NY: PublicAffairs
Meyer, J. W., & Rowan, B. (1977).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 340-363.
Miller, D., & Friesen, P. H. (1984). A longitudinal study of the corporate life cycle. Management science, 30(10), 1161-1183.
Pfeffer, J., & Salancik, G. R. (2003).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 A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Scott, W. Richard. (2003). Organization: Rational, natural, and open systems.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Selznick, P. (1949). TVA and the grass roots. Berkeley, CA: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harir, M., & Lerner, M. (2006). Gauging the success of social ventures initiated by individual social entrepreneurs. Journal of world business, 41(1): 6-20.
Suchman, M. C. (1995). Managing legitimacy: Strategic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571-6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구지원사업-2021-05]

지역성에 따른 사회적자본의 구축과 동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20년「사회적경제 지원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조사」DATA 활용

남춘모[1], 김세연[2]

1)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겸임교수
2) 대구가톨릭대 사회적경제학과 박사과정

〈요약〉

1. 연구배경

- 기존 이론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 「기업·정부(자치단체)·지역민의 포괄적 네트워크」,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요건임.
- 그러나 그 토대가 되는 것은 바로 지역성이라는 점, 즉 경제적 차원 보다는 「지역 토착성(Indigenous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즉 특유의 지역민의 공통적 의식, 사회적 성격, 전통 문화가 우선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임.
- 지역 토착성 구축의 핵심은, 그것이 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으로 이어진다는 점

2. 연구목적

- 「지역별 사회적 기업과 지역주민 영역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존재양식의 특징」 확인.
- 「지역별 사회적 자본의 축적정도와 사회적 기업 조직의 현황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적 분석.
- 그 결과를 통해서 「지역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연구방법

- 양적 분석:「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주민」에 대한 데이터 중, 관련 변수들만을 발췌, 데이터 정제 후, 통계처리 및 분석, 해석.
- 질적 분석: 수량적 분석의 보충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관계자들(관리자급 4명)을 대상으로, 주제 관련 표준화 인터뷰 실시 및 분석.

4. 연구내용

○ 연구가설

- 가설(1):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기간, 지역, 유형, 업종과 사회적 문제인식, 해결지향 지역문제, 조직 강점, 네트워크 대상 연계정도, 거버넌스, 사회적 성과(공동체 의식 확산)과 관련이 있을 것.
- 가설(2): 지역주민들의 거주지역, 거주기간, 가구형태, 연령대와, 사회적 기업 인식정도, 사회적 문제 인식,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신뢰」, 「사회적 자본=호혜적 규범)」, 「삶의 질」과 관련이 있을 것.
- 가설(3):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의 형성 정도와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

○ 통계분석 내용

- 사회적경제(조직)/지역주민: $x2$ 분석, 독립표본 t-test, 분산분석 ANOVA), 상관분석(r2)

○ 인터뷰 분석 내용

- 사례연구, Text Minging

5. 연구결과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 「지역」「활동기간」「유형」「업종」-「사회문제 인식」「조직이 지향하는 지역문제」「조직강점」간의 차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됨.
- 「지역」「활동기간」「유형」「업종」-「사회적자본(1): 네트워크」「사회적자본(2): 신뢰」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됨.

○ 지역주민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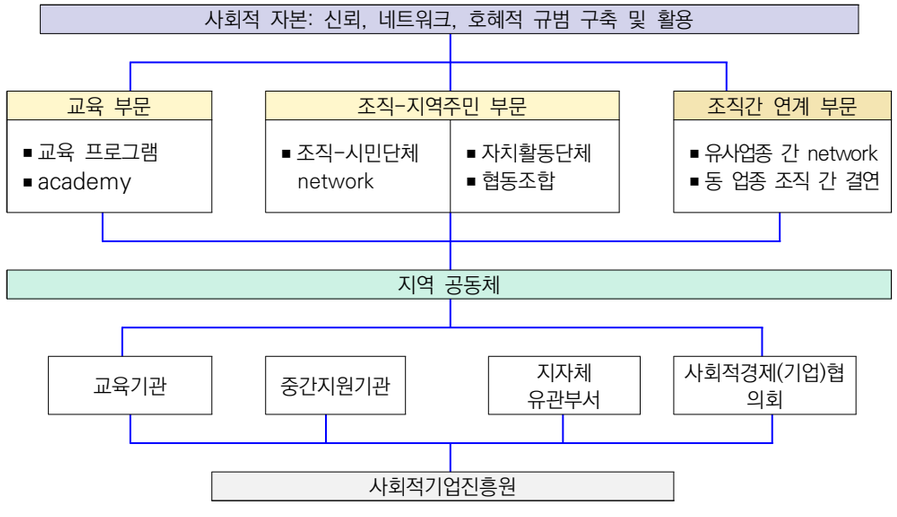
- 「거주지역」「거주기간」「가구형태」「연령대」-「사회적기업 인식정도」「사회적 문제 인식」간의 차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됨.
- 「거주지역」「거주기간」「가구형태」「연령대」-「사회적자본(1)신뢰」「사회적자본(2)네트워크」「사회적자본(3)호혜적 규범」간의 차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됨.

○ 인터뷰 분석 결과

- 각 기관이 속한「지역」과 사회적자본(1)과의 관계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른 특징을 나타냄.
- 조직의「활동기간」이 길수록 「조직강점」,「사회적자본(1), (2)」이 높은데, 이것은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네트워크, 신뢰가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 모임을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협의회', 구체적으로는 업종별, 소지역별 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해 보임.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사회적 자본 구축과 활용 모델 〉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이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활성화 가능성

80년대 이후 각 지역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차원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을 해왔다.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효율성에 주목하게 되었고,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실시되었다. 2007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1]을 제정한 이후 2021년까지 74차례에 걸쳐서 3,368개 기업과 조직들이 인증을 받았으며, 2021년 3월 현재 2,846개소가 활동 중[2]이다.

그러나 14여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사회적기업들의 지속적 성장 추세는 둔화되어 왔고,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기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서, 기존에 제시되어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이론의 관점을 정리[3]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이론과 내용

관련이론	핵심적 내용
이질성(heterogeneity) 이론	·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질적일수록 정부·지자체의 서비스 공급은 상이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런 부족한 서비스 수요의 불충분함을 사회적 경제로부터 공급받음
복지국가 (welfare state)이론	· 사회적경제의 역할은 정부·지자체 기능의 잉여(residual)에 불과, 즉 사회적경제는 복지국가 시스템의 확장
상호의존 (interdependence)이론	· 정부·지자체와 사회적경제 주체와의 상호의존성 강화에 의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가 가능
공급측면 (supply-side)이론	· 높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창업자(공급자)의 존재 정도에 따라 성패 좌우

1) 이 법안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1항). '사회적기업 진흥원'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영리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먼저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s://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company.do?m_cd=D003

3) 최유진(2018). AHP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연구 11(3): 171-174.에서 발췌, 요약.

물론 이 이론들은 서구사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들 이론적 관점들 중에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을 도출하여 활용한다면,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적 경제영역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질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영역이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계층적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기는 어렵지만,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호혜성과 상호신뢰의 가치를 공유하게 한다면, 이질적인 욕구에 따른 수요의 불충분함을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것은 지역민들의 공동체 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의 강화가 지역의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성장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상호의존 이론은 사회적 경제 주체와 정부·지자체와의 상호의존성의 강화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의 관건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 지역의 관·민과의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공급자 측면 이론, 즉 사회적 기업가의 존재가 사회적 경제의 성장과 활성화를 좌우한다는 관점이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어떤 사회문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는가,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는 어떤 수단을 택하는가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사회적 기업가의 지역의 사회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대한 실현가능한 해결 수단의 채택과 실천이 지역의 사회적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기존 이론의 관점에서 도출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community consciousness of residents)」, 「기업·정부(자치단체)·지역민의 포괄적 네트워크(Comprehensive Network of Social Enterprises, Central &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사회적 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요건이지만, 거기의 토대가 되는 것은 바로 지역성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될 것이다. 즉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경제적 차원 보다는 「지역 토착성(Indigenous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즉 특유의 지역민의 공통적 의식, 사회적 성격, 전통 문화가 우선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사회적 경제에 있어 지역 토착성과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 구성과 작동의 기반은 지역 토착성이며, 이 지역 토착성은 지역의 환경(경제적, 자연적, 인문적) 속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지역 토착성을 기반으로, 「지역민들의 공동체 의식 의 형성」, 「포괄적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창의적, 혁신적 기업가의 양육」이,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3가지 요인들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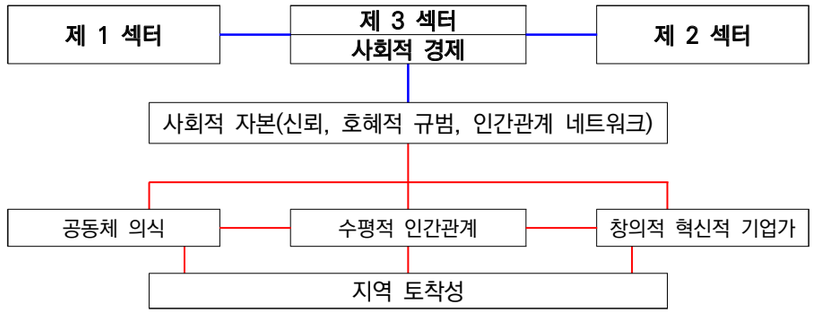
사회적 경제에서의 사회적 자본[4]은, 경제학에서의 인플라(infrastructure) 즉 사회공통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이 아니라, 사회관계자본(Social Relation Capital)을 의미하며, 이것은 사회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 즉 사회적 네트워크로서, 평등적 수평적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다양한 정의[5]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신뢰」, 「인간관계 네트워크」그리고 「호혜적 규범」으로서,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풍요로운 인간관계', '사회문제에 간여하는 다양한 자발적 단체'의 존재, 또는 "지역의 힘(Power of the Region)", "공동체의 결속력(Cohesive Power of Community)"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발전가능성을 진단하여 대안을 도출하고자 할 때, 이 사회적 자본의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적 자본이란 용어는 원래 19세기경에 유럽에서 등장한 속어였으나, 미국의 콜먼(James S. Coleman), 프랑스의 피에르 부르뒤에(Pierre Bourdieu)와 같은 사회학자들이 재정의하였고, 특히 푸트남(R. D. Putnam)이 『Making Deomocracy Work』(1993)에서 "이태리 남부와 북부에서 주정부의 통치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의 차이" 라고 지적한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5) 부르디외는 1984년 "인간이 가진 자본(혹은 사회적 자원이나 가치일반)을 문화자본·경제자본·사회관계자본" 으로 분류하고 사회관계자본을 '인맥' 이라고 보았으며, 콜먼은 1990년에 이 개념을 발전시켜서 "사회적 자본은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적 자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개인 간에 존재하는 것" 으로서 '신뢰', '사귐 등의 인간관계' 그리고 '중간집단(개인과 사회 사이에 있는 지역 커뮤니티 조직이나 자원봉사조직)' 이라고 규정하였다. OECD에서는 "그룹 내부 또는 그룹 간에 협력을 쉽게 하는 공통의 규범이나 가치관, 이해를 수반하는 네트워크" 라고 정의하고 있다. Colman, J. S.(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Harvard Univ. Press, pp.304-307.

〈그림 1〉 지역 토착성 - 사회적 자본 - 사회적 경제 관계도



3.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자본의 구축과 동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성화를 주장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지역성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개념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지역성과 관련된 의미로 해당 지역만의 성격을 의미한다. 즉 지역사회(community)의 특정 지역의 구성원들이 서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고, 그리고 기타 지역과 구분되는 풍토, 역사, 문화, 산업, 자연 등에 기반하여 그 지역만의 고유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identity)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지역성은 지역사회와 정체성의 관점에서 환경, 시설, 영역 등의 지역적인 영역과 지각·정서적 인지와 역동적 변화, 자연·역사·인문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포함한다(장우진, 2011).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성이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성화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드푸르니(J. Defourny)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협동조합과 관련 기업, 상호적 사회와 결사체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을 포함하는데, 이들의 윤리적 자세는 이윤 추구보다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독립적인 관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수익분배에 있어, 사람과 노동이 자본보다 우위에 있다. 즉, 드푸르니의 관점에서 보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목표는 이익 추구보다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J. Defourny, 2001)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과 봉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토착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자본 형성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지역성 구축과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왔다(오미일, 2010; 남승균, 2015; 송미 외, 2015; 최준규 외, 2016; 이헌상 외 2017; 이현주, 2016). 이 연구들은 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회서비스 요구 충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장지은 외(2018)는 경기도 지역의 '따복공동체'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공공지원 단체가 이를 지원할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직에 종사하는 참여자들은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천의지 함양, 주거지 근처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이해진, 2020), 농촌 지역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이해 등이 부족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해진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토대로 하여 지역의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대, 협력, 기여, 혁신 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해외사례인 일본과 홍콩에서도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사례에서도 나타났다(정소양 외, 2015). 구체적으로 일본의 ㈜구로카베와 홍콩의 세인트 제임스 세틀먼트(St. James Settlement)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각각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 관광의 활성화, 커뮤니티 경제의 재생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특화의 문화자원과 인적자원 등을 활용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강점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 나타난 공통된 특징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조직에서 협력, 유대,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역성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명료하게 설명하지 않아 지역성과 사회적 자본의 구축과 동원 가능성을 살펴보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자본에서 사회통합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통한 자본 형성에 대한 논의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관계자본(Social Relation Capital)은 지역의 주민과 사회적경제 조직, 지자체 등의 협력을 통해 축적이 가능할 수 있다.

사회관계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조직

이 관계 자본 축적에 도움될 수 있음을 연구한 사례로는 다음이 있다. 오단이 외(2017)은 서울 동작구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주민, 사회적경제 조직-지자체, 사회적경제 조직-타 자치구 간의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이를 위해 자금 조달 및 자원 공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 등을 주장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의 주민과 타 조직, 지자체와의 활동을 통해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의 자치 역량 증대, 사회적경제의 지역화를 통한 호혜적 상호부조의 경제체제 지향, 자발성과 호혜성 규범의 지역사회 안착 등을 주장한 사례가 있다(김영철, 2011; 이해진, 2015).

이처럼 지역성은 사회적 자본의 구축을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사회적경제 조직만이 추구해야 할 점이 아니라 주민과 지자체가 같이 협력하여 사회관계자본을 축적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리더양성프로그램 개최, 지역 자산 활용 협력적 거버넌스의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있다(한상일, 2010; 2019).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어려움과 관련된 연구로 노영숙 외(2018)는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기업의 운영과 딜레마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업종이 서비스 분야로 제한되고 그에 따른 안정적 소비·와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자본의 영세성 및 인적 자산 구축의 어려움 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민의 참여 확대 방안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 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상을 종합한 결과 지역성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봉사를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곧 지역의 문화자산과 인적 자본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타 기관과 주민 등과의 사회관계자본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의 지역성 기반 관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연구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한, 지역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한 사례를 분석한 것도 많지 않다. 사회적경제 영역이 시장 경제 영역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구성원들이 서로 타 지역의 조직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사회관계자본 축적이 선행될 때, 효과적인 확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역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주민,

사회적경제 조직, 지자체 간의 사회관계자본 구축, 동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의 산재한 문제들을 다수의 참여자들과 같이 해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II.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2020년에 실시한 「사회적경제 지원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조사」에서 수집한 양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첫째, 「지역별 사회적기업과 지역주민 영역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존재양식의 특징(The Characteristics of the Existence Pattern of Social Capital in Local Social Enterprises and Local Residents)」을 확인하고, 둘째, 「지역별 사회적 자본의 축적정도와 사회적 기업 조직의 현황과의 상관관계(The Correlation between the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Social Enterprise Organization in Each Region)」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며, 셋째, 그 결과를 통해서 「지역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Presenting Alternatives for Social Economic Activation Suitable for Each Region」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공된 설문조사의 데이터 중,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주민」의 데이터만을 통계분석의 대상으로 하며, 「지역자치단체 공무원」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표 달성을 지향한다.

첫째,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서, 지역별 사회적 문제에 대한 맞춤형 대책 지향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정도 차이를 확인한다. 이것은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에 지역성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며,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셋째, 지역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의 정도 차이를 확인한다.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 구성 요인으로서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 정도와 지역민들의 공동체 의식 정도를 지역별로

비교하여, 각 지역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와 '네트워크'의 구성의 현황을 확인하고, 지역별 차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과제는, 연구팀이 직접 조사를 하여 수집한 양적 데이터가 아닌 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20년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양적 분석을 하려는 것이다. 또한 문항 전체의 데이터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만을 통계분석, 처리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주민」에게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하며, 「지역 자치단체 공무원」에게서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적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주민」에 대한 데이터 중에서도, 본 연구와 직접적 관련에 있는 변수들만을 발췌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즉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주민」에 대한 데이터 중에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 이용 범위 문항」을 정하여, 거기에 따라 연구목적에 부합한 「통계분석 및 해석」을 하였다.

〈표 3〉 인터뷰 대상 및 표준화 인터뷰 내용

인터뷰 대상	인터뷰 범주	세부문항	비고
대구·경북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 4명	■ 조직의 일반현황	·설립연도, 사업지역, 형태, 주 업종 ·재정적 상황, 조직규모	
	■ 지역사회문제 인식	·전반적 지역문제 ·조직이 지향하는 지역문제	
	■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인식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 사회적 자본	·공동협력, 사업 ·타 기관과의 연계 정도	네트워크
		·거버넌스 ·공동체 의식 확산에의 기여	신뢰
	■ 그 외	·진행에 따른 Probing	

한편 본 연구에서는, 수량적 분석의 보충적 자료수집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조직 관계자들(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조직의 현황 및 사회적 자본에 관한 표준화 인터뷰표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표 2〉 데이터 이용 범위 및 분석을 위한 분류

조사대상	분석 항목	문항	분석을 위한 분류
사회적경제 조직	■ 지역, 활동기간, 유형, 업종	SQ1,2,3,5	-현황 파악 및 비교(독립변수)
	■ 해결 지향 사회문제	Q2	-현황 파악 및 비교(독립변수)
	■ 조직 강점	Q3_1,2,3,4,5,6	-현황 파악 및 비교(독립변수)
	■ 네트워크 대상 연계정도	Q6_1,2,3,4	-사회적 자본(1):네트워크)(종속변수)
	■ 거버넌스	Q9_1,2	-사회적 자본(2):신뢰)(종속변수)
		문항 수 = 18	
지역주민	■ 지역 및 인구학적 속성	SQ1,2,3,5	-현황 파악 및 비교
	■ 사회적기업 인식	Q1_3	-현황 파악 및 비교
	■ 사회적 문제 인식	Q1-4	-현황 파악 및 비교
	■ 조직활동 참여 수	Q2_1~15	-사회적자본(2):네트워크)(종속변수)
	■ 지역연대감	Q3, Q4	-사회적자본(2):네트워크)(종속변수)
	■ 이웃과 연계, 신뢰	Q6_1,2, Q9, Q10_1~15	-사회적자본(1):신뢰)(종속변수)
	■ 구성원 의식, 사회활동내용	Q7_1,2,3,4,5, Q8_1,2,3	-사회적자본(3):호혜적규범)(종속변수)
	■ 삶의 질	Q11, Q12, Q13	-현황 파악 및 비교(종속변수)
		문항 수 = 42	
		총 문항 수 = 60	

Ⅳ. 연구내용

1. 연구가설

〈가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기간, 지역, 유형, 업종과 사회적 문제인식, 해결지향 지역문제, 조직 강점, 네트워크 대상 연계정도, 거버넌스, 사회적 성과(공동체 의식 확산)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림 2〉 가설 1의 인과관계

■ 조직의 지역 ■ 조직의 활동기간 ■ 조직 유형 ■ 조직 업종	⇨	·사회적 문제 인식 ·조직의 해결지향 지역문제 ·조직의 강점 ·사회적자본(1)네트워크=대상과의 연계정도 ·사회적자본(2)신뢰=거버넌스

〈가설 2〉

주민들의 거주지역, 거주기간, 가구형태, 연령대와, 사회적 기업 인식정도, 사회적 문제 인식, 조직활동 참여 수(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지역 연대감(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이웃과 연계, 신뢰(사회적 자본=신뢰), 구성원 의식, 활동내용(사회적 자본=호혜적 규범), 삶의 질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림 3〉 가설 2의 인과관계

■ 거주지역 ■ 거주기간 ■ 가구형태 ■ 연령대	⇨	·사회적 기업 인식 정도 ·사회적 문제 인식 ·사회적자본(1)신뢰:이웃과 연계 ·사회적자본(2)네트워크: 활동 참여, 지역 연대감 ·사회적자본(3)호혜적규범:구성원 의식, 활동내용 ·삶의 질

〈가설 3〉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의 형성 정도와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 형성 정도와 관련성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4〉 가설 3의 인과관계

■ 지역	⇨	■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 ·사회적자본(1)네트워크 : 타 기관, 조직 대상과의 연계정도 ·사회적자본(2)신뢰 : 거버넌스, 공동체 의식 확산 ⇕ ■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사회적자본(1)신뢰 :이웃과 연계 ·사회적자본(2)네트워크 : 조직활동 참여 수, 지역 연대감 ·사회적자본(3)호혜적 규범 : 구성원 의식, 사회활동 내용

2. 통계분석 내용

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통계분석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분석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사회적경제 조직 이원적 통계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계 처리 및 결과 제시
■ 조직 소재지 ■ 조직 활동기간 ■ 조직 유형 ■ 조직 업종	■ 전반적인 지역문제 인식(11문항) ■ 조직이 해결을 지향하는 지역문제(11문항) ■ 조직 강점의 정도(6문항, 5점척도)		■ 교차표, 그래프 ■ $x2$-test ■ 평균값
	■ 지역 타 기관과의 연계정도(4문항, 10점 척도)	사회적자본(네트워크)	■ 집단별 평균값 ■ ANOVA
	■ 지역의 기관, 조직들 간의 협력 정도(2문항, 5점 척도)	사회적자본(신뢰)	

첫째, 「조직 소재지」「조직 활동기간」「조직 유형」「조직 업종」과, 「전반적인 지역문제 인식」「조직이 지향하는 지역문제」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소재지에 따른 지역별 사회문제 인식', '소재지에 따른 지역별 조직지향 지역문제'를 분석하여, 지역별 사회문제인식과 지향하는 지역문제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도출한다.

둘째, 「조직의 소재지」「조직활동기간」「조직유형」「조직업종」과, 「조직의 강점」「타 기관과의 연계정도」「타 기관과의 협력정도」「공동체 의식 확산에의 기여정도」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조직의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공동체 의식)의 정도의 차이를 도출한다.

(1) 「조직의 소재지」「조직활동기간」「조직유형」「조직업종」-「전반적인 지역문제 인식」과의 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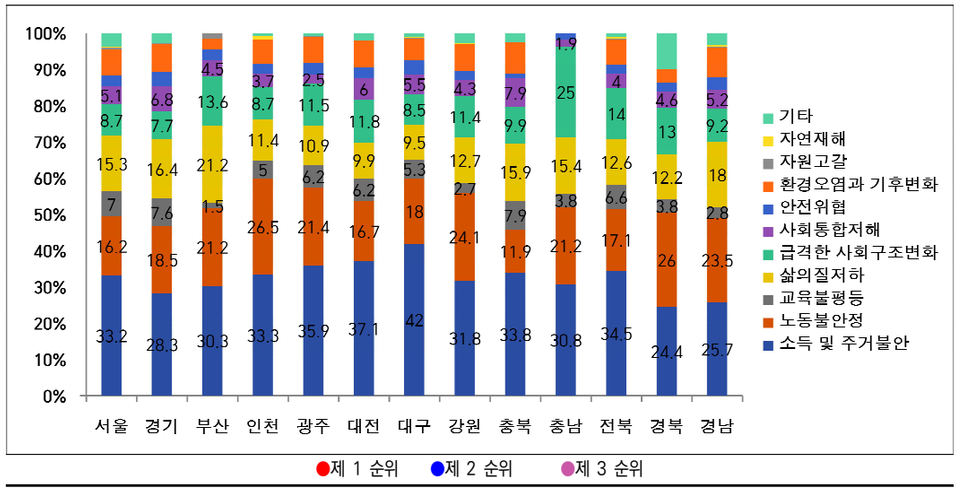
○ 「조직의 소재지」-「전반적인 지역문제 인식」

- 조직의 소재지별 "전반적인 지역문제 인식"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소득 및 주거불안'이 33.3%(n=1,675)로 1순위이며, 2순위는 '노동 불안정'18.9%(n=953), 3순위는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북'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소득 및 주거불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노동 불안정'은 경북만 1순위이며,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2순위로 나타남.

〈표 5〉 조직 소재지별-지역의 사회적문제 인식 교차표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전체
소득 및 주거불안	f	335	179	20	73	174	198	168	95	51	16	250	32	84	1,675
	%	33.2	28.3	30.3	33.3	35.9	37.1	42.0	31.8	33.8	30.8	34.5	24.4	25.7	33.3
노동불안정	f	163	117	14	58	104	89	72	72	18	11	124	34	77	953
	%	16.2	18.5	21.2	26.5	21.4	16.7	18.0	24.1	11.9	21.2	17.1	26.0	23.5	18.9
교육불평등	f	71	48	1	11	30	33	21	8	12	2	48	5	9	299
	%	7.0	7.6	1.5	5.0	6.2	6.2	5.3	2.7	7.9	3.8	6.6	3.8	2.8	5.9
삶의질저하	f	154	104	14	25	53	53	38	38	24	8	91	16	59	677
	%	15.3	16.4	21.2	11.4	10.9	9.9	9.5	12.7	15.9	15.4	12.6	12.2	18.0	13.5
급격한 사회구조변화	f	88	49	9	19	56	63	34	34	15	13	101	17	30	528
	%	8.7	7.7	13.6	8.7	11.5	11.8	8.5	11.4	9.9	25.0	14.0	13.0	9.2	10.5
사회통합저해	f	51	43	3	8	12	32	22	13	12	1	29	6	17	249
	%	5.1	6.8	4.5	3.7	2.5	6.0	5.5	4.3	7.9	1.9	4.0	4.6	5.2	5.0
안전위협	f	30	26	2	6	16	15	16	8	2	1	19	3	11	155
	%	3.0	4.1	3.0	2.7	3.3	2.8	4.0	2.7	1.3	1.9	2.6	2.3	3.4	3.1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f	73	48	2	15	34	40	23	22	13	0	49	5	27	351
	%	7.2	7.6	3.0	6.8	7.0	7.5	5.8	7.4	8.6	.0	6.8	3.8	8.3	7.0
자원고갈	f	3	1	1	0	2	0	1	0	0	0	2	0	1	11
	%	.3	.2	1.5	.0	.4	.0	.3	.0	.0	.0	.3	.0	.3	.2
자연재해	f	2	1	0	2	0	0	1	1	0	0	4	0	1	12
	%	.2	.2	.0	.9	.0	.0	.3	.3	.0	.0	.6	.0	.3	.2
기타	f	39	17	0	2	4	11	4	8	4	0	7	13	11	120
	%	3.9	2.7	.0	.9	.8	2.1	1.0	2.7	2.6	.0	1.0	9.9	3.4	2.4
전체	f	1,009	633	66	219	485	534	400	299	151	52	724	131	327	5,03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 = 256.189, df = 120,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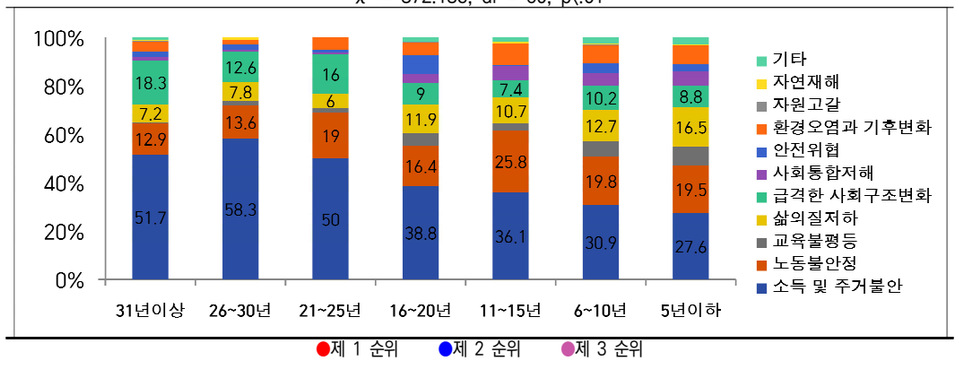
○ 「조직활동기간」-「전반적인 지역문제 인식」

- 「기업설립연도」변수를 "5년단위"로 하여, '30년이상', '26~30년', '21~25년','16~20년','11~15년','6~10년','5년이하'의 「조직 활동기간」으로 변환함.
- 조직 활동기간별 "전반적인 지역문제 인식"에 있어서는, 모든 활동기간에서 '소득 및 주거불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중'26~30년'이 59.3%(n=60)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1년이상'에서 51.7%(n=316), '21~25년'이 50.0%(n=50)의 순서임.
- 이것은 조직의 활동기간이 길수록 '소득 및 주거불안'이 지역의 사회문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줌.

〈표 6〉 조직 활동기간별-지역의 사회적문제 인식 교차표

		31년이상	26~30년	21~25년	16~20년	11~15년	6~10년	5년이하	전체
소득 및 주거불안	f	316	60	50	52	108	433	656	1,675
	%	51.7	58.3	50.0	38.8	36.1	30.9	27.6	33.3
노동 불안정	f	79	14	19	22	77	278	464	953
	%	12.9	13.6	19.0	16.4	25.8	19.8	19.5	18.9
교육 불평등	f	3	2	2	7	8	92	185	299
	%	.5	1.9	2.0	5.2	2.7	6.6	7.8	5.9
삶의 질저하	f	44	8	6	16	32	178	393	677
	%	7.2	7.8	6.0	11.9	10.7	12.7	16.5	13.5
급격한 사회구조변화	f	112	13	16	12	22	143	210	528
	%	18.3	12.6	16.0	9.0	7.4	10.2	8.8	10.5
사회통합저해	f	10	1	1	5	17	75	140	249
	%	1.6	1.0	1.0	3.7	5.7	5.3	5.9	5.0
안전위협	f	12	2	1	10	2	54	74	155
	%	2.0	1.9	1.0	7.5	.7	3.8	3.1	3.1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f	25	2	5	7	26	107	179	351
	%	4.1	1.9	5.0	5.2	8.7	7.6	7.5	7.0
자원고갈	f	1	0	0	1	0	3	6	11
	%	.2	.0	.0	.7	.0	.2	.3	.2
자연재해	f	2	1	0	0	2	4	3	12
	%	.3	1.0	.0	.0	.7	.3	.1	.2
기타	f	7	0	0	2	5	36	70	120
	%	1.1	.0	.0	1.5	1.7	2.6	2.9	2.4
전체	f	611	103	100	134	299	1,403	2,380	5,03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 = 372.135, df = 60,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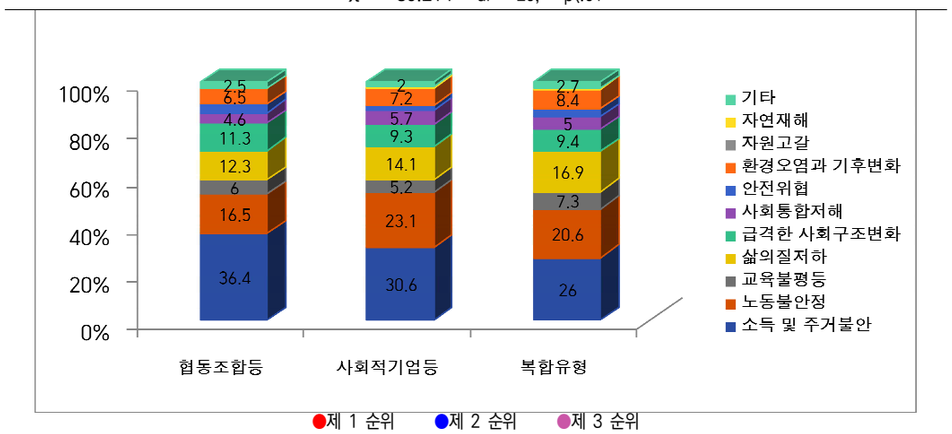


○ 「조직유형」-「전반적인 지역문제 인식」

〈표 7〉 조직유형-지역의 사회적문제 인식 교차표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등	복합유형 (조합+기업)	전체
소득 및 주거불안	f	1,053	440	182	1,675
	%	36.4	30.6	26.0	33.3
노동 불안정	f	477	332	144	953
	%	16.5	23.1	20.6	18.9
교육 불평등	f	173	75	51	299
	%	6.0	5.2	7.3	5.9
삶의 질저하	f	356	203	118	677
	%	12.3	14.1	16.9	13.5
급격한 사회구조변화	f	328	134	66	528
	%	11.3	9.3	9.4	10.5
사회통합 저해	f	132	82	35	249
	%	4.6	5.7	5.0	5.0
안전위협	f	104	28	23	155
	%	3.6	1.9	3.3	3.1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f	188	104	59	351
	%	6.5	7.2	8.4	7.0
자원고갈	f	5	6	0	11
	%	.2	.4	.0	.2
자연재해	f	3	7	2	12
	%	.1	.5	.3	.2
기타	f	72	29	19	120
	%	2.5	2.0	2.7	2.4
전체	f	2,891	1,440	699	5,030
	%	100.0	100.0	100.0	100.0

x^2 = 89.214 df = 20, p(.01



- 조직유형(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등, 복합(협동+기업)형)별로 보면, 모든 조직유형에서'소득 및 주거불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중'협동조합 등'이 36.4%(n=1,053)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등'이 30.6%(n=440), '복합유형'이 26.0%(n=182)의 순서임.
- 이것은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이 '소득 및 주거불안'이 지역의 사회문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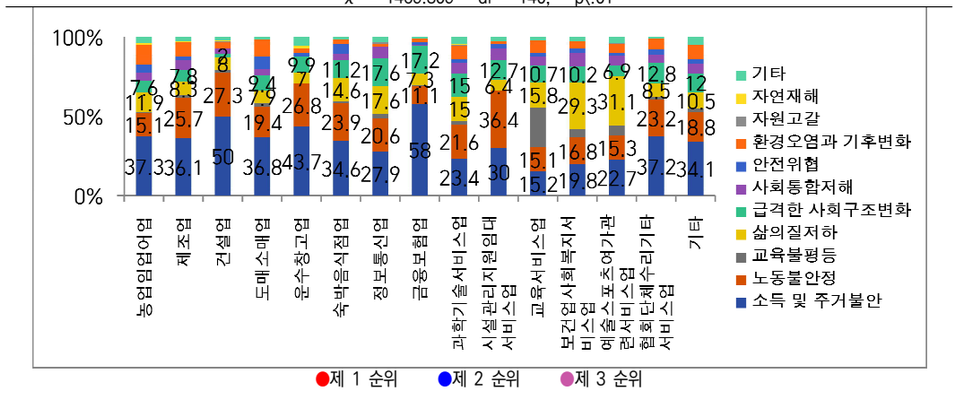
○ 「조직업종」-「전반적인 지역문제 인식」

- 조직업종에 있어서는, '시설 관리 지원 임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소득 및 주거불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농·임·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 창고업', '숙박 음식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에서는 "노동 불안정"이 2순위로 나타남.
- 이것은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이 "소득 및 주거불안"이 지역의 사회문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보여줌.

〈표 8〉 조직업종-지역의 사회적문제 인식 교차표

		농업임업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서비스업	기타	전체
소득 및 주거불안	f	37.3	36.1	50.0	36.8	43.7	34.6	27.9	58.0	23.4	30.0	15.2	19.8	22.7	37.2	34.1	33.2
	%	69	269	75	224	31	71	19	371	39	33	120	66	99	61	94	1,641
노동 불안정	f	15.1	25.7	27.3	19.4	26.8	23.9	20.6	11.1	21.6	36.4	15.1	16.8	15.3	23.2	18.8	19.0
	%	28	192	41	118	19	49	14	71	36	40	119	56	67	38	52	940
교육 불평등	f	.5	1.6	2.0	2.3	.0	1.0	2.9	.8	2.4	.0	25.4	5.7	6.2	1.8	1.8	6.0
	%	1	12	3	14	0	2	2	5	4	0	200	19	27	3	5	297
삶의질 저하	f	11.9	8.3	8.0	7.9	7.0	14.6	17.6	7.3	15.0	6.4	15.8	29.3	31.1	8.5	10.5	13.6
	%	22	62	12	48	5	30	12	47	25	7	124	98	136	14	29	671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f	7.6	7.8	2.0	9.4	9.9	11.2	17.6	17.2	15.0	12.7	10.7	10.2	6.9	12.8	12.0	10.6
	%	14	58	3	57	7	23	12	110	25	14	84	34	30	21	33	525
사회통합 저해	f	5.4	5.8	3.3	4.3	.0	4.4	7.4	1.1	6.6	7.3	5.5	8.4	6.2	5.5	6.2	5.0
	%	10	43	5	26	0	9	5	7	11	8	43	28	27	9	17	248
안전위협	f	4.9	2.4	.0	7.7	2.8	5.9	.0	1.6	2.4	2.7	2.4	2.7	1.8	3.0	2.9	3.1
	%	9	18	0	47	2	12	0	10	4	3	19	9	8	5	8	154
환경오염 기후변화	f	12.4	8.8	4.0	10.7	2.8	2.9	1.5	1.9	8.4	1.8	7.6	4.5	5.7	6.7	9.1	6.7
	%	23	66	6	65	2	6	1	12	14	2	60	15	25	11	25	333
자원고갈	f	.0	.5	.7	.3	.0	.0	1.5	.0	.6	.0	.1	.0	.2	.0	.0	.2
	%	2	3	1	0	1	0	0	2	1	0	1	0	1	0	0	12
자연재해	f	1.1	.4	.7	.0	1.4	.0	.0	.3	.6	.0	.1	.0	.2	.0	.0	.2
	%	7	19	3	8	4	3	2	5	7	3	16	9	16	2	13	117
기타	f	3.8	2.5	2.0	1.3	5.6	1.5	2.9	.8	4.2	2.7	2.0	2.7	3.7	1.2	4.7	2.4
	%	185	746	150	609	71	205	68	640	167	110	787	334	437	164	276	4,949

x^2 = 1469.809 df = 140, p(.01



(2) 「조직의 소재지」「조직활동기간」「조직유형」「조직업종」-「조직이 지향하는 지역문제」와의 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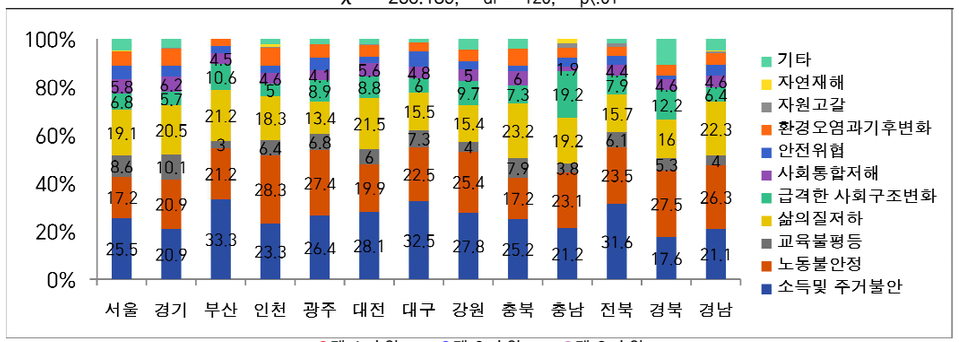
○ 「조직의 소재지」-「조직이 해결을 지향하는 지역문제」

- 조직소재지별 "조직이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문제"에 있어서는,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대구', '강원', '충북', '전북'에서, "소득 및 주거불안"을 조직이 해결을 지향하는 지역사회문제로 "소득 및 주거불안"을 1순위로 하고 있으며, '인천', '광주', '충남', '경북'은 "노동 불안정"을 조직이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문제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남.

〈표 9〉 조직 소재지별-조직이 해결을 지향하는 지역문제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전체
소득 및 주거불안	f	257	132	22	51	128	150	130	83	38	11	229	23	69	1,323
	%	25.5	20.9	33.3	23.3	26.4	28.1	32.5	27.8	25.2	21.2	31.6	17.6	21.1	26.3
노동 불안정	f	174	132	14	62	133	106	90	76	26	12	170	36	86	1,117
	%	17.2	20.9	21.2	28.3	27.4	19.9	22.5	25.4	17.2	23.1	23.5	27.5	26.3	22.2
교육 불평등	f	87	64	2	14	33	32	29	12	12	2	44	7	13	351
	%	8.6	10.1	3.0	6.4	6.8	6.0	7.3	4.0	7.9	3.8	6.1	5.3	4.0	7.0
삶의 질저하	f	193	130	14	40	65	115	62	46	35	10	114	21	73	918
	%	19.1	20.5	21.2	18.3	13.4	21.5	15.5	15.4	23.2	19.2	15.7	16.0	22.3	18.3
급격한 사회구조변화	f	69	36	7	11	43	47	24	29	11	10	57	16	21	381
	%	6.8	5.7	10.6	5.0	8.9	8.8	6.0	9.7	7.3	19.2	7.9	12.2	6.4	7.6
사회통합 저해	f	59	39	3	10	20	30	19	15	9	1	32	6	15	258
	%	5.8	6.2	4.5	4.6	4.1	5.6	4.8	5.0	6.0	1.9	4.4	4.6	4.6	5.1
안전위협	f	57	29	2	7	25	14	26	10	3	2	28	2	15	220
	%	5.6	4.6	3.0	3.2	5.2	2.6	6.5	3.3	2.0	3.8	3.9	1.5	4.6	4.4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f	60	44	2	16	27	27	14	14	11	2	28	6	16	267
	%	5.9	7.0	3.0	7.3	5.6	5.1	3.5	4.7	7.3	3.8	3.9	4.6	4.9	5.3
자원고갈	f	3	2	0	1	0	1	0	0	0	1	8	0	2	18
	%	.3	.3	.0	.5	.0	.2	.0	.0	.0	1.9	1.1	.0	.6	.4
자연재해	f	1	2	0	2	0	0	1	1	0	1	2	0	1	11
	%	.1	.3	.0	.9	.0	.0	.3	.3	.0	1.9	.3	.0	.3	.2
기타	f	49	23	0	5	11	12	5	13	6	0	12	14	16	166
	%	4.9	3.6	.0	2.3	2.3	2.2	1.3	4.3	4.0	.0	1.7	10.7	4.9	3.3
전체	f	1,009	633	66	219	485	534	400	299	151	52	724	131	327	5,03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 = 256.189, df = 120,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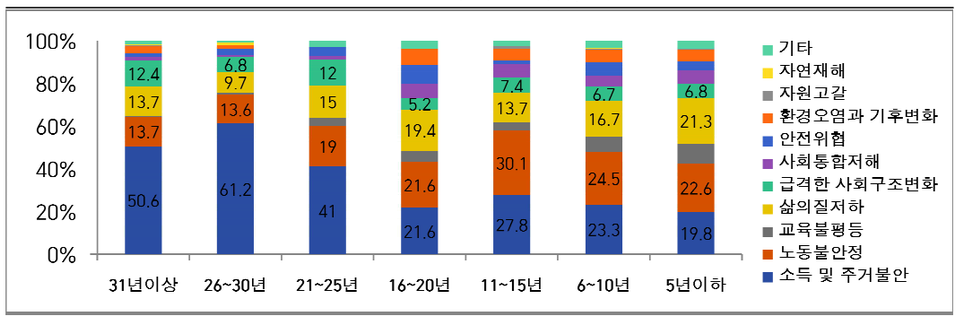
○ 「조직 활동기간」-「조직이 해결을 지향하는 지역문제」

- 조직 활동기간별로 보면, '31년이상', '26~30년', '21~25년', '16~20년'에서 "소득 및 주거불안"을 조직이 해결을 지향하는 지역사회문제 1순위, 그리고 '11~15년', '6~10년', '5년이하'에서는 "노동 불안정"이 1순위로 나타남.
- 이것은 활동기간이 짧은 조직일수록 '노동 불안정'해결을 우선적으로 지향한다는 것을 보여줌.

〈표 10〉 조직 활동기간별-조직이 해결을 지향하는 지역문제 교차표

		31년이상	26~30년	21~25년	16~20년	11~15년	6~10년	5년이하	전체
소득 및 주거불안	f	309	63	41	29	83	327	471	1,323
	%	50.6	61.2	41.0	21.6	27.8	23.3	19.8	26.3
노동 불안정	f	84	14	19	29	90	344	537	1,117
	%	13.7	13.6	19.0	21.6	30.1	24.5	22.6	22.2
교육 불평등	f	2	1	4	7	12	102	223	351
	%	.3	1.0	4.0	5.2	4.0	7.3	9.4	7.0
삶의 질저하	f	84	10	15	26	41	234	508	918
	%	13.7	9.7	15.0	19.4	13.7	16.7	21.3	18.3
급격한 사회구조변화	f	76	7	12	7	22	94	163	381
	%	12.4	6.8	12.0	5.2	7.4	6.7	6.8	7.6
사회통합저해	f	10	1	2	9	19	73	144	258
	%	1.6	1.0	2.0	6.7	6.4	5.2	6.1	5.1
안전위협	f	10	3	4	12	5	86	100	220
	%	1.6	2.9	4.0	9.0	1.7	6.1	4.2	4.4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f	22	2	0	10	16	85	132	267
	%	3.6	1.9	.0	7.5	5.4	6.1	5.5	5.3
자원고갈	f	2	0	0	0	3	4	9	18
	%	.3	.0	.0	.0	1.0	.3	.4	.4
자연재해	f	1	1	0	0	0	6	3	11
	%	.2	1.0	.0	.0	.0	.4	.1	.2
기타	f	11	1	3	5	8	48	90	166
	%	1.8	1.0	3.0	3.7	2.7	3.4	3.8	3.3
전체	f	611	103	100	134	299	1,403	2,380	5,03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 = 489.480, df = 60,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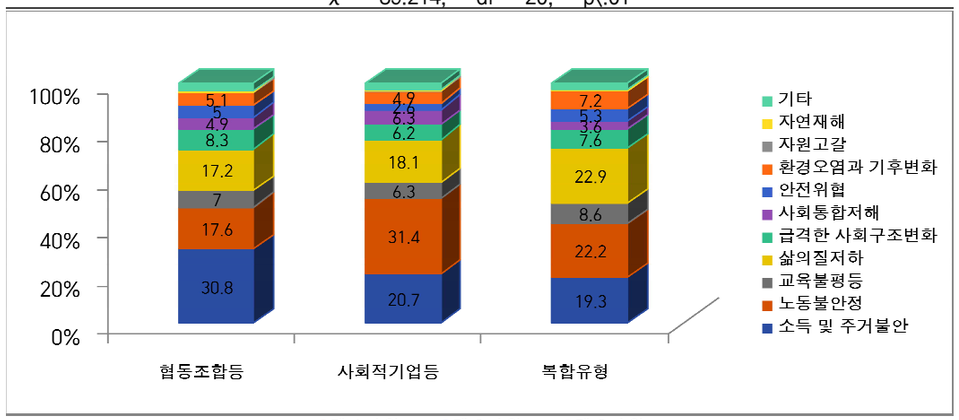
○ 「조직유형」-「조직이 지향하는 지역문제」

- 조직유형별로 보면, '협동조합 등'은 해결을 지향하는 지역사회문제 1순위로 "소득 및 주거불안"을, '사회적기업 등'은 "노동 불안정"을, 그리고 '복합유형'은 "삶의 질 저하"을 조직이 해결을 지향하는 지역사회문제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남.

〈표 11〉 조직유형-조직이 해결을 지향하는 지역문제 교차표

		협동조합등	사회적기업등	복합유형 (조합+기업)	전체
소득 및 주거불안	f	890	298	135	1323
	%	30.8	20.7	19.3	26.3
노동 불안정	f	510	452	155	1117
	%	17.6	31.4	22.2	22.2
교육 불평등	f	201	90	60	351
	%	7.0	6.3	8.6	7.0
삶의 질저하	f	497	261	160	918
	%	17.2	18.1	22.9	18.3
급격한 사회구조변화	f	239	89	53	381
	%	8.3	6.2	7.6	7.6
사회통합저해	f	143	90	25	258
	%	4.9	6.3	3.6	5.1
안전위협	f	145	38	37	220
	%	5.0	2.6	5.3	4.4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f	146	71	50	267
	%	5.1	4.9	7.2	5.3
자원고갈	f	12	5	1	18
	%	.4	.3	.1	.4
자연재해	f	5	4	2	11
	%	.2	.3	.3	.2
기타	f	103	42	21	166
	%	3.6	2.9	3.0	3.3
전체	f	2,891	1,440	699	5,030
	%	100.0	100.0	100.0	100.0

x^2 = 89.214, df = 20,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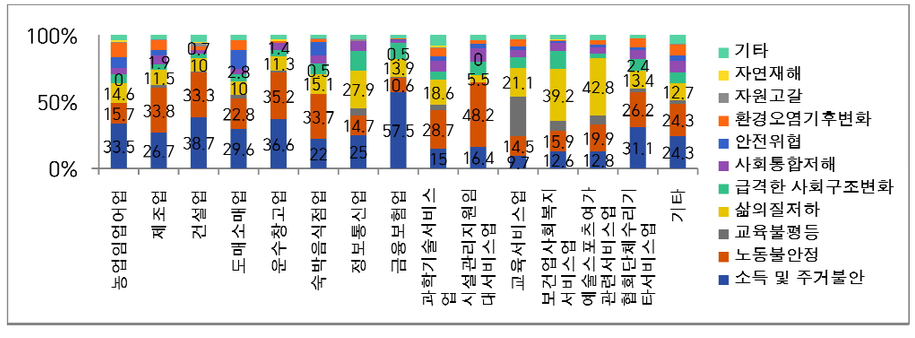
○「조직업종」-「조직이 지향하는 지역문제」

- 조직업종별로 보면, 조직이 해결을 지향하는 지역사회문제 1순위로는, '농·어·임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서비스'에서는 "소득 및 주거불안", '제조업', '숙박·음식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에서는 "노동 불안정"이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교육 서비스업'은 "교육 불평등"을 해결 지향의 지역사회문제 1순위로, 그리고 '정보통신업'과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는 "삶의 질 저하"를 조직이 해결을 지향하는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남.

〈표 12〉 조직업종-조직이 해결을 지향하는 지역문제 교차표

		농업임업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 기타서비스업	기타	전체
소득 및 주거불안	f	62	199	58	180	26	45	17	368	25	18	76	42	56	51	67	1,290
	%	33.5	26.7	38.7	29.6	36.6	22.0	25.0	57.5	15.0	16.4	9.7	12.6	12.8	31.1	24.3	26.1
노동불안정	f	29	252	50	139	25	69	10	68	48	53	114	53	87	43	67	1,107
	%	15.7	33.8	33.3	22.8	35.2	33.7	14.7	10.6	28.7	48.2	14.5	15.9	19.9	26.2	24.3	22.4
교육불평등	f	0	14	1	17	1	1	4	3	7	0	237	23	31	4	7	350
	%	.0	1.9	.7	2.8	1.4	.5	5.9	.5	4.2	.0	30.1	6.9	7.1	2.4	2.5	7.1
삶의질저하	f	27	86	15	61	8	31	19	89	31	6	166	131	187	22	35	914
	%	14.6	11.5	10.0	10.0	11.3	15.1	27.9	13.9	18.6	5.5	21.1	39.2	42.8	13.4	12.7	18.5
급격한 사회구조변화	f	13	35	5	36	3	16	10	77	11	11	65	45	16	15	23	381
	%	7.0	4.7	3.3	5.9	4.2	7.8	14.7	12.0	6.6	10.0	8.3	13.5	3.7	9.1	8.3	7.7
사회통합저해	f	8	47	5	23	4	12	5	10	13	11	42	20	20	11	23	254
	%	4.3	6.3	3.3	3.8	5.6	5.9	7.4	1.6	7.8	10.0	5.3	6.0	4.6	6.7	8.3	5.1
안전위협	f	16	33	0	86	0	20	0	5	5	4	22	6	8	3	12	220
	%	8.6	4.4	.0	14.1	.0	9.8	.0	.8	3.0	3.6	2.8	1.8	1.8	1.8	4.3	4.4
환경오염 기후변화	f	20	55	4	44	1	5	0	5	11	3	41	3	16	11	23	242
	%	10.8	7.4	2.7	7.2	1.4	2.4	.0	.8	6.6	2.7	5.2	.9	3.7	6.7	8.3	4.9
자원고갈	f	1	3	3	2	0	1	1	2	1	0	2	0	1	0	1	18
	%	.5	.4	2.0	.3	.0	.5	1.5	.3	.6	.0	.3	.0	.2	.0	.4	.4
자연재해	f	2	1	1	1	1	0	0	0	2	0	1	1	0	0	0	10
	%	1.1	.1	.7	.2	1.4	.0	.0	.0	1.2	.0	.1	.3	.0	.0	.0	.2
기타	f	7	21	8	20	2	5	2	13	13	4	21	10	15	4	18	163
	%	3.8	2.8	5.3	3.3	2.8	2.4	2.9	2.0	7.8	3.6	2.7	3.0	3.4	2.4	6.5	3.3

x^2 = 182.804 df = 20, p(.01



(3) 「조직의 소재지」「조직활동기간」「조직유형」「조직업종」-「조직의 강점」간의 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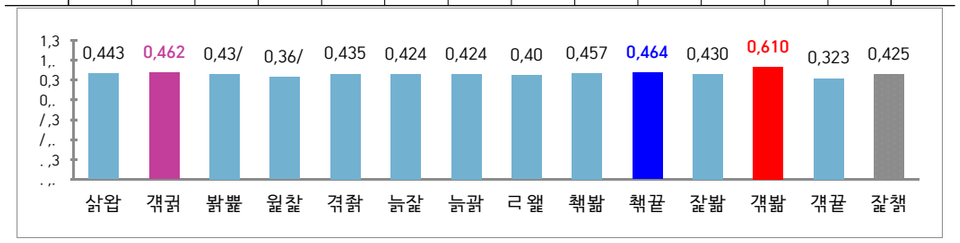
○「조직의 소재지 -「조직의 강점 평균(6문항)」

- 지역별 조직 강점에 대한 조직 자평가 평균을 보면, '경북'이 2.83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충남'2.686, '경기'2.684의 순서임.

〈표 13〉 소재지별-조직강점 평균(6문항)

(범위: 0.000~4.000)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전체
MEAN	2.665	2.684	2.487	2.651	2.581	2.657	2.646	2.620	2.679	2.686	2.652	2.832	2.545	2.647
N	1,009	633	66	219	485	534	400	299	151	52	724	131	327	5,030
SD.	.6665	.6374	.6701	.6295	.6356	.6596	.6461	.6313	.6515	.5770	.6518	.8069	.6987	.6581



● 「조직의 소재지 -「조직의 강점 평균(6문항)」값 차이 검증

- 조직 소재지별 조직의 강점 평균값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는 소재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 〈.01)으로 나타남.

〈표 14〉 거주지역-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정도(One-way An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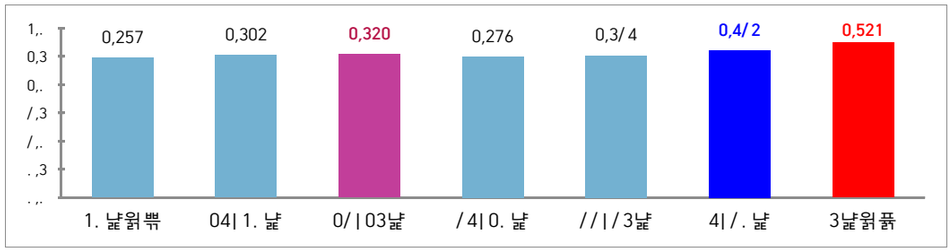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13.332	12	1.111	2.575	.002
Within Groups	2164.388	5,017	.431		
Total	2177.721	5,029			

○ 「조직 활동기간」-「조직의 강점 평균(6문항)」

- 조직 활동기간별 조직의 강점 평균값을 보면, '5년이하'가 2.743으로 가장 높고, '6~10년'이 2.614, '21~25년'2.542의 순서임.
- 조직의 활동기간이 짧을수록 자기조직의 강점에 대한 자평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표 15〉 조직 활동기간-조직의 강점 평균(6문항) (범위: 0.000~4.000)

	30년이상	26~30년	21~25년	16~20년	11~15년	6~10년	5년이하	전체
MEAN	2.479	2.524	2.542	2.498	2.516	2.614	2.743	2.647
N	611	103	100	134	299	1,403	2,380	5,030
SD.	.5880	.6599	.6622	.6309	.6106	.6484	.6718	.6581



● 「조직 활동기간」-「조직의 강점 평균(6문항)」값 차이 검증

- 조직 활동기간별 조직의 강점 평균값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는 활동기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 〈.01)으로 나타남.

〈표 16〉 조직 활동기간-조직의 강점 평균값 차이(One-way An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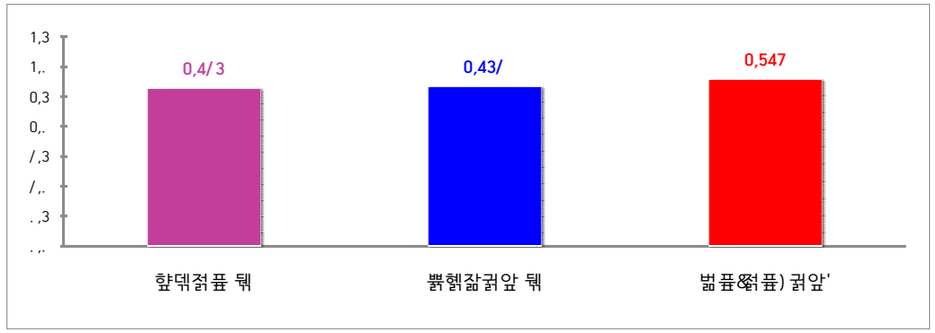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51.691	6	8.615	20.355	.000
Within Groups	2126.030	5,023	.423		
Total	2177.721	5,029			

○ 「조직유형」-「조직의 강점 평균(6문항)」

- 조직유형별 조직의 강점 평균값을 보면, '복합(조합+기업)유형'이 2.769로 가장 높고, '사회적기업 등'이 2.651, '협동조합 등'이 2.615의 순서임.

〈표 17〉 조직유형-조직의 강점 평균(6문항) (범위: 0.000~4.000)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등	복합(조합+기업)	전체
MEAN	2.615	2.651	2.769	2.647
N	2,891	1,440	699	5,030
SD.	.6634	.6501	.6582	.6581



● 「조직유형」-「조직의 강점 평균(6문항)」값 차이 검증

- 조직유형별 조직의 강점 평균값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 〈.01)으로 나타남.

〈표 18〉 조직유형-조직의 강점 평균값 차이(One-way An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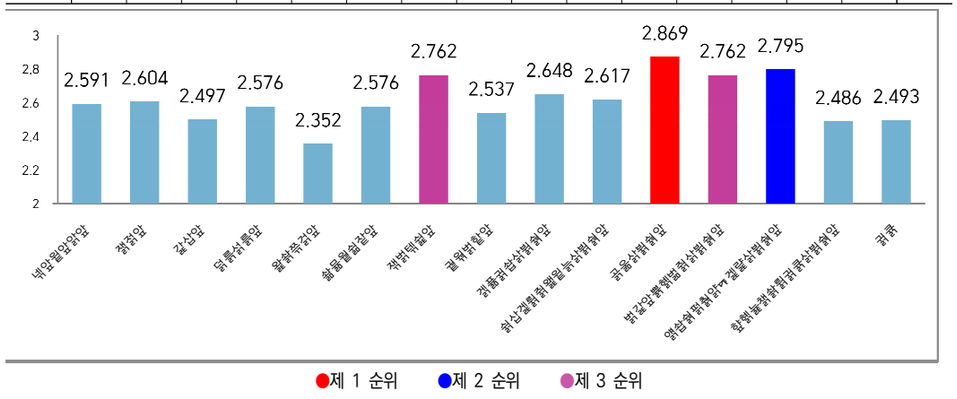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13.517	2	6.758	15.698	.000
Within Groups	2164.204	5,027	.431		
Total	2177.721	5,029			

○ 「조직업종」-「조직의 강점 평균(6문항)」

- 조직업종별 조직의 강점 평균값을 보면, '교육 서비스업'이 2.869로 가장 높고,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이 2.795, '정보통신업'과 '보건사업·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각 협동조합 등'이 2.762의 순서임.

〈표 19〉 조직업종-조직의 강점

	농업임업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시설관리 지원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 기타 서비스업	기타	전체
MEAN	2.591	2.604	2.497	2.576	2.352	2.576	2.762	2.537	2.648	2.617	2.869	2.762	2.795	2.486	2.493	2.647
N	185	746	150	609	71	205	68	640	167	110	787	334	437	164	276	4,949
SD.	.6998	.6876	.7143	.6467	.5631	.6728	.5351	.5690	.6409	.5872	.6227	.6157	.6408	.6774	.7367	.6578



● 「조직업종」-「조직의 강점 평균(6문항)」값 차이 검증

- 조직업종별 조직의 강점 평균값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p 〈.01)으로 나타남.

〈표 20〉 조직업종-조직의 강점 평균값 차이(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87.976	14	6.284	15.101	.000
Within Groups	2053.190	4,934	.416		
Total	2141.165	4,948			

(4) 「조직의 소재지」「조직활동기간」「조직유형」「조직업종」- 「조직의 사회적 자본 (1)네트워크=타 기관과의 연계정도, (2)신뢰=거버넌스)」와의 상관관계 분석

■ 조직의 사회적 자본 평균

○「조직의 사회적 자본(1)네트워크: 타 기관, 조직과의 연계 정도(4문항)」

- 조직의 사회적 자본(1): 네트워크는 '타 조직과의 연계정도(4문항)'에 대한 평균값으로 변환하여 측정하였고, 전체 평균은 4.659(범위: 0.000~10.000)임.

〈표 21〉 조직의 사회적 자본(1)-네트워크(타 기관, 조직과의 연계 정도)(범위: 0.000~10.000)

	Mean	Sd.	min.	max.	N
타 조직 연계정도(1) : 시,군, 구청	5.710	2.895	0	10	5,030
타 조직 연계정도(2) : 문화재단, 주민조직, 비영리조직 등	5.211	2.785	0	10	5,030
타 조직 연계정도(3) : 공기업, 지역공기업 등	4.050	2.800	0	10	5,030
타 조직 연계정도(4) :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기업 등	4.850	2.823	0	10	5,030
전 체	4.659	2.246	0	10	5,030

○ 「조직의 사회적 자본(2)신뢰 : 거버넌스(타 기관, 조직과의 협력 정도)」

- 조직의 사회적 자본(2): 은 '타 조직과의 연계정도(4문항)'에 대한 평균값으로 변환하여 측정하였고, 전체 평균은 2.421(범위: 0.000~4.000)임.

〈표 22〉 조직의 사회적 자본(2)신뢰:거버넌스(타 기관, 조직과의 협력 정도)
(범위: 0.000~4.000)

	Mean	Sd.	min.	max.	N
거버넌스(1) :조직, 시민사회, 행정기관과의 협력	2.448	.891	0	4	5,030
거버넌스(2) :행정기관의 협력 파트너십	2.394	.926	0	4	5,030
전 체	2.421	.866	0	4	5,030

■ 조직 소재지와 조직의 사회적 자본(1)(2)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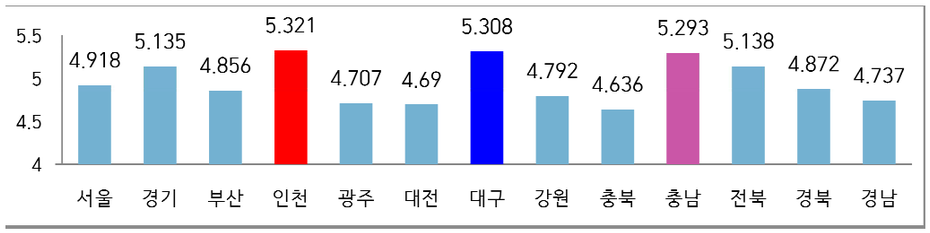
○ 「조직 소재지별」-「조직의 사회적 자본(1)네트워크 : 타 기관, 조직과의 연계 정도」

- 조직 소재지별 조직의 사회적 자본(1):네트워크는, '인천'이 5.3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구'5.308, '충남'5.293의 순서(범위: 0.000~10.000)임.

〈표 23〉 소재지별-조직의 사회적 자본(1)네트워크:타 기관, 조직과의 연계 정도

(범위: 0.000~10.000)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전체
MEAN	4.918	5.135	4.856	5.321	4.707	4.690	5.308	4.792	4.636	5.293	5.138	4.872	4.737	4.955
N	1,009	633	66	219	485	534	400	299	151	52	724	131	327	5,030
SD.	2.214	2.398	2.211	2.333	2.262	2.360	2.074	2.204	2.297	1.809	2.133	1.984	2.272	2.246



● 「조직소재지」-「사회적자본(1):네트워크 평균(4문항)」값 차이 검증

- 조직 소재지별 사회적자본(1):네트워크 평균값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 〈.01)으로 나타남.

〈표 24〉 조직업종-사회적자본(1):네트워크 평균값 차이(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239.157	12	19.930	3.979	.000
Within Groups	25129.649	5,017	5.009		
Total	25368.806	5,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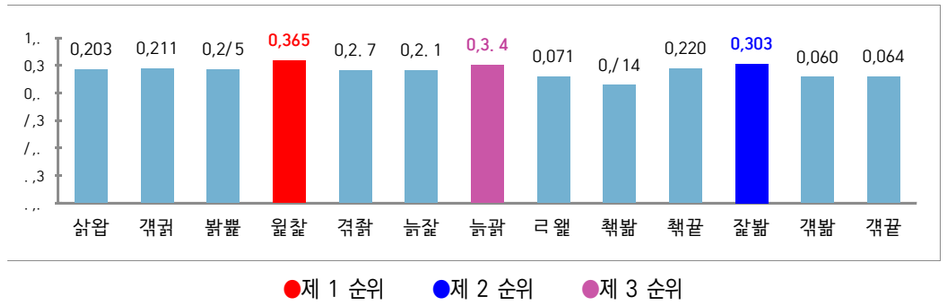
○ 「조직 소재지별」-「조직의 사회적 자본(2)신뢰 : 거버넌스(타 기관, 조직과의 협력 정도)」

- 조직 소재지별 조직의 사회적 자본(2):신뢰는, '인천'이 2.5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북'2.525, '대구'2.506의 순서(범위: 0.000~4.000)임.

〈표 25〉소재지별 - 조직의 사회적 자본(2)신뢰:거버넌스(타 기관, 조직과의 협력 정도)

(범위: 0.000~40.000)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전체
MEAN	2.425	2.433	2.417	2.587	2.409	2.403	2.506	2.293	2.136	2.442	2.525	2.282	2.286	2.421
N	1,009	633	66	219	485	534	400	299	151	52	724	131	327	5,030
SD.	.8698	.8951	.7210	.8749	.8594	.8548	.7711	.9042	.9814	.8023	.8072	.9159	.9185	.8661



● 「조직소재지」-「사회적자본(2):신뢰(2문항)」값 차이 검증

- 조직 소재지별 사회적자본(2):신뢰 평균값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 〈.01)으로 나타남.

〈표 26〉 조직소재지-조직의 사회적 자본(2)신뢰: 거버넌스(타 기관, 조직과의 협력 정도) 평균값 차이(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42.805	12	3.567	4.798	.000
Within Groups	3729.874	5,017	.743		
Total	3772.679	5,029			

■ 조직 활동기간과 조직의 사회적 자본(1)(2)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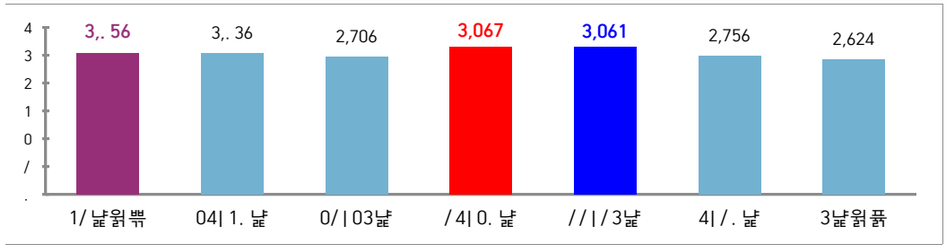
○ 「조직 활동기간」-「조직의 사회적 자본(1) : 타 기관, 조직과의 연계 정도」

- 조직 활동기간별 조직의 사회적 자본(1):네트워크는, '16~20년'이 5.289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1~15년'5.283, '31년이상'이 5.078의 순서(범위: 0.000~10.000)임.

〈표 27〉 조직활동기간(5년단위)-사회적자본(1):네트워크「타 기관, 조직과의 연계 정도」

(범위: 0.000~10.000)

	31년이상	26~30년	21~25년	16~20년	11~15년	6~10년	5년이하	전체
Mean	5.078	5.058	4.928	5.289	5.283	4.978	4.846	4.955
N	611	103	100	134	299	1403	2,380	5,030
SD.	1.919	2.133	2.128	2.024	2.187	2.236	2.350	2.246



● 「조직 활동기간」-「사회적자본(1):네트워크(4문항)」값 차이 검증

- 조직 활동기간별 사회적자본(1):네트워크 평균값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 〈.01)으로 나타남.

〈표 28〉 조직 활동기간-사회적자본(1):네트워크「타 기관, 조직과의 연계 정도」 평균값 차이(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42.805	12	3.567	4.798	.000
Within Groups	3729.874	5,017	.743		
Total	3772.679	5,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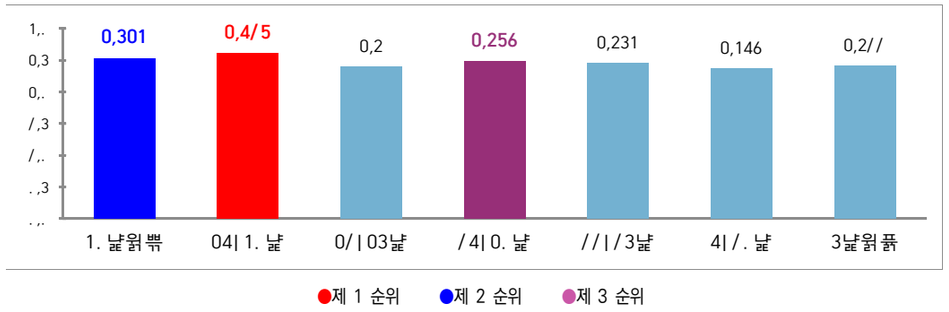
○ 「조직 활동기간」-「조직의 사회적 자본(2) : 신뢰(2문항)」

- 조직 활동기간별 조직의 사회적 자본(2):신뢰는, '26~30년'이 2.6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1년이상'2.523, '16~20년'이 2.478의 순서임(범위: 0.000~4.000)

〈표 29〉 조직 활동기간(5년단위)-조직의 사회적 자본(2)신뢰: 거버넌스(타 기관, 조직과의 협력 정도)

(범위: 0.000~40.000)

	31년이상	26~30년	21~25년	16~20년	11~15년	6~10년	5년이하	전체
Mean	2.523	2.617	2.400	2.478	2.453	2.368	2.411	2.421
N	611	103	100	134	299	1,403	2,380	5,030
SD.	.7473	.7181	.8288	.8269	.7992	.9007	.8884	.8661



● 「조직 활동기간」-「사회적자본(2):신뢰(2문항)」값 차이 검증

- 조직 활동기간 별 사회적자본(2):신뢰 평균값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 〈.01)으로 나타남.

〈표 30〉 조직 활동기간-사회적자본(1):네트워크「타 기관, 조직과의 연계 정도」 평균값 차이 (One-way An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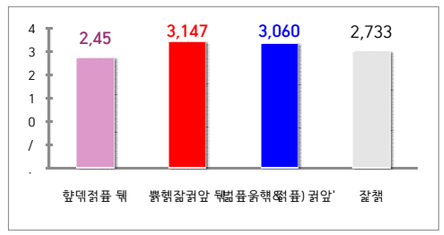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15.196	6	2.533	3.386	.002
Within Groups	3757.483	5,023	.748		
Total	3772.679	5,029			

■ 조직유형과 조직의 사회적 자본(1)(2)과의 관계

○ 「조직유형별」-「조직의 사회적 자본(1)네트워크 : 타 기관, 조직과의 연계 정도」
- 조직 유형별 조직의 사회적 자본(1):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 등'이 5.3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복합유형(조합+기업)'5.282, '협동조합 등'이 4.670의 순서임.

〈표 31〉 조직유형-사회적자본(1):네트워크「타 기관, 조직과의 연계 정도」
(범위: 0.000~10.000)

기업유형분류	MEAN	N	SD.
협동조합 등	4.670	2,891	2.2910
사회적기업 등	5.369	1,440	2.1212
복합유형(조합+기업)	5.282	699	2.1306
전체	4.955	5,030	2.2460



●제 1 순위 ●제 2 순위 ●제 3 순위

● 「조직유형」-「사회적자본(1):네트워크(4문항)」값 차이 검증
- 조직 유형별 사회적자본(1):네트워크 평균값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 〈.01)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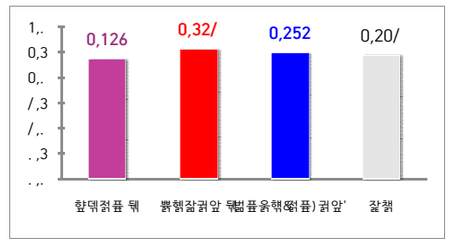
〈표 32〉 조직유형-사회적자본(1):네트워크「타 기관, 조직과의 연계 정도」 평균값 차이 (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556.889	2	278.444	56.414	.000
Within Groups	24811.917	5,027	4.936		
Total	25368.806	5,029			

○ 「조직유형별」-「조직의 사회적 자본(2)신뢰 : 거버넌스(타 기관, 조직과의 협력 정도)」
- 조직유형별 조직의 사회적 자본(2):신뢰, '사회적기업 등'이 2.54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복합유형(조합+기업)'2.474, '협동조합 등'이 2.348의 순서임(범위: 0.000~4.000)

〈표 33〉 조직 유형별-조직의 사회적 자본(2)신뢰: 거버넌스(타 기관, 조직과의 협력 정도)
(범위: 0.000~4.000)

기업유형분류	MEAN	N	SD.
협동조합 등	2.348	2,891	.8801
사회적기업 등	2.541	1,440	.8163
복합유형(조합+기업)	2.474	699	.8772
전체	2.421	5,030	.8661



●제 1 순위 ●제 2 순위 ●제 3 순위

● 「조직유형」-「사회적자본(2):신뢰(2문항)」값 차이 검증
- 조직 유형별 사회적자본(2):신뢰 평균값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 〈.01)으로 나타남.

〈표 34〉 조직유형-조직의 사회적 자본(2)신뢰: 거버넌스(타 기관, 조직과의 협력 정도) 평균값 차이(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38.317	2	19.159	25.790	.000
Within Groups	3734.362	5,027	.743		
Total	3772.679	5,029			

■ 조직 주요 업종과 조직의 사회적 자본(1)(2)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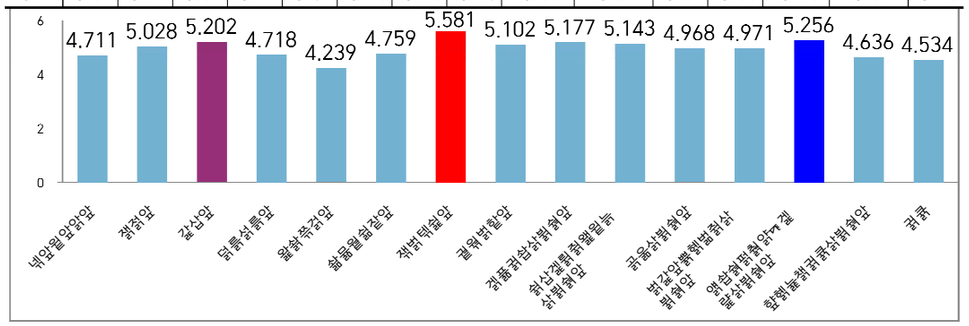
- 조직 주요 업종 총 19개 문항 중 주요 업종 15개만[6] 통계처리 대상으로 함.

○ 「주요 업종별」-「조직의 사회적 자본(1)네트워크 : 타 기관, 조직과의 연계 정도」

〈표 35〉 주요 업종별-사회적자본(1):네트워크「타 기관, 조직과의 연계 정도」

(범위: 0.000~10.000)

조직 주요업종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사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MEAN	4.711	5.028	5.202	4.718	4.239	4.759	5.581	5.102	5.177	5.143	4.968	4.971	5.256	4.636	4.534
N	185	746	150	609	71	205	68	640	167	110	787	334	437	164	276
SD	2.154	2.278	2.354	2.274	2.407	2.116	2.225	1.920	2.269	2.134	2.259	2.288	2.226	2.489	2.493



●제 1 순위 ●제 2 순위 ●제 3 순위

● 「주요업종」-「사회적자본(1):네트워크(4문항)」평균값 차이 검증

- 조직 주요업종별 사회적자본(1):네트워크 평균값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 〈.01)으로 나타남.

〈표 36〉 주요업종별-조직의 사회적 자본(1)네트워크「타 기관, 조직과의 연계 정도」평균값 차이(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260.742	14	18.624	3.723	.000
Within Groups	24684.139	4,934	5.003		
Total	24944.881	4,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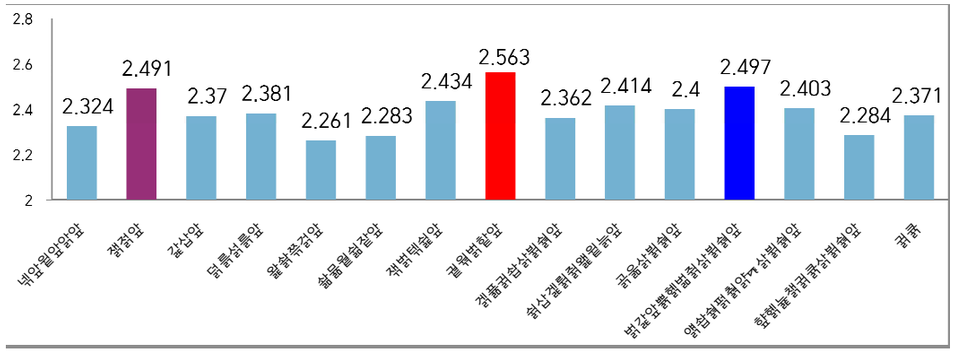
6) 사례 수가 50개 이하(n<50) 업종인, '광업(n=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n=31)', '수도·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n=20)', '부동산업(n=29)'은 결측 처리하고, 나머지 15개 업종만 통계 처리함.

○ 「주요 업종별」-「조직의 사회적자본(2)신뢰 : 거버넌스(타 기관, 조직과의 협력 정도)」

〈표 37〉 주요 업종별-조직의 사회적 자본(2)신뢰: 거버넌스(타 기관, 조직과의 협력 정도)

(범위: 0.000~4.000)

조직 주요업종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사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MEAN	2.324	2.491	2.370	2.381	2.261	2.283	2.434	2.563	2.362	2.414	2.400	2.497	2.403	2.284	2.371
N	185	746	150	609	71	205	68	640	167	110	787	334	437	164	276
SD	.8740	.8895	.9473	.8704	.9097	.8242	.8145	.7226	.7851	.8879	.8832	.8708	.8999	.9987	.8774



●제 1 순위 ●제 2 순위 ●제 3 순위

● 「주요 업종」-「사회적자본(2):신뢰(2문항)」값 차이 검증

- 조직 업종별 사회적자본(2):신뢰 평균값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 〈.01)으로 나타남.

〈표 38〉 조직유형-조직의 사회적 자본(2)신뢰: 거버넌스(타 기관, 조직과의 협력 정도) 평균값 차이(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32.197	14	2.300	3.083	.000
Within Groups	3680.163	4,934	.746		
Total	3712.360	4,948			

나. 지역주민에 대한 통계분석

○ 지역주민에 대한 이원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거주지역」「거주기간」「가구형태」「연령(연령대)」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사회문제해결 기여정도, 사회문제해결 노력정도)」「해결지향 지역 사회문제」「삶의 질(3문항)」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거주지, 거주기간, 가구형태, 연령(연령대)'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인식정도의 차이', '해결지향의 지역 사회문제의 차이'를 도출한다.

둘째, 지역주민의 「거주지역」「거주기간」「가구형태」「연령(연령대)」와, 「사회적 자본(신뢰 3항목, 18문항」「사회적자본(네트워크, 17문항)」「사회적 자본(호혜적 규범, 8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의 정도와의 관계를 도출한다.

〈표 39〉 지역주민 이원적 통계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계 처리 및 결과 제시
■ 거주지역 ■ 거주기간 ■ 가구형태 ■ 연령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사회문제 기여 및 노력)(2문항, 5점척도) ■ 해결을 지향하는 지역문제(11문항)		■ 교차표, 그래프 ■ x2-test ■ ANOVA
	■ 이웃에의 신뢰감(2문항, 5점 척도) ■ 일반적 신뢰감(1문항, 5점 척도) ■ 지역민, 기관에의 신뢰정도(15문항 5점 척도)	사회적자본(1) 신뢰	■ 집단별 평균값 ■ ANOVA ■ 회귀분석
	■ 지역 공동체 활동 참여 수(15문항)*가중치부여 ■ 지역 구성원들과의 연대감(2문항, 5점 척도)	사회적자본(2) 네트워크	
	■ 지역(마을)과의 관련, 소속감(5문항, 5점 척도) ■ 공동체 내 활동(자원봉사)(3문항, 5점 척도)	사회적자본(3) 호혜적 규범	
	■ 삶의 질 -행복지수(1문항, 10점 척도), 지역평가(1문항, 10점 척도) 전체적 만족도(1문항, 10점 척도)		

(1) 「거주지역」「거주기간」「가구형태」「연령(연령대)」-「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 정도」간의 상관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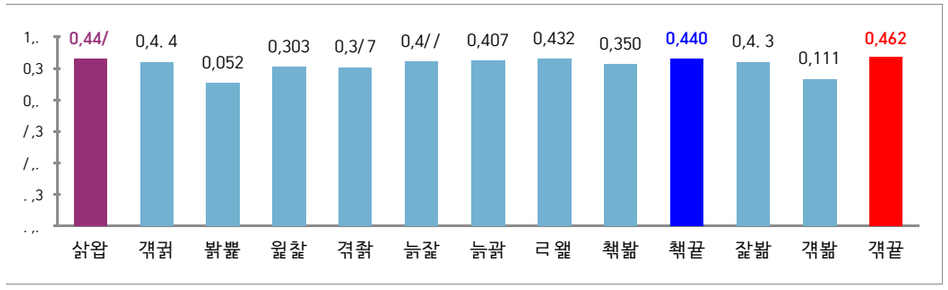
○ 「거주지역」-「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 정도(2문항) 평균값」비교

- 거주지역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2문항)의 평균값을 보면, '경남'이 2.6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충남'2.662, '서울'2.661의 순서임.

〈표 40〉 거주지역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 정도

(범위: 0.000~4.000)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전체
MEAN	2.661	2.606	2.274	2.525	2.519	2.611	2.629	2.654	2.572	2.662	2.605	2.333	2.684	2.591
N	1,749	945	157	452	398	487	517	368	83	213	801	553	423	7,146
SD.	.7421	.7747	.7710	.7672	.7793	.7631	.7822	.8222	.6946	.9167	.7551	.7308	.7081	.7693



● 「거주지역」-「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정도」평균값 차이 검증

- 거주지역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2문항)의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 〈.01)으로 나타남.

〈표 41〉 거주지역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정도(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72.848	12	6.071	10.421	.000
Within Groups	4155.481	7,133	.583		
Total	4228.329	7,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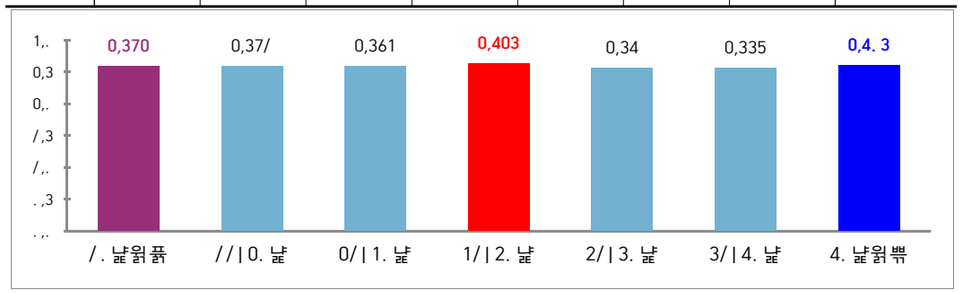
○ 「거주기간」-「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 정도(2문항) 평균값」비교

- 거주기간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2문항)의 평균값을 보면, '31~40년'이 2.6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0년이상'2.605, '10년이하'가 2.592의 순서임.

〈표 42〉 거주기간(년)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 정도

(범위: 0.000~4.000)

	10년이하	11~20년	21~30년	31~40년	41~50년	51~60년	60년이상	전체
Mean	2.592	2.591	2.583	2.625	2.560	2.557	2.605	2.591
N	2,956	1,892	1,162	605	301	166	62	7,144
SD.	.7642	.7636	.7684	.7893	.8543	.7332	.6661	.7692



● 「거주기간」-「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정도」평균값 차이 검증

- 거주기간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2문항)의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p 〉.05)으로 나타남.

〈표 43〉 거주기간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정도(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1.272	6	.212	.358	.905
Within Groups	4224.905	7,137	.592		
Total	4226.177	7,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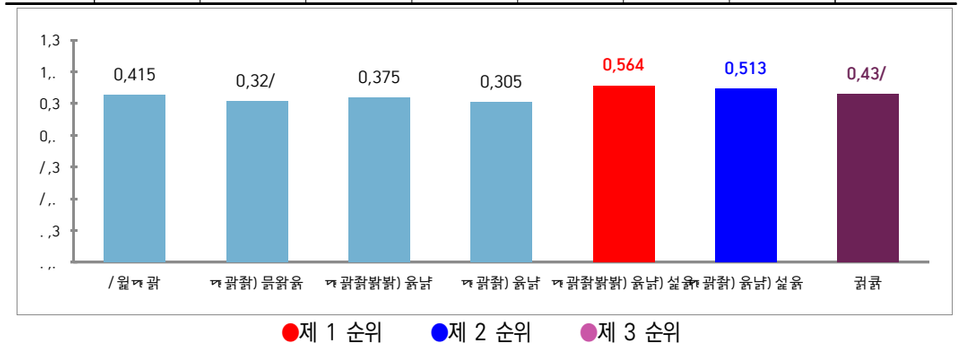
○ 「가구형태」-「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정도」

- 가구형태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2문항)의 평균값을 보면, '가구주 부부+자녀+손주'가 2.786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구주+자녀+손자'가 2.735, '기타'가 2.651의 순서임.

〈표 44〉 가구형태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 정도

(범위: 0.000~4.000)

	1인가구	가구주+배우자	가구주부부+자녀	가구주+자녀	가구주부부+자녀+손자	가구주+자녀+손자	기타	합계
Mean	2.637	2.541	2.597	2.527	2.786	2.735	2.651	2.591
N	932	1,215	3,826	748	96	81	248	7,146
SD.	.7734	.8096	.7461	.8095	.7939	.6712	.7704	.7693



● 「가구형태」-「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정도」평균값 차이 검증

- 가구형태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2문항)의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 〈.01)으로 나타남.

〈표 45〉 가구형태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정도(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14.537	6	2.423	4.105	.000
Within Groups	4213.792	7,139	.590		
Total	4228.329	7,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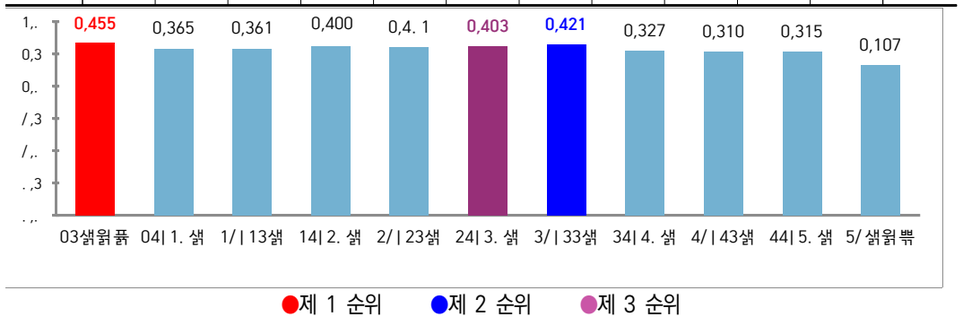
○ 「연령(연령대)」-「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정도」

- 연령대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2문항)의 평균값을 보면, '25세 이하'가 2.67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1~55세'가 2.643, '46~50세'가 2.625의 순서임.

〈표 46〉 연령대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 정도

(범위: 0.000~4.000)

	25세 이하	26~30세	31~35세	36~40세	41~45세	46~50세	51~55세	56~60세	61~65세	66~70세	71세 이상	전체
Mean	2.677	2.587	2.583	2.622	2.603	2.625	2.643	2.549	2.532	2.537	2.329	2.591
N	282	512	563	637	741	946	1,145	840	913	497	70	7,146
SD.	.610	.747	.775	.763	.801	.781	.738	.743	.786	.786	1.035	.7693



● 「연령대」-「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정도」평균값 차이 검증

- 연령대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2문항)의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 〈.01)으로 나타남.

〈표 47〉 연령대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정도(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17.892	10	1.789	3.032	.001
Within Groups	4210.437	7,135	.590		
Total	4228.329	7,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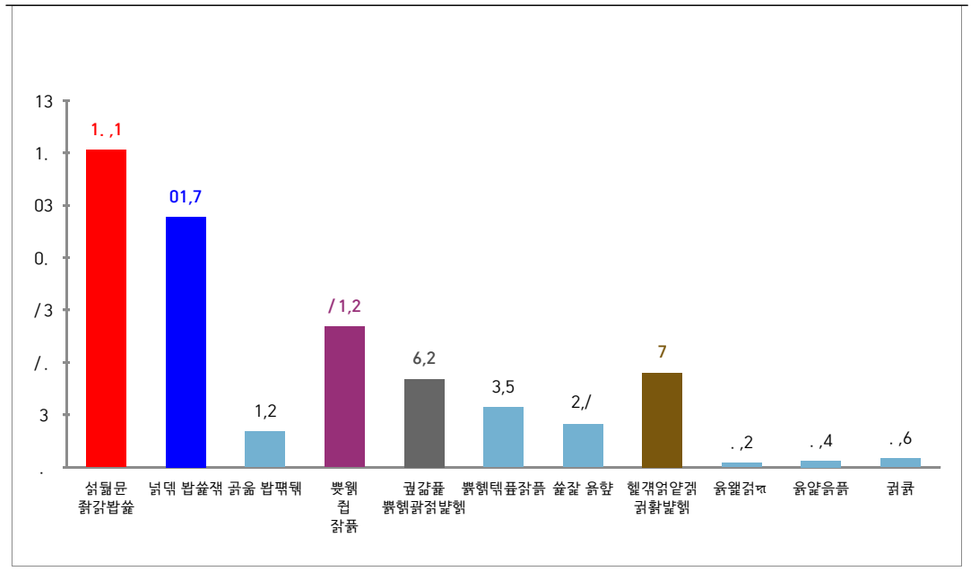
(2) 「거주지역」「거주기간」「가구형태」「연령(연령대)」-「해결지향 지역 사회문제」간의 상관관계 분석

■ 「사회적경제(조직)이 해결을 지향할 지역 사회문제」(전체)

- 사회적경제(조직)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지역문제는, "소득 및 주거불안" 30.3%(n=2,166), '노동 불안정' 23.9%(n=1,711), '삶의 질 저하'13.4%(n=956)의 순서임.

〈표 48〉 사회적경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역문제(전체)

	소득및 주거불안	노동 불안정	교육 불평등	삶의 질 저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사회통합 저해	안전 위협	환경오염 ,기후 변화	자원고갈	자연재해	기타	계	결측	합계
N	2,166	1,711	244	956	601	405	293	642	26	43	59	7,146	24,373	31,519
유효%	30.3	23.9	3.4	13.4	8.4	5.7	4.1	9.0	.4	.6	.8	100.0		



○ 「거주지역별」-「사회적경제(조직)이 해결을 지향할 지역 사회문제(1~5순위)」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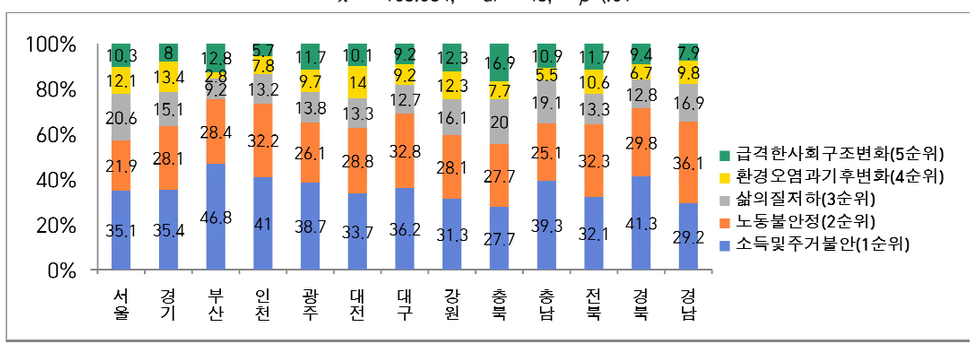
- 거주지역별 사회적경제(조직)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지역문제(주요 5가지)에 있어서는,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강원', '충북', '충남', '경북'에서는 "노동 불안정"이 제 1순위이며, '전북', '경남은 "소득 및 주거불안"이 제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남.

〈표 49〉 거주지역별 - 사회적경제가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역문제(1~5순위)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전체
소득및주거불안 (1순위)	N	512	276	66	158	135	137	166	97	18	72	225	197	107	2,166
	%	35.1	35.4	46.8	41.0	38.7	33.7	36.2	31.3	27.7	39.3	32.1	41.3	29.2	35.6
노동불안정 (2순위)	N	319	219	40	124	91	117	150	87	18	46	226	142	132	1,711
	%	21.9	28.1	28.4	32.2	26.1	28.8	32.8	28.1	27.7	25.1	32.3	29.8	36.1	28.2
삶의질저하 (3순위)	N	300	118	13	51	48	54	58	50	13	35	93	61	62	956
	%	20.6	15.1	9.2	13.2	13.8	13.3	12.7	16.1	20.0	19.1	13.3	12.8	16.9	15.7
환경오염과기후 변화(4순위)	N	176	104	4	30	34	57	42	38	5	10	74	32	36	642
	%	12.1	13.4	2.8	7.8	9.7	14.0	9.2	12.3	7.7	5.5	10.6	6.7	9.8	10.6
급격한사회구조 변화(5순위)	N	150	62	18	22	41	41	42	38	11	20	82	45	29	601
	%	10.3	8.0	12.8	5.7	11.7	10.1	9.2	12.3	16.9	10.9	11.7	9.4	7.9	9.9
전체	N	1,457	779	141	385	349	406	458	310	65	183	700	477	366	6,07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 1순위 ●제 2 순위 ●제 3 순위 ●제 4 순위 ●제 5 순위

x^2 = 163.984, df = 48, p 〈.01



○「거주기간」-「사회적경제(조직)이 해결을 지향할 지역 사회문제(1~5순위)」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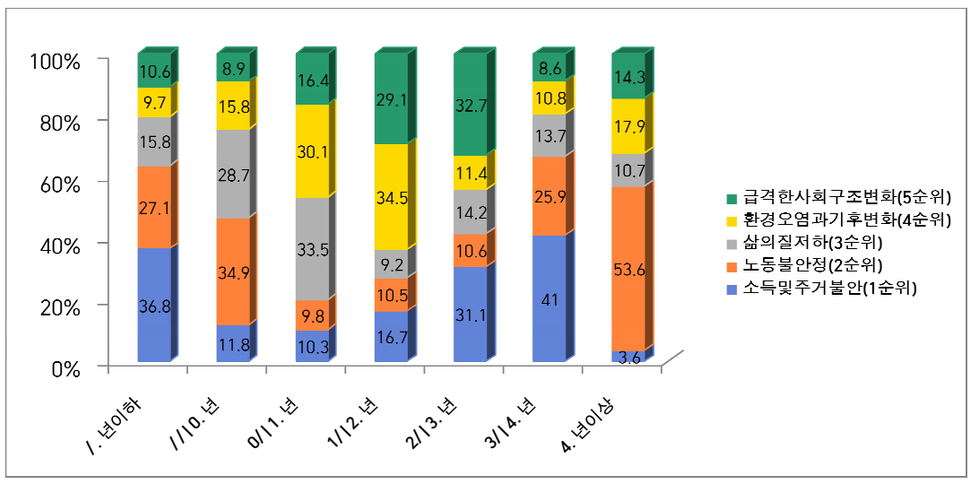
- 거주기간별 사회적경제(조직)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지역문제에 있어서는, "소득 및 주거불안"이 30.3%(n=2,16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동 불안정'이 23.9%(n=1,711), '삶의 질 저하'13.4%(n=956)의 순서임.

〈표 50〉 거주기간별 - 사회적경제가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역문제(1~5순위)

		10년이하	11~20년	21~30년	31~40년	41~50년	51~60년	60년이상	전체
소득및주거불안 (1순위)	N	916	560	339	180	83	57	30	2,165
	%	36.8	34.9	33.5	34.5	32.7	41.0	53.6	35.6
노동불안정(2순위)	N	673	460	305	152	79	36	6	1,711
	%	27.1	28.7	30.1	29.1	31.1	25.9	10.7	28.2
삶의질저하(3순위)	N	393	253	166	87	27	19	10	955
	%	15.8	15.8	16.4	16.7	10.6	13.7	17.9	15.7
환경오염과기후 변화(4순위)	N	241	142	104	55	36	15	8	601
	%	9.7	8.9	10.3	10.5	14.2	10.8	14.3	9.9
급격한사회구조 변화(5순위)	N	263	189	99	48	29	12	2	642
	%	10.6	11.8	9.8	9.2	11.4	8.6	3.6	10.6
전체	N	2,486	1,604	1,013	522	254	139	56	6,07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 1 순위 ●제 2 순위 ●제 3 순위 ●제 4 순위 ●제 5 순위

x^2 = 39.890, df = 24, p 〈.05



○ 「가구형태」-「사회적경제(조직)이 해결을 지향할 지역 사회문제(1~5순위)」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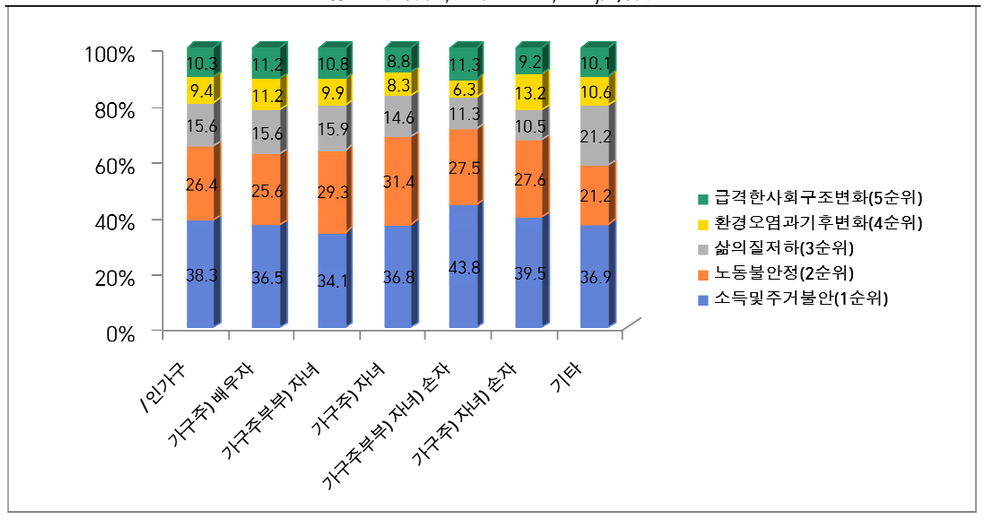
- 가구형태별 사회적경제(조직)이 해결을 지향할 지역 사회문제(1~5순위)를 보면, 모든 형태에서 "소득 및 주거불안"이 1순위이며, "노동 불안정"이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남.
- 가구형태와 해결을 지향할 지역 사회문제(1~5순위)와의 관계는 통계적 의미는 없음.

〈표 51〉 가구형태별-사회적경제가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역문제(1~5순위)

		1인가구	가구주+배우자	가구주부부+자녀	가구주+자녀	가구주부부+자녀+손자	가구주+자녀+손자	기타	전체
소득및주거불안(1순위)	N	309	383	1090	239	35	30	80	2,166
	%	38.3	36.5	34.1	36.8	43.8	39.5	36.9	35.6
노동불안정(2순위)	N	213	268	937	204	22	21	46	1,711
	%	26.4	25.6	29.3	31.4	27.5	27.6	21.2	28.2
삶의질저하(3순위)	N	126	163	509	95	9	8	46	956
	%	15.6	15.6	15.9	14.6	11.3	10.5	21.2	15.7
환경오염과기후변화(4순위)	N	76	117	316	54	5	10	23	601
	%	9.4	11.2	9.9	8.3	6.3	13.2	10.6	9.9
급격한사회구조변화(5순위)	N	83	117	347	57	9	7	22	642
	%	10.3	11.2	10.8	8.8	11.3	9.2	10.1	10.6
전체	N	807	1,048	3,199	649	80	76	217	6,07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 1 순위 ●제 2 순위 ●제 3 순위 ●제 4 순위 ●제 5 순위

x^2 = 32.604, df = 24, p ⟩.05



○ 「연령대」-「사회적경제(조직)이 해결을 지향할 지역 사회문제(1~5순위)」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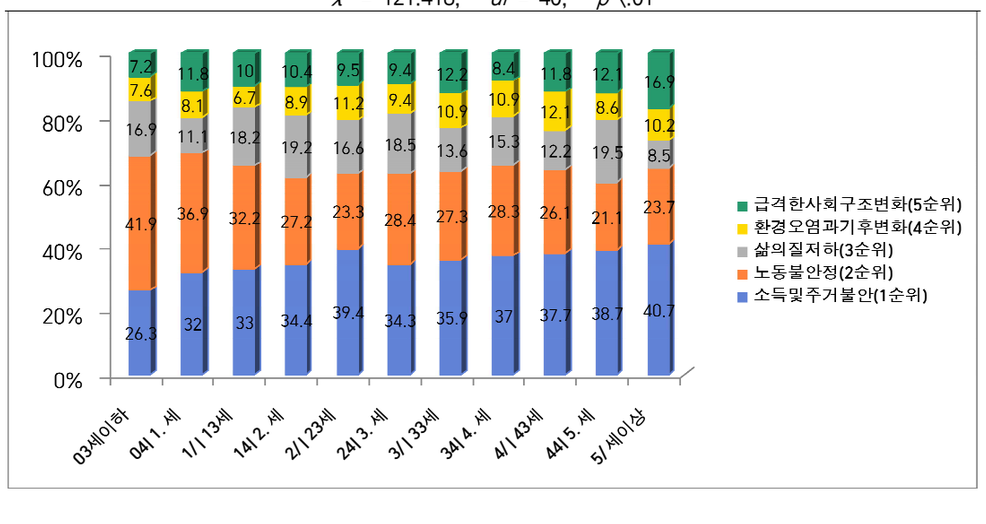
- 연령대별 사회적경제(조직)이 해결을 지향할 지역 사회문제(1~5순위)를 보면, '25세이하'와 '26~30세' 즉 청년층에서는 "노동 불안정"이 1순위이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소득 및 주거불안"이 1순위이며, "노동 불안정"이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은 청년세대들의 취창업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이, 사회적경제가 해결을 우선 지향해야 할 사회문제로 "노동 불안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표 52〉 연령대별 - 사회적경제가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역문제(1~5순위)

		25세이하	26-30세	31-35세	36-40세	41-45세	46-50세	51-55세	56-60세	61-65세	66-70세	71세이상	전체
소득및주거불안(1순위)	N	62	138	158	186	240	269	358	268	296	167	24	2,166
	%	26.3	32.0	33.0	34.4	39.4	34.3	35.9	37.0	37.7	38.7	40.7	35.6
노동불안정(2순위)	N	99	159	154	147	142	223	272	205	205	91	14	1,711
	%	41.9	36.9	32.2	27.2	23.3	28.4	27.3	28.3	26.1	21.1	23.7	28.2
삶의질저하(3순위)	N	40	48	87	104	101	145	135	111	96	84	5	956
	%	16.9	11.1	18.2	19.2	16.6	18.5	13.6	15.3	12.2	19.5	8.5	15.7
환경오염과기후변화(4순위)	N	18	35	32	48	68	74	109	79	95	37	6	601
	%	7.6	8.1	6.7	8.9	11.2	9.4	10.9	10.9	12.1	8.6	10.2	9.9
급격한사회구조변화(5순위)	N	17	51	48	56	58	74	122	61	93	52	10	642
	%	7.2	11.8	10.0	10.4	9.5	9.4	12.2	8.4	11.8	12.1	16.9	10.6
전체	N	236	431	479	541	609	785	996	724	785	431	59	6,07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 1 순위 ●제 2 순위 ●제 3 순위 ●제 4 순위 ●제 5 순위

x^2 = 121.418, df = 40, p ⟨.01



(3) 「거주지역」「거주기간」「가구형태」「연령(연령대)」-「삶의 질 평균(3문항)」 간의 상관관계 분석

■ 주관적 삶의 질 평균(3문항) : 「(1)자신의 행복점수 자평가 정도」,「(2)지역(마을)의 살기 좋은 곳 정도 평가」,「(3)지역(마을)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 정도」

〈표 53〉 주관적 삶의 질 평가 평균(3문항)

(범위: 0.00~10.00)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행복 점수 자평가 정도	31,519	0.00	10.00	6.89	1.828
(2)지역(마을)의 살기 좋은 곳 정도 평가	31,519	0.00	10.00	6.67	1.851
(3)지역(마을)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 정도	31,519	0.00	10.00	6.55	1.816
전체 평균	31,519	0.00	10.00	6.70	1.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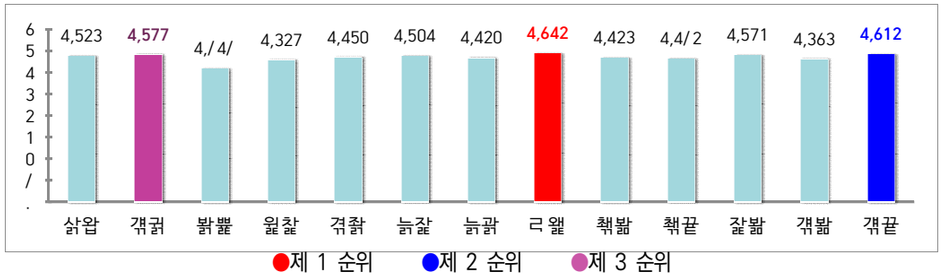
○ 「거주지역」-「삶의 질 평균(3문항)」

- 거주지역별 삶의 질 평균값을 보면, '강원'이 6.86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남'6.834, '경기'가 6.799의 순서임.

〈표 54〉 거주지역 - 삶의 질 평균(3문항)

(범위: 0.000~10.000)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전체
MEAN	6.745	6.799	6.161	6.549	6.672	6.726	6.642	6.864	6.645	6.614	6.793	6.585	6.834	6.703
N	6,216	4,500	1,000	2,000	2,500	2,298	4,000	1,500	500	1,000	2,500	1,505	2,000	31,519
SD.	1.593	1.626	1.702	1.682	1.524	1.624	1.589	1.596	1.438	1.548	1.667	1.666	1.539	1.611



● 「거주지역」-「삶의 질 평균(3문항)」 평균값 차이 검증

- 거주지역과 삶의 질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01)으로 나타남.

〈표 55〉 거주지역 - 삶의 질 평균(3문항)(One-way An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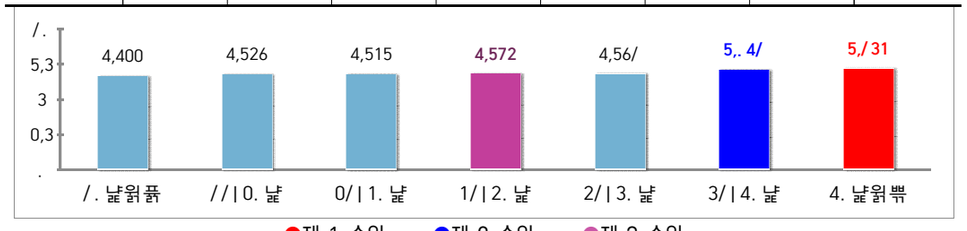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536.196	12	44.683	17.322	.000
Within Groups	81270.577	3,1506	2.580		
Total	81806.773	3,1518			

○ 「거주기간」-「삶의 질 평균(3문항)」

- 거주기간별 삶의 질 평균값을 보면, '60년이상'거주자가 7.153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60년'7.061, '31~40년'6.794의 순서임.

〈표 56〉 거주기간 - 삶의 질 평균(3문항)

	10년이하	11~20년	21~30년	31~40년	41~50년	51~60년	60년이상	전체
MEAN	6.622	6.748	6.737	6.794	6.781	7.061	7.153	6.703
N	13,897	8,177	5,394	2,200	1,070	566	209	31,513
SD.	1.621	1.584	1.611	1.607	1.570	1.675	1.721	1.611



● 「거주기간」-「삶의 질 평균(3문항)」 평균값 차이 검증

- 거주기간별 삶의 질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01)으로 나타남.

〈표 57〉「거주기간」-「삶의 질 평균(3문항)」(One-way An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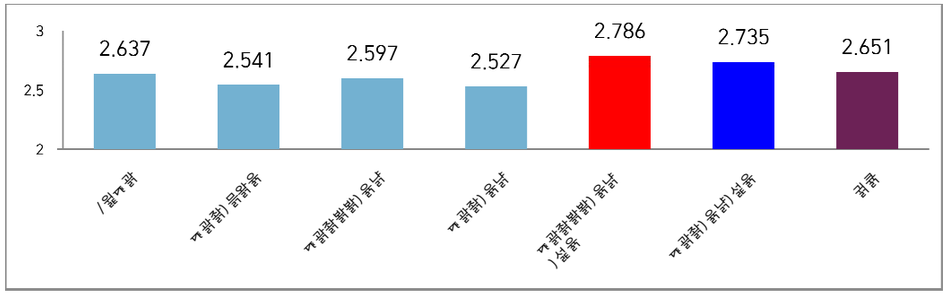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252.475	6	42.079	16.258	.000
Within Groups	81543.575	31,506	2.588		
Total	81796.050	31,512			

○ 「가구형태」-「삶의 질(3문항)」평균

- 가구형태별 삶의 질 평균값을 보면, '가구주 부부+자녀+손주'가 2.786으로 가장 높고, '가주주+자녀+손주'가 2.735, '기타'가 2.651의 순서로, 대가족일수록 삶의 질에 대한 만족이 높으로 것으로 나타남.

〈표 58〉 가구형태 - 삶의 질 평균(3문항) (범위: 0.000~4.000)

	1인가구	가구주+배우자	가구주부부+자녀	가구주+자녀	가구주부부+자녀+손자	가구주+자녀+손자	기타	합계
Mean	2.637	2.541	2.597	2.527	2.786	2.735	2.651	2.591
N	932	1215	3826	748	96	81	248	7146
SD.	.773	.809	.746	.809	.794	.671	.770	.769



● 「가구형태」-「삶의 질(3문항)」평균값 차이 검증

- 가구형태별 삶의 질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01)으로 나타남.

〈표 59〉 가구형태 - 삶의 질 평균(3문항)(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14.537	6	2.423	4.105	.000
Within Groups	4213.792	7,139	.590		
Total	4228.329	7,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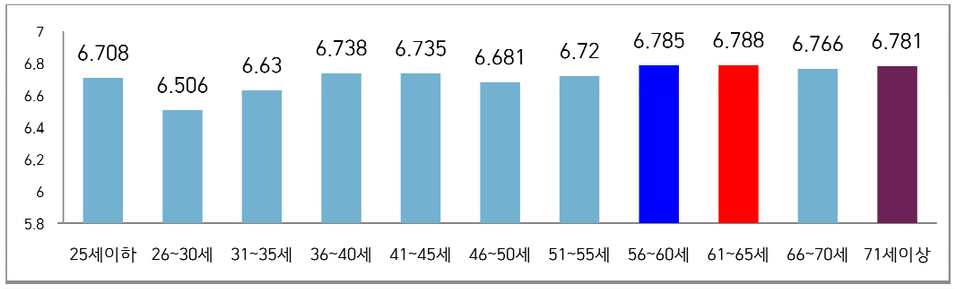
○ 「연령(연령대)」-「삶의 질(3문항)」평균

- 연령대별 삶의 질 평균값을 보면, '61~65세'가 6.7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6~60세'6.785, '71세이상'6.781로서 노령층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0〉 연령대 - 삶의 질 평균(3문항)

(범위: 0.000~10.000)

	25세이하	26~30세	31~35세	36~40세	41~45세	46~50세	51~55세	56~60세	61~65세	66~70세	71세이상	전체
Mean	6.708	6.506	6.630	6.738	6.735	6.681	6.720	6.785	6.788	6.766	6.781	6.703
N	2,607	3,446	3,032	3,024	3,104	3,536	3,790	2,970	3,474	2,188	348	31,519
SD.	1.6234	1.6088	1.6002	1.6113	1.5792	1.5820	1.6036	1.6027	1.6344	1.6458	1.7322	1.6111



● 「연령대」-「삶의 질(3문항)」평균값 차이 검증

- 연령대별 삶의 질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01)으로 나타남.

〈표 61〉 연령대 - 삶의 질 평균(3문항)(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215.688	10	21.569	8.329	.000
Within Groups	81591.085	31,508	2.590		
Total	81806.773	31,518			

(4) 「거주지역」「거주기간」「가구형태」「연령(연령대)」-「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1):신뢰, (2):네트워크, (3):호혜적 규범」과의 상관관계

■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 전체(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평균값」

-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1)(2)(3)의 전체 평균은 1.764(범위: 0.000~4.000)임.

〈표 62〉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1)(2)(3)(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평균

(범위: 0.000~4.000)

	N	min.	max.	mean	SD.
사회적자본(1)신뢰	3,1519	.0	4.0	1.848	.5036
사회적자본(2)네트워크	3,1519	.0	4.0	1.390	.7630
사회적자본(3)호혜적규범	3,1519	.0	4.0	2.054	.6190
전체	3,1519	.0	4.0	1.764	.6205

● 「거주지역」-「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별(1신뢰, 2네트워크, 3호혜적 규범)」평균값 차이 검증

- 거주지역과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 전체(1)(2)(3)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01)으로 나타남.

〈표 64〉 거주지역 -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1신뢰) 평균값 차이(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19.935	12	1.661	6.564	.000
Within Groups	7974.153	31,506	.253		
Total	7994.088	31,518			

〈표 65〉 거주지역 -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2네트워크) 평균값 차이(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241.862	12	20.155	35.069	.000
Within Groups	18107.367	31,506	.575		
Total	18349.228	31,518			

〈표 66〉 거주지역 -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3호혜적 규범) 평균값 차이(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84.910	12	7.076	18.588	.000
Within Groups	11993.383	31,506	.381		
Total	12078.293	31,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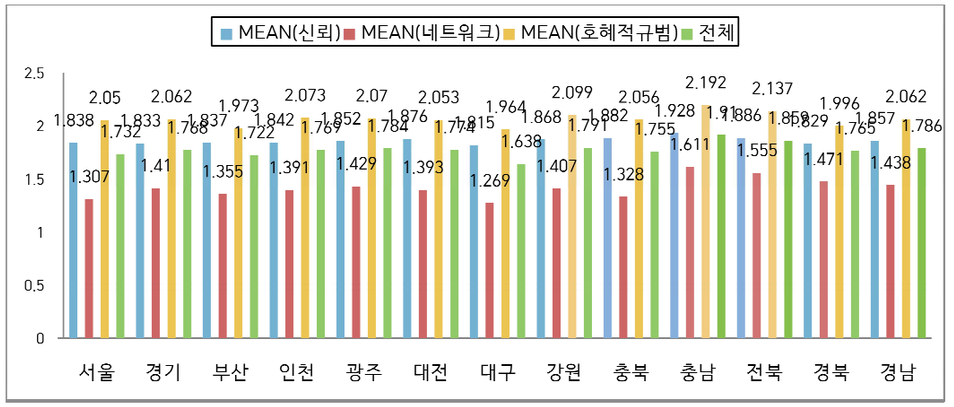
○ 「거주지역」-「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평균」

- 거주지역별 사회적자본 전체(1:신뢰, 2:네트워크, 3:호혜적 규범)의 평균값을 보면, "신뢰"는 '충남'1.928, '전북'1.886, '충북'1.882의 순이며, "네트워크"는 '충남' 이 1.611, '전북'1.555. '경북'1.417의 순이고, "호혜적 규범"의 경우에는 '충남'2.192, '전북'2.137, '강원'2.099의 순서임.

〈표 63〉 거주지역 -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평균값

(범위: 0.000~4.000)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전체
MEAN (신뢰)	1.838	1.833	1.837	1.842	1.852	1.876	1.815	1.868	1.882	1.928	1.886	1.829	1.857	1.848
MEAN (네트워크)	1.307	1.410	1.355	1.391	1.429	1.393	1.269	1.407	1.328	1.611	1.555	1.471	1.438	1.390
MEAN (호혜적규범)	2.050	2.062	1.973	2.073	2.070	2.053	1.964	2.099	2.056	2.192	2.137	1.996	2.062	2.054
전체	1.732	1.768	1.722	1.769	1.784	1.774	1.683	1.791	1.755	1.910	1.859	1.765	1.786	1.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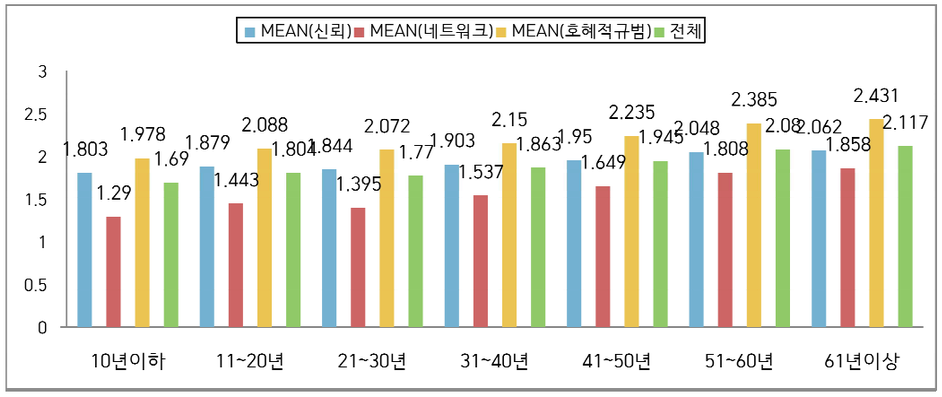
○ 「거주기간」-「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 거주기간별 사회적자본의 평균값은 (1), (2), (3) 모두가'61년이상'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51~60년', '41년~50년'의 순으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사회적자본의 구축정도가 높음.

〈표 67〉 거주기간 -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평균값

(범위: 0.000~4.000)

	10년이하	11~20년	21~30년	31~40년	41~50년	51~60년	61년이상
MEAN(신뢰)	1.803	1.879	1.844	1.903	1.950	2.048	2.062
MEAN(네트워크)	1.290	1.443	1.395	1.537	1.649	1.808	1.858
MEAN(호혜적규범)	1.978	2.088	2.072	2.150	2.235	2.385	2.431
전체	1.690	1.804	1.770	1.863	1.945	2.080	2.117



● 「거주기간」-「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1신뢰, 2네트워크, 3호혜적 규범)」평균값 차이 검증

- 거주기간과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 전체(1)(2)(3)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01)으로 나타남.

〈표 68〉 거주기간 -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1신뢰) 평균값 차이(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85.604	6	14.267	56.842	.000
Within Groups	7907.951	31,506	.251		
Total	7993.555	31,512			

〈표 69〉 거주기간 -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2네트워크) 평균값 차이(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425.882	6	70.980	124.779	.000
Within Groups	17922.214	31,506	.569		
Total	18348.097	31,512			

〈표 70〉 거주기간 -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3호혜적 규범) 평균값 차이(One-way An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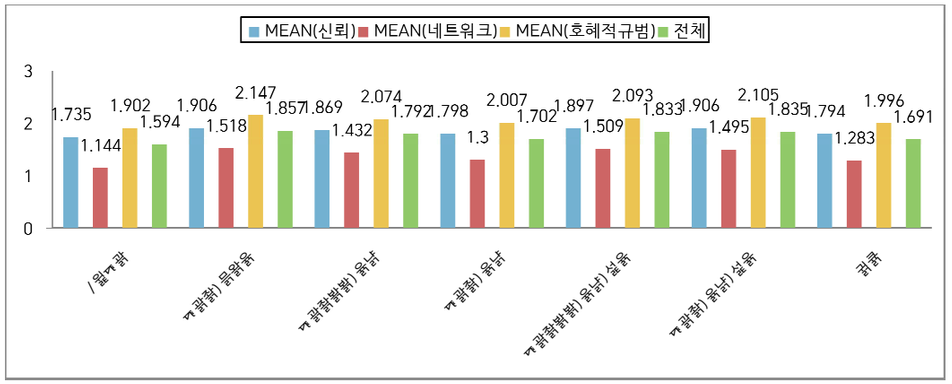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239.592	6	39.932	106.282	.000
Within Groups	11837.382	31,506	.376		
Total	12076.975	31,512			

○ 「가구형태」-「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1신뢰, 2네트워크, 3호혜적 규범) 평균」

- 가구형태별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1:신뢰, 2:네트워크, 3:호혜적 규범)의 평균값은 "신뢰"는 '가구주+배우자'와 '가구주+자녀+손자'가 1.906으로 가장 높고, "네트워크"는 '가구주+배우자'가, 그리고 "호혜적 규범"은 '가구주+배우자'형태 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71〉 가구형태 -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평균값
(범위: 0.000~4.000)

	1인가구	가구주+배우자	가구주부부+자녀	가구주+자녀	가구주부부+자녀+손자	가구주+자녀+손자	기타
MEAN(신뢰)	1.735	1.906	1.869	1.798	1.897	1.906	1.794
MEAN(네트워크)	1.144	1.518	1.432	1.300	1.509	1.495	1.283
MEAN(호혜적규범)	1.902	2.147	2.074	2.007	2.093	2.105	1.996
전체	1.594	1.857	1.792	1.702	1.833	1.835	1.691



●제 1 순위 ●제 2 순위 ●제 3 순위

● 「가구형태」-「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1:신뢰, 2:네트워크, 3:호혜적 규범)」평균값 차이 검증

- 가구형태와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 전체(1)(2)(3)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01)으로 나타남.

〈표 72〉 가구형태 -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신뢰) 평균값 차이(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93.529	6	15.588	62.174	.000
Within Groups	7900.559	31,512	.251		
Total	7994.088	31,518			

〈표 73〉 가구형태 -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평균값 차이(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423.131	6	70.522	123.969	.000
Within Groups	17926.098	31,512	.569		
Total	18349.228	31,518			

〈표 74〉 가구형태 -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호혜적 규범) 평균값 차이(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163.616	6	27.269	72.122	.000
Within Groups	11914.677	31,512	.378		
Total	12078.293	31,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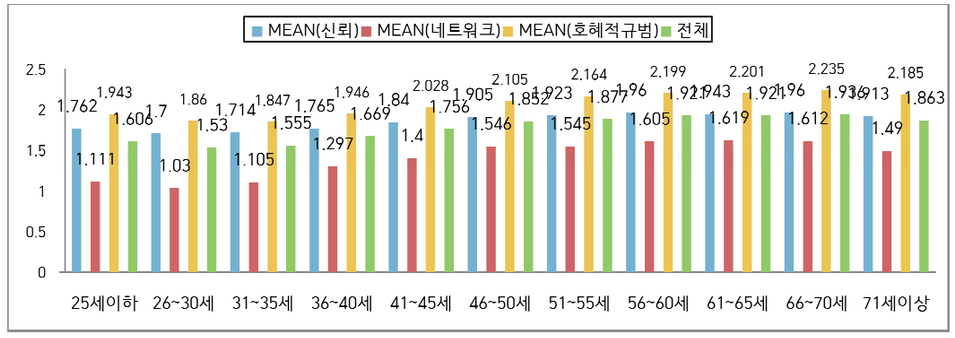
○ 「연령(연령대)」-「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평균」

- 「연령대별」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1:신뢰, 2:네트워크, 3:호혜적 규범)의 평균값은 "신뢰"는 '56~60세'와 '66~70세'가 1.960으로 가장 높고, "네트워크"는 '61~65세', 그리고 "호혜적 규범"은 '66~70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75〉 연령대 -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평균값

(범위: 0.000~4.000)

	25세이하	26~30세	31~35세	36~40세	41~45세	46~50세	51~55세	56~60세	61~65세	66~70세	71세이상
MEAN(신뢰)	1.762	1.700	1.714	1.765	1.840	1.905	1.923	1.960	1.943	1.960	1.913
MEAN(네트워크)	1.111	1.030	1.105	1.297	1.400	1.546	1.545	1.605	1.619	1.612	1.490
MEAN(호혜적규범)	1.943	1.860	1.847	1.946	2.028	2.105	2.164	2.199	2.201	2.235	2.185
전체	1.606	1.530	1.555	1.669	1.756	1.852	1.877	1.921	1.921	1.936	1.863



● 「연령(연령대)」-「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1신뢰, 2네트워크, 3호혜적 규범)」평균값 차이 검증

- 연령대와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 전체(1)(2)(3)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01)으로 나타남.

〈표 76〉 연령대 -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1신뢰) 평균값 차이(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300.840	10	30.084	123.210	.000
Within Groups	7693.248	31,508	.244		
Total	7994.088	31,518			

〈표 77〉 연령대 -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2네트워크) 평균값 차이(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1528.415	10	152.842	286.296	.000
Within Groups	16820.813	31,508	.534		
Total	18349.228	31,518			

〈표 78〉 연령대 -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3호혜적 규범) 평균값 차이(One-way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599.755	10	59.976	164.630	.000
Within Groups	11478.538	31,508	.364		
Total	12078.293	31,518			

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있어 「조직활동」,「조직강점」,「사회적 성과」,「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자본1(신뢰), 2(네트워크)」와의 관계

● 사회적경제(조직)에 있어「조직 활동기간」「조직 강점」「사회적 성과」「경제적 성과」-「사회적 자본(네트워크-신뢰)」간의 상관관계」

〈표 79〉「조직 활동기간」「조직 강점」「사회적 성과」「경제적 성과」-「사회적 자본(네트워크-신뢰)」간의 상관관계(r2)

	조직 활동기간	조직강점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자본1 (신뢰)	사회적자본2 (네트워크)
조직활동기간	1.000					
조직강점	-.127**	1.000				
사회적성과	.028	.416**	1.000			
경제적성과	.132****	.207**	.347**	1.000		
사회적자본1 (네트워크)	.044**	.307**	.429**	.231**	1.000	
사회적자본2 (신뢰)	.055**	.274**	.306**	.221**	.455**	1.000

** p <.01 * p <.05

(1) 사회적경제(조직)에 있어 사회적 자본1(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2(신뢰)와의 상관관계

- 사회적 자본 1(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조직 연계정도(문항 1):시, 군, 구청", "사회적경제조직 연계정도(문항 2): 문화재단, 주민조직, 비영리조직 등", "사회적경제조직 연계정도(문항 3): 공기업, 지역공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연계정도(문항 4):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4문항(5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구성됨.
- 사회적 자본 2(신뢰)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역 조직, 시민사회 및 행정기관이 협력하고 있다"는 믿음(거버넌스 문항 1)과, "이들 조직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 역할 수행 및 공동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식(거버넌스 문항 2)의 평균값으로 구성됨.

- 사회적 자본 1(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 2(신뢰)와의 상관관계(r2)는 0.455(p<.01)이며, 이것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의 타 조직, 시민사회,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수행을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 조직의 사회적 네트워크도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조직의 활동기간과 사회적 자본(1), (2)와의 상관관계

- 조직 활동기간(설립연도에서 현재까지)과 사회적 자본(1), (2)와의 상관관계 계수(r2)는 각각 0.044(p<.01)와 0.055(p<.01)로서, 이것은 조직의 활동기간이 길수록 사회적 자본(1), (2)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함. 즉 조직의 활동 기간이 길수록 그 조직이 지역사회에서의 타 기관, 조직과의 신뢰 관계가 강하고, 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줌.

(3) 조직 강점과 사회적 자본(1), (2)와의 상관관계

- 조직의 강점은, "이윤분배의 제한으로 사회적 목적에 집중할 수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내재적 동기부여로 직원들이 높은 생산성을 가질 수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모델을 기획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신뢰에 기반한 자원봉사나 기부 등 외부자원을 동원하기에 용이하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제품)을 제공하기 용이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다."의 6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6문항의 평균값을 측정하였음.
- 조직의 강점과 사회적 자본(1), (2)와의 상관관계 계수(r2)는 각각 0.307(p<.01)과 0.274(p<.01)로서, 이것은 자기 조직의 강점에 자평가가 높은 사회적경제 기업(조직)일수록 사회적 자본(1), (2)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함.

(4) 조직의 사회적 성과와 사회적 자본(1), (2)와의 상관관계

- 조직의 사회적 성과는 "제공하는 서비스 중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지역 창업활동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편이다.", "지역 소득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편이다.", "지역사회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편이다.",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편이다.", "지역사회 빈곤율 감소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편이다.",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편이다."의 7문항(5점 척도)의 평균값을 측정하였음.

- 조직 사회적 성과와 사회적 자본(1), (2)와의 상관관계 계수(r2)는 각각 0.429(p<.01)와 0.306(p<.01)로서, 이것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회적 성과가 높은 조직일수록 사회적 자본(1), (2)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함

(5) 조직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자본(1), (2)와의 상관관계

- 조직의 경제적 성과는, "전년대비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평균 총수입이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총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총 자산이 증가하였다."의 4문항의 평균값(5점 척도)을 측정하였음.
- 조직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자본(1), (2)와의 상관관계 계수(r2)는 각각 0.231(p<.01)과 0.221(p<.01)로서, 이것은 조직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자평가가 높을수록, 그 조직이 사회적 자본(1), (2)를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라. 지역주민에 있어 「지역공동체의식」「공동체활동」「지역의 혁신성 평가」「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평가」「삶의 질 평가」-「사회적 자본(신뢰-네트워크-호혜적 규범)」간의 상관관계」

〈표 80〉「지역의 혁신성평가」「지역사회적경제(조직) 평가」「삶의 질 평가」「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r2)

변수	사회혁신의식	사회문제기여, 해결노력정도 인식	삶의 질	사회적자본(1) 신뢰	사회적자본(2) 네트워크	사회적자본(3) 호혜적규범
사회혁신의식	1.000					
사회문제기여,해결노력정도	.213**	1.000				
삶의 질	.252**	.205**	1.000			
사회적자본(1) 신뢰	.336**	.264**	.348**	1.000		
사회적자본(2) 네트워크	.273**	.160**	.245**	.538**	1.000	
사회적자본(3) 호혜적규범	.385**	.332**	.315**	.484**	.499**	1.000

(1) 지역민의 사회적 자본(1), (2), (3)의 상관관계

○ 지역민의 사회적 자본(1): 신뢰 변수의 구성
- 이웃연계 2문항(5점 척도): "내가 아플 때 나는 이웃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내가 아플 때 이웃은 나의 아이들을 몇 시간 정도 돌봐줄 수 있다.(Q6_1,2)"
- 일반적 신뢰 1문항(5점 척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Q9)"
- 시민사회 단체 신뢰 정도"(Q2_1~15)의 15문항(5점 척도): "가족 신뢰 정도", "친척 신뢰 정도", "친구 신뢰 정도", "이웃 신뢰 정도", "처음 만나는 사람 신뢰 정도",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 신뢰 정도", "고향사람 신뢰 정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 신뢰 정도", "타향사람 신뢰 정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신뢰 정도", "정치인 신뢰 정도", "정부 부처 신뢰 정도", "지역 자치단체 신뢰 정도", "법원 신뢰 정도", "검찰 신뢰 정도", "경찰 신뢰 정도"의 평균값을 측정한 것임.

○ 지역민의 사회적 자본(2): 네트워크 변수의 구성
- 공동체 활동 15문항(2점 척도): "동창회/동창모임, 전우회 회원/조합원으로 참여", "종친회, 향우회 회원/조합원으로 참여", "노동조합 회원/조합원으로 참여", "직능단체 회원/조합원으로 참여", "정당 회원/조합원으로 참여", "친목회/친목계 회원/조합원으로 참여", "문화, 예술, 스포츠 동호회 회원/조합원으로 참여",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조합원으로 참여", "종교단체 회원/조합원으로 참여",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 로터리, 라이온스 회원/조합원으로 참여", "자원봉사단체 회원/조합원으로 참여",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마을모임 회원/조합원으로 참여",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주주로서 참여", "일반협동조합, 마을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어촌공동체 회사 조합원/주주로서 참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생협, 의료생협, 자활기업 조합원/주주로서 참여"(Q2_1~15)를 서스튼(Thurstone)척도로 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5점 척도로 변환, 측정함.
- 지역 연대감 2문항(5점 척도): "지역/마을내 이웃 사람들은 요즘 서로 잘 지내고 있는가", "지역/마을내 구성원은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는가"(Q3, Q4)의 평균값을 측정하여, 「모임 또는 조직활동(15문항)」과 「지역 연대감(2문항)」의 평균값으로 구성됨.

○ 지역민의 사회적 자본(3): 호혜적 규범의 변수 구성
- 지역 공동체 구성의식 5문항(5점 척도): "나와 우리지역(마을)의 일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와 우리지역(마을) 이웃들의 일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지역(마을)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지역(마을)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지역(마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Q7_1,2,3,4,5)의 평균값으로 구성됨.
- 자원봉사활동 3문항(5점 척도): "내가 속한 공동체나 이웃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돕는다.", "공동체 활동에 자원봉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난받거나 제재받을 것이다.(reverse)", "내가 속한 공동체나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공동체 활동에 공평하게 기여한다."(Q8_1,2,3)의 의 평균값으로 구성됨.

○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1): 신뢰, (2):네트워크, (3):호혜적 규범 간의 상관관계(r2)
- 「사회적자본(1): 신뢰 - 사회적자본(2): 네트워크」가 0.538(p<.01)
- 「사회적자본(1): 신뢰 - 사회적자본(3): 호혜적 규범」은 0.484(p<.01)
- 「사회적자본(2): 네트워크 - 사회적자본(3): 호혜적 규범」은 0.499(p<.01)
- 사회적자본(1), (2), (3) 즉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사회혁신 정도 - 사회적자본(1), (2), (3) 간의 상관관계(r2)

○ 지역주민의 사회혁신 의식의 변수 구성
- 사회혁신에 대한 생각 4문항(5점 척도): "우리지역은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 새로운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 대응하는 편이다.", "우리지역은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는 편이다.", "우리지역은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편이다", "우리지역은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해결책을 모색하여 대응하는 편이다."(Q14_1, 2, 3, 4)의 평균값으로 구성됨.

○ 지역주민의 사회혁신 의식과 사회적 자본(1): 신뢰, (2):네트워크, (3):호혜적 규범 간의 상관관계(r2)
- 지역주민의 사회혁신의식과 사회적자본(1), (2), (3) 간의 상관관계는 각 0.336(p<.01), 0.273(p<.01), 0.385(p<.01)로 나타남.

-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사회혁신 의식이 높을수록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의 사회적 자본의 구축정도도 높다는 것을 의미함.

(3) 사회문제 해결의 기여 인식과 사회적 자본(1): 신뢰, (2):네트워크, (3):호혜적 규범 간의 상관관계(r2)

○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기여 인식 변수 구성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2문항(5점 척도):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Q1-3, 1, 2)의 평균값으로 구성됨.

○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기여 인식과 사회적 자본(1): 신뢰, (2):네트워크, (3):호혜적 규범 간의 상관관계(r2)
-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기여 인식과 사회적자본(1), (2), (3) 간의 상관관계는 각 0.264(p<.01), 0.160(p<.01), 0.332(p<.01)로 나타남.
-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의 사회적 자본의 구축정도도 높다는 것을 의미함.

(4) 삶의 질 자평가와 사회적 자본(1): 신뢰, (2):네트워크, (3):호혜적 규범 간의 상관관계(r2)

○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자평가 변수 구성
- 주관적 삶의 질 3문항(10점 척도): "스스로 측정한 자신의 행복점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을)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정도",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을)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 정도"의 평균값으로 구성됨.

○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자평가와 사회적 자본(1): 신뢰, (2):네트워크, (3):호혜적 규범 간의 상관관계(r2)
-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자평가와 사회적자본(1), (2), (3) 간의 상관관계는 각 0.348(p<.01), 0.245(p<.01), 0.315(p<.01)로 나타남.
-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자평가가 높을수록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의 사회적 자본의 구축정도도 높다는 것을 의미함.

마. 「지역별」-「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주민의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 관계 분석

-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과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 호혜적 규범)의 차이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 81〉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 상관관계의 차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계 처리 및 결과 제시
■ 지역	■ 해당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 ■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	■ 평균값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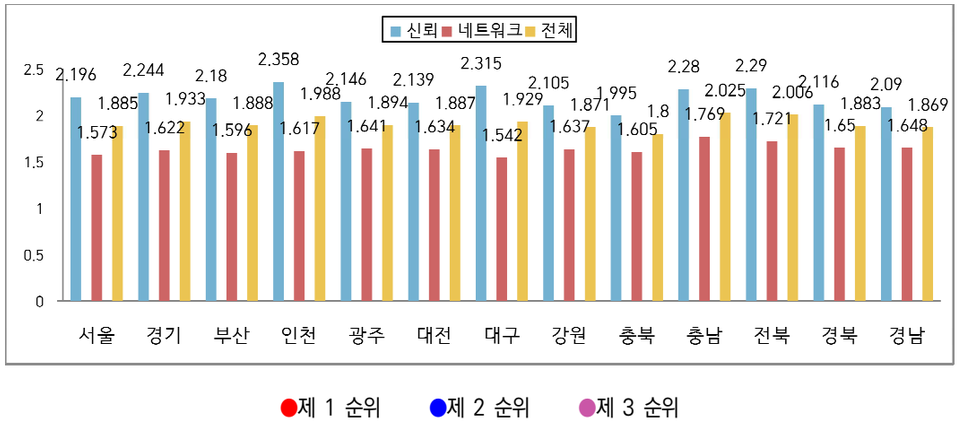
- 각 지역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서 상관계수(Pearson' r)를 도출하고, 그것을 각 지역별로 비교하여, 지역에 있어서의 사회적 자본의 구축과 인식의 차이를 규명한다.

○ 「지역별」-「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자본(전체)」,「주민의 사회적 자본(전체)」

- 조직의 사회적자본 전체의 경우에는 '인천'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구', '전북'의 순서임.
- 인천'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자본(1), (2) 즉 '신뢰'와 '네트워크'는 가장 높지만,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1), (2)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네트워크'는 매우 낮은 편임.
- 마찬가지로 '대구'의 경우에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자본(1), (2)는 높지만,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자본(1), (2)는 낮은 편임.
-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충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북', '경북'의 순임.
- '충남'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1), (2)는 가장 높고,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에도 사회적 자본(1), (2)는 높은 편임.
- 사회적 자본(1), (2) 둘다 높은 편에 속하는 지역은 '전북'으로, 조직의 사회적 자본(1), (2)는 3순위, 그리고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1), (2)는 2순위로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자본(1): 신뢰와 사회적 자본(2): 네트워크가 균형적으로 갖추어진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82〉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1)(2) 비교(범위: 0.000~4.000)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조직	신뢰	2.425	2.433	2.417	2.587	2.409	2.403	2.506	2.293	2.136	2.442	2.525	2.282	2.286
	네트워크	1.967	2.054	1.942	2.128	1.883	1.876	2.123	1.917	1.854	2.117	2.055	1.949	1.895
	계	2.196	2.244	2.18	2.358	2.146	2.139	2.315	2.105	1.995	2.280	2.290	2.116	2.090
지역주민	신뢰	1.838	1.833	1.837	1.842	1.852	1.876	1.815	1.868	1.882	1.928	1.886	1.829	1.857
	네트워크	1.307	1.41	1.355	1.391	1.429	1.393	1.269	1.407	1.328	1.611	1.555	1.471	1.438
	계	1.573	1.622	1.596	1.617	1.641	1.634	1.542	1.637	1.605	1.769	1.721	1.650	1.648



3. 인터뷰 조사 내용

가.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 인터뷰 내용 분석

〈표 83〉 인터뷰 대상자 목록

	성명	기관명	업종	소재지	일시
1	A	우렁이밥상협동조합	가공·제조업	대구 달서구	2021.07.07. 14:00~15.30
2	B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종합도소매	대구 동구	2021.06.29. 16:00~17.30
3	C	협동조합 농부장터	농산물도매업	대구 북구	2021.06.29. 13:00~14.30
4	D	㈜공감씨즈	숙박업	대구 중구	2021.06.23. 14:00~15.30

(1)우렁이밥상 협동조합

우렁이밥상 협동조합은 대구시 달서구 선원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의 주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이용할 수 있기 위해 마을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우렁이밥상협동조합은 2015년도에 달서구 최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두터웠다. 또한, 조합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마을 주민들이 서로 모여 지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잦고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었다.

"저희가 역사로 보면 2005년부터 동네 주민들이 와룡배움터를 쭉 하다가 2013년에 우렁이밥상이 나왔죠. [···] 처음에 우렁이밥상이 와룡배움터에 학부모들이 만든 거니까 중복이 많이 되어있죠. 그 때 마을 기업 만들 때 와룡배움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공동체가 없을까하는 게 음식점을 그러니까 길 건너편에 우리 어린이날 행사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짐 실어오기 불편하잖아. 음식 만들어가지고 실어 나르기 힘드니까 그래서 어디 없나했는데 공간쓰던 곳을 마침 나와 가지고 배움터를 저기로 선정하고 우렁이랑 행사하면 둘이 만나서 같이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2005년부터 마을 주민들은 아이들의 교육과 방과후 보충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주민들이 조금씩 참여하고 '와룡배움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곳은 수익을 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아이들의 교육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서로 적은 금액이라도 보태가며 배움터를 계속 운영하고자 했고, 그것이 먹거리로도 이어져 우렁이밥상협동조합 설립에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주목할 점은 주민들이 지역에 산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모여 문제해결을 위해 모임을 조직했다는 것이다. 와룡배움터의 오랜 운영은 오히려 경제적 이익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참여 주민들의 신뢰와 협동이 축적될 수 있는 주요한 토대가 되었다. 게다가 주민들 대부분의 특징으로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또한 배움터를 오랫동안 같이 운영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진 것도 주요했다. 이것은 우렁이밥상 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중요한 지역 네트워크(사회적 자본 1)와 지역주민들과의 신뢰관계(사회적 자본 2)가 잘 구축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랜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두터운 신뢰와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은 이후 우렁이밥상협동조합으로 이익을 추구하였을 때에도 쉽게 와해될 수 없었다. 주민들은 우렁이밥상 협동조합을 운영하게 되면서 조합에 대한 모든 결정을 조합원들과의 대화와 토론 그리고 합의를 기반으로 했다. 이것 역시 조합원인 지역주민들의 호혜적 규범(사회적 자본 3)이 잘 작용하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런 사회적 자본(1), (2), (3)이 잘 구축되어있어서 우렁이밥상협동조합은 마을기업으로서 오래 유지되어온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렁이밥상협동조합과 와룡배움터를 오래 운영하면서 조합원들은 인근 지역의 여러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이 서로 협력하고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가 주민들하고 벌써 15년 이상을 같이 있었어요. 바뀌신 분들도 있지만 안 바뀌신 분들은 15년 이상 같이 있었거든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튤립을 어느 축제 때 못 나눠줘가지고 신안에서 대구 사회적경제협의회로 보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마을 공동체 대구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그걸 받았는데 이제 동구에도 나누고 거점으로 나눠줬고 우리 쪽으로 나눴는데 상가 분들 힘내라고 대표님하고 쫙 다니면서 나눠드렸죠 또 뭘 이렇게 그러시죠. 할머니 나눠드리고 보고 기운내시라고 저쪽에서 보내주셨다고 꽃다발도 드리고 튤립도 드리고, [···] 어린이날 행사할 때는 저희들 요 밑에 어떤 미용실 원장

님은 아이들 머리 깎는 애들이 그 날 어린이날 행사 때는 무료로 20명까지 머리를 깎아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많이 응원해주셔요. "

지속적인 행사 개최는 마을의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오게 하였고, 나아가 조합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의 자원봉사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우렁이와 와룡배움터 등의 협동조합은 일회용 쓰레기 낭비를 줄이고자 행사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들의 개인 접시사용을 유도하였다. 이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신뢰가 확산됨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여겨진다. 또한, 인근 지역의 협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한 행사 구축은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렁이밥상협동조합에서 나타난 지역성과 사회자본과의 관계는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뢰와 네트워크, 협력 등의 역량을 확산시키는 데에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활동, 모임 구성, 오랜 기간 활동, 지속적인 네트워크 조직 등이었다. 우렁이밥상 협동조합의 모델이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에도 이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렁이밥상 협동조합의 사례는 사회적 자본의 확장을 논의하기에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2)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은 대구 동구 도평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56개 법인과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물품구매지원제도 등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유통채널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과 협력을 해서 과시적인 성과모델을 만들어라는 것인데 특정한 공공기관이 지역과 협력하려고 하면 지역을 알아야 해요.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해요. 그들과 함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함께 만들어 내서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공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이제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서 우리지역이 필요하는 실질수요를 확인하고 지역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역의 소외된 곳 지역의 어렵다고 하는 소위말하는 취약계층 이런 사람을 두루두루 돌아보는 역할들을 공

공이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가 전달체계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돌아본다는 것은 실제로 돈을 쓰는 행위로 나타나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그 지점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죠. 어떻게 역할을 할까 사회적 경제 생산하는 제품의 서비스를 직접 매입해서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수요자들. 여기서 말하는 독거노인이나 다문화가정 뭐생각보다 이런 세대가 많다보니까 이들의 속사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기초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대상자도 있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역할에 일선에 우리가 있는 거죠"

대구 사회적기업 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에 판로개척과 제품수요 문제를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공구매지원기관 활동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흥미롭지만, 더욱 흥미로운 점은 대구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신뢰,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만 폐쇄적으로 사회적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연계하는 점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무한상사 사무실 근처에 있는 독거노인 대상으로 우리가 생필품을 별도로 제공한 적이 있어요. 이건 왜 그랬냐면 이걸 우리가 나가다 보니까 폐지줍는 어르신이 많은 거야 그래서 직원들이랑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도울 수 없냐 이러더라고 [···] 리스트 받아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물품을 다 제공했죠. 근데 우리가 했는지는 받았는 분들은 모를거예요. 우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런 형태의 접촉점. 말고 이제 일반 지역주민들하고의 접근은 다음 달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건이 하나 있기는 한데 마을 주민들이랑 만나는 장이 하나 필요해요. 사실 뭐 커피도 한잔 해야 되고 고기도 한 번 구워먹어야 되고 서로를 알아야 그 다음을 할 수 있으니까 또 마을 공동체의 사업을 만들어내는 또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이 인근에 그 분들에 현장에 가 가지고 마을분들이랑 만나는 시간들을 다음 달부터 가지려고 해요. [···] 그 분들이 주된 역할을 잘 하실거고 이 마을을 오랫동안 지내면서 이 마을의 모든 역사적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서 마을 축제도 하고 이랬거든요. 이제 그 분들을 우리가 서포트하는거죠 우리는 여기 주민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주민으로서 뭔가 역할하는데는 조금 안 맞고요. 다만 이 지역에 뭔가 필요하다면 우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아울러 앞서 언급된 우렁이밥상협동조합, 협동조합 농부장터과 같이 지역주민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나,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계한다. 그러나 지역민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뢰와 호혜적 규범을 구축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장이 부족하다는 점은, 무한상사 자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이나 「지자체 담당부서」가 이를 위한 지원(장소 제공, 경비, 지역민과의 연락망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협동조합 농부장터

협동조합 농부장터는 대구 북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의 농산물 생산자와 사회적 경제 조직 등과 연계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대구경북 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로컬푸드 기관 간의 정보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문화활동,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장 말고 여기 대구 북구 지역에 우리 직원들이 16명인데 북구에 거주하지 않는 우리 직원은 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의 인적 자원하고 관련되어있고 생산자들은 우리 생산의 특성 때문에 북구에도 극히 몇 명 있지만 가까운 대구 근교 지역에 지역적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가장 중심적으로 조합원들 1차적으로 우리가 205명 정도 되는 조합원 중에 소비자가 과반수거든요. 이 조합원들이 지역사회에 1차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특이하게 이용조합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법적으로 투자하고 우리하고 특별한 계약관계에 의해 이 매장을 이용하고 주고받는 이 이용조합원이 3000명인데 이 3000명은 거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원이라고 봐야하고 관계 맺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적 경제 혹은 공동체적 문화 공동체적 생활하는 다양한 마을활동으로서 이제 우리 지역에 그런 공동체 단위들이 있어요. 유형으로는 이런 마을 단체협의회도 있고 꼭 그런 협의회 틀이 아니더라도 마을에 어떤 이슈가 있거나 문화 활동이 있을 때는 연계해서 하는 이런 활동 단위들이 있습니다. [···]행사는 주로 조합원들이나 소비자들을 생각하는거죠. 이런 활동 단위들이 있고 또 먹거리 관련 사업을 통해서 특별한 마을의 단체나 아니면 많지 않은 아파트 단지의 조직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하고 먹거리를 매개로 한 관계 맺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농촌과의 교류활동을 하거나 체험 이런 지역 자산들의 연계 활동들이 있죠.

[···] 이런 활동들은 아주 일상적으로 하죠. 코로나가 없으면 예를 들어 단체로 농촌과의 교류활동을 하는 게 농촌체험도 있고 우리 생산자가 있는 농촌지역과 모니터닝 활동이나 여러 가지 생산자와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농촌지역의 봉사활동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하죠.

협동조합 농부장터는 이용조합원 제도를 두고 있는데 법적으로 투자하고 계약관계에 의해 협동조합 농부장터를 이용하는 이용조합원이 약 3,000명이다. 3,000명은 대부분 대구 북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있으며 그 외에 조합원은 205명 정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조합원이자 소비자인 지역주민이 농부장터와 연계하여 공동체 활동을 참여한다. 마을 단체 협의회, 문화 활동, 먹거리 관련 사업, 제로웨이스트 등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주민, 농부장터, 공동체 조직들이 서로 연계를 한다. 이러한 연계는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가 상호간의 네트워크, 호혜, 신뢰를 쌓는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꼭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거점을 두고 있는 이런데 하고 공동구매나 공동물품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또 그 사람들이 농촌 활동과 연계 할 수 있도록 한다던지 가장 큰 사회적 경제조직과 네트워크는 로컬푸드 활동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간의 별도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게 대구·경북 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입니다. 이 연합회 전에는 서로 일상적으로 정보도 주고받고 물류도 서로 지원하고 이러다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조금 체계를 갖추다가 작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연합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협동조합간의 네트워크가 가장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결합도가 높은 형태죠. 조직 간의 연합회니까 하나의 법인입니다. 이게 하나의 협동조합이죠.

이처럼 협동조합 농부장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자본(1), (2), (3)을 잘 갖추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원활한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 신뢰 그리고 호혜적 규범을 구축하는 것도 주목받을만한 점이지만, 또한 협동조합 농부장터는 지역민,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들과만 신뢰와 네트워크를 쌓는 것이 아니라, 일반 조직과도 관계를 맺음으로써 폐쇄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로컬푸드 활동을 하고있는 협동조합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대구·경북 지역 로컬푸드 이종 협동조합 연합회를 구성하였다. 이는 중요한 논의를 지니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조직이 상호간의 교류하면서 신뢰와 네트워크가 축적됨과 동시에 교류를 통해 지역 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연계함으로써 사회적자본의 축적이 또 하나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조직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4) ㈜공감씨즈

대구 동구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공감씨즈는 게스트하우스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취약계층을 돕고 있다. 또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구시 사회적경제 투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 *대구의 사회적기업이 교육 관련 사회적 기업이 타시도에 비해 많은 편이고요 문화 예술 관광 여과 관련 사회적기업이 많은 편입니다. 대구 사회적 기업의 장점이기도 하고 제조업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 공연같은 걸 엮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가 허브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 저희가 생각했을 때 청소년들이랑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좀 알리기 쉬운 기업들 나름 의미있는 활동. 에이즈 감염인을 돕는 카페라던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을 저희가 선별해서 코스를 짠 거죠.*

공감씨즈는 여행사라는 업종의 장점을 살리고, 인근 사회적 기업들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여행코스를 만들었다. 이는 대구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의 특성을 활용하고자 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대구지역엔 문화 예술관광, 교육, 에이즈 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을 소개하고 투어 코스에 포함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연계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었다.

특히, 공감씨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청년과 청소년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들의 인식 확장을 도모하고 있고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대구지역의 사회적 기업 간 연계를 활용할 수 있고 확장에 주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공감씨즈가 여행이라는 테마를 통해 기업 간 연계를 이끌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감씨즈 대표가 대구 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가능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감씨즈의 역량은 각각의 사회적 기업들이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여겨진다. 또한, 공감씨즈는 인근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외국인 유치를 돕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경주와 합천 등의 지역에 문화유산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대구지역을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대구지역의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데에 일조하게 되었다.

이처럼 공감씨즈의 활동은 인근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주변 사회적 기업이 하나의 관광코스와 같이 엮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공감씨즈는 업종 특성(관

광, 숙박, 문화 등)상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편이어서, 지역민들보다는 타 지역 조직과의 연계 및 신뢰와 네트워크를 확장이 중요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활동이 기업 자체의 활동과 이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계를 넘어서서 서로 연계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때, 신뢰와 협동에 의한 공유된 사회적 가치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인터뷰 내용 Text 분석

인터뷰 내용을 '텍스톰(Textom)[7]'패키지를 활용하여 계량화한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본 연구는 수량적 분석의 보충을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파악을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자본의 인식과 속성 등을 파악하고자 현재 사회적경제 영역에 활동하고 있는 조직 관계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텍스톰(Textom)'패키지를 통해 데이터 정제, 분석이 이뤄졌다.

(1) 주요 단어 빈도분석

본 연구에서 인터뷰 내용을 텍스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순 빈도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도출되었으며, 그 외에 '공간','사회','사회적경제', '활동', '마을', '지역', '생각'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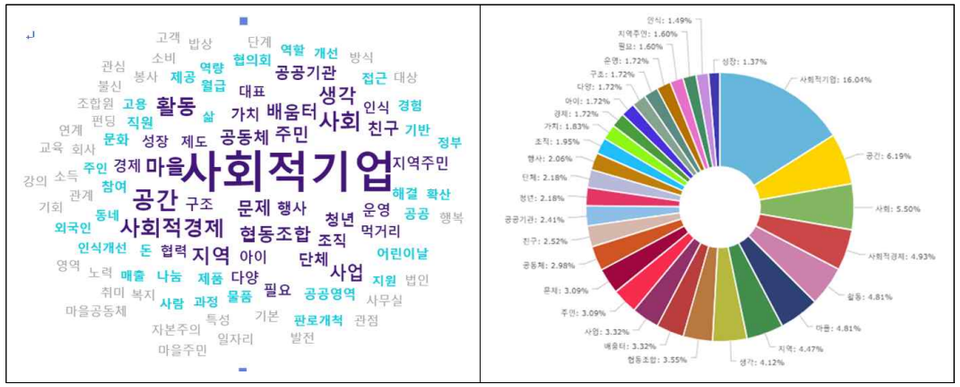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사회'가 단어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간'6.19%, '활동'4.81%, '마을'4.81%, '지역'4.47%는 사회적기업-공간-사회-사회적경제-활동-마을-지역으로 이어지는 단어 간 연관성이 있다.

또한 특정 단어의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을 통해 나타난 상위 30개 단어는 '사회적기업', '공간', '사회', '지역', '사회적경제', '마을', '협동조합', '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표 83〉과 같이 빈도분석으로 도출된 상위 30개 단어와 대부분 동일하고 유사한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빈도분포를 통해 나타난 단어들이 가중치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중요하게 나타난다.

7) 텍스톰(Textom)은 웹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서비스로 빅데이터 수집, 형태소 분석, 시각화에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TEXTOM 5.0 버전으로 이용했다.

〈그림 5〉 사회적경제 조직 관계자 인터뷰 텍스트 분석의 Wordcloud & Pie Graph



〈표 83〉 사회적경제 조직 관계자 인터뷰 상위 30개 단어 빈도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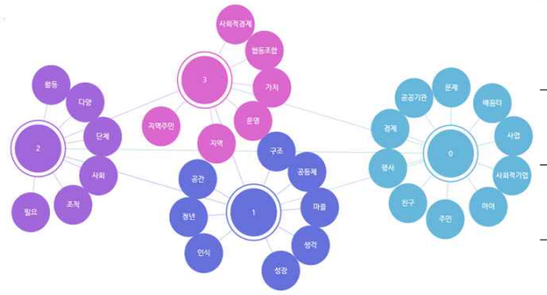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사회적기업	140	11	사업	29	21	가치	16
2	공간	54	12	주민	27	22	경제	15
3	사회	48	13	문제	27	23	아이	15
4	사회적경제	43	14	공동체	26	24	다양	15
5	활동	42	15	친구	22	25	구조	15
6	마을	42	16	공공기관	21	26	운영	15
7	지역	39	17	청년	19	27	필요	14
8	생각	36	18	단체	19	28	지역주민	14
9	협동조합	31	19	행사	18	29	인식	13
10	배움터	29	20	조직	17	30	성장	12

(2) CONCOR (Convergence of Iteration Correaltion)분석

상관계수를 이용해 단어 간의 관계를 그룹화하여 블록 모델링(blocking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고, 네 변수의 상관계수 값이 각 1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 조직 관계자들이 사회적자본에 대한 생각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G0은 '사회적기업','공공기관,'문제','주민','경제'등 사회적경제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G1, G2는 사회적자본이 축적되기 위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G3은 '지역주민','운영','가치','협동조합','사회적경제'등으로 사회적자본이 동원되어 조직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요소로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림 6〉 담론분석 (1-mode)[8)]



구분	단어
G0	사회적기업, 아이, 주민, 친구, 행사, 경제, 공공기관, 문제, 배움터, 사업
G1	공간, 공동체, 마을, 생각, 성장, 구조, 인식, 청년
G2	활동, 다양, 단체, 사회, 조직, 필요
G3	지역주민, 지역, 운영, 가치,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3) 의미연결망 분석

네트워크 내의 연결 관계를 시각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N-GRAM 네트워크 그래프를 실시하였다. 각 단어끼리의 발생빈도 분석결과 마을/사회적기업(14), 사회/경제(9), 어린이날/행사(9),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9), 사회/협동조합(5), 다양/공동체(4), 경제/조직(4), 마을/주민(4), 인식/개선(4)의 관계도가 상위 9순위로 나타났다. 결과는 〈그림 7〉과 〈표 85〉와 같다.

〈그림 7〉 사회적경제 조직 관계자 인터뷰 텍스트 분석의 N-GRAM[9)] 네트워크

〈표 84〉 단어 간 공출현 빈도

순위	단어		단어	빈도
1	{마을}	-	{사회적기업}	14
2	{사회}	-	{경제}	9
3	{어린이날}	-	{행사}	9
4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	9
5	{사회}	-	{협동조합}	5
6	{다양}	-	{공동체}	4
7	{경제}	-	{조직}	4
8	{마을}	-	{주민}	4
9	{인식}	-	{개선}	4

8) 1-Mode는 단어 간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의 CONCOR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N-Gram 은 n개 연결된 두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다.

Ⅴ. 연구결과

1. 통계분석 결과 및 해석

가.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역」「활동기간」「유형」「업종」-「사회문제 인식」「조직이 지향하는 지역문제」「조직강점」「사회적자본(1), (2)」와의 관계

■ 「지역」「활동기간」「유형」「업종」-「사회문제 인식」

- 「조직이 생각하는 지역의 사회문제」에 있어서는, "소득 및 주거불안"이 33.3%(n=1,675), "노동불안정"이 18.9%(n=953), "삶의 질 저하"가 13.5%(n=677)의 순서임.
- 「지역별」로 보면,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소득 및 주거불안"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생각하고 있음.(χ2=256.189, df=120, p<.01)
- 조직의 「활동기간별」로는, '5년이하'부터 '31년이상'모두가 "소득 및 주거불안"을 지역의 사회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노동 불안정"이 그 다음이며, 다만 '31년 이상'의 경우에는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를 지역의 사회문제 2순위로 생각하고 있음.(χ2=372.135, df=60, p<.01)
- 조직의 「유형별」 지역 사회문제 인식에서도 모든 유형에서 "소득 및 주거불안"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동 불안정", "삶의 질 저하"의 순서임.

■ 「지역」「활동기간」「유형」「업종」-「조직이 지향하는 지역문제」

- 「조직이 해결을 지향하는 지역문제」에 있어서는, "소득 및 주거불안"이 26.3%(n=1,323), "노동 불안정"이 22.2%(n=1,117), "삶의 질 저하"가 18.3%(n=918)의 순서임.
- 「지역별」로 보면, '인천','광주','충남','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소득 및 주거불안"의 해결을 조직이 지향하는 지역문제로 생각하고 있음. 다른 지역은 모두 "소득 및 주거불안"해결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남.(χ2=256.189, df=120, p<.01)

- 「활동기간별」로는, '11~15년', '6~10년','5년이하'는 "노동 불안정"을 조직이 지향하는 지역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16년'이상의 경우에는 "소득 및 주거불안"을 해결을 지향하는 지역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χ2=489.480, df=60, p<.01) 즉 조직의 활동기간이 대체로 짧은 조직은 "소득 및 주거불안"보다는 "노동 불안정"을 우선시하며, 긴 조직은 "소득 및 주거불안"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조직 역사가 짧은 조직일수록 '고용 불안정'이라는 최근의 상황에 더 민감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조직유형별」로는 '협동조합 등'은 "소득 및 주거불안"을, '사회적 기업 등'은 "노동 불안정"을, 그리고 '복합유형(조합+기업 등)'은 "삶의 질 저하"를 조직이 지향하는 우선적인 지역문제로 인식하고 있음.(χ2=89.214, df=20, p<.01)사회적 기업이 "노동 불안정"을 우선적인 해결지향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사회적 기업의 활동기간이 짧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됨.
- 「업종 별」로는, 조직의 업종 성격에 따라 해결을 지향하는 지역문제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임. '제조업','숙박 음식점업','과학기술 서비스업'등 고용이 불안정한 업종은 "노동 불안정"을,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은 "교육 불평등"을,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등 서비스 관련 업종은 "삶의 질 저하"의 해결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남.(χ2=1469.809, df = 140, p<.01)

■ 「지역」「활동기간」「유형」「업종」-「조직강점」

- 「지역별」 조직 강점에 대한 조직 자평가(6문항)의 평균값은 전체 2.647(범위: 0.000~4.000)으로서, '경북'이 2.83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충남'2.686, '경기'2.684의 순서임.(p <.01)

■ 「지역」「활동기간」「유형」「업종」-「사회적자본(1): 네트워크」

- 조직의 사회적 자본(1): 네트워크는 '타 조직과의 연계정도(4문항)'에 대한 평균값으로 변환하여 측정하였고, 전체 평균은 4.659(범위: 0.000~10.000)임.
- 「지역별」로는 '인천'이 5.3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구'5.308, '충남'5.293의 순서임. 대체로 인구규모가 적은 지역일수록 "네트워크: 타 기관, 조직과의 연계정도"가 낮지만, 의외로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서울'의 네트워크 평균값이

낮게 나타남.(p 〈.01)

- 「활동기간별」로는 '16~20년'이 5.2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1~15년','31년 이상'의 순서이며, 대체로 활동기간이 짧을수록 네트워크 수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p 〈.01)
- 「조직 유형별」로 사회적 자본(1):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 등'이 5.3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복합유형(조합+기업)'5.282, '협동조합 등'이 4.670의 순서임.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 상대적으로 복합유형이나 협동조합보다 "타 기관, 조직과의 협력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조직 유형별 사회적자본(1):네트워크 평균값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 〈.01)으로 나타남.
- 「조직 업종별」로는 '정보 통신업'의 사회적 자본(1):네트워크의 평균값이 가장 큰데 이것은 업종의 성격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다음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5.256, '건설업'5.202의 순서임. 조직 주요업종별 사회적 자본(1):네트워크 평균값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 〈.01)으로 나타남.

■ 「지역」「활동기간」「유형」「업종」-「사회적자본(2): 신뢰」

- 조직의 사회적 자본(2): 신뢰는 '타 조직과의 협력이나 공동사업 정도(2문항)'에 대한 평균값으로 변환하여 측정하였고, 전체 평균은 2.421(범위: 0.000~4.000)임.
- 「지역별」로는 '인천'이 2.5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북'2.525, '대구'2.506의 순서임. '인천'의 경우 사회적 자본(1): 네트워크도 가장 높았고, '대구'역시 사회적자본(1)의 수치는 높은 편으로서, 사회적 자본(1)과 (2) 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p 〈.01)
- 「활동기간별」로는 '26~30년'이 2.6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10년이상'2.523'의 순서로서, 대체로 활동기간이 길수록 신뢰 수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p 〈.01)
- 「조직 유형별」로 사회적 자본(2):신뢰 평균값도, 사회적 자본(1)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 등'이 2.5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것 역시 사회적자본(1):네트워크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담됨.(p 〈.01)
- 「조직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의 사회적 자본(2):신뢰의 평균값이 2.563으

로 가장 큰데, 이것 역시 업종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497의 순서임.(p 〈.01)

나. 지역주민의 「거주지역」「거주기간」「가구형태」「연령대」-「사회적기업 인식정도」「사회적 문제 인식」「사회적자본(1)네트워크: 조직활동 참여 수, 지역 연대감」「사회적자본(2) 신뢰: 이웃과의 연계, 신뢰」「사회적자본(3)호혜적 규범: 구성원 의식, 활동내용」「삶의 질」과의 관계

■ 「거주지역」「거주기간」「가구형태」「연령대」-「사회적기업 인식정도」

- 「거주지역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정도(평가: 2문항)의 평균값을 보면, '경남'이 2.6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충남'2.662, '서울'2.661의 순서이며,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 〈.01)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정도(평가: 2문항)의 평균값을 보면, '31~40년'이 2.6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0년이상'2.605, '10년이하'가 2.592의 순서이며, 거주기간별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p 〉.05)으로 나타남.
- 「가구형태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정도(평가: 2문항)의 평균값을 보면, '가구주 부부+자녀+손주'가 2.786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구주+자녀+손자'가 2.735, '기타'가 2.651의 순서임.(p 〈.01)
- 「연령대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정도(평가: 2문항)의 평균값을 보면, '25세 이하'가 2.67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1~55세'가 2.643, '46~50세'가 2.625의 순서임.(p 〈.01)

■ 「거주지역」「거주기간」「가구형태」「연령대」-「사회적 문제 인식」

- 사회적경제(조직)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지역문제에 있어서는, "소득 및 주거불안"이 30.3%(n=2,16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동 불안정'이 23.9%(n=1,711), '삶의 질 저하'13.4%(n=956)의 순서이며, 「거주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강원', '충북', '충남', '경북'에서는 "노동 불안정"이 제 1순위이며, '전북', '경남은 "소득 및 주거불안"이 제 1 순위인 것으로 나타남.(x2=163.984, df=48, p 〈.01)
- 「거주기간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지역문제에 있어서는, "소득 및 주거불안"

이 30.3%(n=2,16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동 불안정'이 23.9%(n=1,711), '삶의 질 저하'13.4%(n=956)의 순서임.(χ2=39.890, df=24, p 〈.05)

- 「가구형태별」 사회적경제(조직)이 해결을 지향할 지역 사회문제(1~5순위)를 보면, 모든 형태에서 "소득 및 주거불안"이 1순위이며, "노동 불안정"이 2순위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음.(χ2=32.604, df=24, p 〉.05)
- 「연령대별」로는, '25세이하'와 '26~30세' 즉 청년층에서는 "노동 불안정"이 1순위이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소득 및 주거불안"이 1순위이며, "노동 불안정"이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남.(χ2=121.418, df=40, p 〈.01) 이것은 청년세대들의 취창업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이, 사회적경제가 해결을 우선 지향해야 할 사회문제로 "노동 불안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거주지역」「거주기간」「가구형태」「연령대」-「사회적자본(1)신뢰」「사회적자본(2)네트워크」「사회적자본(3)호혜적 규범」

-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1)(2)(3)의 전체 평균은 1.764(범위: 0.000~4.000)로서, 「거주지역별」 사회적자본(1:신뢰, 2:네트워크, 3:호혜적 규범)의 평균값을 보면, "신뢰"는 '충남'1.928, '전북'1.886, '충북'1.882의 순이며, "네트워크"는 '충남' 이 1.611, '전북'1.555. '경북'1.417의 순이고, "호혜적 규범"의 경우에는 '충남'2.192, '전북'2.137, '강원'2.099의 순서임.(p 〈.01)
- 「거주기간별」 사회적 자본의 평균값은 (1), (2), (3) 모두가'61년이상'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51~60년', '41년~50년'의 순으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사회적 자본의 구축정도가 높음.(p 〈.01)
- 「가구형태별」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1:신뢰, 2:네트워크, 3:호혜적 규범)의 평균값은 "신뢰"는 '가구주+배우자'와 '가구주+자녀+손자'가 1.906으로 가장 높고, "네트워크"는 '가구주+배우자'가, 그리고 "호혜적 규범"은 '가구주+배우자'형태 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p 〈.01)
- 「연령대별」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1:신뢰, 2:네트워크, 3:호혜적 규범)의 평균값은 "신뢰"는 '56~60세'와 '66~70세'가 1.960으로 가장 높고, "네트워크"는 '61~65세', 그리고 "호혜적 규범"은 '66~70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p 〈.01)

2. 인터뷰 분석 결과 및 해석

- 대구·경북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우렁이밥상협동조합','㈜공감씨즈','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농부장터'의 관계자(대표) 4명을 「비표준화된 인터뷰표」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규범)을 중심으로 인터뷰함.
- 각 4명의 대상자에 대한 인터뷰 내용 분석에서, 「지역」,「활동기간」,「유형」,「업종」과 「사회문제 인식」,「조직이 지향하는 지역문제」,「조직강점」,「사회적자본(1), (2)」와의 관계는 대체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개의 기관은 대체로 활동기간이 길었으며 "소득 및 주거불안"을 우선적 과제로 선정함. 다음으로"노동 불안정", "고용 불안정"등으로 나타남. 이는 주민들의 거주기간 길수록 소득과 주거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삶의 터전을 구축하고자 함을 알 수 있음.
- 각 기관이 속한「지역」과 사회적자본(1)과의 관계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른 특징을 나타냄. 사회적 기업은 대체로 "네트워크: 타기관, 조직과의 연계정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업보다는 낮은 것으로 진술함.
- 또한, 조직의「활동기간」이 길수록 「조직강점」,「사회적자본(1), (2)」이 높은 것으로 진술함. 이것은 조직의 활동을 기반으로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네트워크, 신뢰가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함.
- 기관별로 보면, 우렁이밥상 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중요한 지역 네트워크(사회적 자본 1)와 지역주민들과의 신뢰관계(사회적 자본 2), 호혜적 규범(사회적 자본 3)이 잘 작용하는 있다는 것을 보여줌. 이런 사회적 자본(1), (2), (3)이 잘 구축되어있어서 우렁이밥상협동조합은 마을기업으로서 오래 유지되어온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무한상사는 업종 특징(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물품구매지원제도 등) 상 타 기관, 조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역민들과의 연계는 부족함. 지역민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뢰와 호혜적 규범을 구축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장이 부족하다는 점은, 무한상사 자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이나 「지자체 담당부서」가 이를 위한 지원(장소 제공, 경비, 지역민과의 연락망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협동조합 농부장터는, 농산물 생산과 유통이라는 업종 특성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사회적 자본(1), (2), (3)을 잘 갖추어서 활용하고 있음.
- 공감씨즈는 업종 특성(관광, 숙박, 문화 등)상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편이어서, 타 지역 조직과의 연계 및 신뢰와 네트워크를 확장이 중요할 수 있음.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활동이 기업 자체의 활동과 이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계를 넘어서서 서로 연계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때, 신뢰와 협동에 의한 공유된 사회적 가치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인터뷰 대상자들은 전체적으로는, 기업과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과 그러한 소규모 모임을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협의회'나 '지역센터'의 역할이 확장될 필요성을 주장함.
- 이는 기업활동가와 주민들이 서로 모일 수 있는 '공간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의미함. 구체적으로는 업종별, 소지역별 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해 보임.

3.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가.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 사회적경제(조직)에 있어 사회적 자본(1), (2)의 중요성 확인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통계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조직의 「사회적 자본(1):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2):신뢰」는 조직의 「활동기간」,「조직강점」은 물론 「사회적 성과(자평가)」와 「경제적 성과(자평가)」에 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됨.
- 또한 인터뷰 조사에서도, 대상자들 모두가 조직에 있어 「사회적 자본(1):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2):신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또 그것의 구축과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함.

○ 지역주민에 있어 사회적 자본(1), (2), (3)의 중요성 확인
- 지역주민에 대한 통계분석에서도, 「사회적 자본(1):신뢰」와 「사회적 자본(2):네트워크」,「사회적 자본(3):호혜적 규범」은 주민의 「사회혁신의식」,「삶의 질」에 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됨.

나.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 구축에 대한 정책적 대안

○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자본의 특징
- 통계 및 인터뷰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자본(1), (2)의 구축 및 활용 정도에 있어서는, 특히 「지역별」,「업종별」,「활동기간별」로 그 구축 및 활용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두드러짐.
- 먼저 「지역별」차이를 보면, 수도권(서울, 경기)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인구규모가 비교적 적고, 행정구역이 넓은 지역(강원, 충북)이 낮은 경향을 보임.
- 「업종별」차이는, 업종의 특성 상 대외지향적인 업종(정보통신, 금융보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구축 및 활용정도가 높고, 생산 및 유통관련 업종(농어업, 운수·창고)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활동기간별」차이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활동기간이 짧은 조직일수록 사회적 자본의 구축과 활용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자본 구축과 활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

- 인구규모가 크고 대도시형 지역의 경우, 시민단체(자원봉사기관, 동우회 등)와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사회적경제-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사회적경제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지역주민들의 자치활동단체(바자회, 동우회, 자선단체 등)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도시 및 농어촌의 경우에는, 지역토착적인 사회적경제 활동(업종)에 맞추어서, 지역민들을 생산 및 소비활동에 동참하게 하는 「협동조합(생산, 소비자)」의 구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활동기간별」에 있어서, 기간이 짧은 조직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자본 구축과 활용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업종간 네트워크 구축」, 「기존 동 업종 중견 조직과의 자매결연」,「지역민과의 친근성 확대를 위한 홍보」등의 전략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함.

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 구축에 대한 정책적 대안

○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의 특징

- 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은 「거주지역별」,「거주기간별」,「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는, 농어업 중심 산업구조가 두드러진 지역(충남, 전북) 주민들의의 사회적 자본의 구축 정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대도시 지역(대구, 서울, 부산)이 낮을 것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는 당연히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길수록 구축정도가 높고, 「연령대별」로도 높은 연령일수록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의 사회적 자본 구축정도는 낮게 나타남.

■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 구축과 활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

- 대도시 지역은 거주 환경적으로 지역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은 어려운 형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거주민들은 나름대로의 의미있는 활동(봉사활동, 동우회, 동·반·아파트 동 단위의 바자회, PTA 등)에 참여하려는 의지와 동기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도시거주민들의 도시성(urbanism)[10]으로 인해서, 스스로 선도적으로 활

10) 도시성(urbanism as a way of life)이란, 도시 거주민들이 갖게 되는 자기이익추구, 상호착취 정신, 사무적·비인간적·일시적인 사회적 관계로 인해서 감정적,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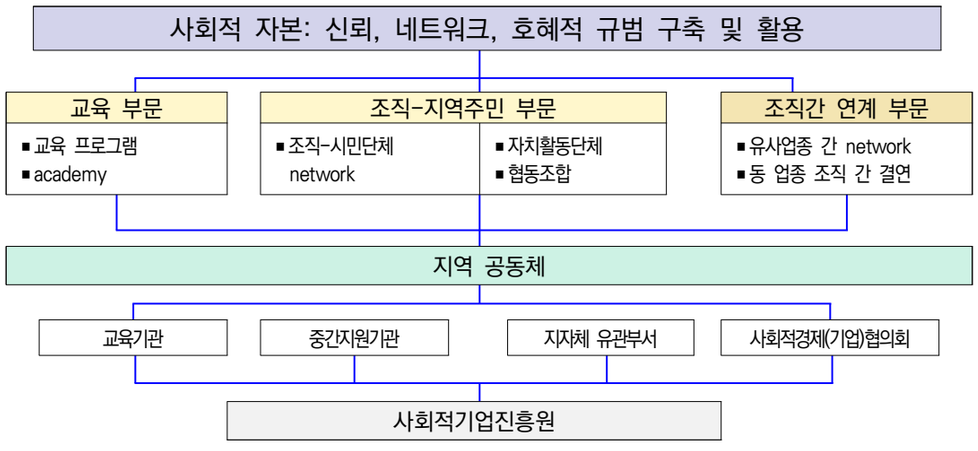
동을 위한 조직을 구성, 참여하려는 성향은 약함.

- 따라서 이런 도시 거주민들에게는 단체나 기관(조직)이 주도하여, 그들을 사회적 경제영역에 참여할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저연령층(청년층)의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자체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고, 또 경제중심 가치에 익숙해져 있어서,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긍정적이지 못함.
- 따라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식을 확산해 갈 제도 즉 「대학 중심의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산·학·정 연계 아카데미」를 구성하여,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상에서 제시된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의 특징과, 그에 따른 구축 및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은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있어 사회적자본 구축과 활용 모델

- 사회적경제(조직)-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지역주민들의 자치활동단체(바자회, 동우회, 자선단체 등)의 구축」
- 「관련 업종간 네트워크 구축」, 「기존 동 업종 중견 조직과의 결연」,「지역민과의 친근성 확대를 위한 홍보」
- 「협동조합(생산, 소비자)」
- 「대학 중심의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산·학·정 연계 아카데미」

〈그림 8〉 사회적자본 구축과 활용 모델



4.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20년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 DATA」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 호혜적 규범」 관련 변수를 발췌, 정제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 것임.
- 원래 사회적 자본 측정도구로는, 1993년 미국 정치경제학자인 푸트남(Robert David Putnam, 1940-)이 『Making Democracy Work』에서, 사회적 자본의 측정 지표로, 「지역조직이나 단체에서의 활동 빈도」, 「투표율」, 「자원봉사 활동 정도」, 「친구나 지인과의 연결 정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시하였고, 그 이후 이것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측정 도구와 지표가 제시되었음.
-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우, '네트워크 연결', '핵심가치 공유', '신뢰와 협력', '호혜적 규범', '단체 참여정도'를 사회적 자본의 측정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음.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용한 DATA의 변수들로는 이런 일반적인 사회적 자본 측정 도구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음.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의 구축 정도를 단순히 측정한 통계결과만을 제시하였음.
-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 즉 정치적 참여의 확대, 교육적 성과 향상, 지역 경제발전,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 개선 등에 미치는 효과를 밝힘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구축과 활용을 모색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팀은 향후 일반화된 사회적 자본의 측정 도구와, 지역성에 기반을 둔 측정 도구를 계발하여, 연구를 지속할 것임.

참고문헌

고동현(2016).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 자본주의의 오래된 미래, 한울아카데미.

김영철(2011). 사회적 경제와 지역의 내발적 발전. 지역사회연구, 19(2), 25-49.

김태근(2013). 사회적기업의 이론적 실천적 다양성 연구 : 유럽에서의 사회적 경제와 제3섹터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2(2): 23-49.

남승균(2015). 사회적경제와 지역의 내발적 발전에 관한 연구. 인천학연구, 23, 85-124.

노영숙, & 장지현(2018).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딜레마: 충북을 사례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1), 27-51.

도수관(2017). 지식정보사회에서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그리고 경제발전과 배분적 형평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역 및 국가 수준의 분석,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연구보고서.

박선영·배광빈(2020).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포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Vol.34 No.1: 1-32.

사회적기업연구원 편집부(2008).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인 대상 인식조사 분석, 사회적기업연구,1(2): 117-126.

송미, & 윤희정(2015). 문화· 관광분야의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계망-춘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19(4), 111-131.

안나현(2016). 구매자-공급자 간의 사회적 자본이 공급사슬의 교환 프로세스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단이, 원도연, & 전예지(2017).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실상과 고찰: 동작구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3), 1-26.

오미일(2010). 글로벌경제의 대항 비전으로서 사회적 경제:'경제의 지역화', 로컬 경제운동과 관련하여. 로컬리티 인문학, (4), 83-118.

우천식(2007). 한국 경제·사회와 사회적 자본,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유미현(2017). 사회적경제의 사회적자본이 협력적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해진(2015).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 혁신, 호혜, 협력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9(5), 77-111.

이해진(2020). 충청북도 농촌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발전방안: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30(1), 199-248.

이헌상, 형영주, & 이창원(2012). 지역형사회적기업 전략적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4(2), 15-37.

이현주(2016). 협동조합기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존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5(2), 67-95.
장지은, 김연복, & 오민석(2018). 지역 사회적경제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모델에 관한 연구: 경기도 따복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34(3), 13-28.
장현숙(2019). 조직사회자본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소양, & 임상연(2015). 해외의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 사례: 일본과 홍콩의 경험. 국토, 38-46.
정지수(2021).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 : 나눔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병준 외 3인(2020). 사회적 기업 리더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성과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리더 동일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13(1): 69-96.
조영복, 신경철(2013).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연구,6(1): 51-82.
최유진(2018). AHP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교의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연구, 11(3): 163-189.
최준규(2016).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의 필요성 제시. 국토, 418, 112-113.
한상일(2019). 한국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업가정신과 지역 자산 활용: 사회적 성과와 재정성과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협동조합경영연구, 50, 1-23.
한상일·권소일(2019). 사회적 기업 인지도와 사회적 자본의 사회적 기업 신뢰에 대한 효과분석,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9(2): 33-56.
황승미(2015). 사회자본이 사회적 경제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Bhinekawati, Risa(2017).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social capital and corporate development in developing economies. Routledge.
Christoforou, Asimina(2014). Social capital and economics : social values, power, and social identity. Routledge.
Daniere, Amrita(2014). The dynamics of social capital and civic engagement in Asia : vibrant societies. Routledge.
Dasgupta, Partha(2000). Social capital : a multifaceted perspective. World Bank.
Defourny, J., & Borzaga, C(2001).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Routledge.

Deth, Jan W.(1999).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Routledge.
Li, Yaojun(2015).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and applications in social capital. Edward Elgar Pub.
Lin, Nan(2001). Social capital :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년 연구지원 사업 보고서**

발 행 인	정현곤
발 행 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 소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47, 새마을금고빌딩 (6~8층)
전 화 / 팩 스	031-697-7700 / 031-697-7889
홈 페 이 지	www.socialenterprise.or.kr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